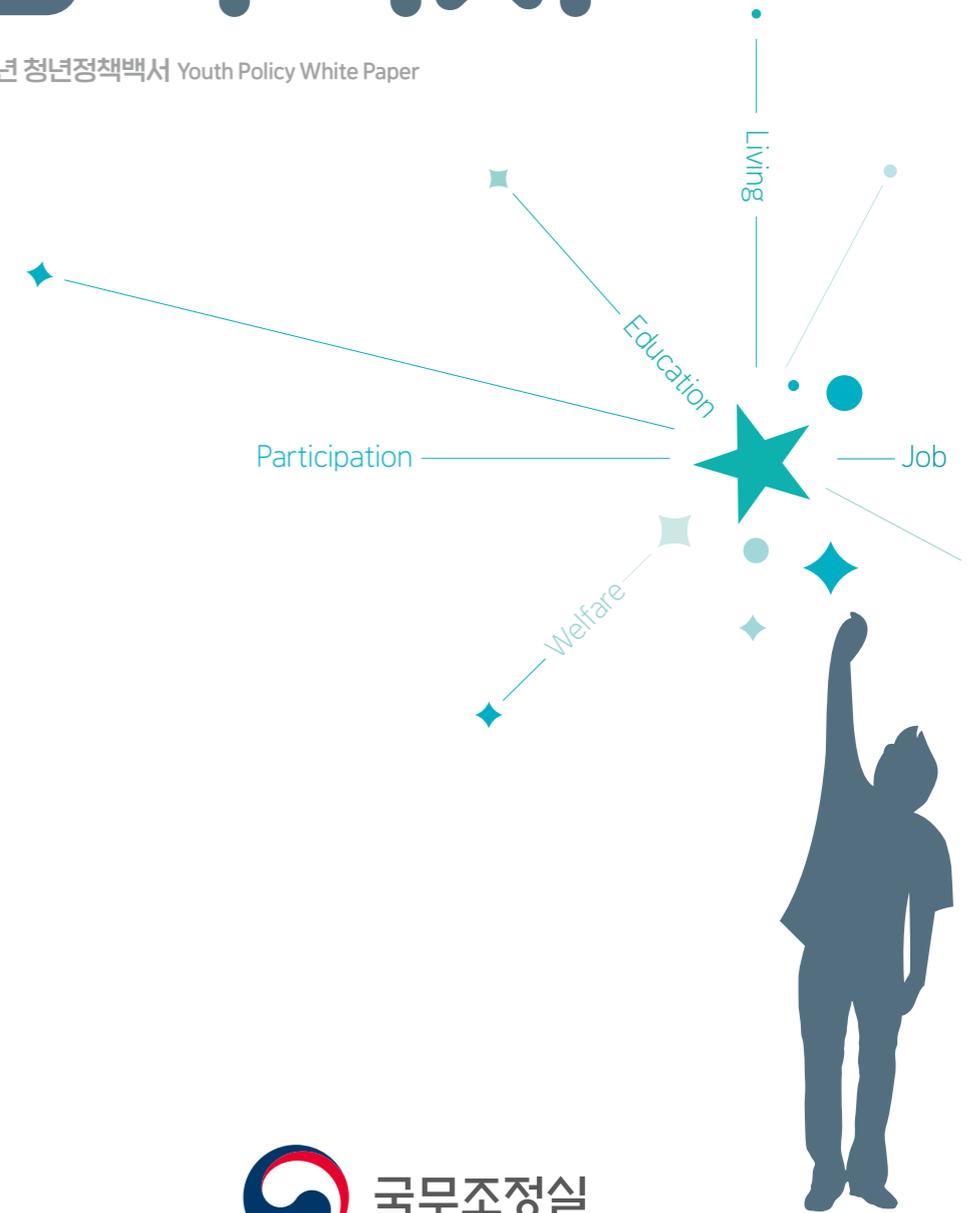


청년 정책백서

2021년 청년정책백서 Youth Policy White Paper



***청년**이 바꾼 오늘
만든 내일



2030.go.kr



2021년 청년정책백서

YOUTH POLICY WHITE PAPER

발간사



청년(靑年)을 글자 그대로 풀면 ‘푸르른 때’가 되겠지요. 꿈을 펼쳐 나가는 인생의 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년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청년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주자는 일념으로 청년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첫 정부입니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 청년정책백서」는 이러한 발자취를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술 문명의 전환, 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 전 분야에 걸친 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백서에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시계열 통계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이 진학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첫 직장을 얻고 가정을 형성하기까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청년정책의 목표는 청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고 과거의 정책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청년정책백서」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정책백서는 매년 발간되어 청년의 삶과 청년정책의 역사를 축적해나가는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1 청년정책백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는 물론이고, 모든 청년과 부모 세대 등의 정책 수립과 참여, 각종 연구 등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김 부 겸

With Youth HISTORY MAP

2020-2021

'청년을 위한 정책(for the youth)'을 넘어, '청년에 의한 정책(by the youth)'으로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C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1
각자자인 청년들이 앞서
'기본주례' 등

2019.07.30.
청년정책추진단 출범

2020.03.26.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2020.08.05.
청년기본법 시행

2020.09.19.
제1회 청년의 날



2020.09.1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2020.12.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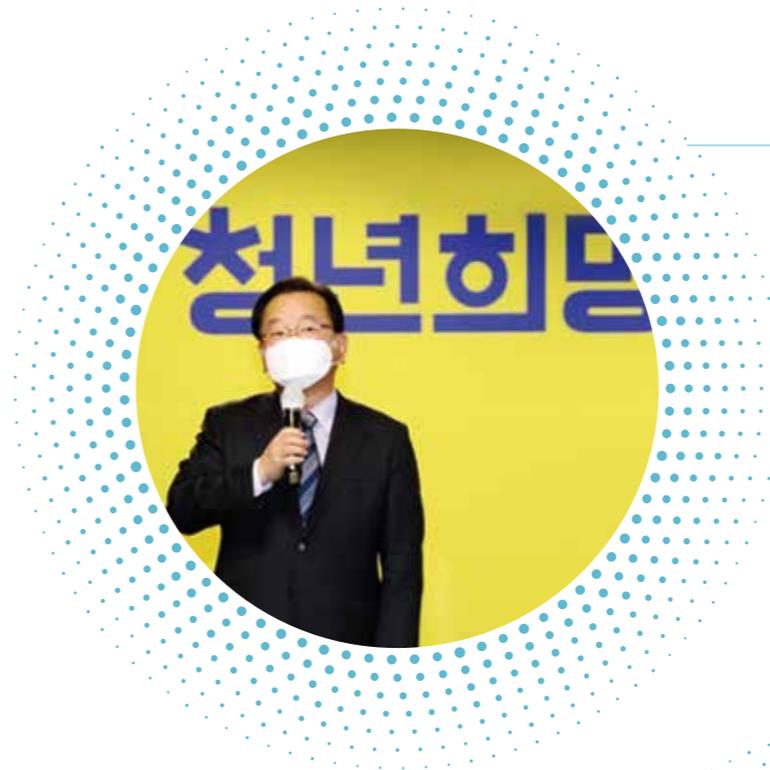
With Youth HISTORY MAP (2020-2021)

'청년을 위한 정책(for the youth)'을 넘어, '청년에 의한 정책(by the youth)'으로

- 2021.03.30.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 2021.06.15.
청년정책조정실 출범



2021.08.26.
청년특별대책 발표



- 2021.09.07. ~
청년희망ON 프로젝트
- 1차 : KT 2021.09.07.
- 2차 : 삼성 2021.09.14.
- 3차 : LG 2021.10.21.
- 4차 : SK 2021.10.25.
- 5차 : 포스코 2021.11.10.
- 6차 : 현대차 2021.11.22.
- 7차 : 에코프로 2022.01.18.
- 8차 : 카카오 2022.02.09.



2021.09.07.
9개 부처(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복지부, 고용부, 문화부, 교육부, 행안부) 전담조직 신설

2021.09.18.
제2회 청년의 날



With Youth HISTORY MAP (2020-2021)

'청년을 위한 정책(for the youth)'을 넘어, '청년에 의한 정책(by the youth)'으로

2021.11.13.~2021.12.0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5차



2021.11.17.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2021.11.30.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1.12.30.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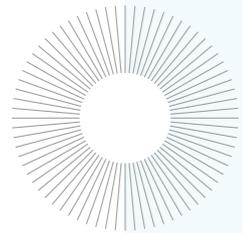


출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MBC 기사 참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뉴스1), 청년희망온(뉴스1), 청년특별대책(뉴스1),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 발표(뉴스1),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대한민국 청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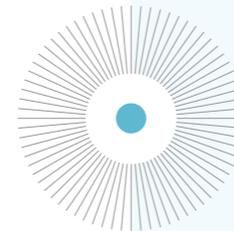
발간사	3
With Youth HISTORY MAP	4
통계로 보는 청년의 삶 20선	16
들어가며	27



제1부 대한민국 청년의 삶



총론	지표구성의 목적·원칙·체계	30
제1장	청년인구 동향	
제 1 절	청년인구 동향	
	1. 청년인구 규모와 구조	32
	2. 청년인구 이동	36
	3. 청년가구 구성	39
제2장	생애주기별로 본 청년의 삶	
제 1 절	학습기	
	1. 진학 결정	42
	2. 대학생의 삶과 진로	45
	3. 고졸자의 삶과 진로	55
제 2 절	노동진입기	
	1. 첫 일자리 진입	59



	2. 첫 일자리 특성	60
	3. 경제활동상태	67
제 3 절	가정형성기	
	1. 혼인	75
	2. 출산	80
제3장	청년기 주요 삶의 여건	
제 1 절	경제적 여건	
	1. 소득과 자산	85
	2. 주거	89
제 2 절	신체·정신적 여건	
	1. 신체와 정신건강	115
	2. 문화와 여가	126
	[책속의 코너] 보호필요 청년	107
제 3 절	참여와 권리	
	1. 사회·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과 정치적 효능감	132
	2. 정치·정책 참여	137

제2부 대한민국 청년정책

총론	의의 및 주요내용	144
제1장	청년정책의 흐름	
	1.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청년정책	145
	2.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147
제2장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제 1 절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1. 「청년기본법」 제정	150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53
	3. 중앙부처 조직 정비	169
	4. 지자체 조직 정비 및 지자체 전담조직협의회	176
제 2 절	주요 종합대책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78
	2.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184
	3. 청년특별대책	186
	4.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190
	5. 청년희망ON 프로젝트	193

제3장 부문별 성과

제 1 절 교육 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196
2. 국가장학금	197
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202
4. 일학습병행제	206

제 2 절 일자리 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11
2. 국민취업지원제도	212
3.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215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7
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21
6. 청년내일채움공제	224
7.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228
8.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직장 문화 개선	230
9.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	233
10. 근로감독 강화	236

제 3 절 주거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38
2.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239

제2부 대한민국 청년정책

- 3.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40
- 4. 청년 공적임대 주택 확대 243
-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46

제 4 절 복지·문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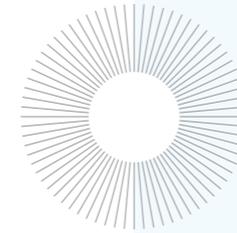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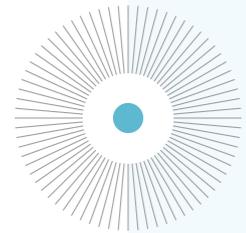
-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48
- 2.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249
- 3. 햇살론 254
- 4. 자살예방사업 255
- 5.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60
- 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심리지원서비스) 262
- 7. 통합문화이용권 265

제 5 절 참여·권리 분야

-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269
- 2.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270
- 3.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청년제안 및 제도개선 활성화 272
- 4. 청년참여 20-30 275

제 6 절 민관협력

- 1.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 277
- 2.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기관 운영 283



- 3. 기업의 청년지원 사례 288
- 4. 주요 청년단체 활동 293

마치며 미래를 위한 제언 312

부록1 '21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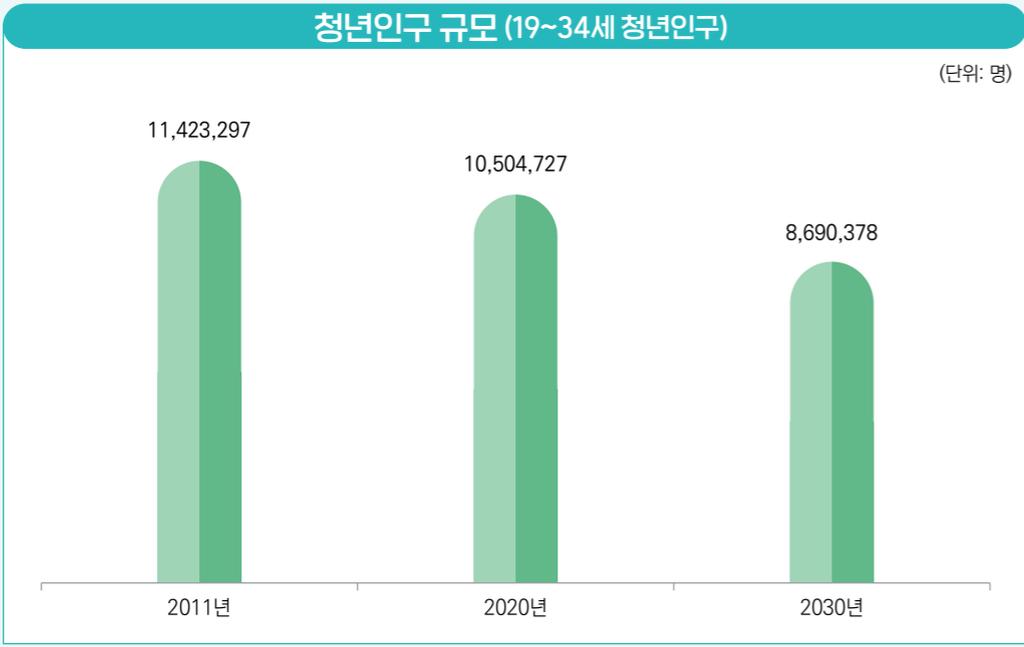
- 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예산 및 자체사업 현황 314
- 2. 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및 자체사업 현황 315

부록2 청년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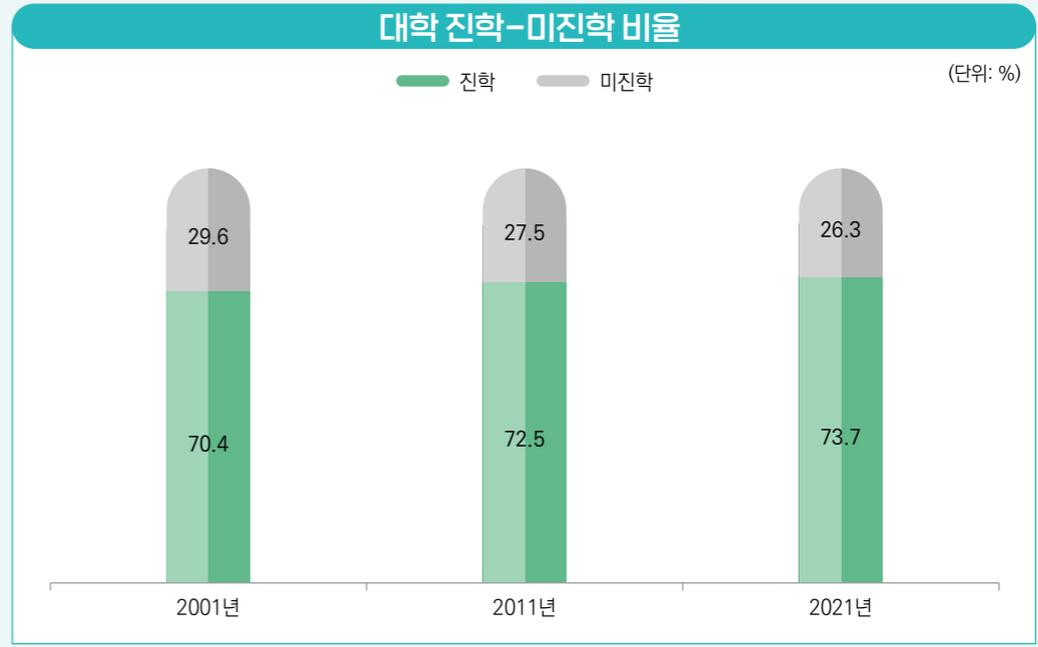
- 1. 개요 317
- 2. 현황 및 목록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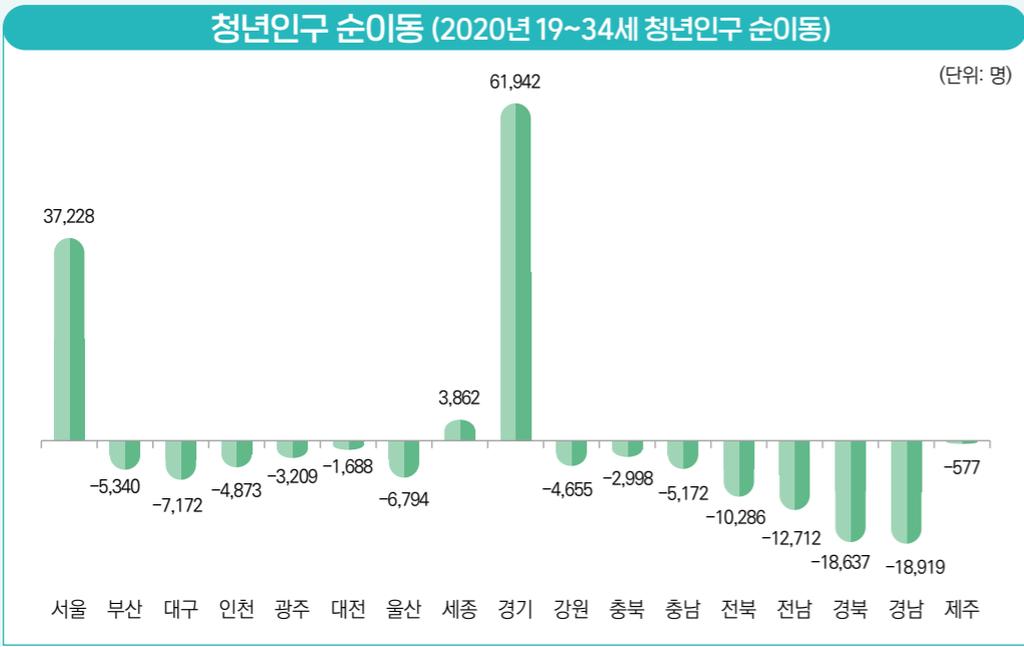
★청년이 바꾼 오늘
만든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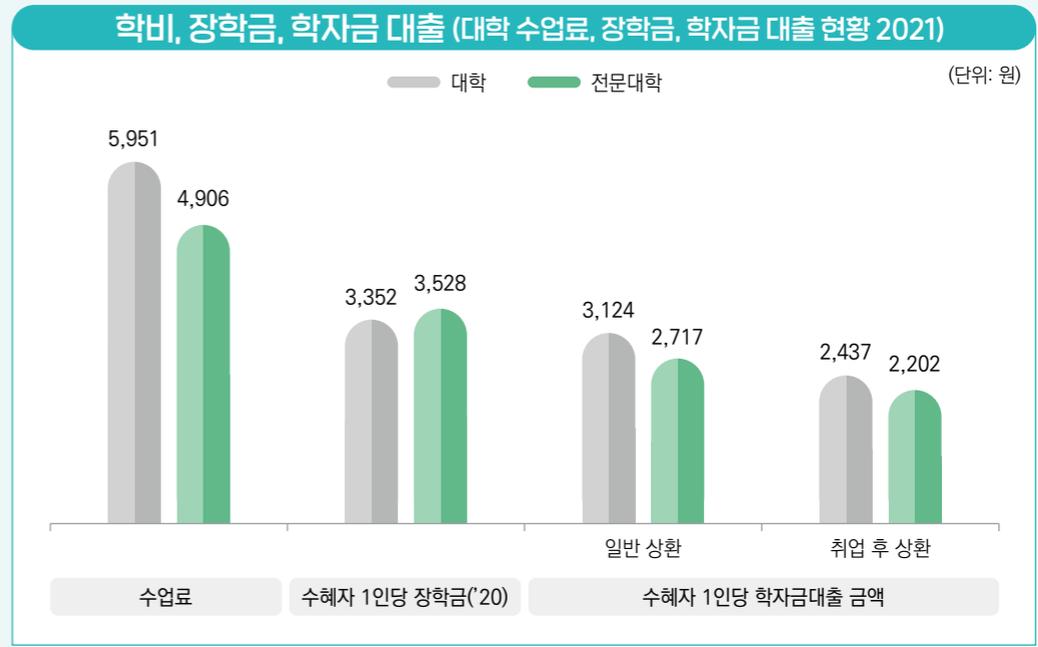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청년인구 규모.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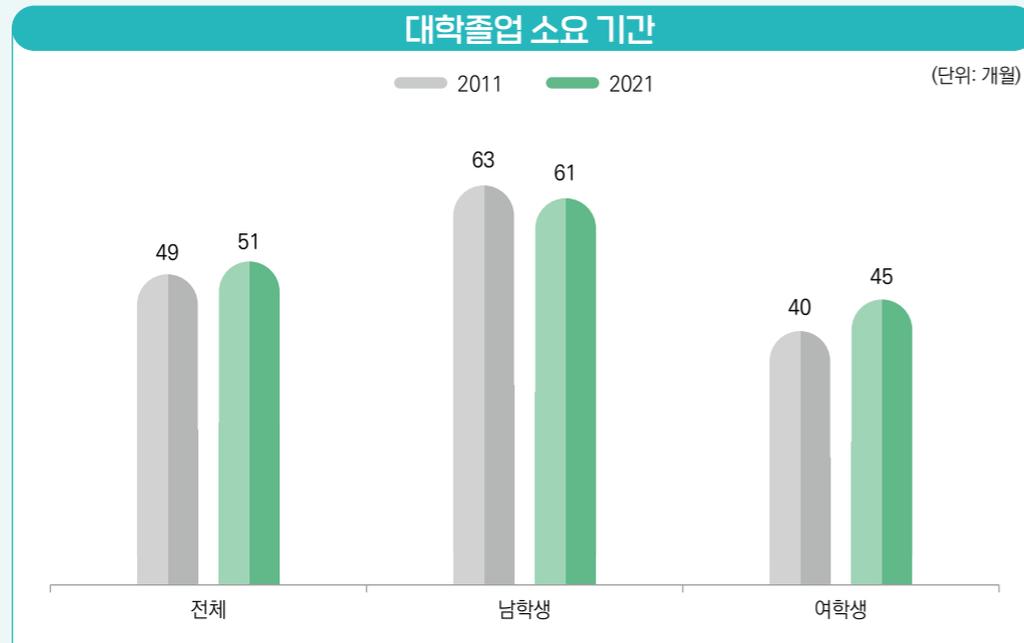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1.12.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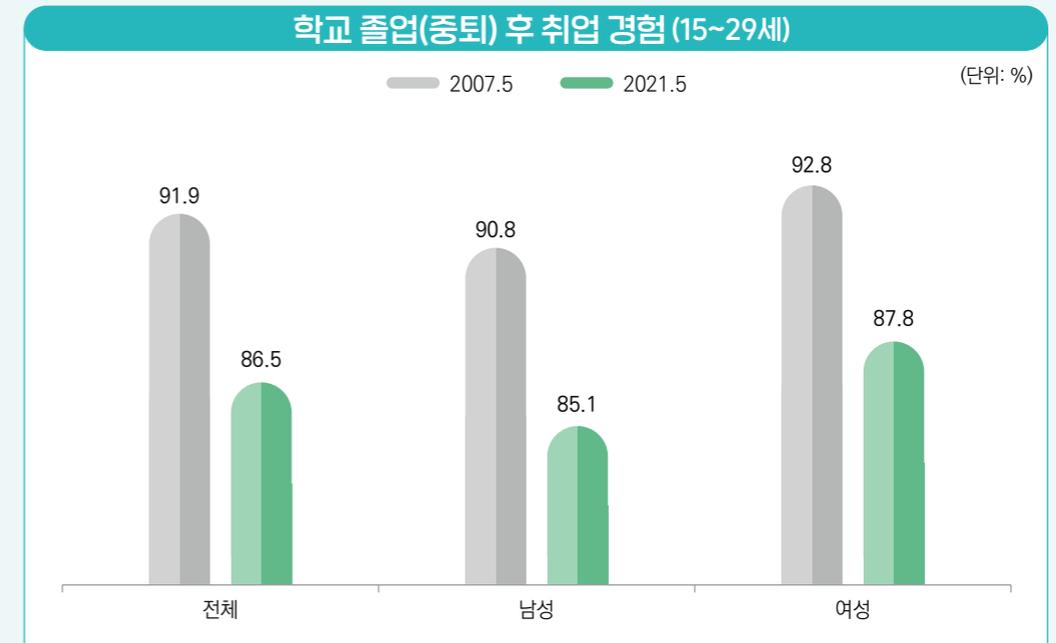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h). 시도/각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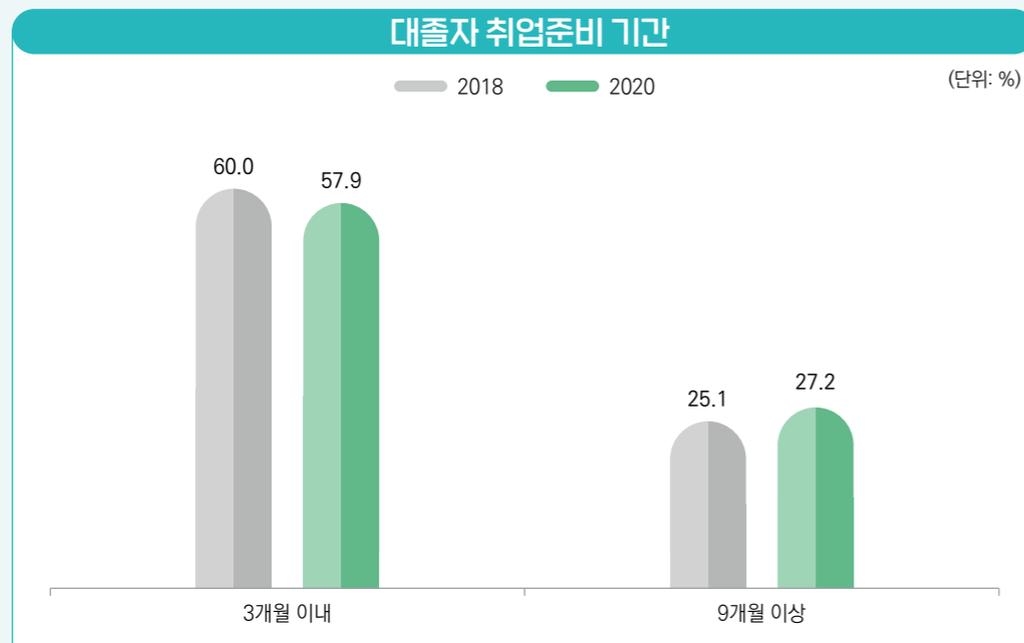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자료를 이용하여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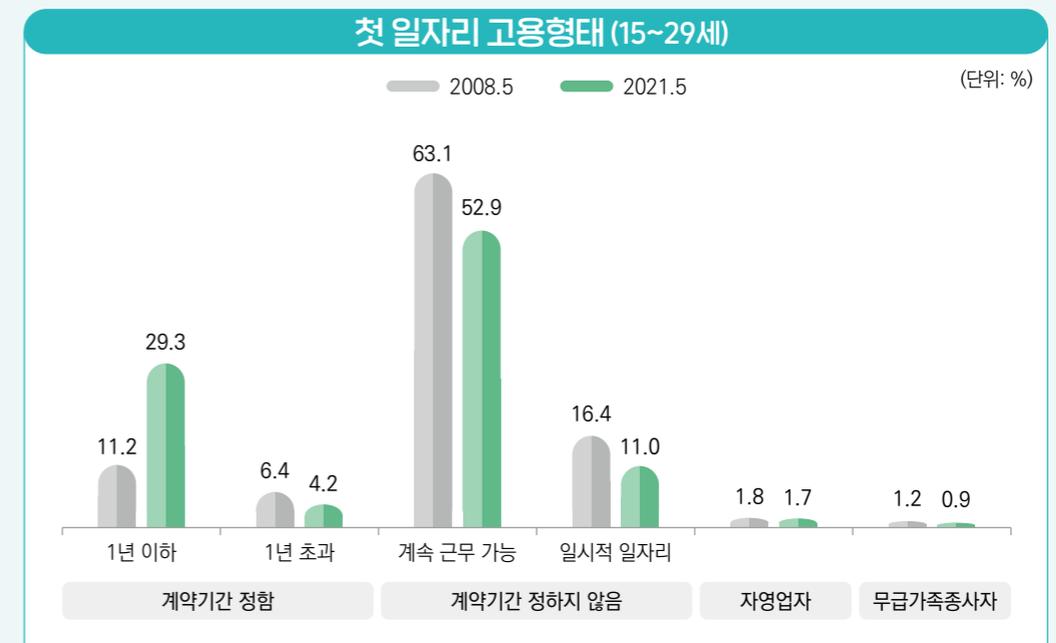
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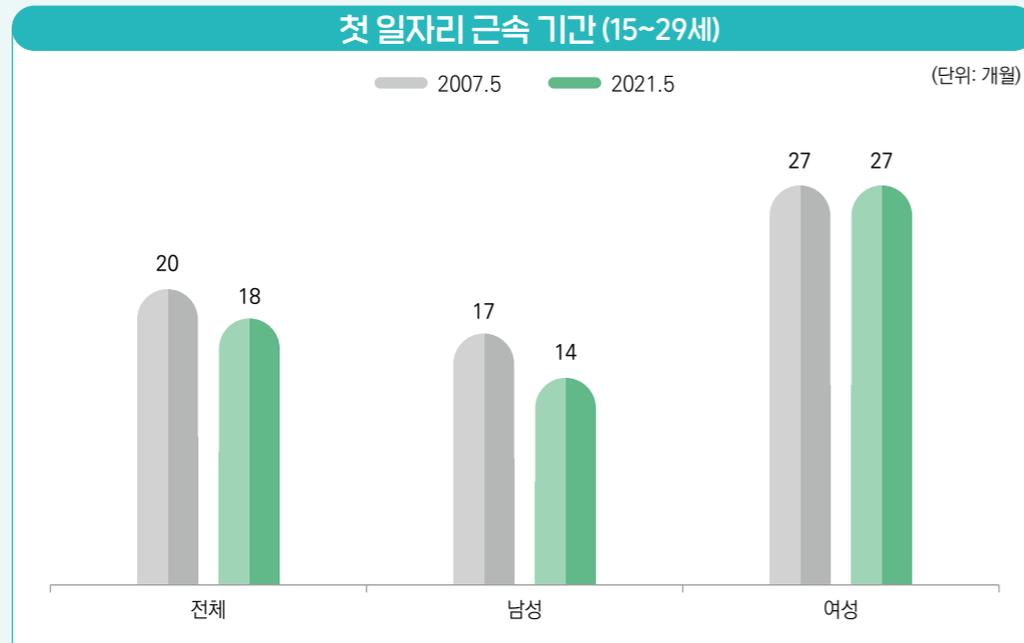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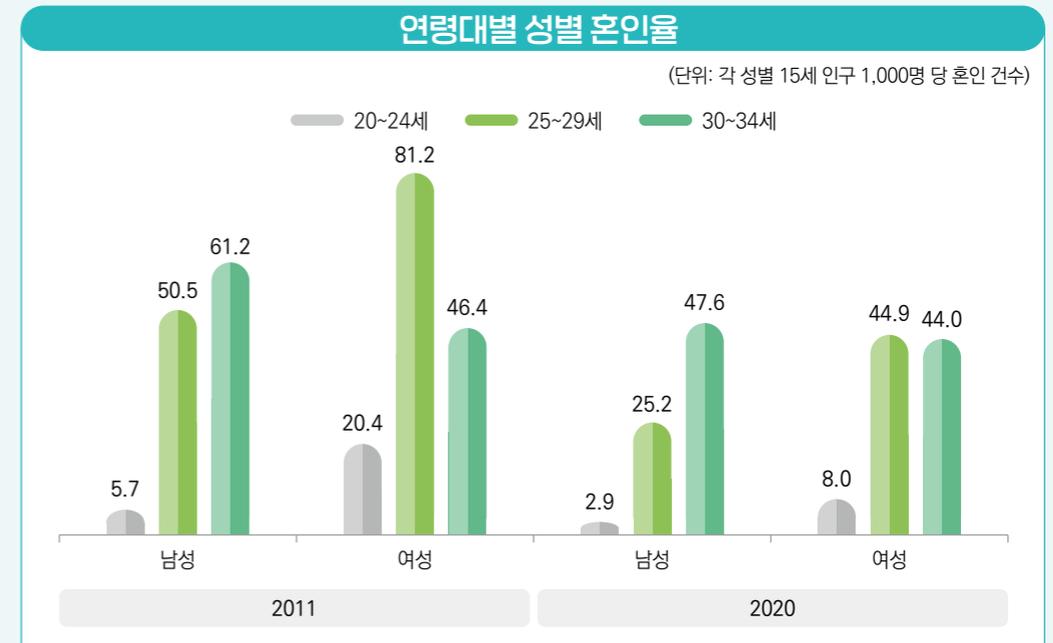
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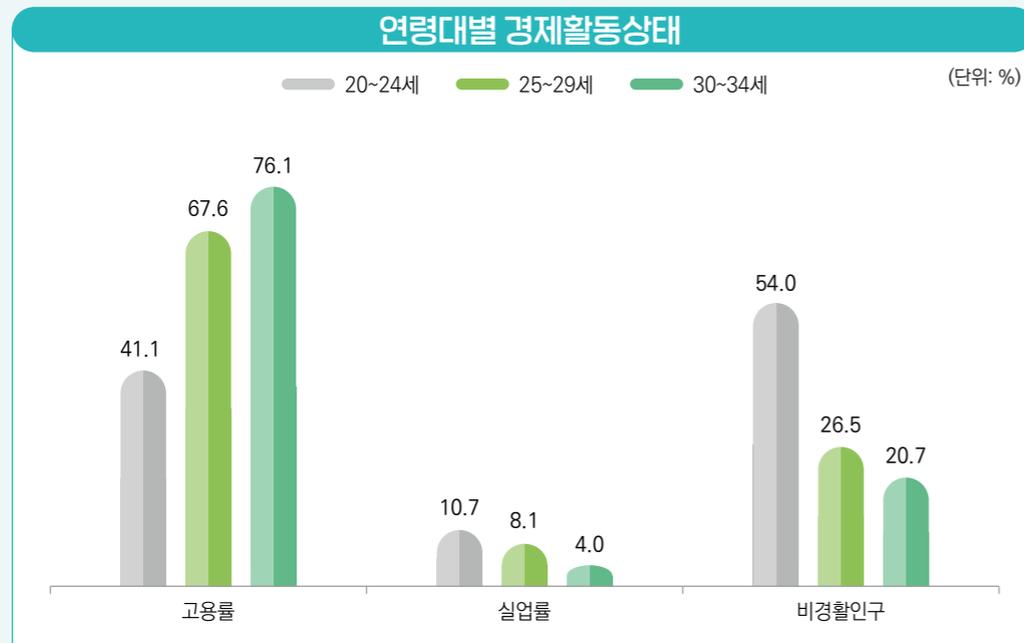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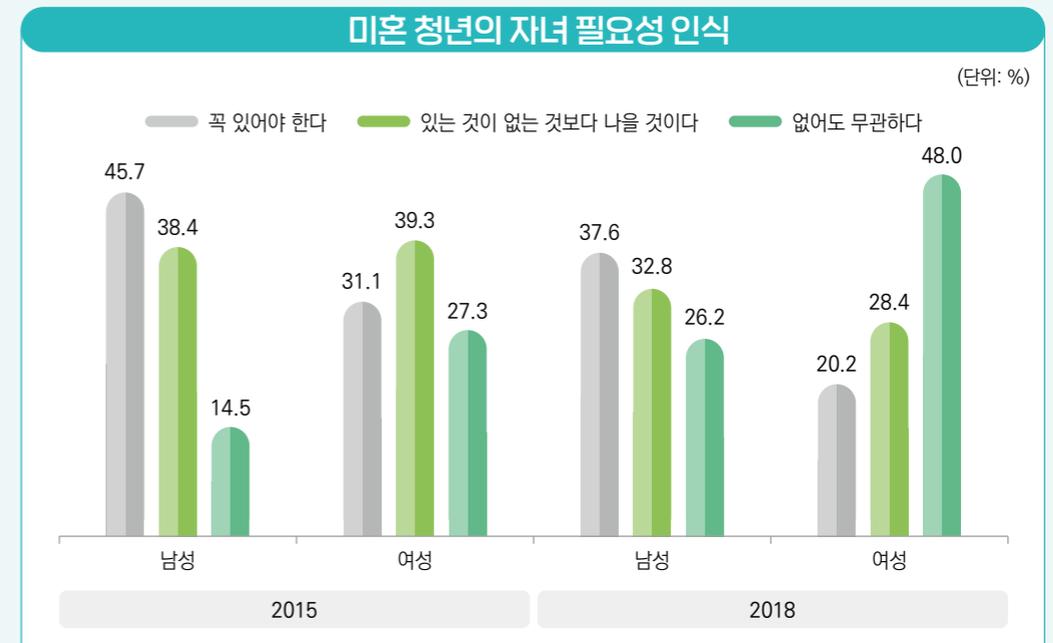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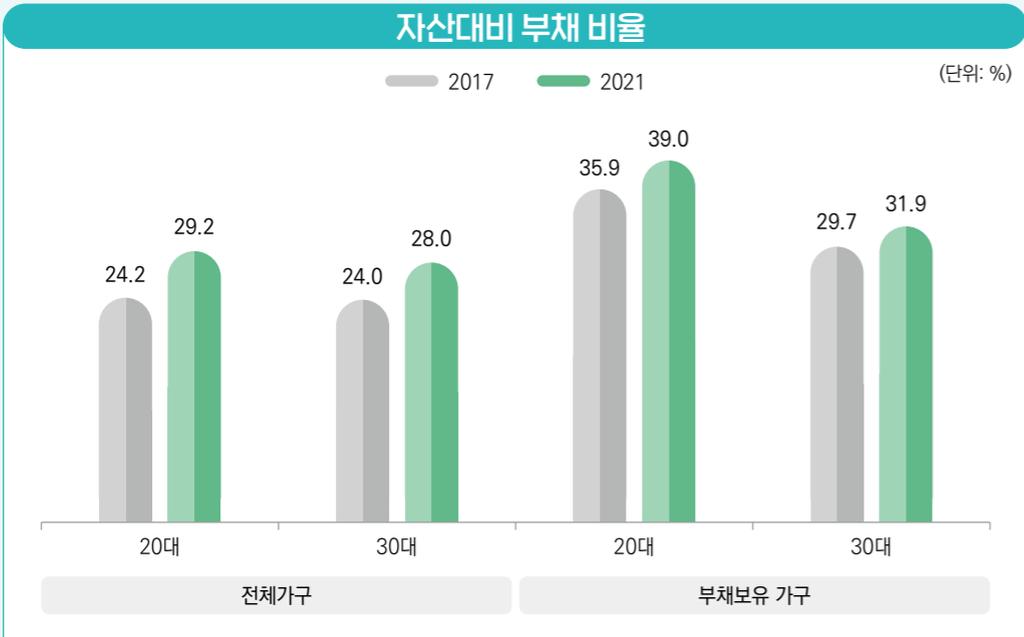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3.18.).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8687&ord=2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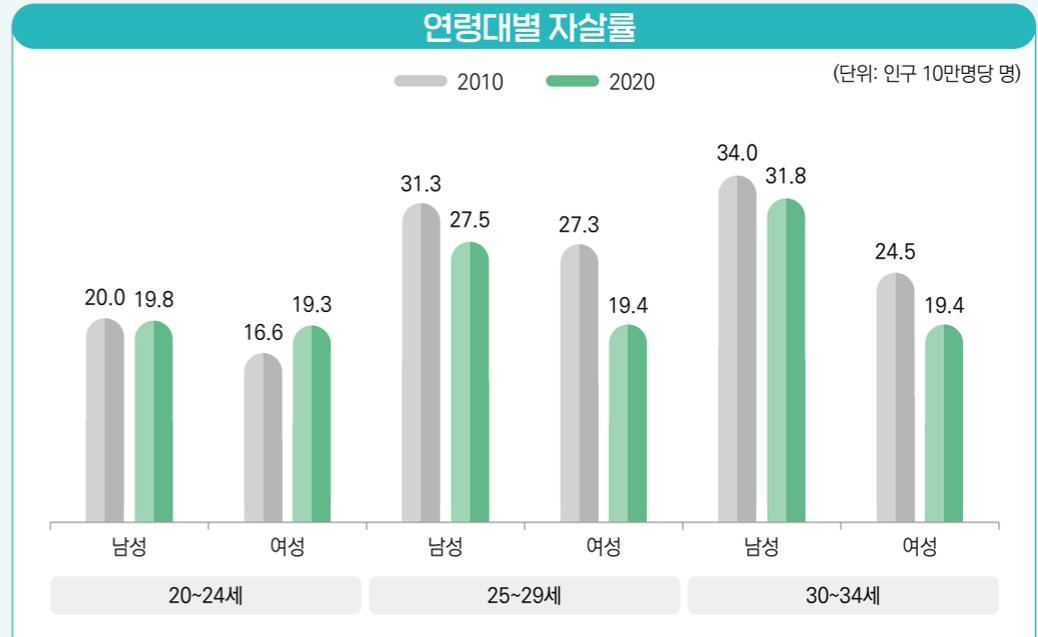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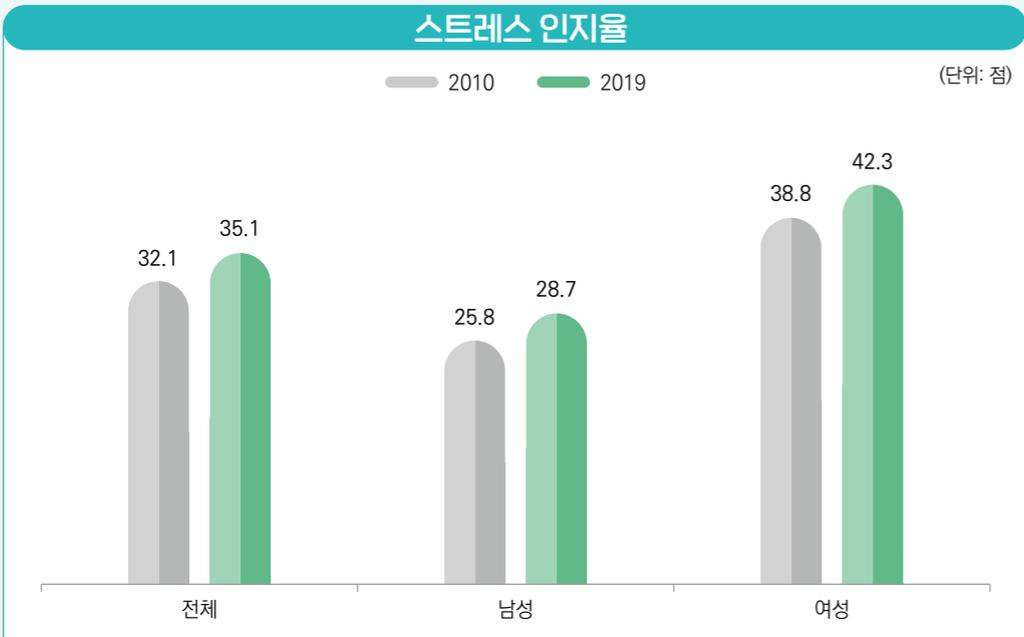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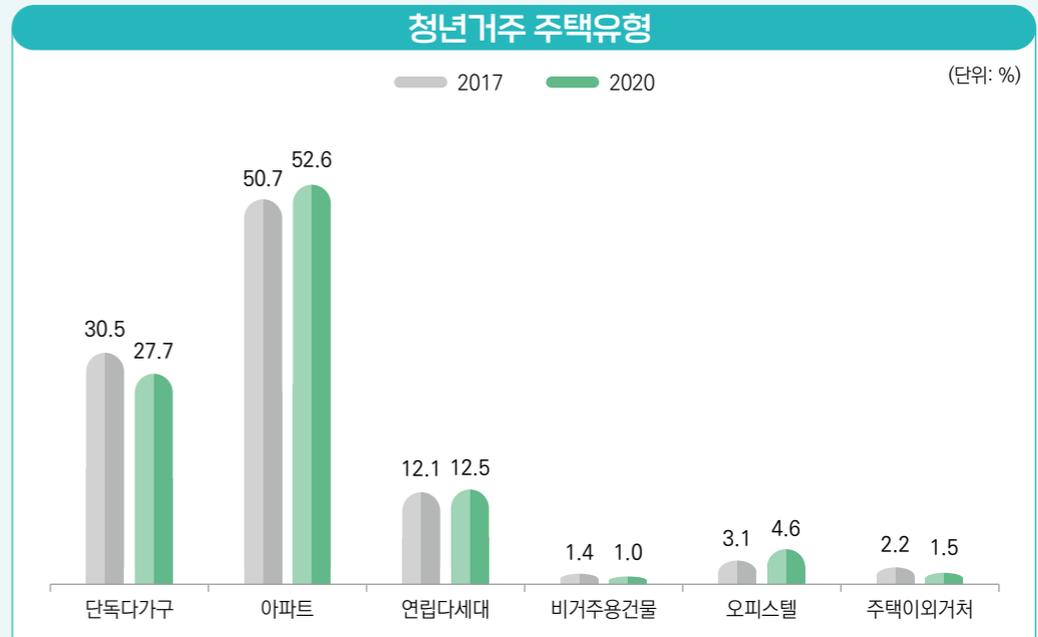
주: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기준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2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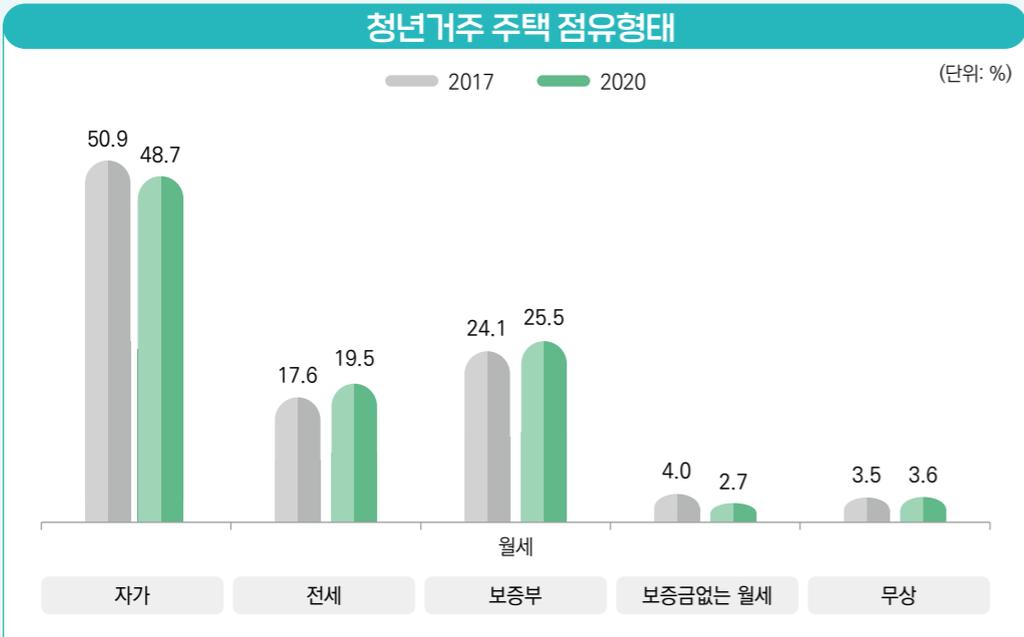
주: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해당연도연앙인구)*100,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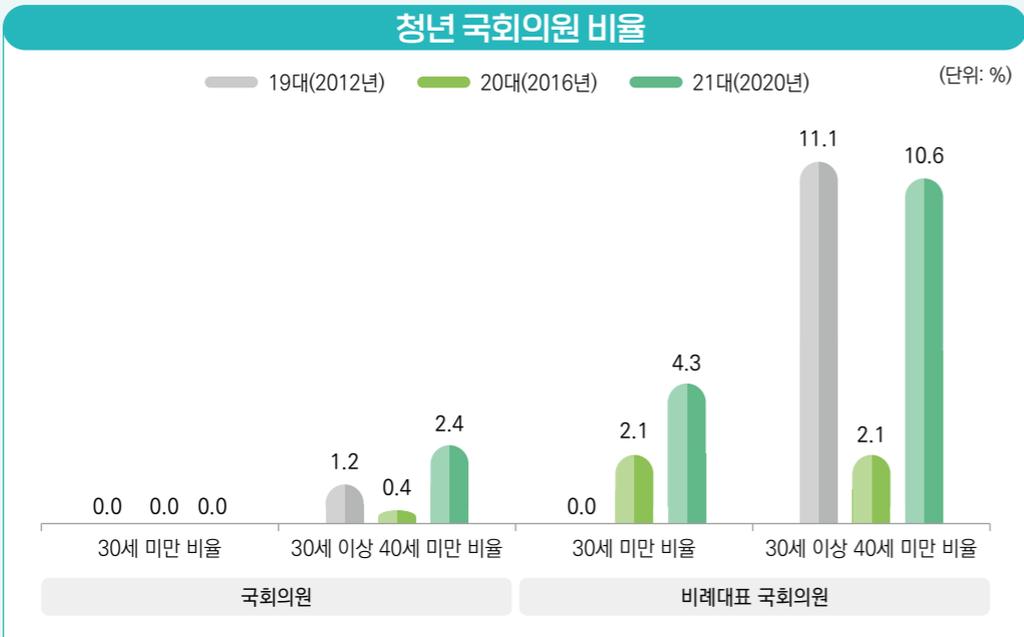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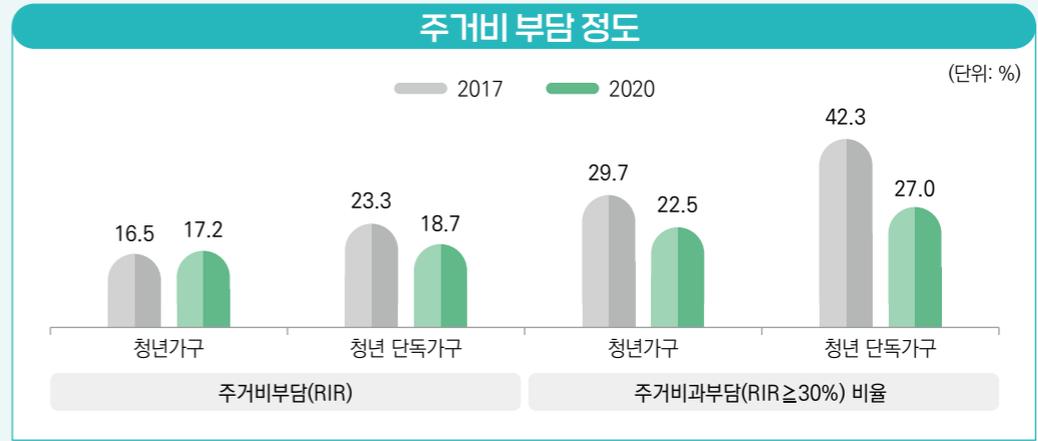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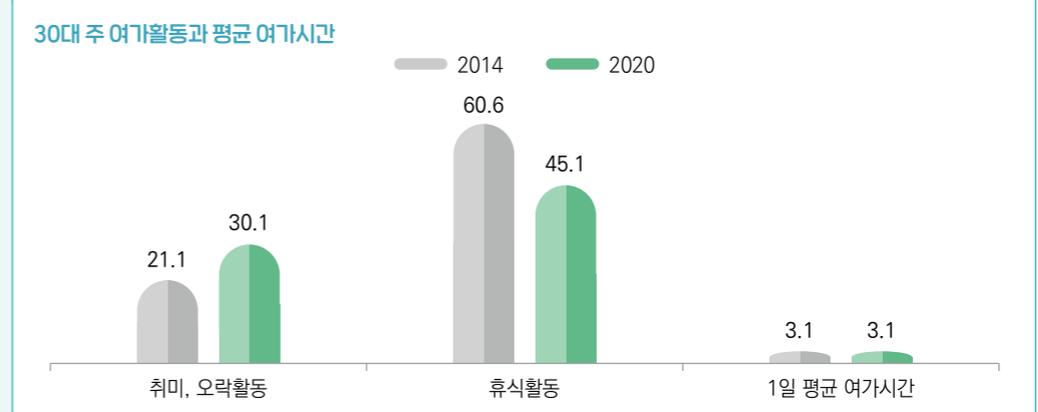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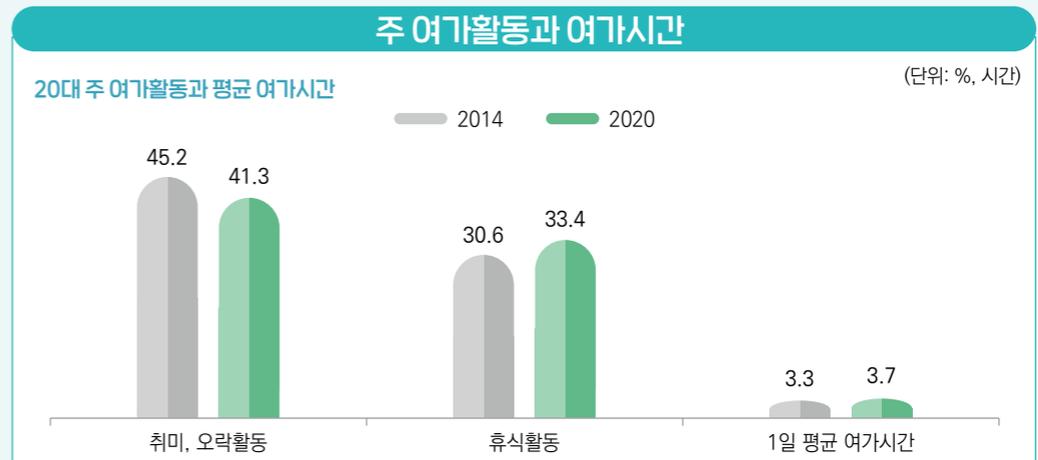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r>에서 2021. 12. 19. 인출.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021년 청년정책백서

YOUTH POLICY WHITE PAPER

들어가며



청년백서는 청년의 삶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 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청년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고자 제작되었다. 지표 측면에서 객관적인 실태지표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지표도 수록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청년 개인 삶의 분기점이 되는 순간들로 내용을 편제하여 대표적 청년 개인의 인생 스토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시기별로 청년정책에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문재인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기록하여 청년 관련 다양한 시책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정책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 추진계획을 기록하여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추후 청년정책을 기획 및 보완 할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담당자가 직접 집필하여 현장감을 높였다.

청년백서는 크게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1장은 청년인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교육과 진로, 경제활동, 가족의 구성 등 청년들의 삶의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3장은 경제적, 정서적, 참여·권리, 보호 필요 청년을 통해 현재 청년의 삶의 여건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자산, 주거유형, 주거부담, 정신건강, 문화와 여가, 사망, 취약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청년들의 삶을 구성하는 분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부는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주요한 성과를 다룬다. 먼저 1장은 시기별 청년정책의 역사를 통해 그간 정부들의 노력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정책 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한 배경과 그 의미를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년이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체계가 구축되었다. 2장의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부분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부처들의 노력을 담았다.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립, 전담조직 신설과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청년의 삶 기본방향, 청년특별대책, 희망ON 프로젝트 등 주요 종합대책을 다룬다. 교육 분야에서 국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일학습병행제 등을, 일자리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다루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등, 복지·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자살예방사업, 청년층 정신건강 강화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청년참여 20-30 등을 다루고 있다.

이번 청년백서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족적들을 기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청년백서를 매년 제작하여, 청년통계와 다양한 청년시책들을 축적하고 관리해 나가며, 청년백서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전념하겠다.

제 1 부

대한민국 청년의 삶

총론

지표구성의 목적·원칙·체계

제1장

청년인구 동향

제2장

생애주기별로 본 청년의 삶

제3장

청년기 주요 삶의 여건



총론

지표구성의 목적·원칙·체계

1. 청년의 삶 지표 구성의 목적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발달과 사회 진출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설계되어 왔다. 청년 연령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직면하는 진로선택, 교육·훈련 과정, 일자리 이행, 주거 이행, 그리고 가족 이행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정책 체계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일자리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등 분야별 지원정책을 수립하였고, 「청년기본법」 제정과 시행(20.8)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12), 제1차 시행계획(21.3), 특별대책(8.26)의 일련의 계획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수립과 대책마련을 통해 청년의 전 생애과정에 대응하는 이행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 체계를, 그리고 이행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의 청년정책이 포괄하고 있는 생애 주기와 영역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의 실태와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신력 있고 대표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직까지 청년의 삶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청년통계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여서 완결된 체계는 아니더라도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고 대표적인 지표들로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분석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최대

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2. 지표 구성의 원칙과 지표 체계

가. 지표 구성의 원칙

이상의 지표 체계 구성에 따라 제시되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첫째,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의 주요 국면을 삶의 궤적의 형태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행의 객관적인 상황과 더불어 현대인의 삶의 불연속성과 불안정성이라는 특성이 포착되도록 지표들이 포함된다.

둘째,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행의 조건이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삶의 여건의 형태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청년기본법」에서 권익증진의 영역으로 제시하는 주거, 복지, 금융생활, 문화활동 등과 청년의 참여와 권리와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된다.

셋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제시되는 모든 지표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된 가장 대표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교육통계서비스(KESS)와 같은 정부 공식 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표를 우선 활용한다. 일부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통계표를 제시한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 중 자립준비청년 관련 지표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별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일관된 통계로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장기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최대 10년 간의 시계열을 제시함으로써 지표 변화의 추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지표별로 확보할 수 있는 시계열 범위가 균일하지 않아 짧게는 가장 최신 연도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섯째, 모든 지표에서 성별, 연령대별 구분을 통해 청년층 내부의 이질적인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원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밝혀둔다.

나. 지표 구성 체계

청년의 삶의 지표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삶의 지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청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청년인구의 규모 추이, 부양비 변화, 인구이동, 그리고 가구구성 형태가 이 영역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본다. 19세 청년이 처음 맞게 되는 진로선택에서 출발하여 대학진학자와 직업계고 졸업자의 이행 경로를 살펴보고,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 가족 형성의 경로를 이어서 살펴본다. 세 번째는 삶의 궤적의 조건이자 결과라 할 수 있는 삶의 여건들을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에는 소득과 자산(부채), 건강, 주거, 문화·여가, 참여·권리의 측면이 포함된다. 그리고 평균적인 이행의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의 삶의 실태를 특별히 조망한다.

제1장 청년인구 동향



제1절 청년인구 동향

1. 청년인구 규모와 구조

가. 청년인구 규모

1) 과거 청년인구 규모(2011-2020년)

최근 10년 간(2011-2020년) 19-34세 청년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1년 11,423,297명에서 2020년 10,504,727명으로 918,570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더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남성: 408,596명 감소, 6.92% 감소, 여성: 509,974명 감소, 9.24% 감소).

〈표 1-1〉 성별 청년(19-34세) 인구 규모(2011-2020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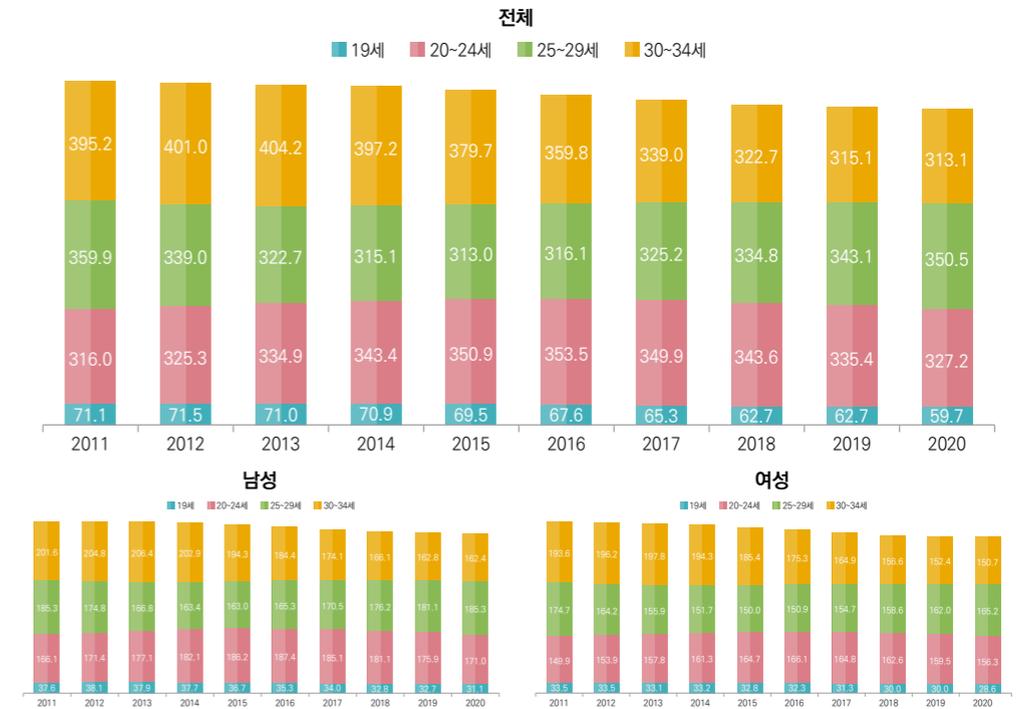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2020 변화분	2011-2020 변화율
전체	11,423,297	11,368,595	11,327,607	11,265,875	11,130,791	10,969,733	10,794,081	10,639,012	10,562,865	10,504,727	-918,570	-8.04
남성	5,905,785	5,890,464	5,881,495	5,860,514	5,802,442	5,724,333	5,637,407	5,561,545	5,525,168	5,497,189	-408,596	-6.92
여성	5,517,512	5,478,131	5,446,112	5,405,362	5,328,349	5,245,400	5,156,674	5,077,467	5,037,698	5,007,538	-509,974	-9.24

자료: 통계청. (2021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기 성별 청년(19-34세)를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 연령대별 인구 규모 변화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남성과 여성 공히 30-34세 연령층의 인구 규모가 동기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34세 여성의 경우 429,339명, 30-34세 남성의 경우 392,413명이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20-24세 청년인구는 남성, 여성 공히 증가

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4세 남성은 2011년 1,661,130명에서 2020년 1,709,726명으로 48,596명 증가하였고, 20-24세 여성은 동기간 1,499,241명에서 1,562,539명으로 63,299명 증가하였다. 또한 19세 청년의 경우 남성, 여성 공히 감소하였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25-29세의 경우 남성은 동기간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5.4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5-29세 청년층의 감소 특성은 여성 25-29세 연령층의 감소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성별 청년(19-34세) 5세 단위 인구 규모(2011-2020년)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2021a).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미래 청년인구 규모 전망(2021-2067년)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청년인구 규모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2021-2067년 간 19-34세 청년인구는 2021년 10,760,503명에서 2067년 4,790,975명으로 약 5,969,528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남성 청년인구가 약 3,279,073명, 여성 청년인구가 약 2,690,455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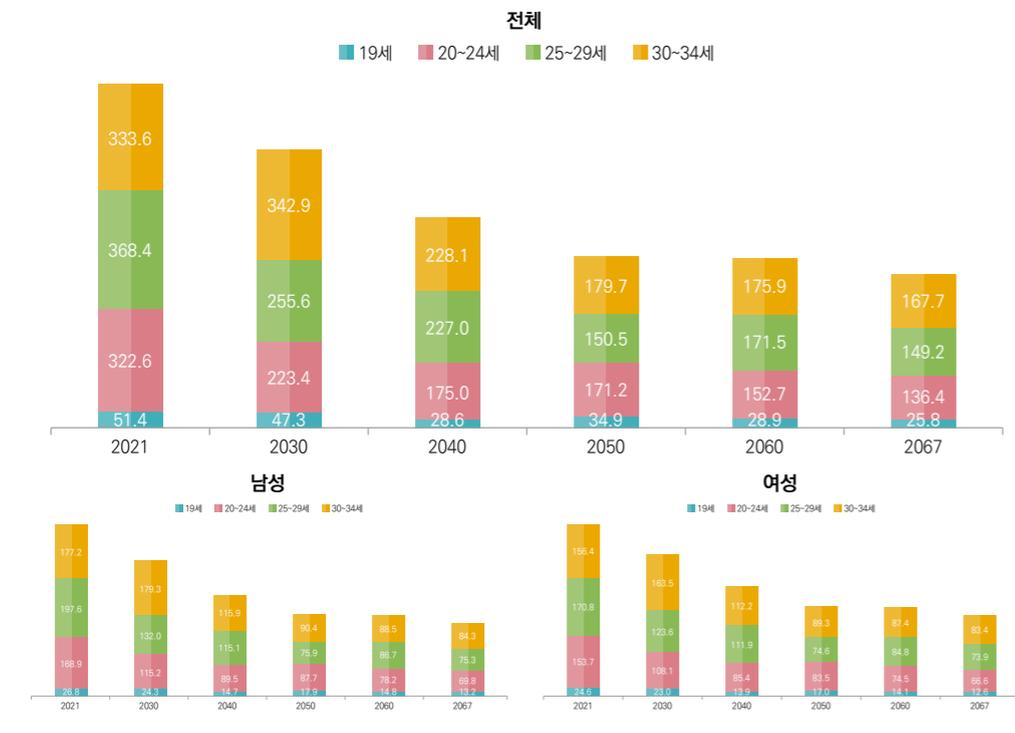
〈표 1-2〉 성별 청년(19-34세) 인구 규모 전망(2021-2067년) (단위: 명, %)

구분	2021	2030	2040	2050	2060	2067	2021-2067 변화분	2021-2067 변화율
전체	10,760,503	8,690,378	6,586,088	5,363,208	5,290,099	4,790,975	-5,969,528	-55.48
남성	5,704,969	4,507,860	3,352,145	2,719,631	2,682,442	2,425,896	-3,279,073	-57.48
여성	5,055,534	4,182,518	3,233,943	2,643,577	2,607,657	2,365,079	-2,690,455	-53.22

자료: 통계청, (2019).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성별 청년인구 규모 전망(2021-2067년)를 5세 단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2011-2020년) 간 추세와 다르게 25-29세 연령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19세의 경우 49.82% 감소, 20-24세 57.72% 감소, 25-29세 59.50% 감소, 30-34세 49.7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5-29세의 경우 남성은 61.91%, 여성은 56.72%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별 감소폭의 차이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성별 청년(19-34세) 5세 단위 인구 규모 전망(2021-2067년)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2019).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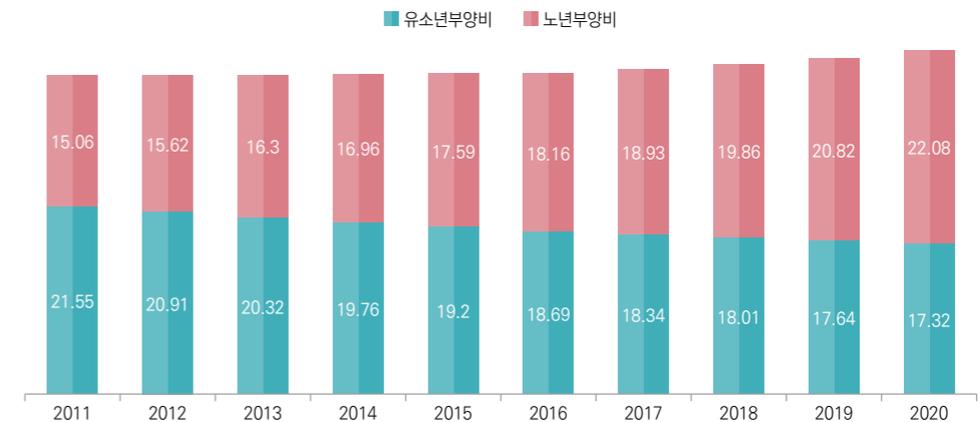
나. 인구 구조 특성

1) 과거 부양비(2011-2020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 당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율로 표현되는 유소년부양비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 당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표현되는 노년부양비로 구분된다.

지난 2011-2020년 간 부양비는 관측기간 초반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측기간 초기 유소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에 비하여 크게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소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폭에 비하여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이 더 큰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1-3 부양비 추세(2011-2020년) (단위: 인구 100명 당 명)



자료: 통계청, (2021b).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미래 부양비 전망(2021-2067년)

향후 2021-2067년의 부양비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유소년부양비는 203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 일시적 감소를 반복하여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하여 2067년에는 102.41명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여, 총부양비는 2021년 39.56에서 2067년 120.2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3〉 부양비 전망(2021-2067년) (단위: 인구 100명 당 명)

구분	2021	2030	2040	2050	2060	2067
유소년부양비	16.57	14.73	17.39	17.36	16.74	17.83
노년부양비	22.99	38.23	60.12	77.62	91.43	102.41
총부양비	39.56	52.96	77.51	94.98	108.17	120.24

자료: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청년인구 이동

가. 청년(19-34세)의 17개 시도별 지역 간 순이동

19-34세의 17개 시도별 지역 간 순이동 양상은 최근 10년간 대체적으로 서울, 인천(최근 순유출 특성이 관측), 세종, 경기에서는 순유입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는 순유출 특성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청년(19-34세) 순유입은 서울, 경기, 세종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모두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순유입 규모는 경기(61,942명), 서울(37,228명), 세종(3,862명) 순이며, 순유출은 경남(-18,919명), 경북(-18,637명), 전남(-12,712명), 전북(-10,286명)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7,172명), 울산(-6,794명), 부산(-5,340명) 역시 광역시 중 순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청년(19-34세)의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세(2011-2020년) (단위: 명)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8,017	-2	-1,829	6,136	-6,228	550	17,754	24,941	40,212	37,228
부산	-13,973	-12,831	-10,543	-8,443	-6,896	-8,350	-9,277	-10,723	-9,420	-5,340
대구	-8,830	-8,206	-8,321	-8,964	-7,116	-5,551	-5,906	-6,805	-11,578	-7,172
인천	9,552	10,514	8,868	3,785	3,037	3,328	1,258	1,735	673	-4,873
광주	-1,432	-3,351	-2,874	-3,632	-6,019	-4,452	-5,094	-3,920	-3,036	-3,209
대전	693	158	17	-2,426	-4,732	-1,616	-3,326	-3,413	-4,192	-1,688
울산	883	2,525	1,658	1,492	387	-3,065	-5,628	-6,464	-5,597	-6,794
세종	0	3,714	2,331	8,546	12,996	8,315	9,096	8,974	6,842	3,862
경기	38,099	40,488	36,172	30,096	37,162	47,147	37,533	49,020	45,776	61,942
강원	-2,512	-5,109	-3,418	-4,248	-2,293	-5,196	-4,531	-8,033	-5,459	-4,655
충북	-385	-1,366	-1,573	-1,306	-1,380	-1,993	-2,235	-1,386	-2,793	-2,998
충남	3,489	2,225	2,740	1,603	1,206	1,265	2,653	-596	-4,054	-5,172
전북	-4,052	-7,935	-7,168	-7,678	-6,858	-7,857	-8,341	-11,694	-11,531	-10,286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남	-7,624	-7,506	-6,838	-6,156	-4,632	-8,213	-7,595	-9,369	-9,587	-12,712
경북	-3,415	-8,250	-6,939	-7,663	-7,193	-9,767	-10,187	-11,885	-11,644	-18,637
경남	-1,969	-5,284	-3,321	-3,539	-3,655	-7,052	-8,804	-11,763	-14,056	-18,919
제주	-507	216	1,038	2,397	2,214	2,507	2,630	1,381	-556	-577

자료: 통계청. (2021h). 시도/각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

통계청. (2021i).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성별 청년(20-34세)의 17개 시도별 지역 간 순이동¹⁾

2020년 기준 17개 시도별 성별 청년(20-34세)의 순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큰 순유입 규모를 보인 서울의 경우 남성(10,473명)보다 여성(23,556명)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다음으로 순유입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경기의 경우 남성(34,366명)이 여성(27,268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순유출 특성이 관측된 지역 중 남성보다 여성의 순유출이 더 크게 나타난 지역은 부산, 대구 등이며,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여성 청년의 순유출이 남성 청년의 순유출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 남성 청년(20-34세)의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세(2011-2020년) (단위: 명)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4,842	-1,331	-3,057	572	-5,644	-2,000	4,867	6,249	12,630	10,473
부산	-7,881	-6,934	-5,920	-5,291	-4,311	-4,951	-5,491	-6,337	-5,916	-4,045
대구	-5,176	-4,712	-4,684	-5,003	-4,051	-3,204	-3,743	-4,093	-6,743	-4,501
인천	4,482	5,179	4,668	1,789	1,693	2,056	1,289	1,255	447	-2,484
광주	-887	-1,583	-1,363	-1,781	-2,847	-1,819	-2,382	-2,008	-1,625	-1,470
대전	346	75	-44	-1,017	-1,885	-698	-1,581	-1,584	-1,837	-683
울산	824	1,814	1,112	1,130	747	-1,730	-3,282	-3,578	-2,521	-3,077
세종	-	1,801	1,005	3,646	5,704	3,817	4,073	4,345	3,185	1,954
경기	20,653	21,306	19,241	17,981	20,576	25,985	22,696	28,626	27,430	34,366
강원	-956	-2,369	-1,081	-1,618	31	-3,229	-2,423	-4,490	-2,951	-1,576
충북	-95	-328	-662	-420	-550	-497	-718	648	-533	-534
충남	2,326	1,780	2,252	1,806	1,289	1,518	2,596	934	-881	-936

1)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연령을 준용하여 19-34세 연령 인구를 관측하고자 하였으나, 성별 구분은 통계청 집계자료가 5세 단위로만 공표되고 있어 19세를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밝힌다.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북	-2,042	-4,107	-3,578	-4,210	-3,719	-4,013	-4,266	-5,659	-5,458	-4,741
전남	-3,912	-3,865	-3,744	-3,020	-2,522	-3,935	-3,703	-3,768	-3,362	-5,419
경북	-1,634	-4,242	-3,418	-4,124	-3,913	-4,921	-4,465	-5,152	-5,144	-8,585
경남	-902	-2,616	-1,141	-1,443	-1,609	-3,631	-4,876	-5,960	-6,450	-8,435
제주	-304	132	414	1,003	1,011	1,252	1,409	572	-271	-307

자료: 통계청. (2021i).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6〉 여성 청년(20-34세)의 17개 시도별 순이동 추세(2011-2020년) (단위: 명)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3,650	34	88	3,981	-2,066	759	10,566	16,043	24,073	23,556
부산	-6,240	-6,097	-4,790	-3,496	-2,850	-3,569	-4,014	-4,569	-3,723	-1,594
대구	-3,403	-3,456	-3,349	-3,768	-2,906	-2,057	-1,928	-2,361	-4,416	-2,385
인천	4,814	5,031	3,965	1,863	1,163	1,049	-38	472	38	-2,460
광주	-454	-1,707	-1,457	-1,845	-3,028	-2,491	-2,433	-1,725	-1,195	-1,559
대전	346	-123	-32	-1,383	-2,782	-946	-1,747	-1,993	-2,346	-1,091
울산	330	870	744	567	-178	-1,081	-1,979	-2,508	-2,713	-3,288
세종	0	1,753	1,221	4,535	6,793	4,144	4,574	4,252	3,397	1,804
경기	18,087	19,918	17,861	13,244	17,607	21,344	16,005	21,134	19,359	27,268
강원	-1,864	-2,593	-2,464	-2,673	-2,277	-2,002	-2,114	-3,487	-2,624	-2,870
충북	-289	-1,011	-921	-1,079	-838	-1,335	-1,655	-1,878	-2,231	-2,197
충남	928	468	482	-86	-75	-177	-47	-1,497	-3,026	-3,966
전북	-2,227	-3,555	-3,535	-3,292	-3,016	-3,633	-4,041	-5,625	-5,696	-5,273
전남	-3,436	-3,332	-2,932	-2,707	-1,801	-3,794	-3,513	-5,220	-5,803	-6,640
경북	-1,969	-4,120	-3,688	-3,562	-3,264	-4,646	-5,578	-6,617	-6,251	-9,555
경남	-737	-2,123	-1,750	-1,589	-1,585	-2,794	-3,254	-5,157	-6,606	-9,499
제주	-236	43	557	1,290	1,103	1,229	1,196	736	-237	-251

자료: 통계청. (2021i).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청년가구 구성

가. 청년가구의 세대구성별 가구 구성 형태

청년(20-34세) 세대구성별 가구는 일반가구와 1인 가구 모두 최근 5년(2016-2020년) 간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일반가구는 2016-2017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는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가구의 증가율에 비하여 1인 가구의 증가율이 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20-34세) 세대구성별 특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 청년이 가구 주인 일반 가구가 최근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에도 관측기간 내내 남성 1인 가구 수가 여성 1인 가구 수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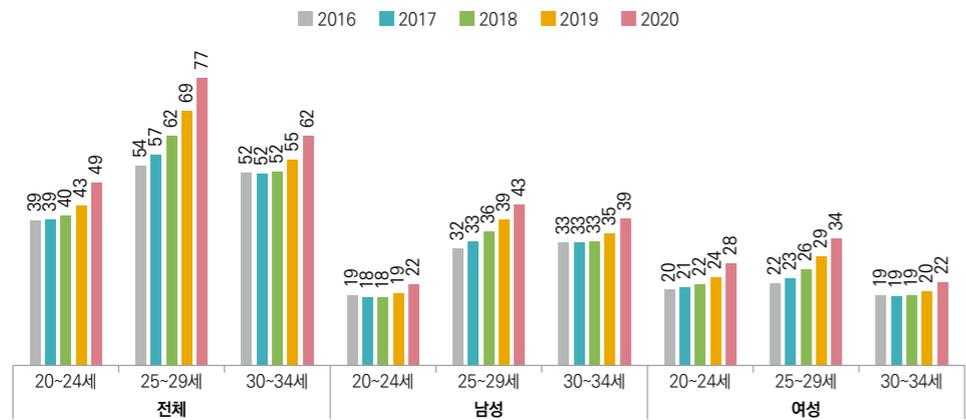
〈표 1-7〉 청년(20-34세)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2016-2020년) (단위: 명, %)

구분	가구의 연령 20-34세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년 변화율
전체	일반가구 수	2,704,310	2,679,763	2,701,694	2,804,912	3,027,720	11.96
	1인가구 수	1,448,936	1,478,618	1,542,349	1,672,464	1,885,312	30.12
남성	일반가구 수	1,712,902	1,671,007	1,651,375	1,681,372	1,771,056	3.40
	1인가구 수	834,881	848,163	876,599	940,948	1,044,704	25.13
여성	일반가구 수	991,408	1,008,756	1,050,319	1,123,540	1,256,664	26.76
	1인가구 수	614,055	630,455	665,750	731,516	840,608	36.89

자료: 통계청. (2021f). 가구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인 가구와 관련하여 세부 연령대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 기간 남성과 여성 모두 25-29세 연령층의 1인 가구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청년(20~34세) 5세 단위 1인 가구 현황(2016~2020년)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2021f).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구분	가구주의 연령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년 변화율
읍부	20~24세	1.3	1.3	1.3	1.3	1.3	0.0
	25~29세	1.7	1.7	1.7	1.6	1.6	-5.9
	30~34세	2.5	2.4	2.3	2.3	2.2	-12.0
면부	20~24세	1.8	1.8	1.8	1.7	1.7	-7.3
	25~29세	1.3	1.3	1.3	1.3	1.2	-7.7
	30~34세	2.4	2.3	2.2	2.2	2.1	-12.5
동부	20~24세	1.8	1.8	1.7	1.7	1.6	-7.5
	25~29세	1.3	1.3	1.3	1.2	1.2	-7.7
	30~34세	1.5	1.5	1.5	1.5	1.4	-6.7
전국	20~24세	2.2	2.1	2.1	2	1.9	-13.6
	25~29세	1.7	1.6	1.6	1.6	1.5	-10.0
	30~34세	1.7	1.6	1.6	1.6	1.5	-10.0

자료: 통계청. (2021g).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청년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가구주가 청년(20~34세)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펴본 청년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양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청년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를 세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30~34세 2명, 25~29세 1.5명, 20~24세 1.2명으로 가구주가 젊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은 경향이 관측되고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대가 30~34세의 경우 가구원 수 감소율이 가장 큰 특성이 관측되고 있다.

표 1-8 청년(20~34세) 5세 단위 평균 가구원 수(2016~2020년) (단위: 명, %)

구분	가구주의 연령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년 변화율
전국	20~24세	1.3	1.3	1.3	1.2	1.2	-7.7
	25~29세	1.6	1.5	1.5	1.5	1.5	-6.3
	30~34세	2.2	2.2	2.1	2	2	-9.1
	20~34세	1.7	1.7	1.6	1.6	1.6	-7.8

청년인구 동태 요약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현재 1,051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92만명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져 2030년 869만명, 2040년 659만명, 2050년 537만명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년부양비의 큰 폭의 증가로 인해 증가했으며, 향후 노년부양비 급격한 증가에 따라 총부양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17개 시도별 지역간 순이동은 서울, 인천, 세종, 경기에서 순유입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순유출이 관측되고 있다. 가구 구성에서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증가율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2장 생애주기별로 본 청년의 삶



제1절 학습기

1. 진학 결정

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미진학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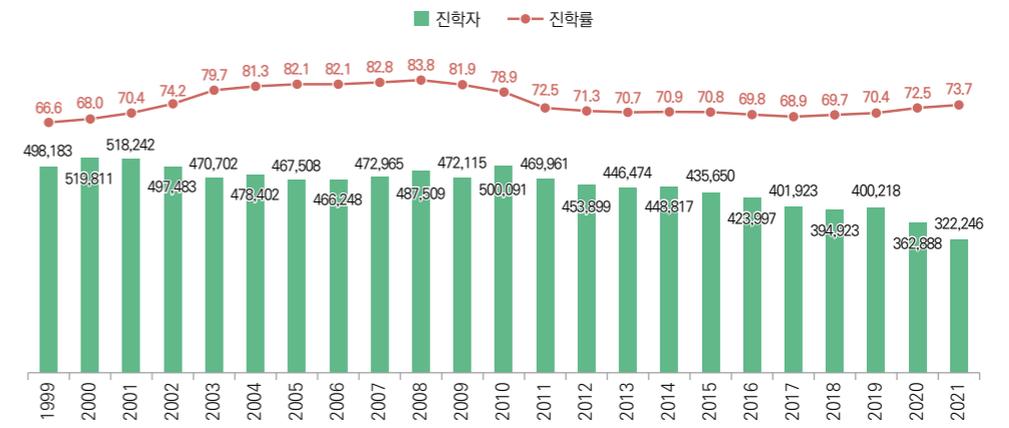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이 높은 나라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우 급감했다.

이후 다소 감소해서 2016년 최저치인 69.8%를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9년보다 1.9%포인트 증가한 72.5%였고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한 73.7%를 보였다.

다만 이 시기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졸업자는 약 6만 8천명 감소하여 약 12%포인트가 감소하였고 2021년 졸업자는 2020년 대비 약 6만 2천명 감소하여 약 12.6%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림 2-1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 진학 추이

(단위: 명, %)



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1.12.30. 인출.

우리나라의 높은 진학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0년 69.81%로 OECD 평균인 45.48%보다 24.33%포인트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위였고 2019년은 2위로 나타났다.

〈표 2-1〉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69.99	69.75	69.57	69.80	69.81
OECD 평균	43.07	43.73	44.29	44.98	45.48

주: 한국의 '08년~'18년, '20년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교육지표」 기준 1위, '19년 2위(1위 아일랜드(70.0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교육지표.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020년 기준 대학 미진학 사유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가 3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4.3%),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14.5%),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20년 기준 남성, 여성 청년 모두 빠른 취업과 대학 진학 생각이 없어서 등이 주요한 사유로 확인된다.

〈표 2-2〉 고등교육기관 미진학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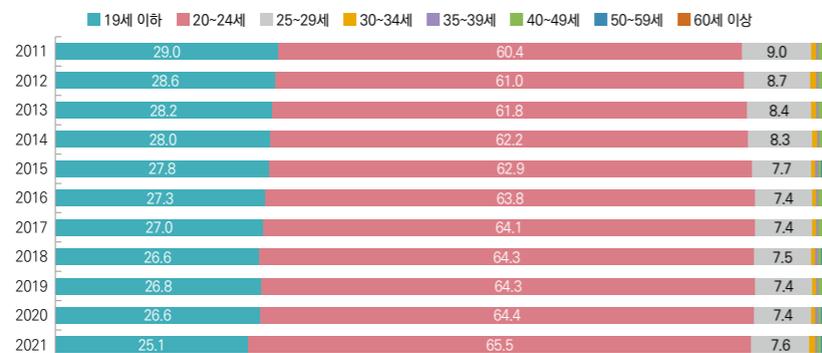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0.3	1.5	2.8	14.2	1.2	1.8	1.6	11.9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40.2	33.0	35.9	40.2	40.2	38.3	35.7	35.0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8.5	15.7	11.7	2.8	10.7	16.0	15.3	9.4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12.3	19.6	16.3	15.5	13.8	16.6	17.4	13.2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34.3	28.9	27.4	23.2	29.4	23.2	25.5	25.6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4.0	1.3	4.2	4.0	3.5	3.7	4.5	5.0
기타	0.3	0.0	1.7	-	1.3	0.2	0.0	-
모름/무응답	-	0.0	-	-	-	0.3	-	-

주: 2019년까지는 15~39세, 2020년은 18~34세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나. 고등교육기관별 연령별 재적학생 구성비

그동안 주로 20대 초반 청년들의 구성비가 높았던 고등교육기관의 연령별 재적학생 구성비는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 고등교육기관 연령별 구성비는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적령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24세 이하의 구성비가 대학의 2011년 89.4%, 2012년 89.6%, 2013년 90%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91.0%였다. 그러나 이후 24세 이하 연령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90.6%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대학 연령별 재적학생 구성비 (단위: %)



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DB

특히 연령별 학생 비율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신입생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이 부분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2016년의 신입생 중 만 19세(재수생 포함)까지의 비율은 85.7%였지만 2021년의 비율은 77.4%로 8.3%포인트가 떨어졌다. 이 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의 연령 구성비에 의해 앞으로의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연령별 구성비에 있어서 점차 고등교육기관 적령 학생 연령대의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표 2-3〉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연령별 구성비 (단위: %)

연도	17세이하	18세	19세	20대초	20대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16	0.7	68.3	16.7	10.0	1.2	0.9	1.3	0.7	0.1	0.0
2017	0.6	66.2	18.1	10.6	1.2	0.9	1.3	0.8	0.2	0.0
2018	0.6	65.1	18.1	11.5	1.4	0.9	1.3	0.9	0.2	0.0
2019	0.5	64.5	19.0	11.5	1.4	0.8	1.2	0.9	0.2	0.0
2020	0.5	58.9	22.0	13.2	1.7	1.0	1.4	1.1	0.3	0.0
2021	0.7	55.9	20.8	15.3	2.2	1.4	1.8	1.6	0.5	0.1

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1.12.30. 인출.

2. 대학생의 삶과 진로

가. 학비와 조달 방법

1) 등록금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21년 기준 입학금 171천원, 수업료 5,951천원이고, 계열별로는 의학이 9,396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학 6,701천원, 예체능 6,667천원, 자연과학 6,398천원, 인문사회 5,190천원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2-4〉 대학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기준연도	입학금	수업료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학
2019	416	5,884	5,198	6,312	6,713	6,747	9,239
2020	291	5,914	5,193	6,344	6,711	6,757	9,326
2021	171	5,951	5,190	6,398	6,667	6,701	9,398

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자료: 대학알리미. 각 연도. <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2021.12.30. 인출.

전국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21년 기준 입학금 286천원, 수업료 4,906천원이고, 계열별로는 자연과학이 5,772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체능 5,768천원, 인문사회 4,913천원, 공학 4,844천원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2-5〉 전문대학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기준연도	입학금	수업료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2019	452	4,933	4,910	5,770	5,804	4,887
2020	369	4,912	4,915	5,759	5,766	4,865
2021	286	4,906	4,913	5,772	5,768	4,844

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자료: 대학알리미. 각 연도. <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2021.12.30. 인출.

2)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전문대학의 경우 2016년 3,324천원에서 2020년 3,528천원으로 204천원이 증가했고 대학의 경우 2016년 3,287천원에서 3,352천원으로 65천원 증가했다.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2019년에 장학금 지급액이 감소했지만 2020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여액 (단위: 천원)

기준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문대학	3,324	3,420	3,500	3,422	3,528
대학	3,287	3,378	3,344	3,292	3,352

자료: 대학알리미. 각 연도. <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2021.12.30. 인출.

3) 학자금 대출

대학의 학자금 대출현황은 일반상환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받은 경우를 보면, 2021년 1학기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의 3.1%가 3,185천원을 대출받았고, 취업후 상환의 경우는 재학생의 7.3%가 2,456천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의 경우 전체 대출 수혜율은 2018년 1학기 3.8%에서 2021년 1학기 3.1%로 감소하였고, 등록금 대출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등락이 있었지만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취업후 상환의 경우는 전체 대출은 8.6%에서 7.3%로 감소했고, 등록금 대출도 4.4%에서 4.2%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7〉 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원)

기준연도	학기	일반상환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2018	2	3.75	2,765,450	2.40	2,916,351
2019	1	4.06	3,035,702	2.89	3,095,514
2019	2	3.40	2,794,430	2.20	2,995,430
2020	1	3.48	3,056,975	2.50	3,081,435
2020	2	3.05	2,812,262	2.07	2,924,011
2021	1	3.10	3,184,845	2.33	3,123,928

기준연도	학기	취업후상환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2018	2	8.64	2,247,709	4.37	2,197,626
2019	1	7.70	2,391,856	4.26	2,378,078
2019	2	9.19	2,232,421	4.79	2,213,187
2020	1	7.95	2,408,888	4.58	2,392,798
2020	2	8.26	2,173,809	4.42	2,103,156
2021	1	7.34	2,455,789	4.23	2,437,124

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표 2-8〉 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원)

기준연도	학기	일반상환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2018	2	4.80	2,469,351	3.06	2,431,119
2019	1	5.45	2,892,888	4.21	2,718,931
2019	2	3.89	2,531,340	2.61	2,497,676
2020	1	4.31	2,915,386	3.42	2,694,832
2020	2	3.46	2,517,073	2.45	2,427,436
2021	1	4.07	3,022,348	3.37	2,717,484

기준연도	학기	취업후상환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2018	2	11.98	2,110,705	6.07	1,881,145
2019	1	10.22	2,403,954	6.26	2,189,576
2019	2	12.97	2,091,232	7.00	1,871,035

기준연도	학기	취업후상환			
		전체(등록금+생활비)		등록금(학비)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수혜자비율	1인당 평균금액
2020	1	10.31	2,372,394	6.53	2,142,514
2020	2	11.44	2,008,649	6.28	1,722,980
2021	1	10.00	2,435,959	6.38	2,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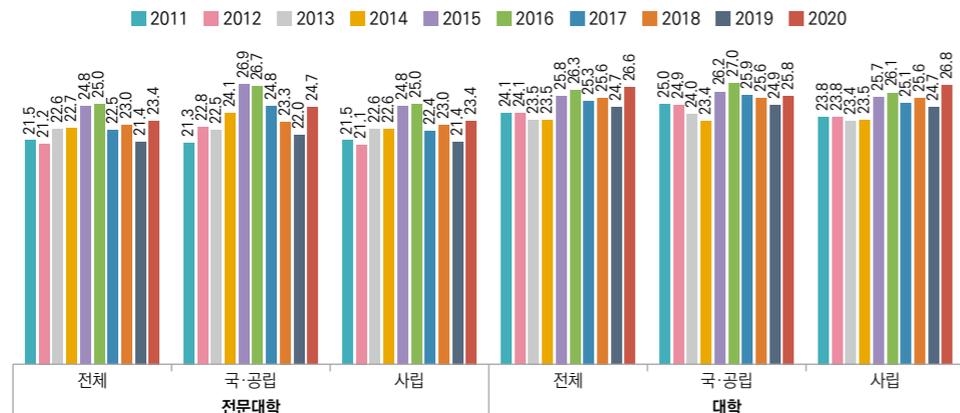
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 도
자료: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자료를 이용하여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대비 휴학률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 대비 휴학률은 2016년까지 증가하여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2020년 휴학률이 다시 증가해서 전문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휴학률인 23.4%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 휴학률이 1.9%포인트 증가해 26.6%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휴학률로 나타났다. 이는 휴학률이 가장 낮았던 2013년에 대비해보면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의 휴학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사립대학의 휴학률은 2.1%포인트 증가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휴학률이며 가장 높은 휴학률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림 2-3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휴학률 (단위: %)



주: 휴학률 = 휴학자수 / 재적학생수
자료: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다. 고등교육기관 중도탈락 사유

고등교육기관의 중도탈락 사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퇴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대학은 2011년에 미등록이 18%, 미복학이 44.5% 였고 자퇴는 35.9%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은 미등록이 15.4%, 미복학이 33.9%로 2.6%포인트, 2.0%포인트 감소했지만 자퇴는 49.5%로 13.6%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은 2011년에 미등록이 17.2%, 미복학이 30.4%, 자퇴가 45.4%였다. 반면 2021년에는 미등록이 16.1%로 1.1%포인트 감소, 미복학이 25.3%로 5.1%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자퇴는 55.5%로 10.1%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대학의 경우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이 매우 줄었다는 점이다. 2011년 전체의 5.6%를 차지하던 학사경고 제적이 2021년에는 1.8%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 2-9〉 전문대학, 대학의 중도탈락 사유별 비율 (단위: %)

연도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제적	재학연한초과	기타
전문대학								
2011	18.0	44.5	35.9	0.2	0.0	0.1	0.0	1.2
2012	17.8	42.2	38.8	0.2	0.0	0.1	0.3	0.6
2013	16.3	44.1	38.5	0.2	0.0	0.1	0.1	0.7
2014	15.0	45.0	38.8	0.2	0.0	0.1	0.2	0.7
2015	14.6	45.4	37.8	0.2	0.0	0.1	0.1	1.9
2016	15.2	42.6	39.1	0.2	0.0	0.1	0.0	2.8
2017	14.4	43.8	39.6	0.2	0.0	0.1	0.0	1.9
2018	14.6	40.4	43.0	0.3	0.0	0.1	0.1	1.5
2019	15.1	37.4	45.5	0.2	0.0	0.1	0.1	1.6
2020	13.5	38.5	46.8	0.2	0.0	0.1	0.0	0.8
2021	15.4	33.9	49.5	0.1	0.0	0.1	0.1	1.0
대학								
2011	17.2	30.4	45.4	5.6	0.1	0.2	0.1	1.1
2012	17.0	30.1	46.9	5.1	0.0	0.0	0.2	0.6
2013	16.6	32.1	45.7	4.8	0.0	0.0	0.2	0.7
2014	17.3	33.5	43.9	4.4	0.0	0.0	0.2	0.7
2015	16.9	33.6	44.0	3.9	0.0	0.0	0.2	1.4
2016	17.4	32.7	45.3	3.2	0.0	0.0	0.2	1.1
2017	17.0	31.5	46.7	3.1	0.0	0.0	0.3	1.5

연도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제적	재학연한초과	기타
2018	16.2	30.5	47.0	2.7	0.0	0.0	0.2	3.4
2019	16.9	29.9	49.5	2.6	0.0	0.0	0.3	0.9
2020	15.8	28.4	52.3	2.3	0.0	0.0	0.3	0.9
2021	16.1	25.3	55.5	1.8	0.0	0.0	0.3	1.0

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1.12.30. 인출.

라. 고등교육기관 졸업 유예현황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 조건을 만족하고도 졸업하지 않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학사졸업 유예학생들이 늘고 있다. 졸업 유예 학생에 대한 본격적인 통계조사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 데이터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졸업 유예자 수는 점차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2019년 202명에 불과하던 졸업 유예자 수가 2020년 263명, 2021년 340명으로 30.2%포인트, 29.3%포인트 증가해 약 30%포인트씩 늘고 있고 대학의 경우 2019년 13,241명, 2020년 16,700명, 2021년 19,016명으로 26.1%포인트, 1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0〉 고등교육기관 졸업 유예자

과정	연도	유예자수	증감률
전문대학과정	2019	202	
	2020	263	30.2%p
	2021	340	29.3%p
대학과정	2019	13,241	
	2020	16,700	26.1%p
	2021	19,016	13.9%p

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1.12.30. 인출.

마. 학교 졸업까지 소요 기간

대학을 졸업한 29세 이하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는 데까지 드는 평균 기간은 2021년 현재 3년제 이하는 36개월, 4년제는 62개월이 소요된다. 남성 청년의 경우 군입대 등으로 여성 청년에 비하여 평균 3년제 이하는 15개월, 4년제는 19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 흐름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남성 청년의 경우 군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여성 청년들은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표 2-11〉 학교 졸업까지 소요 기간(15~29세)

(단위: 개월)

	대졸자			3년제 이하			4년제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05	46	60	37	34	46	26	61	76	51
2008. 05	48	62	38	34	47	26	62	76	52
2009. 05	48	62	38	34	46	26	63	77	52
2010. 05	48	62	39	33	45	26	63	78	53
2011. 05	49	63	40	34	46	27	63	77	53
2012. 05	49	63	40	34	47	27	63	77	54
2013. 05	49	62	40	34	46	27	62	76	53
2014. 05	49	63	41	34	46	27	62	75	52
2015. 05	49	62	41	34	45	27	61	74	52
2016. 05	51	63	42	35	47	28	61	75	52
2017. 05	50	62	42	35	44	28	61	74	52
2018. 05	51	62	43	35	45	29	61	74	52
2019. 05	51	61	44	36	44	29	61	73	53
2020. 05	51	61	44	36	44	29	62	73	54
2021. 05	51	61	45	36	44	29	62	73	5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다른 지표들과 달리 고등교육기관 학제별로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원 졸업자가 진학을 선택한 진학률은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자의 경우 2016년 7.3%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2020년은 6.6%로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대학 졸업자의 진학은 해당 대학을 졸업한 이후 타 전문대학이나 대학으로 진학한 졸업자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들이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대학원 석사과정의 자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생도 2016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2016년 5.0%였던 졸업자의 진학률은 2020년 6.6%로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진학률 (단위: %)

연도	전체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2016	6.3	5.0	7.3	6.4
2017	6.2	5.3	6.8	6.2
2018	6.2	5.8	6.7	5.8
2019	6.5	6.5	6.8	6.2
2020	6.6	6.6	6.6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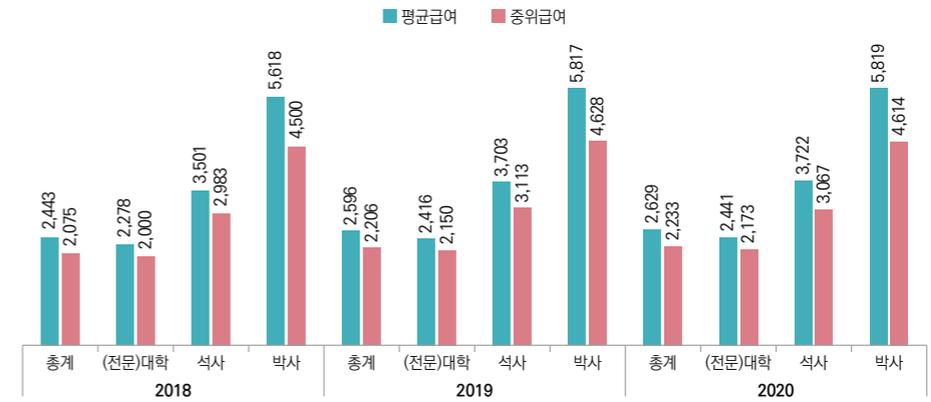
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각 연도.

사. 대학졸업자의 초임급여 변화²⁾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평균 급여와 중위 급여 모두 전반적으로 2018년 이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자의 평균 급여는 2018년에 2,443천원이었고 2019년 2,596천원으로 153천원 올랐고, 2020년 2,629천원으로 33천원 올랐다. (전문)대학의 경우 2018년 2,278천원, 2019년 2,416천원, 2020년 2,441천원으로 각각 138천원, 25천원 올랐다. 석사의 경우 2018년 3,501천원, 2019년 3,703천원, 2020년 3,722천원으로 202천원, 19천원 올랐고 박사의 경우 2018년 5,618천원, 2019년 5,817천원, 박사 5,819천원으로 199천원, 2천원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2018년대비 2019년은 6.3% 올랐지만 2019년대비 2020년은 1.3%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중위 급여의 경우는 평균 급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2020년 석사와 박사의 중위 급여가 2019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학졸업자의 초임급여의 통계는 2018년 2월 졸업자(2017.8월 포함)의 2018년 12월 31일 당시 취업자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되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 약 27만~29만명을 조사하여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발표한 결과이다.

그림 2-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초임급여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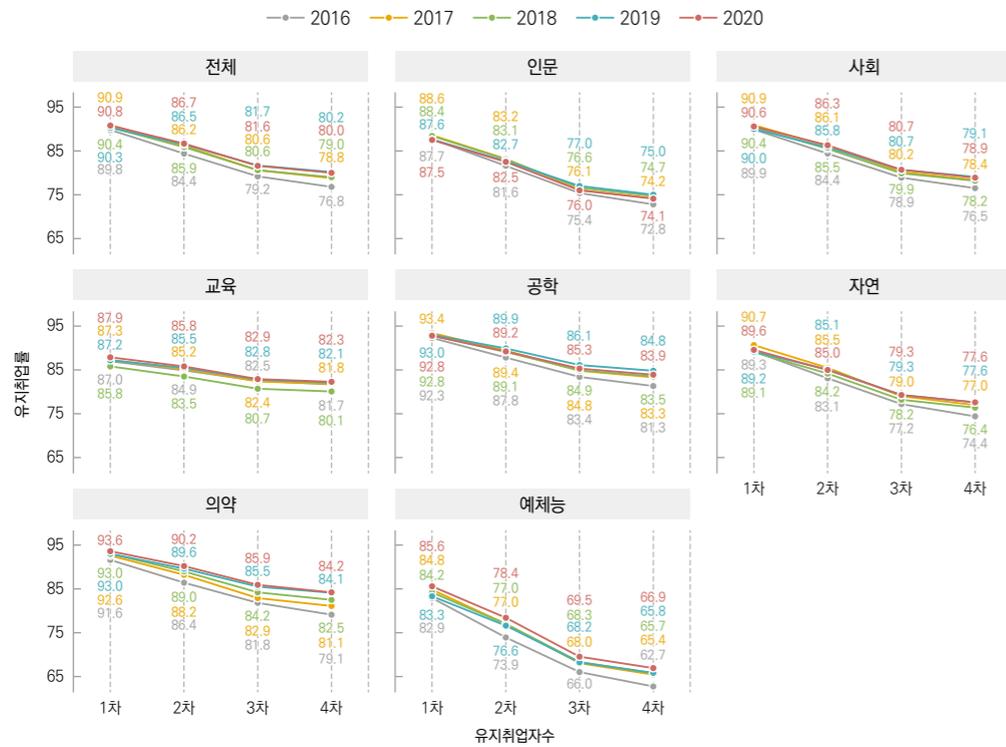


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각 연도.

아. 대학 계열별 졸업 후 고용유지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자의 취업 후 분기별로 취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유지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 전체적으로 볼 때 2020년에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공학 계열과 인문 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에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거나 최고치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유지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5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고등교육기관)



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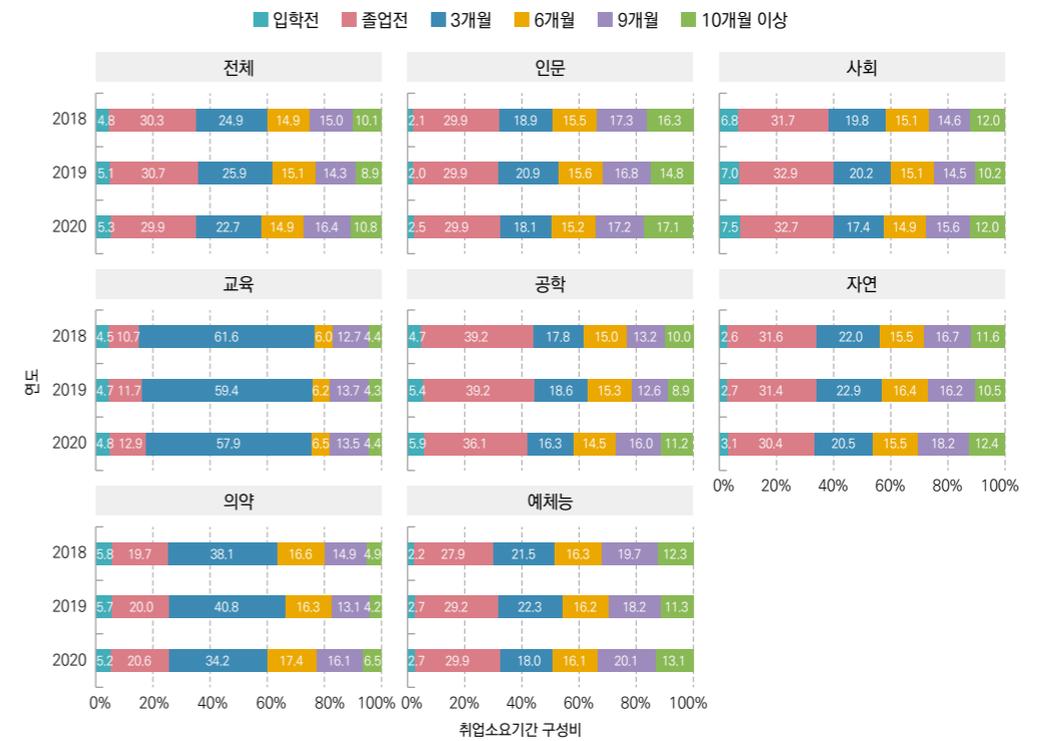
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준비기간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취업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2018년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비율이 60.0%였지만 2020년에는 57.9%로 2.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9개월 이상 취업을 준비한 학생의 비율은 2018년 25.1%에서 27.2%로 2.1%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경우 의약 계열의 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의 비율이 2018년 63.6%에서 60.0%로 3.6%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고 가장 감소폭이 작은 계열은 0.4%포인트 감소한 인문 계열이었다. 반면 취업준비기간이 9개월 이상의 비율이 2018년 대비 2020년 증가폭이 가장 큰 계열은 의약계열로 2.8%포인트, 가장 증가폭이 작은 계열은 0.7%포인트 증가한 인문계열로 나타났다.

그림 2-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소요기간

(단위: 개월)



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각 연도.

3. 고졸자의 삶과 진로

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9년까지 학교의 자체조사 체제였으나 2020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취업률 조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연계로 그 조사 방법을 전환하였다. 2020년에는 첫 조사로 시범 조사의 형태로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 다양한 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0년 첫 시행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50.7%였다. 이듬해인 2021년은 4.7%포인트 높아진 5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2020년 27.7%에서 2021년 28.6%로 0.9%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진학률의 경우는 2020년 42.5%였고 2021년 45%로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연도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	상세 자료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2020	50.7	42.5	27.7	89,998	24,938	38,215	1,585	970	24,920
2021	55.4	45.0	28.6	78,994	22,583	35,529	1,809	862	18,211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x 100 /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x 100
 ** 미취업자: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공공데이터베이스(DB) 미등록으로 졸업 후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자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보도자료

나. 직업계고 시도별 취업률 및 진학률

직업계고의 시도별 취업률은 2020년 경북이 59.6%, 대구가 53.7%로 높은 편에 속했고 2021년 도 경북과 대구가 각각 65.1%, 61.8%로 60%를 넘기며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취업률의 증가폭이 가장 큰 시도는 경남으로 7.9%포인트가 증가했고 울산도 7.4%포인트 증가했다. 진학률의 경우 2020년은 제주가 61.6%, 부산이 50.5%로 높았고 2021년은 제주가 60.2%, 부산이 53.1%로 높게 나타났다. 진학률의 증가폭이 가장 큰 시도는 서울과 인천으로 각각 5.8%포인트,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직업계고 졸업자 지역별 취업률 및 진학률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서울	4,809	52.2	5,104	34.7	4,129	55.5	5,320	40.5
부산	1,437	46.9	3,241	50.5	1,266	52.8	2,882	53.1
대구	1,250	53.7	2,370	49.3	1,194	61.8	2,119	50.2
인천	1,763	50.4	2,202	37.4	1,557	57.2	2,164	42.8
광주	691	47.2	1,313	45.9	637	52.3	1,194	48.1
대전	881	55.3	1,113	40.1	739	58.9	1,025	43.2
울산	573	45.8	1,163	47.0	518	53.2	1,053	50.7
세종	56	53.3	84	42.9	48	53.3	77	44.8
경기	4,812	48.4	8,195	44.3	4,306	51.5	7,835	47.3
강원	781	50.0	1,212	41.7	683	50.3	1,091	42.5
충북	1,078	52.1	1,975	47.6	995	58.1	1,952	52.0
충남	1,310	51.7	1,799	40.4	1,187	56.6	1,551	41.0
전북	935	47.2	1,893	46.7	780	49.1	1,538	46.0
전남	1,284	49.5	2,140	43.4	1,254	55.5	1,808	42.7
경북	1,805	59.6	1,722	34.1	1,863	65.1	1,369	30.2

구분	2020				2021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경남	1,211	49.7	1,760	40.7	1,164	57.6	1,725	44.5
제주	262	47.3	929	61.6	263	52.1	826	60.2

자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보도자료.

다. 직업계고 한국표준교육분류별³⁾ 취업률, 진학률

직업계고 졸업생을 한국표준교육분류를 통해 분류한 결과로 취업률과 진학률을 살펴보면 가장 취업률이 높은 분류가 보건 및 복지 분류로 취업률이 6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학, 제조 및 건설 분류 60.7%, 교육 분류 56.3% 순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의 경우는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인 분류가 교육 분류로 74.0%였고 보건 및 복지가 64.6%를 보였다.

〈표 2-15〉 직업계고 졸업자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률 및 진학률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현황		진학자 현황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	-	-	-	-
교육	200	27	56.3	148	74.0
예술 및 인문학	7,461	1,356	42.2	4,150	55.6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	-	-	-	-
경영, 행정 및 법	20,405	5,269	51.3	9,802	48.0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42	5	26.3	23	54.8
정보통신 기술(ICTs)	3,668	996	54.3	1,750	47.7
공학, 제조 및 건설	32,500	11,182	60.7	12,276	37.8
농림어업 및 수의학	2,559	595	49.7	1,267	49.5
보건 및 복지	2,191	517	68.5	1,416	64.6
서비스	9,968	2,636	52.3	4,697	47.1

자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보도자료.

3)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교육분류 기준

삶의 궤적: 교육과 진로

청년이 되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삶의 경로가 진학이다. 2021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의 73.7%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 비율은 2000년 68%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2008년 83.6%를 정점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학에 재적학생의 연령 구성에서 24세 이하의 비중과 신입생 중 19세 이하의 비율이 각각 줄고 있고, 최근 들어 휴학을, 졸업유예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학교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3년제 이하는 36개월, 4년제는 62개월이 소요된다.

2021년 1학기 기준 대학생들은 평균 6백만원 가까이, 전문대학생들은 평균 5백만원 가까이 수업료로 지불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장학금으로 대학 3.5백만원, 전문대학 3.4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2021년 1학기 기준으로 대학생의 약 2.3%(등록금 일반상환)에서 7.3%(등록금+생활비 취업후 상환)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대학졸업 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은 3개월 이내 취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9개월 이상 취업자 비율이 증가해 전반적으로 취업준비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경우 취업과 진학으로 진로가 나뉘어지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졸업생(55.4%)이 취업을, 나머지(45.0%)는 진학을 선택하였다. 2020년에 비해 취업률은 증가했고, 진학률은 감소했다. 분류별로는 보건 및 복지, 공학, 제조 및 건설, 교육 분류의 취업률이 높고, 교육, 보건 및 복지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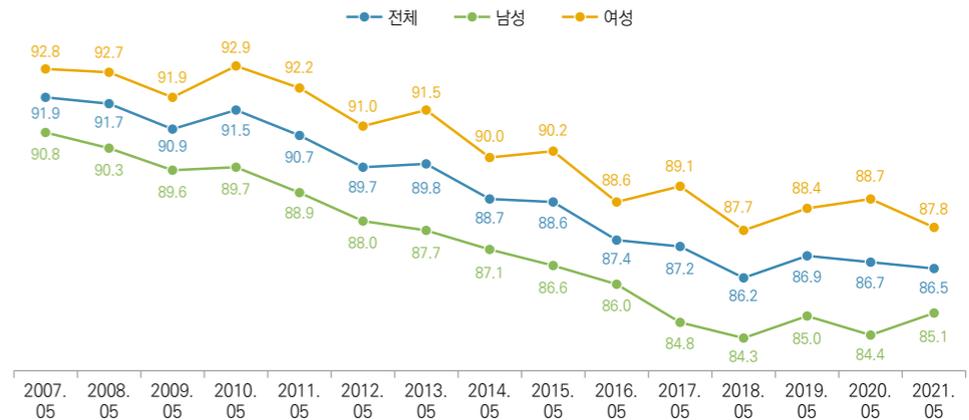
제2절 노동진입기

1. 첫 일자리 진입

가. 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 경험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29세 이하 청년은 2021년 현재 4백 79만 여명으로 이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은 4백 14만 명이며, 비율로는 86.5%를 차지하였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 청년의 취업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 청년 모두 2007년 이후 14년 사이 대략 5%포인트 가량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림 2-7 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 경험(15~29세)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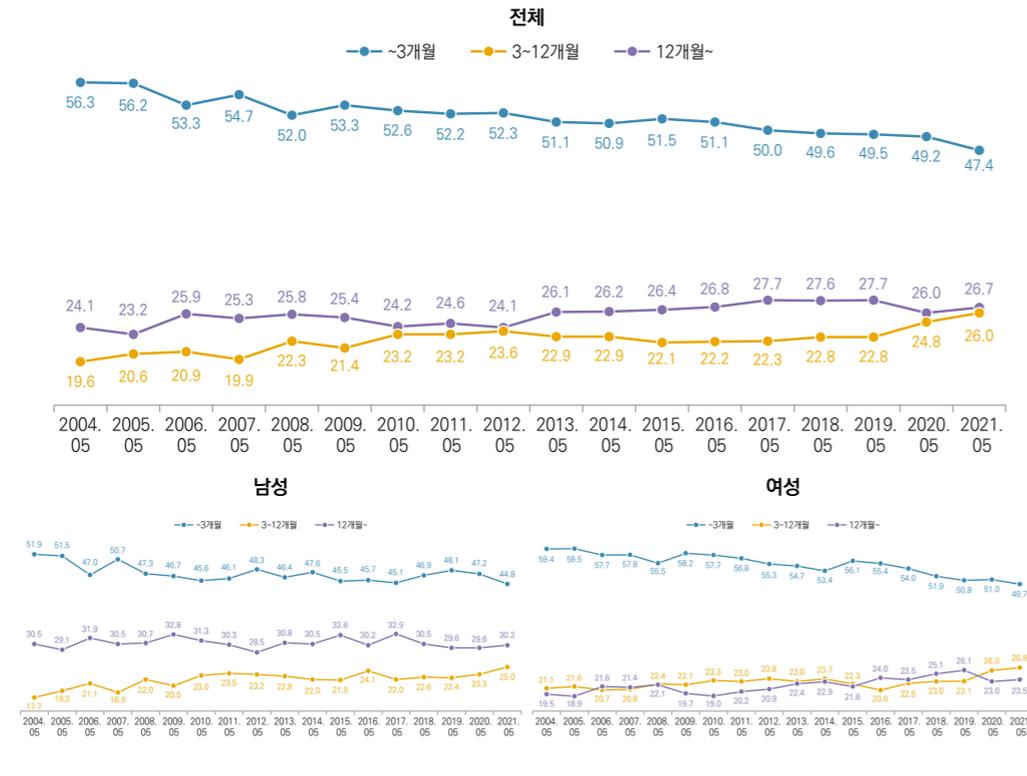
나.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 기간

학교를 마친 청년들은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 까지 평균적으로 10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여성 청년은 그 기간이 대략 8개월 정도로 짧은 반면, 남성 청년은 12개월 정도로 여성 청년에 비하여 더 긴 편이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첫 일자리까지의 진입 기간은 2004~2021년 사이 일부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12개월 이상 첫 일자리 진입이 지연된 이들의 비중이 여성 청년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청년들은 대학교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8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 기간(15~29세)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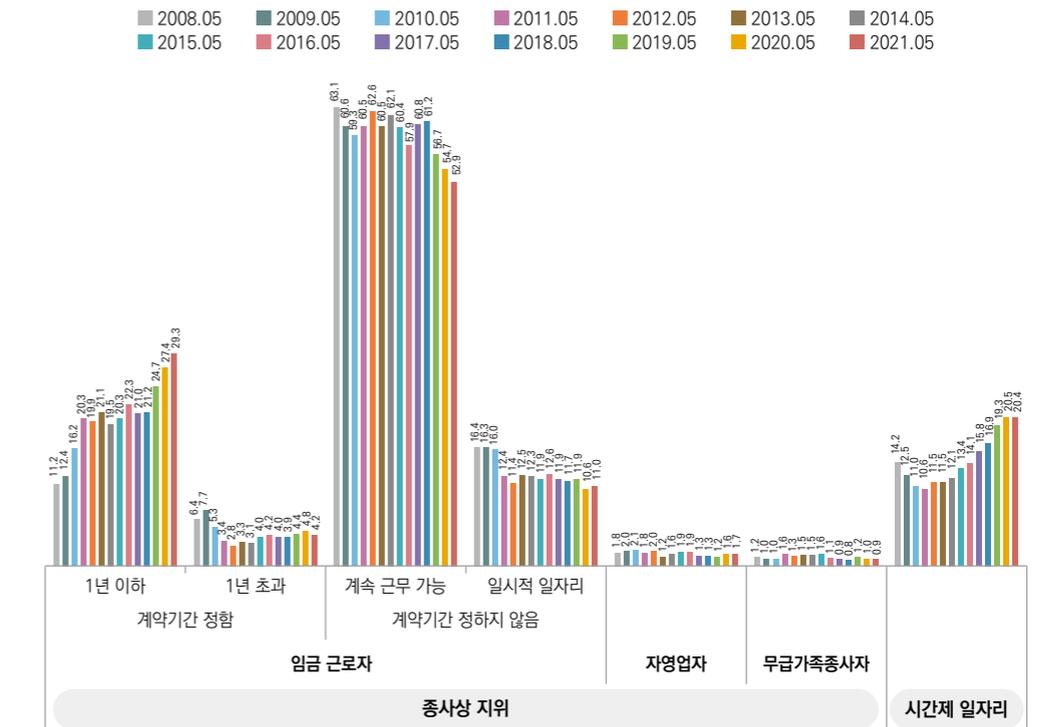
2. 첫 일자리 특성

가.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의 절반 정도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진입하였다. 다만, 이러한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2008년 당시 그 비율이 63.1%였던 반면, 2021년 현재 52.9%로 10.2%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은 11.2%에서 29.3%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더불어 첫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인 비율 역시 2008년 11.4%에서 2020년 20.4%로 크게 늘어나,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15~29세)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나. 청년 창업

30세 이하 청년 창업자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총 17만 4천 개 기업이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었다. 전체 창업 기업의 94.8%가 개인사업자였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 창업의 93.9%를 차지하였다.

최근 들어 창업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청년 창업 기업의 수는 1.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폭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유사하였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창업기업 수가 2016년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창업 기업 수는 다른 부문에 비하여 증가폭이 작았다.

〈표 2-16〉 청년 창업기업 수(30세 이하) (단위: 개)

	전체	부문		산업				
		법인	개인	농림 어업 및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급업	건설업	서비스업
2016	116,815	6,396	110,419	489	4,245	337	3,587	108,157
2017	128,808	6,403	122,405	499	4,637	1,288	3,952	118,432
2018	138,933	7,128	131,805	530	4,594	2,010	4,217	127,582
2019	146,766	8,184	138,582	641	4,323	1,048	4,284	136,470
2020	174,728	9,093	165,635	714	4,248	1,068	4,651	164,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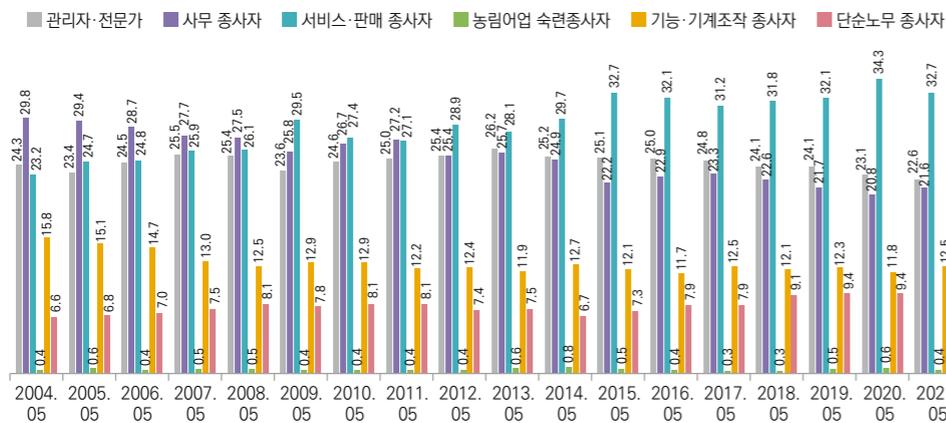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각 연도. 창업기업동향. <https://kosis.kr>에서 2022.1.5. 인출.

다.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직업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첫 일자리는 2021년에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3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자, 전문가가 22.6%를 차지하였다. 사무종사자 역시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에 있으며,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첫 일자리가 단순노무종사자인 비율은 2021년에 이르러 10.2%를 차지하였다.

그림 2-10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직업(15~29세)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첫 일자리의 직업 분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남성 청년들의 경우, 기능·기계조작 종사자의 비율이 2021년에 22%를 차지하여 사무종사자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그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에 있다. 남성 청년 중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져서 2021년에 이르러 첫 일자리의 15%가 단순노무였다.

여성도 사무종사자와 관리자, 전문가인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 청년의 경우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2004년 40.4%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는데, 2021년에 이르러 그 비율이 28.4%로 줄어들었다.

〈표 2-17〉 학교 졸업(중퇴) 후 남녀 청년의 첫 일자리의 직업(15~29세) (단위: %)

	남성					여성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2004. 05	21.3	15.4	23.1	28.2	11.4	26.5	40.4	23.2	6.6	3.0
2005. 05	20.2	14.4	24.5	27.9	11.9	25.7	40.2	24.9	5.7	3.1
2006. 05	19.8	15.6	25.1	26.7	11.9	27.9	38.3	24.5	5.9	3.4
2007. 05	22.0	14.5	26.4	23.5	12.7	28.0	37.7	25.5	5.0	3.5
2008. 05	22.3	14.9	25.1	22.9	13.9	27.9	37.1	26.8	4.5	3.6
2009. 05	19.0	16.2	26.9	24.3	12.9	27.1	33.2	31.4	4.1	3.9
2010. 05	18.1	16.5	27.1	24.2	13.6	29.4	34.3	27.6	4.5	4.0
2011. 05	18.7	17.9	27.1	22.1	13.7	29.9	34.4	27.1	4.5	3.7
2012. 05	18.0	16.4	30.1	23.2	11.7	31.1	32.4	28.0	4.1	4.2
2013. 05	18.6	17.9	28.8	22.1	11.9	32.0	31.7	27.5	4.1	4.0
2014. 05	18.5	15.6	30.2	23.1	11.6	30.2	32.0	29.4	4.8	3.0
2015. 05	17.3	14.1	34.0	21.5	12.3	31.2	28.6	31.7	4.7	3.4
2016. 05	18.3	14.4	34.2	20.5	12.1	30.5	29.7	30.4	4.6	4.5
2017. 05	16.8	14.8	33.0	22.6	12.2	31.3	30.3	29.7	4.3	4.4
2018. 05	18.1	14.8	31.7	21.2	13.7	29.3	29.3	31.9	4.4	5.1
2019. 05	17.0	14.5	32.2	21.2	14.4	30.5	28.1	32.1	4.3	4.9
2020. 05	16.9	13.8	33.1	20.6	14.3	28.7	27.0	35.4	3.9	4.9
2021. 05	16.9	14.1	31.2	22.0	15.1	27.7	28.4	34.0	4.0	5.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라.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

학교를 마치고 처음 진입한 일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은 2021년 현재 18개월로 나타나며, 이러한 평균 근속기간은 2004년 당시 20개월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남성 청년은 첫 일자리 근속 기간이 2021년에 14개월로 여성 청년의 27개월에 비하여 상당히 짧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청년들은 여성 청년들에 비하여 첫 일자리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긴 반면에, 일자리를 지속하는 기간은 짧다는 점에서 남녀 청년이 다른 노동시장 이행 양상을 나타낸다.

【표 2-18】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근속 기간(15~29세) (단위: 개월)

	전체	남자	여자
2004. 05	20	17	27
2005. 05	20	16	27
2006. 05	20	17	27
2007. 05	20	17	27
2008. 05	19	16	27
2009. 05	19	16	27
2010. 05	19	15	26
2011. 05	19	15	26
2012. 05	18	15	26
2013. 05	18	14	25
2014. 05	18	14	24
2015. 05	17	14	24
2016. 05	18	14	24
2017. 05	18	14	24
2018. 05	18	14	25
2019. 05	17	14	25
2020. 05	18	14	26
2021. 05	18	14	27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마.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청년들은 첫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2021년 현재 첫 일자리를 이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46.2%가 근로여건의 불만을 이직 이유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가족적 이유와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2-19】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15~29세) (단위: %)

	근로여건 불만족(보수, 근로시간 등)	개인/가족적이유 (건강, 육아, 결혼 등)	전망이 없어서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	직장휴업, 폐업, 파산 등	그 외
2004. 05	39.3	22.3	8.7	7.3	5.3	3.9	13.2
2005. 05	41.6	21.1	8.8	7.4	5.4	3.7	12.0
2006. 05	41.3	21.2	10.2	7.3	5.1	3.3	11.6
2007. 05	42.4	20.5	9.4	7.7	5.9	3.7	10.3
2008. 05	43.3	19.2	9.5	6.8	6.6	3.0	11.5
2009. 05	43.0	17.6	9.7	6.6	7.2	3.6	12.2
2010. 05	42.6	16.9	10.2	7.5	8.4	2.8	11.4
2011. 05	42.2	18.5	9.8	7.2	8.9	2.5	10.8
2012. 05	44.0	18.0	8.6	8.8	8.6	1.8	10.2
2013. 05	45.1	18.8	8.2	7.6	9.2	2.2	9.0
2014. 05	46.8	17.7	7.8	7.0	10.1	1.9	8.7
2015. 05	47.4	16.8	7.6	6.4	11.2	1.9	8.8
2016. 05	48.6	13.5	7.9	6.3	10.7	2.8	10.2
2017. 05	51.0	13.8	7.2	6.6	12.0	2.4	7.0
2018. 05	51.0	14.2	8.7	6.0	12.4	1.7	6.0
2019. 05	49.7	14.5	8.6	6.9	12.3	2.2	5.8
2020. 05	47.7	14.3	8.8	7.0	12.4	2.9	6.9
2021. 05	46.2	14.5	8.8	7.0	13.2	2.2	8.0
남성	45.1	13.9	9.0	7.3	12.8	2.6	9.4
여성	47.3	15.1	8.7	6.7	13.5	1.9	6.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첫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 당시 5.3%에 불과하였던 반면, 2021년에 이르러 2배가 넘는 13.2%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계약직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이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첫 일자리를 떠나는 청년의 비율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건강이나 육아, 결혼 등 개인, 가족적 이유에 따라 일을 그만둔 비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4년 당시 22.3%였던 반면, 2021년 현재 그 비율이 14.5%로 줄어들었다.

바. 최종학교 전공 일치 여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자리(직장)이 최종학교의 전공과 “매우 일치”하거나 “그런대로 일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현재 47.7%로 “매우 불일치”나 “약간 불일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하여 더 낮았다.

남성 청년은 전공과 일치 비율이 42.3%로, 여성 청년의 52.7%에 비하여 전공과 일치하는 비율이 낮았다. 다만,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모두 일과 전공의 일치 수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2-20】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일치 여부 (15~29세)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불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2004. 05	57.0	43.0	61.8	38.3	53.6	46.4
2005. 05	56.7	43.3	61.1	38.9	53.4	46.6
2006. 05	53.8	46.2	58.4	41.6	50.4	49.5
2007. 05	52.4	47.6	56.7	43.3	49.1	50.9
2008. 05	53.0	47.0	59.2	40.8	48.3	51.7
2009. 05	52.8	47.2	57.9	42.1	49.0	51.0
2010. 05	53.0	47.0	57.2	42.9	50.0	50.0
2011. 05	52.9	47.0	57.7	42.3	49.3	50.7
2012. 05	52.9	47.1	58.2	41.8	48.8	51.2
2013. 05	52.1	47.9	58.6	41.4	47.0	53.0
2014. 05	52.4	47.6	57.7	42.3	48.3	51.7
2015. 05	52.2	47.8	59.4	40.6	46.7	53.3
2016. 05	51.9	48.1	58.0	42.0	46.9	53.1
2017. 05	50.8	49.2	57.9	42.1	45.0	55.0
2018. 05	50.9	49.1	56.1	43.9	46.4	53.6
2019. 05	51.9	48.1	58.1	41.9	46.4	53.6
2020. 05	51.8	48.2	57.6	42.4	46.5	53.5
2021. 05	52.3	47.7	57.7	42.3	47.3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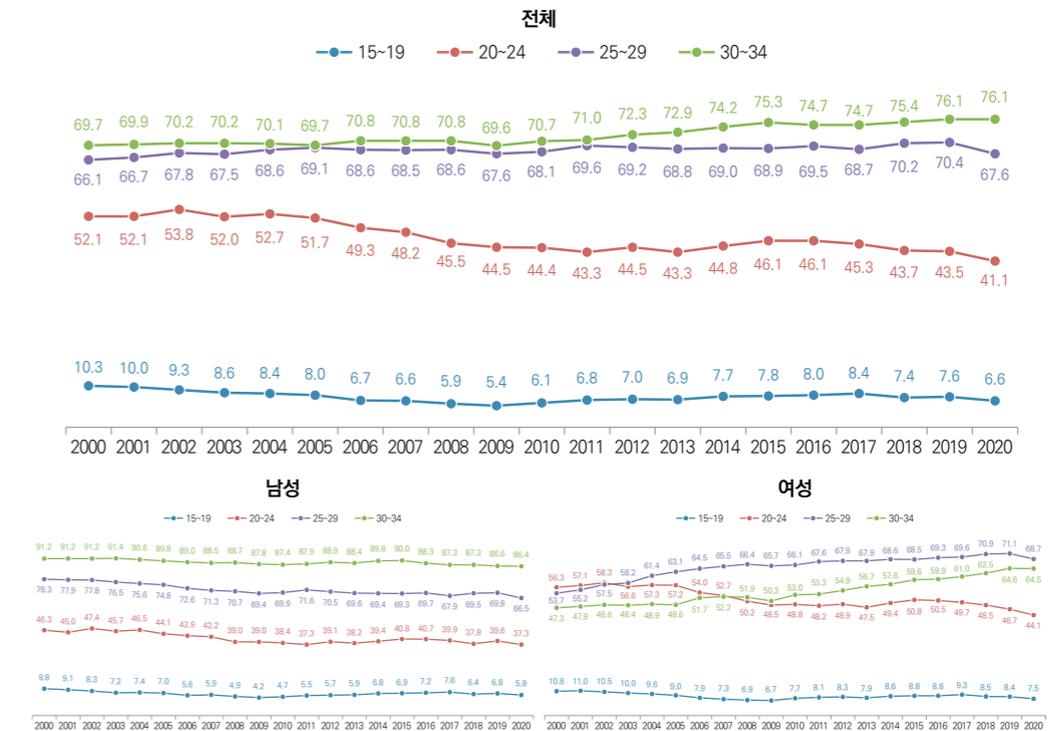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3. 경제활동상태

가. 고용률

15~34세 청년층 중에서 취업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15~19세는 6.6%, 20~24세는 41.1%, 25~29세는 67.6%, 30~34세는 76.1%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1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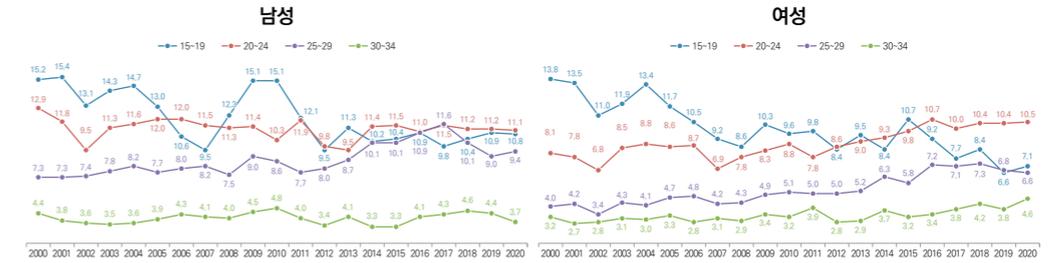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남녀 청년의 고용률은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15~29세의 고용률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30~34세 청년의 고용률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 청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20대 후반에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이후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남성 청년의 고용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체로 낮아진다. 특히 30~34세 남성 고용률은 2000년 당시 91.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 86.4%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여성 청년의 고용률은 10대와 20대 초반은 낮아지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47.3%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64.5%를 기록하여 후기 여성 청년들의 고용참여가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성과 여성 청년의 고용률 증감이 상반되게 나타나면서, 전체 고용률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나.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2020년 15~19세가 8.7%, 20~24세가 10.7%, 25~29세가 8.1%, 30~34세가 4.0%로 나타났다.

2000~2021년 사이 남성 청년의 고용률은 25~29세가 11.8%포인트, 30~34세가 4.8%포인트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1~2%포인트 내외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낮아진 고용률 대비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은 까닭은,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미취업자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한다. 전체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이는 어린 청년들의 경우 취학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률 양상과는 반대로 남성 청년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여성 청년들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0년 당시 전체 인구의 15.6%가 비경제활동인구였던 25~29세 남성 청년의 경우 2000년에 이르러 그 비율이 26.6%로 11%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연령대의 여성 청년들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000년 44.1%에서 2020년 26.4%로 줄어들어, 남성의 비경제활동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30~34세 청년들 역시 남성 청년은 4.6%(00)에서 10.3%(20)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51.2%(00)에서 32.3%(20)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 2-12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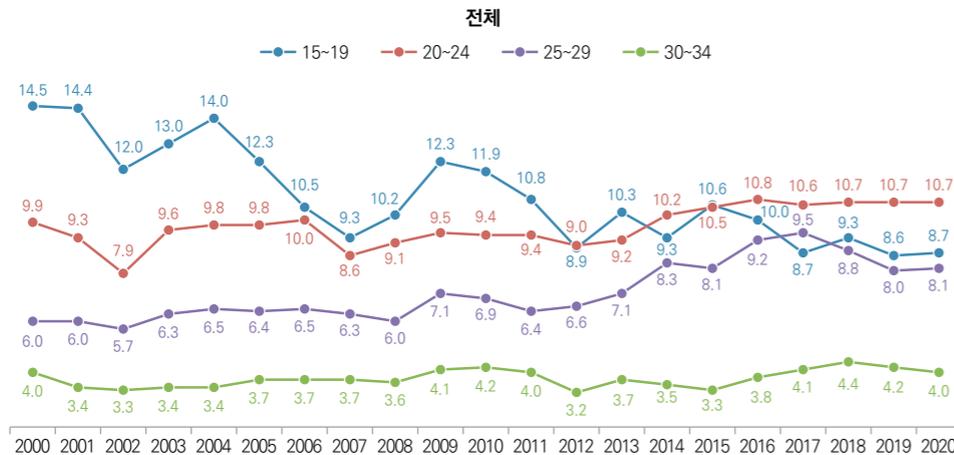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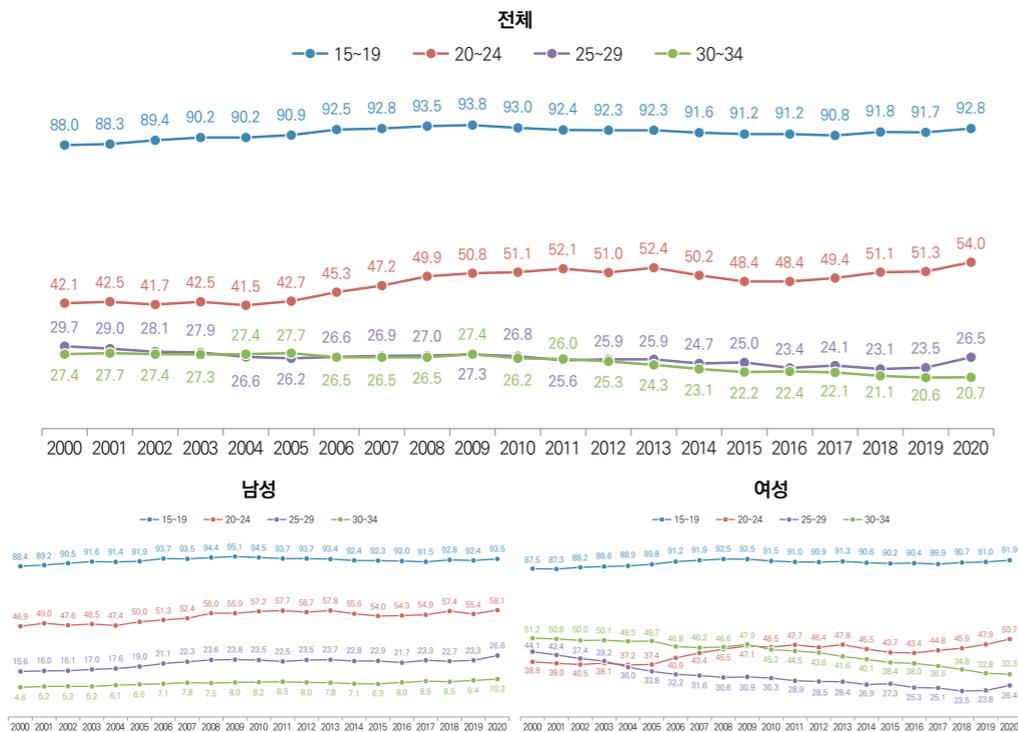


그림 2-13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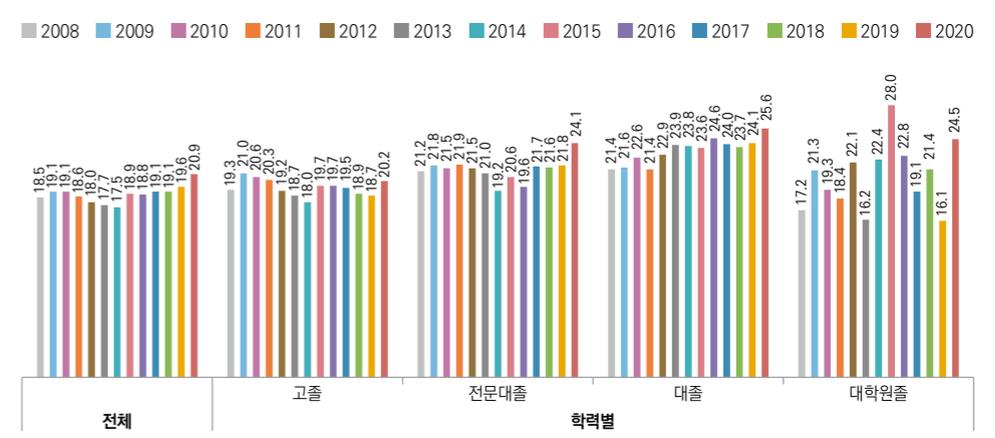
라. 니트(NEET)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는 취업하지 않고,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도 않는 청년을 의미한다. 15~29세 청년 중 니트의 비율은 2020년 현재 20.9%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 청년의 니트 비율이 25.6%로 가장 높고, 고졸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니트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시간 흐름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니트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니트 비율이 대부분의 집단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4 청년 니트 비율(15~29세)

(단위: %)



주: 정재현(2021)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정재현(2021),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2021 청년정책포럼: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과 해소 방안 자료집」,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청년허브

마. 미취업자의 평소 활동상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 중 상당 수는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면서 평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학교를 마쳤으며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29세 이하 청년층의 36.3%는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2008년 27.6%에 비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학교를 마친 미취업자 중 육아, 가사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08년 30.1%에서 2021년 8.0%로 줄어들었다. 이는 출산율의 하락과 혼인연령, 첫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하더라도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21〉 학교를 졸업(중퇴)한 미취업 청년의 평소활동상태(15~29세) (단위: 천 명, %)

연도	미취업자 수	평소 활동상태						
		직업교육 훈련	취업 관련 시험 준비	그냥 시간 보냄	여가 시간	구직 활동	육아,가사	기타
2008. 05	1,522	2.3	27.6	15.2	2.2	13.4	30.1	9.3
2009. 05	1,481	2.6	25.9	15.2	2.8	15.3	29.3	8.9
2010. 05	1,409	3.5	25.3	15.7	2.8	13.9	28.5	10.4
2011. 05	1,423	4.3	24.6	16.2	3.7	10.8	25.9	14.5

	미취업자 수	평소 활동상태						
		직업교육 훈련	취업 관련 시험 준비	그냥 시간 보냄	여가 시간	구직 활동	육아,가사	기타
2012. 05	1,377	3.2	24.7	19.4	4.2	13.4	22.7	12.5
2013. 05	1,329	3.7	26.9	19.0	3.5	12.4	22.5	12.0
2014. 05	1,336	3.7	28.3	18.4	4.0	15.3	19.5	10.9
2015. 05	1,418	4.6	28.5	18.6	3.4	12.9	20.0	12.0
2016. 05	1,405	3.8	32.7	17.8	3.9	12.7	15.4	13.6
2017. 05	1,444	3.3	35.2	17.5	5.0	12.7	14.6	11.7
2018. 05	1,487	4.2	31.7	19.5	5.2	15.4	12.1	11.9
2019. 05	1,541	4.4	34.4	21.6	5.3	13.0	10.5	10.8
2020. 05	1,660	5.4	32.6	23.9	4.8	14.2	9.5	9.6
2021. 05	1,548	4.3	36.3	24.9	3.4	14.5	8.0	8.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특히 여성의 경우 불과 19여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를 마친 미취업 청년의 절반 정도가 육아와 가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비율이 2021년에 이르러 15%까지 줄어들었다. 대신 여성 청년들 중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비율보다 높아졌다. 남성 청년의 경우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최근 들어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비율 역시 높아졌다.

【표 2-22】 학교를 졸업(중퇴)한 미취업 남녀 청년의 평소활동상태(15~29세) (단위: %)

	평소 활동상태											
	직업교육훈련		취업관련시험준비		그냥시간보냄		여가시간		구직활동		육아,가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8. 05	3.0	1.8	38.5	20.5	22.7	10.3	1.3	2.7	19.0	9.8	0.8	49.2
2009. 05	3.2	2.2	37.5	18.9	20.6	11.9	2.5	2.9	22.4	11.1	0.2	46.7
2010. 05	5.2	2.4	32.2	21.0	24.5	10.3	1.5	3.4	20.4	9.9	0.2	45.9
2011. 05	5.9	3.3	31.6	19.9	20.7	13.3	3.0	4.2	16.7	6.8	0.5	42.5
2012. 05	4.3	2.4	27.7	22.6	25.9	14.9	3.8	4.5	18.8	9.8	1.1	37.5
2013. 05	6.4	1.9	34.6	21.8	25.8	14.4	3.0	3.9	15.2	10.5	0.2	37.5
2014. 05	4.9	2.7	35.2	22.9	25.6	12.8	2.4	5.2	19.5	12.1	0.0	34.7
2015. 05	4.3	4.8	34.6	24.0	24.9	14.1	1.8	4.5	16.3	10.4	0.8	34.1
2016. 05	5.9	2.0	36.2	30.1	22.1	14.2	2.1	5.4	13.9	11.8	0.6	27.3
2017. 05	4.2	2.4	38.6	32.3	21.2	14.4	4.1	5.6	15.6	10.3	0.3	27.0
2018. 05	6.0	2.7	33.7	29.9	22.8	16.7	4.5	5.9	18.7	12.7	0.3	22.2

	평소 활동상태											
	직업교육훈련		취업관련시험준비		그냥시간보냄		여가시간		구직활동		육아,가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9. 05	5.5	3.4	36.8	32.4	25.6	18.2	4.8	5.6	14.1	12.0	0.0	19.8
2020. 05	5.8	5.0	35.3	30.1	27.5	20.8	4.8	4.7	16.1	12.5	0.1	18.2
2021. 05	4.4	4.2	37.2	35.5	30.0	20.0	2.2	4.7	17.1	11.9	0.3	15.6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바. 취업 시험 준비 분야

만 29세 이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2021년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약 86만 명에 이르며, 이 중 남성 청년은 44만명, 여성 청년은 42만 명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27만9천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반 기업체가 19만 명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년의 시험 준비 분야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 청년은 교원임용과 일반직 공무원, 고시 및 전문직 등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남성은 일반기업체와 언론사, 공영 기업체 등의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23】 비경제활동 청년의 취업 시험 준비 분야(15~29세) (단위: 천 명)

	취업시험 준비하고 있음						
	전체	일반 기업체	언론사·공영기업체	교원 임용	일반직 공무원	고시 및 전문직	기능분야 및 기타
2006. 05	542	87	49	42	221	63	80
2007. 05	540	88	38	48	202	65	99
2008. 05	561	92	41	41	207	76	105
2009. 05	546	103	38	52	178	74	101
2010. 05	543	91	24	28	177	86	138
2011. 05	599	122	30	33	181	66	167
2012. 05	572	128	36	36	164	67	140
2013. 05	603	131	53	28	192	60	139
2014. 05	650	166	52	35	182	75	139
2015. 05	622	118	52	32	218	60	142
2016. 05	644	138	58	33	253	55	108

	취업시험 준비하고 있음						
	전체	일반 기업체	인문사·공영기업체	교원 임용	일반직 공무원	고시 및 전문직	기능분야 및 기타
2017. 05	699	144	56	43	256	58	142
2018. 05	626	154	50	37	208	49	129
2019. 05	714	169	71	30	219	48	177
2020. 05	804	199	112	35	227	65	166
2021. 05	859	191	103	34	279	90	162
남성	439	119	58	9	133	40	79
여성	420	71	44	25	145	50	8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30. 인출.

삶의 궤적: 일자리

2021년 기준 학교 졸업(중퇴)자 479만여명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414만 명으로 약 86.5%를 차지한다. 2007년 이후 이 비율은 감소세에 있다. 2021년 현재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여성 청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첫 취업의 고용형태 중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자리(정규직)에는 약 52.9%가 진입하는데, 이 비율은 2008년 이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년 이하 계약직은 29.3%, 시간제는 20.4%인데, 이들 일자리로 진입하는 비율은 증가세다. 2020년 기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의 수는 17.4만개이며, 이 중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서비스업종에 분포된다. 첫 일자리의 직업은 서비스·판매 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의 순인데, 사무종사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2021년 현재 18개월인데, 2004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들의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20대 초반은 감소, 20대 중후반은 유지, 30대 초반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연령대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실업률은 연령대별로 증가폭은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취업하지 않고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청년니트(NEET)의 비중은 2020년 현재 20.9%에 달하고, 대졸이상 학력의 니트비중이 20%대 중반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제3절 가정형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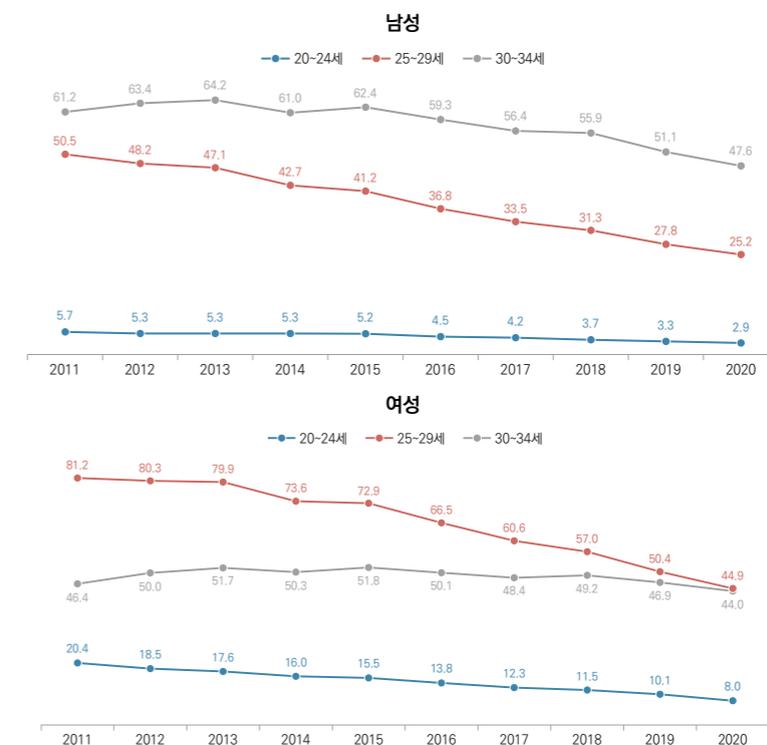
1. 혼인

가. 청년의 결혼

1) 청년 혼인율

15세 이상 연령대별 5세 단위 혼인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남성은 30-34세 연령대가, 여성의 경우 25-29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특성이 관측되고 있으며, 남성, 여성 공히 20-34세 연령층의 혼인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령층의 혼인율은 관측기간 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5 성별, 5세 단위 연령별 혼인율(2011-2020년) (단위: 각 성별 15세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



자료: 통계청. (2021.3.18.).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8687&ord=2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특히, 2011-2020년 최근 10년 간 20-34세 연령대의 혼인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남성 25-29세 혼인율은 2011년 50.5건에서 2020년 25.2건으로 50.1% 감소하였으며, 20-24세의 혼인율 역시 2011년 5.7건에서 2020년 2.9건으로 49.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20-24세 혼인율이 2011년 20.4건에서 2020년 8건으로 60.78%, 25-29세 연령대의 혼인율은 44.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년 미혼비율

2015,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 청년의 미혼비율을 집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및 성별 공히 2015년에 비하여 2020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19-34세 청년의 미혼율은 2015년 76.86%에서 2020년 82.37%로 5.51%포인트 증가하였고, 19-34세 남성의 미혼율은 82.17%에서 87.03%로 4.86%포인트, 여성의 경우 71.01%에서 77.24%로 6.23%포인트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들 연령층의 미혼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혼율의 증가가 특히 30-34세 연령층의 미혼율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30-34세 연령층의 미혼율은 2015년 46.93%에서 2020년 56.39%로 9.4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10.08%포인트, 여성의 경우 8.5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미혼율 자체는 크게 낮지만, 큰 증가폭을 띠고 있다.

〈표 2-24〉 19-34세 청년의 연령대별(5세 단위), 성별 미혼비율(2015, 2020년) (단위: %, %p)

전체(19-34세)			
연령	2015년(A)	2020년(B)	변화분(B-A)
19세	99.41	99.86	0.45
20-24세	97.90	98.61	0.71
25-29세	83.95	87.38	3.43
30-34세	46.93	56.39	9.46
19-34세	76.86	82.37	5.51

남성(19-34세)			
연령	2015년(A)	2020년(B)	변화분(B-A)
19세	99.54	99.95	0.41
20-24세	98.85	99.16	0.31
25-29세	90.00	92.18	2.18
30-34세	55.83	65.91	10.08
19-34세	82.17	87.03	4.86

여성(19-34세)			
연령	2015년(A)	2020년(B)	변화분(B-A)
19세	99.26	99.77	0.51
20-24세	96.81	98.00	1.19
25-29세	77.33	81.97	4.64
30-34세	37.53	46.04	8.51
19-34세	71.01	77.24	6.23

자료: 통계청. (2017).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내국인)-시군구. <https://kosis.kr>에서 2022.1.4. 인출.
통계청. (2021).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내국인)-시군구. <https://kosis.kr>에서 2022.1.4.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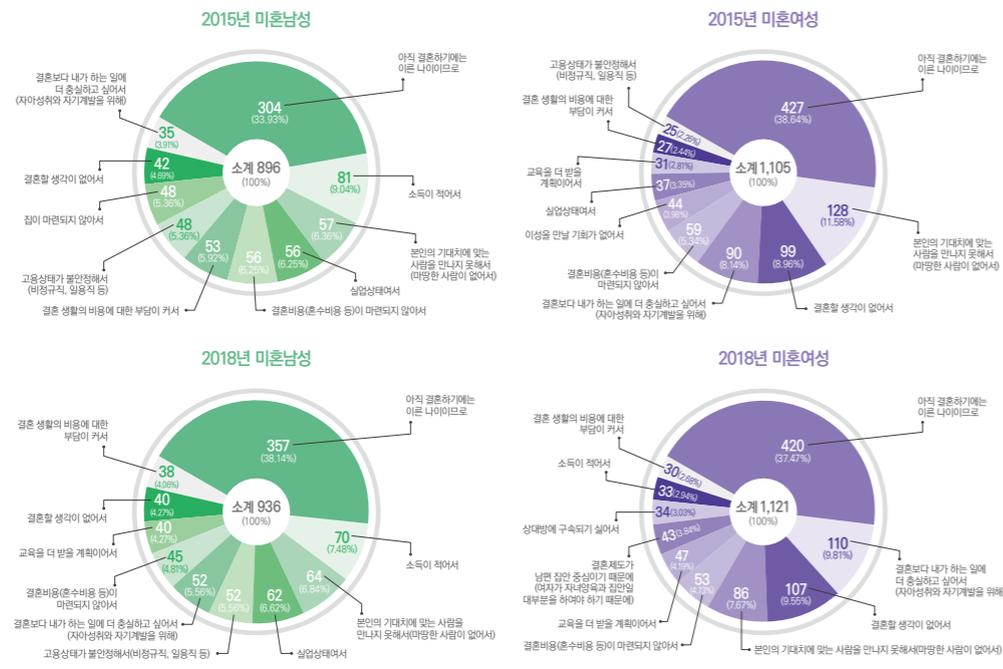
3) 청년 미혼사유

19-34세 청년의 미혼 사유는 남녀 공히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 변화는 성별로 다른 특성이 관측되었다. 즉, 남성의 해당 응답 비율은 2015년에 비하여 2018년에 4.21%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1.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34세 남성, 여성 청년 공히 경제적 부담, 개인의 인생 커리어와 가치관과 관련된 미혼 사유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 세부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남성의 경우, 소득이 적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결혼 준비 및 결혼 생활 비용의 부담 등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된 미혼 사유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등 자신의 인생 커리어 및 가치관과 관련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여성 응답 중 결혼제도가 남성 집안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 19-34세 청년의 성별 미혼사유(2015, 2018년)

(단위: 명, %)



주: 성별, 각 연도별로 상위 10개 사유만 제시함.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나. 청년의 이혼

청년(20-34세) 연령대의 이혼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측기간 내 감소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25 성별, 5세 단위 연령별 이혼율(2011-2020년) (단위: 각 상별 15세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 %, %)

연도/구분	남성										
	일반 이혼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1	5.4	0	0.5	2.4	5.8	8.6	9.9	9.7	8.2	6	2.7
2012	5.4	0	0.5	2.3	5.5	8.3	9.6	9.9	8.3	6.1	2.8
2013	5.4	0	0.5	2.3	5.5	8.1	9.6	9.9	8.4	6.1	2.9
2014	5.4	0	0.5	2.1	5.5	8	9.5	9.9	8.2	6.1	2.9
2015	5	0	0.6	2	5.1	7.4	8.7	9.2	8	6	2.9
2016	4.9	0	0.6	1.9	5.2	7.3	8.3	8.9	7.8	5.9	2.8

연도/구분	남성										
	일반 이혼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7	4.8	0	0.6	2	5.1	7.2	8	8.6	7.7	5.7	3
2018	4.9	0	0.6	1.9	4.8	7.1	8	8.6	7.9	6.2	3.3
2019	5	0	0.6	1.9	4.8	7.1	8.1	8.6	8.1	6.4	3.5
2020	4.8	0	0.4	1.8	4.3	6.7	7.8	8	7.7	6.3	3.6
2011-2020 변화분	-0.6	0	-0.1	-0.6	-1.5	-1.9	-2.1	-1.7	-0.5	0.3	0.9
2011-2020 변화율	-11.11	-	-20.00	-25.00	-25.86	-22.09	-21.21	-17.53	-6.10	5.00	33.33

연도/구분	여성										
	일반 이혼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1	5.4	0.3	2.5	5.6	8.7	10.1	9.9	8.7	6.1	3.7	1
2012	5.3	0.2	2.4	5.4	8.4	9.9	10	9	6.2	3.8	1
2013	5.3	0.2	2.3	5.3	8.4	9.7	10.2	9.1	6.4	4	1.1
2014	5.3	0.2	2.1	5.4	8.2	9.7	10.2	9.1	6.4	4.2	1.2
2015	5	0.1	1.9	4.9	7.7	8.9	9.6	8.7	6.3	4.2	1.2
2016	4.8	0.1	1.8	4.8	7.7	8.6	9.2	8.6	6.3	4.2	1.3
2017	4.7	0.1	1.7	4.6	7.8	8.6	8.9	8.2	6.3	4.2	1.4
2018	4.8	0.1	1.7	4.3	7.6	8.7	8.8	8.6	6.7	4.7	1.6
2019	4.9	0.1	1.6	4.2	7.6	8.6	9	8.8	6.9	4.9	1.8
2020	4.7	0.1	1.4	3.8	6.9	8.2	8.6	8.3	6.8	5.1	2
2011-2020 변화분	-0.7	-0.2	-1.1	-1.8	-1.8	-1.9	-1.3	-0.4	0.7	1.4	1
2011-2020 변화율	-12.96	-66.67	-44.00	-32.14	-20.69	-18.81	-13.13	-4.60	11.48	37.84	100.00

주: 일반이혼율 = (총 이혼건수 ÷ 15세 이상 남자인구) × 1,000(원자료 참조)
 자료: 통계청(2021.3.18.).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8687&ord=2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출산

가. 출산율 및 출생아 수

1) 모의 연령별 출산율

청년층의 출산과 관련하여,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2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측기간 내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24세 출산율은 2011년 16.4명에서 2020년 6.2명으로, 25-29세의 경우 78.4명에서 30.6명으로, 30-34세의 경우 114.4명에서 78.9명으로 각각 62.2%, 60.97%, 3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6】 모의 연령별(5세 단위) 출산율(2011-2020년)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p, %)

연도	합계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1	1.24	1.8	16.4	78.4	114.4	35.4	4.6	0.2
2012	1.3	1.8	16	77.4	121.9	39	4.9	0.2
2013	1.19	1.7	14	65.9	111.4	39.5	4.8	0.1
2014	1.21	1.6	13.1	63.4	113.8	43.2	5.2	0.1
2015	1.24	1.4	12.5	63.1	116.7	48.3	5.6	0.2
2016	1.17	1.3	11.5	56.4	110.1	48.7	5.9	0.2
2017	1.05	1	9.6	47.9	97.7	47.2	6	0.2
2018	0.98	0.9	8.2	41	91.4	46.1	6.4	0.2
2019	0.92	0.8	7.1	35.7	86.2	45	7	0.2
2020	0.84	0.7	6.2	30.6	78.9	42.3	7.1	0.2
2011-2020 변화분	-0.4	-1.1	-10.2	-47.8	-35.5	6.9	2.5	0.0
2011-2020 변화율	-32.26	-61.11	-62.20	-60.97	-31.03	19.49	54.35	0.00

자료: 통계청. (2021c).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모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 역시 앞서 살펴본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2011년 총 출생아 수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25-29세, 30-34세 연령층의 출생

아 수는 지난 10년간 각각 96,566명(63.05%), 95,707명(46.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4세 연령층의 출생아 수 역시 2011년 24,648명에서 2020년 9,612명으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7】 모의 연령별(5세 단위) 출생아 수(2011-2020년) (단위: 명)

연도	총출생아 수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1	471,265	2,979	24,648	137,008	221,434	74,245	10,126	443
2012	484,550	2,917	24,619	127,192	239,223	78,982	11,098	392
2013	436,455	2,813	22,051	102,801	220,346	77,183	10,714	284
2014	435,435	2,527	21,171	96,192	221,145	82,226	11,523	308
2015	438,420	2,211	20,514	94,622	216,252	92,081	12,138	335
2016	406,243	1,907	19,078	85,036	192,968	94,313	12,336	371
2017	357,771	1,520	15,768	74,026	161,045	92,645	12,202	373
2018	326,822	1,292	13,313	65,029	143,067	91,101	12,417	389
2019	302,676	1,096	11,303	57,834	131,334	87,300	13,242	398
2020	272,337	907	9,612	50,631	118,909	78,315	13,482	340
2011-2020 변화분	-197,834	-1,993	-14,926	-96,566	-95,707	7,480	4,642	-49
2011-2020 변화율	-42.21	-69.55	-61.00	-63.05	-46.30	5.48	33.14	-23.25

자료: 통계청. (2021d). 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청년의 결혼, 출산 관련 가치관

1) 19-34세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필요성 의식

19-34세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과 하는 편이 좋다는 소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각각 1.89%포인트, 6.49%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소위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각각 8.47%포인트, 0.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 필요성과 관련하여,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 61.46%에서 2018년 48.58%로 12.8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은 9.94%에서 18.33%로 8.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8〉 2015-2018년 19-34세 기혼 여성의 결혼 필요성 의식 변화 (단위: %, %p, 명)

범주	2015년	2018년	2015-2018년 변화분
반드시 해야 한다	10.82	8.93	-1.89
하는 편이 좋다	39.41	32.92	-6.49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44.03	52.50	8.47
하지 않는 게 낫다	5.18	5.48	0.30
모르겠다	0.56	0.17	-0.39
표본 수	2,857	2,318	-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표 2-29〉 2015-2018년 19-34세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 의식 변화 (단위: %, %p, 명)

범주	2015년	2018년	2015-2018년 변화분
꼭 있어야 한다	61.46	48.58	-12.8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28.39	32.66	4.27
없어도 무관하다	9.94	18.33	8.39
모르겠다	0.21	0.43	0.22
표본 수	2,857	2,318	-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2) 19-34세 미혼 남성, 여성의 결혼 및 자녀 필요성 의식

19-34세 미혼 남성, 여성의 결혼 및 자녀 필요성 변화(2015-2018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 필요성과 관련하여, 2015년과 2018년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특성이 관측되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15년에 비하여 2018년에 감소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34세 미혼 남성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은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2015년에 비하여 2018년에 각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34세 미혼 남성, 여성의 자녀 필요성과 관련하여,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과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소위 긍정적 응답 비율은 관측기간 공히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특성이 나타난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2015-2018년 간 변화분은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13.64%포인트,

21.88%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정적 응답 비율은 11.67%포인트, 20.6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0〉 2015-2018년 19-34세 미혼 남성의 결혼 필요성 의식 변화 (단위: %, %p, 명)

범주	2015년	2018년	2015-2018년 변화분
반드시 해야 한다	21.88	15.28	-6.60
하는 편이 좋다	44.31	38.68	-5.6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28.46	35.79	7.33
하지 않는 게 낫다	3.01	6.20	3.19
모르겠다	2.34	4.06	1.72
표본 수	896	936	-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표 2-31〉 2015-2018년 19-34세 미혼 여성의 결혼 필요성 의식 변화 (단위: %, %p, 명)

범주	2015년	2018년	2015-2018년 변화분
반드시 해야 한다	9.68	7.05	-2.63
하는 편이 좋다	33.12	24.35	-8.77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50.68	52.90	2.22
하지 않는 게 낫다	4.89	13.47	8.58
모르겠다	1.63	2.23	0.60
표본 수	1,105	1,121	-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표 2-32〉 2015-2018년 19-34세 미혼 남성의 자녀 필요성 의식 변화 (단위: %, %p, 명)

범주	2015년	2018년	2015-2018년 변화분
꼭 있어야 한다	45.65	37.61	-8.04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38.39	32.80	-5.59
없어도 무관하다	14.51	26.18	11.67
모르겠다	1.45	3.42	1.97
표본 수	896	936	-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표 2-33〉 2015-2018년 19-34세 미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 의식 변화 (단위: %, %p, 명)

범주	2015년	2018년	2015-2018년 변화분
꼭 있어야 한다	31.13	20.16	-10.9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39.28	28.37	-10.91
없어도 무관하다	27.33	47.99	20.66
모르겠다	2.26	3.48	1.22
표본 수	1,105	1,121	-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를 활용하여 작성.

삶의 궤적: 혼인, 출산

청년들의 혼인율은 지난 10년간 남녀 공히 약 50% 가량 감소하였다. 현재 남성은 30~34세, 여성은 25~29세 연령대에서 높은 혼인율을 보인다. 미혼율은 수치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폭이 큰 특징을 보인다. 미혼사유로는 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담, 인생 커리어와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가 주를 이룬다. 반면, 청년층 미혼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고, 감소율도 큰 특징이 있다.

출산율의 감소세는 청년층 출산율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청년들의 결혼 및 자녀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약해지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기혼과 미혼을 불문하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3장 청년기 주요 삶의 여건



제 1 절 경제적 여건

1. 소득과 자산

가. 소득

1) 소득수준 추이

청년(19~3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 (균등화)시장소득은 2019년 기준 전체가구의 평균 (균등화) 시장소득의 100.8%이고, (균등화)가처분소득의 경우 전체가구의 95.3% 수준이다.

청년(19~34세) 1인가구의 평균 (균등화)시장소득은 2019년 기준 전체가구의 97.3%, (균등화)가처분소득의 경우 전체가구의 90.2% 수준이다.

청년가구주 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의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77%로 전체가구 3.19%보다 다소 낮다.

〈표 3-1〉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추이 (단위: 만원/연간, %)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전체가구	청년가구주 가구	청년 1인가구	전체가구	청년가구주 가구	청년 1인가구
2016	2,866.9	2,911.6	2,666.0	2,743.5	2,647.6	2,367.4
2017	2,989.1	2,981.9	2,873.8	2,857.8	2,718.3	2,587.5
2018	3,048.7	3,158.1	3,189.5	2,925.1	2,881.3	2,868.5
2019	3,103.2	3,126.9	3,020.9	3,014.6	2,873.6	2,718.6
연평균 증가율	2.68	2.41	4.25	3.19	2.77	4.72

주: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균등화된 소득.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선(중위소득 50% 기준) 아래에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청년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청년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6년 11.0%에서 2019년 10.9%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10.4%에서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모두 19-24세, 30-34세, 25-29세 순으로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증가세(19-24세)이거나 횡보(25-29세, 30-34세)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세로 나타나 시장소득 하락세를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완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2〉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단위: %)

시장소득	전체	19-34세	19-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2016	20.7	11.0	12.1	8.5	11.9
2017	20.8	11.4	12.6	9.2	12.0
2018	21.0	10.6	12.0	9.2	10.0
2019	21.4	10.9	12.8	8.3	11.2

가처분소득	전체	19-34세	19-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2016	17.6	10.4	11.4	8.7	10.9
2017	17.3	10.6	11.5	8.7	11.4
2018	16.7	9.5	11.2	8.2	8.4
2019	16.3	8.9	10.2	6.9	9.3

주: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나. 자산과 부채

1) 자산

전체 가구 평균 자산액은 2017년 38,671만원에서 2021년 50,253만원으로 29.95% 증가했다. 이에 비해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9,882만원에서 12,140만원으로 22.85%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30대 가구주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28,824만원에서 40,017만원으로 38.83% 증가해 전체 가구주 가구의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액과 증감률 추이 (단위: 만원)

구분	평균 자산액					증감률				
	2017	2018	2019	2020	2021	18-17	19-18	20-19	21-20	21-17
전체	38,671	42,036	43,191	44,543	50,253	8.70	2.75	3.13	12.82	29.95
20대	9,882	9,892	10,994	10,720	12,140	0.10	11.14	-2.49	13.25	22.85
30대	28,824	31,503	32,638	35,467	40,017	9.29	3.60	8.67	12.83	38.83

주: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기준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2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부채

전체 가구 평균 부채액은 2017년 7,099만원에서 2021년 8,801만원으로 이 기간 동안 23.96% 증가했다. 이에 비해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393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48.55%로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0대 가구주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6,920만원에서 11,190만원으로 61.71% 증가해 전체 증가율보다 세 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부채액과 증감률 추이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부채액					증감률				
	2017	2018	2019	2020	2021	18-17	19-18	20-19	21-20	21-17
전체	7,099	7,668	7,910	8,256	8,801	8.02	3.16	4.37	6.60	23.98
20대	2,393	2,591	3,197	3,479	3,550	8.27	23.39	8.82	2.04	48.35
30대	6,920	8,088	8,915	10,082	11,190	16.88	10.23	13.09	10.99	61.71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2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보유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2017년 63.5%에서 2021년 63.6%로 0.1% 포인트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47.7%에서 56.1%로 8.4% 포인트, 3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72.1%에서 78.6%로 6.7% 포인트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보유율이 거의 동일한 데 비해 청년 가구주 가구의 부채보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보유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63.5	64.1	63.8	63.7	63.6
20대	47.7	50.8	57.0	59.2	56.1
30대	72.1	75.2	75.3	77.8	78.8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2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자산 대비 부채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전체 가구와 부채 보유 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전체 가구의 경우 20대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9.2%로 5.0% 포인트 증가했고, 30대 가구주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24.0%에서 28.0%로 4.0%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가 18.5%에서 17.5%로 0.9% 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부채보유 가구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5.9%에서 39.0%로 3.1% 포인트 증가했고, 30대 가구주 가구는 29.7%에서 31.9%로 2.2% 포인트 증가하여 전체 가구가 23.6%에서 22.8%로 0.8% 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표 3-6〉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가구					부채보유 가구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8.4	18.2	18.3	18.5	17.5	23.6	23.4	23.6	24.0	22.8
20대	24.2	26.2	29.1	32.5	29.2	35.9	38.7	41.2	42.4	39.0
30대	24.0	25.7	27.3	28.4	28.0	29.7	31.0	32.5	33.3	31.9

주: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기준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2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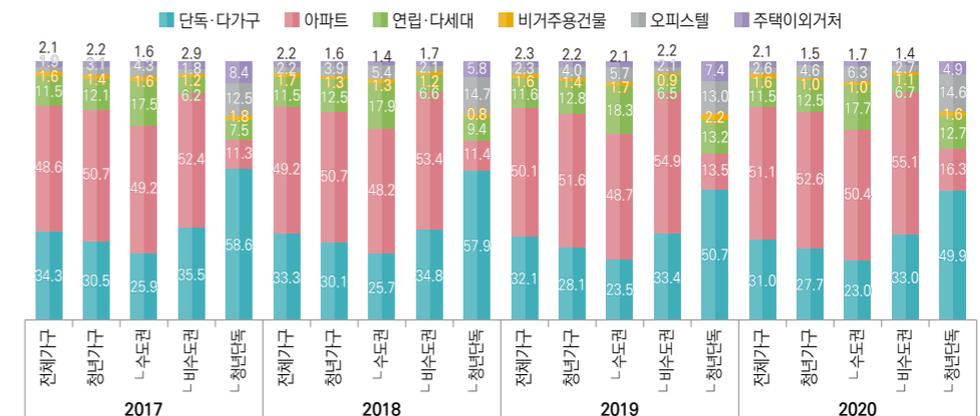
2. 주거

가. 주택유형과 건축 연도, 주거면적

1) 주택유형

청년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2017년 50.7%에서 2020년 52.6%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거주 청년이 비수도권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중이 낮은 편이다. 청년단독가구는 주로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비율이 높으나 점차 감소중이다. 지옥고 등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은 청년단독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7년 8.4%에서 2020년 4.9%로 하락하였다.

그림 3-1 연도별 지역별 청년거주 주택유형 (단위: %)



주: 청년가구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만19~34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정의. 수도권, 비수도권은 청년가구 중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이고 청년단독은 청년가구 중 1인가구를 의미함. 이하 동일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건축연도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연도는 청년이 점차 신규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5년 미만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2017년 13.4%에서 2020년 21.7%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표 3-7〉 연도별 지역별 청년거주 주택 건축연도 (단위: %)

구분	5년미만	6-10년	11-20년	21-30년	30년초과	계	
2017	전체가구	10.4	10.1	32.1	28.9	18.4	100.0
	청년가구	13.4	11.2	34.5	29.0	12.0	100.0
	↳ 수도권	11.3	11.2	37.3	30.4	9.9	100.0
	↳ 비수도권	15.7	11.2	31.5	27.4	14.2	100.0
	↳ 청년단독	18.0	16.2	39.5	19.7	6.5	100.0
2018	전체가구	14.9	10.9	28.2	28.5	17.6	100.0
	청년가구	19.2	12.3	30.4	27.0	11.3	100.0
	↳ 수도권	16.6	12.7	31.8	29.1	9.8	100.0
	↳ 비수도권	21.8	11.8	29.0	24.6	12.9	100.0
	↳ 청년단독	28.0	20.8	29.9	14.5	6.7	100.0
2019	전체가구	15.9	11.3	27.3	28.6	16.8	100.0
	청년가구	19.7	13.2	29.1	27.4	10.5	100.0
	↳ 수도권	18.4	13.2	30.6	28.2	9.5	100.0
	↳ 비수도권	21.4	13.3	27.3	26.3	11.7	100.0
	↳ 청년단독	24.0	23.4	29.6	16.7	6.2	100.0
2020	전체가구	17.3	11.8	24.7	29.6	16.5	100.0
	청년가구	21.7	13.9	25.9	28.5	9.9	100.0
	↳ 수도권	19.9	13.6	27.7	29.7	9.1	100.0
	↳ 비수도권	23.7	14.3	24.0	27.4	10.7	100.0
	↳ 청년단독	25.8	22.7	24.5	19.7	7.3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원룸 거주 비율

거주중인 주택이 원룸인 경우는 청년단독가구가 가장 높은 61.1%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높고, 주택이외 거처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71.9%에 비해서는 점차 하락중이다.

〈표 3-8〉 연도별 지역별 원룸 거주비율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10.2	11.1	11.5	11.1
청년가구	16.2	17.5	18.2	17.4
↳ 수도권	15.7	18.1	18.5	17.3

구분	2017	2018	2019	2020
↳ 비수도권	16.5	16.9	17.9	17.6
↳ 청년단독	71.9	71.5	68.1	61.1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평균 거주 기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어 2017년 6.1년에서 2020년 5.3년으로 하락중이다. 특히 청년1인가구는 2020년 1.3년에 불과하여 주거안정성이 가장 낮다.

〈표 3-9〉 연도별 지역별 평균 거주기간 변화 (단위: 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8.0	7.7	7.7	7.6
청년가구	6.1	5.7	5.4	5.3
↳ 수도권	5.7	5.2	4.9	4.9
↳ 비수도권	6.5	6.2	5.8	5.8
↳ 청년단독	1.2	1.1	1.1	1.3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평균 주거면적

(1) 가구당 면적

주택의 평균 면적은 점차 확대중이다. 2017년 63.8㎡에서 2020년 66.0㎡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에 비해서는 비수도권이 더 넓은 면적을 소비하고 있다. 청년단독가구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표 3-10〉 연도별 지역별 평균 주거면적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65.4	66.2	68.1	68.9
청년가구	63.8	64.6	65.0	66.0
↳ 수도권	61.8	61.6	62.4	64.4

구분	2017	2018	2019	2020
↳ 비수도권	66.0	67.9	68.0	67.9
↳ 청년단독	30.0	30.2	30.0	33.7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1인당 면적

1인당 면적으로 주거면적 소비를 파악하면, 청년단독가구가 가장 넓은 면적을 소비중이다. 2017년 30.0㎡에서 2020년 33.7㎡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3-11】 연도별 지역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31.2	31.7	32.9	33.9
청년가구	24.5	25.1	25.9	27.5
↳ 수도권	23.6	23.6	24.8	26.7
↳ 비수도권	25.5	26.8	27.1	28.4
↳ 청년단독	30.0	30.2	30.0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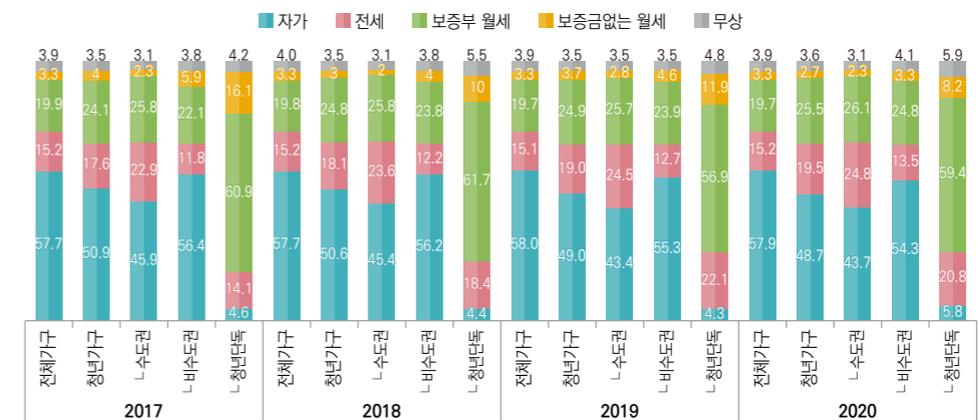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점유형태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1) 점유형태 변화

청년가구의 대표적인 점유형태는 자가로 2017년 50.9%에서 2020년 48.7%로 소폭 하락하였다. 보증부월세는 24.1%에서 25.5%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자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고, 청년단독가구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림 3-2 연도별 지역별 청년가구 주택 점유형태 변화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하락하는 추세로 2017년 6.6%에서 2020년 4.7%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높고 청년단독가구가 2020년에 9.6% 수준이다.

【표 3-12】 연도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5.9	5.7	5.3	4.6
청년가구	6.6	6.1	5.9	4.7
↳ 수도권	7.1	7.6	7.5	6.4
↳ 비수도권	6.0	4.4	4.1	2.7
↳ 청년단독	12.3	10.8	12.0	9.6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는 감소중이다.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는 2017년 0.3%에서 2020년 0.2%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3-13〉 연도별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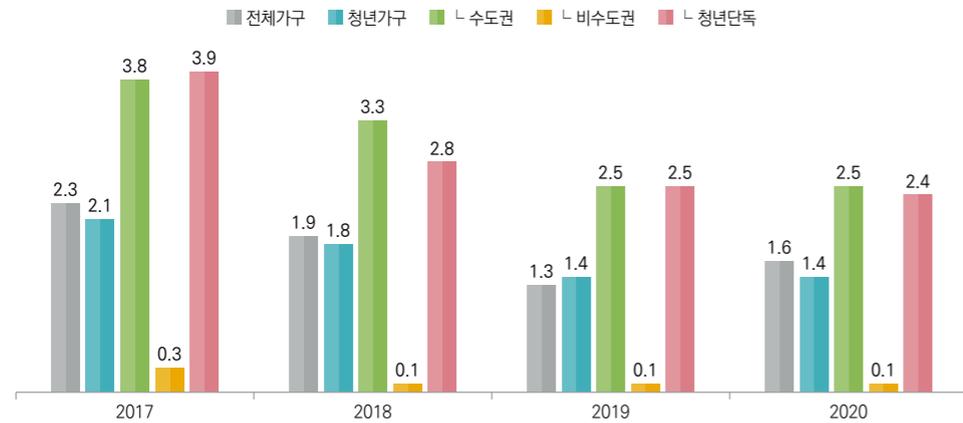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0.2	0.2	0.1	0.1
청년가구	0.3	0.4	0.2	0.2
↳ 수도권	0.4	0.5	0.2	0.2
↳ 비수도권	0.2	0.2	0.3	0.3
↳ 청년단독	-	-	-	-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은 지속 하락중이다. 청년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2017년 2.1%에서 2020년 1.4%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이 높다. 청년단독가구는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2.4%가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그림 3-3 연도별 지역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변화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주거만족도와 이사의향

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3.00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청년가구는 2017년 3.03에서 2020년 3.04로 변화하였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의 주택 만족도가 약간 높다.

〈표 3-14〉 연도별 지역별 주택 만족도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2.98	2.98	3.00	3.00
청년가구	3.03	3.02	3.04	3.04
↳ 수도권	3.02	2.99	3.01	3.02
↳ 비수도권	3.04	3.05	3.07	3.06
↳ 청년단독	3.02	2.98	3.00	3.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거환경(편의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녹지, 주차, 교육, 소음, 치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 기간에 걸쳐 3.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5〉 연도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2.97	2.94	2.94	2.97
청년가구	3.00	2.97	2.99	3.00
↳ 수도권	3.00	2.97	2.99	3.00
↳ 비수도권	3.00	2.98	2.98	3.00
↳ 청년단독	3.02	2.94	2.98	2.99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이사의향 계획 및 사유

이사의향은 점차 축소중이다. 2017년에는 청년가구의 14.5%가 이사의향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11.4%로 하락하였다. 청년단독가구는 2017년 18.5%에서 2020년 14.2%로 변화하였다.

【표 3-16】 연도별 지역별 청년 이사사항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	
	소계	2년미만	2-5년	5년초과				
2017	전체가구	11.4	6.5	4.0	0.9	78.7	9.8	100.0
	청년가구	14.5	8.6	4.7	1.2	74.4	11.1	100.0
	↳ 수도권	18.2	10.7	5.9	1.6	69.0	12.7	100.0
	↳ 비수도권	10.4	6.3	3.4	0.8	80.4	9.2	100.0
	↳ 청년단독	18.5	13.7	4.6	0.3	65.8	15.7	100.0
	2018	전체가구	9.7	5.6	3.5	0.7	80.8	9.4
청년가구		12.2	7.4	4.1	0.8	76.9	10.9	100.0
↳ 수도권		15.5	9.2	5.3	1	72.3	12.2	100.0
↳ 비수도권		8.6	5.3	2.7	0.6	81.8	9.6	100.0
2019	전체가구	8.9	5.2	3.1	0.7	80.0	11.1	100.0
	청년가구	11.4	7.0	3.6	0.8	75.4	13.1	100.0
	↳ 수도권	14.2	8.6	4.5	1.1	71.2	14.6	100.0
	↳ 비수도권	8.2	5.1	2.6	0.5	80.3	11.5	100.0
2020	전체가구	9.0	4.7	3.4	0.9	80.7	10.3	100.0
	청년가구	11.4	6.4	4.0	1.0	76.6	11.9	100.0
	↳ 수도권	13.4	7.4	4.8	1.2	71.5	15.1	100.0
	↳ 비수도권	9.3	5.3	3.2	0.8	82.4	8.4	100.0
2020	↳ 청년단독	14.2	10.3	3.7	0.2	68.6	17.2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의 사유는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으로 이사(7), 교통편리(11), 직주근접(10), 계약만기(5)와 같은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17】 연도별 지역별 청년 이사계획 사유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2017	전체가구	3.3	17.1	10.0	2.5	19.8	5.4	47.2	18.8	6.8	22.6	27.8	11.1	7.4	200.0
	청년가구	4.9	16.2	10.2	2.4	22.0	4.5	46.6	18.3	7.0	27.2	25.5	8.4	6.9	200.0
	↳ 수도권	5.2	17.4	12.7	3.1	25.2	5.2	45.7	18.3	5.0	21.1	25.0	8.4	7.8	200.0
	↳ 비수도권	4.3	13.9	5.4	1.1	15.8	3.0	48.4	18.2	10.7	39.0	26.5	8.5	5.3	200.0
	↳ 청년단독	9.0	1.4	15.2	2.0	32.5	0.9	39.1	9.2	9.7	52.6	20.9	0.1	7.3	200.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2018	전체가구	3.7	20.1	9.2	1.6	18.2	5.4	49.6	19.3	5.2	21.6	28.0	9.8	8.2	200.0	
	청년가구	5.5	18.7	9.4	1.4	20.2	3.9	50.2	19.5	4.6	24.1	26.9	7.2	8.2	200.0	
	↳ 수도권	5.7	18.6	8.6	1.8	23.8	4.0	48.8	18.8	4.3	23.5	27.2	5.7	9.1	200.0	
	↳ 비수도권	5.1	18.8	11.0	0.7	13.2	3.8	52.9	20.8	5.2	25.3	26.4	10.2	6.6	200.0	
	↳ 청년단독	13.5	3.5	16.0	1.2	28.6	0.8	44.4	12.5	7.4	39.6	20.5	0.2	11.9	200.0	
2019	전체가구	3.6	20.5	8.2	1.2	17.0	4.5	49.3	20.8	7.8	24.5	26.3	9.4	6.9	200.0	
	청년가구	5.9	20.6	9.5	1.2	18.8	3.2	47.7	19.3	8.8	27.3	25.9	5.7	6.1	200.0	
	↳ 수도권	6.9	20.3	11.2	1.7	21.2	3.7	45.9	19.1	7.0	26.0	25.0	5.2	6.9	200.0	
	↳ 비수도권	4.0	21.3	6.1	0.3	14.3	2.2	51.1	19.6	12.4	29.9	27.5	6.6	4.7	200.0	
2020	전체가구	3.3	20.3	10.2	2.0	19.3	4.3	53.6	17.1	9.2	26.6	20.5	6.8	2.3	4.4	200.0
	청년가구	5.0	18.8	12.2	1.9	22.0	2.6	50.9	16.9	10.5	29.7	20.6	3.8	1.3	3.8	200.0
	↳ 수도권	5.2	20.2	15.4	2.5	26.9	2.3	47.9	17.3	12.5	24.5	17.7	3.3	1.4	3.0	200.0
	↳ 비수도권	4.8	16.4	7.1	1.0	13.9	3.0	55.9	16.1	7.3	38.3	25.4	4.7	1.0	5.2	200.0
2020	↳ 청년단독	7.6	5.1	15.7	2.7	28.0	0.5	49.2	6.6	11.7	45.4	20.7	-	0.5	6.3	200.0

주1: (1)결혼이나 세대 독립, (2)이미 분양받은 주택(내집)으로 이사, (3)집값 혹은 집세 부담, (4)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5)계약 만기, (6)재개발, 재건축, (7)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8)가구상황에 적합한 주택규모, (9)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10)직주 근접, (11)교통편리한 곳으로 이사, (12)자녀양육 및 교육환경, (13)기타

주2: 5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복수 응답으로 합은 200%
 주3: 2020년에는 (13) 기타 이전에 귀촌, 귀농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이사 문항이 추가됨.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주거이동률

주거이동률은 현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거이동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2017년 46.6%에서 2020년 50.6%으로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거이동률이 높다. 청년단독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이보다 훨씬 높은 86.4%를 기록하고 있다.

【표 3-18】 연도별 지역별 주거이동률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35.9	36.4	36.4	37.2
청년가구	46.6	47.8	49.9	50.6
↳ 수도권	47.8	49.1	51.6	52.5
↳ 비수도권	45.4	46.5	48.1	48.4
↳ 청년단독	86.6	86.1	87.5	86.4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 전월세 가격

1) 전세가격

청년가구 전세보증금은 2017년 평균 1억 4,869만원에서 2020년 1억 7,621만원으로 상승하였다. 수도권은 2억 초과, 비수도권은 1억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년단독가구 중 전세거주자의 평균 전세가격은 9,259만원이다.

〈표 3-19〉 연도별 지역별 전세가격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14,674	15,298	15,975	18,098
청년가구	14,869	15,197	15,722	17,621
↳ 수도권	17,182	17,426	18,022	20,481
↳ 비수도권	9,879	10,596	10,764	11,809
↳ 청년단독	7,357	7,762	8,953	9,259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보증부 월세 가격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평균값이 큰 변화가 없다. 2017년 2,057만원 보증금에 35.8만원 월세에서 2020년 2,171만원 보증금에 35만원 월세로 변화폭이 적다. 수도권은 보증금이 상승하였고, 청년단독가구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0〉 연도별 지역별 보증부 월세 가격 (단위: 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전체가구	2,152	32.1	2,125	32.6	2,241	32.3	2,236	32.5
청년가구	2,057	35.8	2,021	35.5	2,144	35.2	2,171	35.0
↳ 수도권	2,693	41.8	2,742	40.5	2,908	40.3	2,944	39.5
↳ 비수도권	1,235	28.2	1,186	29.7	1,217	29.1	1,264	29.8
↳ 청년단독	1,012	36.3	1,093	35.7	1,035	35.0	1,245	35.6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임대료 부담 정도

(1) 주거비부담(RIR)

월소득에서 전환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거비부담(RIR, Rent to Income Ratio)은 2017년 16.5%에서 2020년 17.2%로 상승하였고 수도권이 19.6%로 비수도권에 비해 높다.

〈표 3-21〉 연도별 지역별 주거비부담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17.0	15.5	16.1	16.6
청년가구	16.5	17.0	17.0	17.2
↳ 수도권	20.2	18.5	18.8	19.6
↳ 비수도권	15.8	14.6	14.0	13.8
↳ 청년단독	23.3	18.0	17.8	18.7

주: 중위수 기준. 월소득 대비 전환임대료의 비중으로 계산함.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주거비 과부담

월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30% 이상인 경우를 주거비 과부담으로 정의할 때,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감소하고 있다. 2017년 29.7%에서 2020년 22.5%로 하락하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높다. 청년 단독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이 하락하고 있으나 27.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 3-22〉 연도별 지역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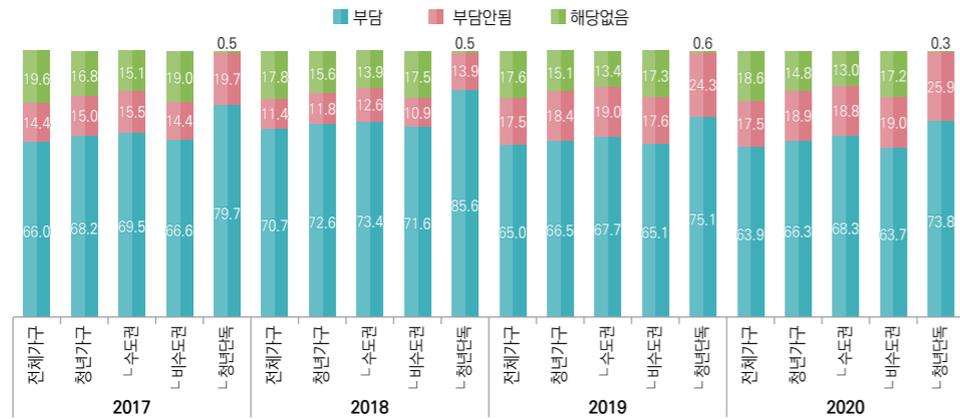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28.7	26.2	26.7	23.8
청년가구	29.7	26.2	27.3	22.5
↳ 수도권	32.1	29.7	29.9	25.3
↳ 비수도권	26.3	21.6	23.7	18.7
↳ 청년단독	42.3	35.4	34.4	27.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임대료 부담 인식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청년가구의 부담정도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매우부담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 25.3%에서 2020년 19.6%로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청년 단독가구가 특히 높다.

그림 3-4 연도별 지역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바. 자가마련 특성

1) 자가점유율 및 보유율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로써, 자신의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자가보유율에 비해 약간 낮다.

청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2017년 53.8%에서 2020년 50.6%로 하락하고 있고, 자가점유율도 같은 기간 동안 50.9%에서 48.7%로 낮아졌다.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이 낮은 편이고, 청년 단독가구는 자가보유율이 낮다. 그러나 2017년 5.8%에 비해 2020년에는 6.9%로 상승하였다.

〈표 3-23〉 연도별 지역별 자가점유율 및 보유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점유율	보유율	점유율	보유율	점유율	보유율	점유율	보유율
전체가구	57.7	61.1	57.7	61.1	58.0	61.2	57.9	60.6
청년가구	50.9	53.8	50.6	53.4	49.0	51.4	48.7	50.6
↳ 수도권	45.9	49.5	45.4	49.0	43.4	46.5	43.7	46.1
↳ 비수도권	56.4	58.4	56.2	58.1	55.3	57.0	54.3	55.7
↳ 청년단독	4.6	5.8	4.4	5.4	4.3	5.1	5.8	6.9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와 연령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된 기간과 생애최초 주택마련 시의 연령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가구 전체적으로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은 2017년 6.7년에서 2020년 7.6년으로 증가하였고, 연령은 같은 기간 동안 36.2세에서 37.1세로 상승하였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다.

〈표 3-24〉 연도별 지역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및 연령 (단위: 년, 세)

구분	2017		2018		2019		2020	
	기간	연령	기간	연령	기간	연령	기간	연령
전체가구	6.8	39.1	7.1	39.4	6.9	39.1	7.7	39.9
청년가구	6.7	36.2	6.9	36.3	6.7	36.3	7.6	37.1
↳ 수도권	7.0	36.6	7.5	36.9	7.3	36.9	8.5	38.1
↳ 비수도권	6.4	35.8	6.4	35.8	6.2	35.6	6.7	36.1
↳ 청년단독	2.1	27.3	2.0	27.5	2.0	26.8	1.8	27.7

주: 생애최초 주택마련 연령이 34세를 넘는 이유는 청년가구가 청년(19-34세)이 포함된 가구 전체이기 때문임. 이 내부에 부모동거, 청년부부, 청년단독, 기타동거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자가주택가격 변화

자가주택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2017년 2억 8,587만원에서 2020년 3억 7,494만원으로 3년 사이에 1억 가까이 자가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은 가격상승폭이 더 커서 2017년 3억 6,817억원에서 2020년 5억 1,995억원으로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상승폭이 적다.

【표 2-25】 연도별 지역별 자가주택가격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25,487.3	28,079.5	29,109.5	32,924.2
청년가구	28,587.4	31,505.4	32,791.5	37,494.1
↳ 수도권	36,817.1	42,047.4	44,368.4	51,995.7
↳ 비수도권	21,267.8	22,734.2	22,714.1	24,588.8
↳ 청년단독	19,052.1	21,444.9	20,716.3	24,774.7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PIR 변화

주택의 가격대비 연소득 배율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청년가구 전체적으로 4.9배(2020년)이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다.

【표 3-26】 연도별 지역별 PIR 변화 (단위: 배)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가구	5.6	5.5	5.4	5.5
청년가구	4.8	5.0	5.2	4.9
↳ 수도권	6.0	5.6	6.5	6.7
↳ 비수도권	4.1	4.2	4.2	4.2
↳ 청년단독	5.8	6.0	4.5	5.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사. 주택보유 필요성과 인식

1) 주택보유 필요성

주택보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택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1.0%에서 2020년 86.6%가 주택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상승폭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다.

【표 3-27】 연도별 지역별 주택보유 필요성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가구	82.8	17.2	82.5	17.5	84.1	15.9	87.7	12.3
청년가구	81.0	19.0	81.3	18.7	82.4	17.6	86.6	13.4
↳ 수도권	78.5	21.5	82.3	17.7	82.2	17.8	87.5	12.5
↳ 비수도권	83.8	16.2	80.3	19.7	82.5	17.5	85.7	14.3
↳ 청년단독	63.1	36.9	63.3	36.7	63.9	36.1	73.5	26.5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주택보유·비보유 사유

주택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로는 주거안정이 가장 대표적이나 점차 자산 증식과 노후생활자금의 비중이 늘고 있다.

【표 3-28】 연도별 지역별 주택보유 이유 (단위: %)

구분	주거안정	자산증식	노후생활자금	기타	계	
2017	전체가구	91.8	6.7	1.5	0.0	100.0
	청년가구	91.2	7.3	1.5	0.1	100.0
	↳ 수도권	91.2	7.2	1.5	0.1	100.0
	↳ 비수도권	91.1	7.4	1.5	0.0	100.0
	↳ 청년단독	87.6	10.0	2.1	0.3	100.0
2018	전체가구	88.7	7.6	3.7	0.0	100.0
	청년가구	88.3	8.4	3.3	-	100.0
	↳ 수도권	88.4	8.1	3.4	-	100.0
	↳ 비수도권	88.2	8.6	3.2	-	100.0
	↳ 청년단독	88.4	8.7	2.9	-	100.0
2019	전체가구	89.7	7.1	3.3	0.0	100.0
	청년가구	89.6	7.6	2.7	-	100.0
	↳ 수도권	89.8	7.2	2.9	-	100.0
	↳ 비수도권	89.4	8.1	2.5	-	100.0
	↳ 청년단독	89.1	9.0	1.9	-	100.0

구분	주거안정	자산증식	노후생활자금	기타	계	
2020	전체가구	86.7	8.9	4.4	0.0	100.0
	청년가구	86.2	10.0	3.8	-	100.0
	↳ 수도권	85.4	10.1	4.5	-	100.0
	↳ 비수도권	87.2	9.8	3.0	-	100.0
	↳ 청년단독	87.0	9.9	3.1	-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반대로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현재 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표 3-29〉 연도별 지역별 주택 비보유 이유 (단위: %)

구분	현재 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	자산증식 수단이 되기 어려움	생활에 불편이 없음	기타	계	
2017	전체가구	49.7	20.6	29.5	0.2	100.0
	청년가구	48.7	20.9	30.2	0.2	100.0
	↳ 수도권	48.2	22.0	29.6	0.2	100.0
	↳ 비수도권	49.5	19.3	31.0	0.3	100.0
	↳ 청년단독	53.2	19.2	27.5	0.1	100.0
2018	전체가구	54.6	11.9	33.0	0.5	100.0
	청년가구	56.0	12.5	31.0	0.5	100.0
	↳ 수도권	47.8	15.1	36.2	0.9	100.0
	↳ 비수도권	63.9	10.0	26.0	0.1	100.0
	↳ 청년단독	59.7	10.7	29.5	0.1	100.0
2019	전체가구	56.6	11.3	31.8	0.3	100.0
	청년가구	57.6	11.6	30.6	0.2	100.0
	↳ 수도권	54.0	12.9	32.8	0.2	100.0
	↳ 비수도권	61.8	10.1	28.0	0.1	100.0
	↳ 청년단독	59.1	12.9	27.8	0.1	100.0
2020	전체가구	57.1	13.3	29.1	0.4	100.0
	청년가구	56.9	13.4	29.5	0.2	100.0
	↳ 수도권	52.6	15.1	32.2	0.1	100.0
	↳ 비수도권	61.1	11.7	26.9	0.3	100.0
	↳ 청년단독	58.6	12.4	28.8	0.2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아. 정책수요

1)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가구는 증가일로이다. 2017년 36.9%에서 2020년 46.8%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프로그램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어 2020년에는 56.5%까지 상승하였다. 청년단독가구는 늘 높았고 2017년 44.5%에서 2020년 55.2%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3-30〉 연도별 지역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전체가구	34.2	65.8	33.0	67.0	36.1	63.9	40.6	59.4
청년가구	36.9	63.1	37.0	63.0	40.9	59.1	46.8	53.2
↳ 수도권	44.9	55.1	46.5	53.5	51.1	48.9	56.5	43.5
↳ 비수도권	28.0	72.0	26.9	73.1	29.4	70.6	35.9	64.1
↳ 청년단독	44.5	55.5	46.9	53.1	50.0	50.0	55.2	44.8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구입자금대출이다. 2017년 31.4%에서 2020년 33.7%으로 안정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다. 두 번째는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이다. 청년단독가구는 전세 자금대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 2017년 28.4%에서 2020년 43.2%으로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월세보조 요구가 높다.

〈표 3-31〉 연도별 지역별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변화 (단위: %)

구분	월세 보조	전세자 금대출	구입자 금대출	개량 개보수	분양전 환공임	장기 공임	공공 분양	주거 상담	계	
2017	전체가구	10.4	18.7	30.1	9.5	8.0	15.0	5.9	2.5	100.0
	청년가구	11.1	21.5	31.4	5.8	9.1	12.7	6.3	2.1	100.0
	↳ 수도권	10.9	22.9	30.7	4.8	9.1	13.6	6.4	1.7	100.0
	↳ 비수도권	11.4	19.1	32.5	7.6	9.2	11.3	6.0	2.8	100.0
	↳ 청년단독	26.9	28.4	15.6	0.8	9.7	11.2	6.1	1.2	100.0

구분	월세 보조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개량 개보수	분양전 환공임	장기 공임	공공 분양	주거 상담	계	
2018	전체가구	10.4	18.8	31.7	8.9	9.4	13.6	4.8	2.4	100.0
	청년가구	10.4	22.8	32.8	5.5	9.7	11.5	4.8	2.5	100.0
	↳ 수도권권	8.5	24.4	32.0	4.7	10.9	11.8	4.9	2.8	100.0
	↳ 비수도권	13.8	19.8	34.3	6.9	7.5	10.9	4.7	2.0	100.0
	↳ 청년단독	23.1	34.2	14.0	0.9	11.5	11.8	3.4	1.1	100.0
2019	전체가구	11.1	23.5	31.2	8.0	6.5	11.9	5.7	2.2	100.0
	청년가구	11.5	29.4	31.8	4.8	5.9	9.6	5.4	1.6	100.0
	↳ 수도권권	11.4	32.1	30.7	3.6	5.3	10.1	5.3	1.4	100.0
	↳ 비수도권	11.7	23.9	34.1	7.1	7.1	8.5	5.5	2.0	100.0
	↳ 청년단독	22.6	42.7	13.9	0.8	4.3	11.2	3.9	0.7	100.0
2020	전체가구	9.8	24.5	34.6	6.9	5.4	11.6	5.3	1.9	100.0
	청년가구	10.3	29.3	33.7	4.6	5.3	10.2	4.9	1.7	100.0
	↳ 수도권권	10.1	30.4	31.2	3.7	6.0	11.7	5.5	1.3	100.0
	↳ 비수도권	10.8	27.4	38.2	6.0	4.0	7.5	3.9	2.2	100.0
	↳ 청년단독	22.3	43.2	13.5	1.3	4.2	10.7	3.8	1.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12.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책속의 코너]

보호필요 청년

가. 장애 청년

1) 등록장애청년

장애 청년에 대한 협의의 개념으로서 19~34세 등록장애청년은 2011년 186천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56천명 수준이다.

이중에서 19~24세 청년은 2011년 26.4%에서 2020년 35.3%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25~29세 청년은 29.2%에서 32.5%로 증가하였다. 30~34세 청년은 2011년 44.4%에서 2020년 32.1%로 감소하였다.

남성 청년은 2011년 69.6%에서 2020년 65.4%로 약간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여성 청년은 30.4%에서 34.6%로 증가하였다.

〈표 3-32〉 등록장애청년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34세	186	179	174	169	164	160	157	155	156	156
등록 장애 청년	19~24세	26.4	27.9	29.4	31.1	33.0	34.3	35.4	36.2	36.1
	25~29세	29.2	27.7	26.7	26.9	27.3	28.3	29.6	30.5	31.4
	30~34세	44.4	44.4	44.0	42.0	39.7	37.4	35.0	33.3	32.5
	남성	69.6	69.1	68.5	67.9	67.4	66.8	66.4	66.1	65.7
	여성	30.4	30.9	31.5	32.1	32.6	33.2	33.6	33.9	34.3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장애인등록현황.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 활동제약청년

인구총조사(전수) 자료에 의한 장애 청년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활동제약 청년은 2015년 기준 181천명 규모이다.

2015년 기준 활동제한 청년은 ①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언어장애, ④치매, ⑤중풍, ⑥견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 ⑦지적, 자폐성 장애, ⑧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⑨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제약, ⑩웃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돌아다니기 제약, ⑪장보기(쇼핑), 병원가기, 집밖돌아다니기 제약, ⑫(16세 이상) 취업활동 제약 중 1개 이상 영역에서 제약이 있는 청년이다.

2010년 기준 활동제한 청년은 ①시각, 청각, 언어장애, ②견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제한, ③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제약, ⑤웃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제약, ⑥ 장보기, 병원 가기 제약, ⑦(16세 이상) 취업활동 제약 중 1개 이상 영역에서 제약이 있는 청년이다.

이중에서 2015년 기준 19~24세 청년은 38.7%이고, 25~29세 청년은 27.1%, 30~34세 청년은 34.3%이다. 2010년 기준 19~24세 청년은 31.2%이고, 25~29세 청년은 31.6%, 30~34세 청년은 37.2%이다.

2015년 기준 남성 청년은 61.9%이고 여성 청년은 37.6%이다. 2010년 기준 남성 청년은 56.0%이고 여성 청년은 44.0%이다.

【표 3-33】 활동제한 청년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0	2015
활동제한 청년	19-34세	192	181
	19-24세	31.2	38.7
	25-29세	31.6	27.1
	30-34세	37.2	34.3
	남성	56.0	61.9
	여성	44.0	37.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나. 한부모 청년

한부모청년은 가구원 구성이 부와 미혼자녀이거나 모와 미혼자녀인 가구의 가구주 청년으로, 2020년 기준 158천명 규모다. 2010년 기준 한부모 청년은 142천명, 2015년은 203천명, 2016년은 175천명, 2017년은 165천명, 2018년은 162천명, 2019년은 161명으로 한부모 청년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다.

이중에서 19~24세 한부모청년은 2010년 8.9%에서 점차 증가해 2018년과 2019년에 10.7% 수준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10.8% 수준이다. 25~29세 한부모청년은 2010년 32.4%에서 2015년에 26.1%로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해 2020년에 34.8%이다. 30~34세 한부모 청년은 2010년 58.7%였다가 2015년에 64.9%로 증가하고, 점차 감소해 2020년에 54.4%이다.

남성 한부모청년은 2010년 47.8%였다가 2015년에 42.6%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해 2019년 45.1%, 2020년 44.9% 수준이다. 여성 한부모청년은 2010년 52.2%였다가 2015년에 57.4%로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9년 54.9%, 2020년 55.1% 수준이다.

【표 3-34】 한부모 청년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부모 청년	19-34세	142	203	175	165	162	161	158
	19-24세	8.9	8.9	9.9	10.2	10.7	10.7	10.8
	25-29세	32.4	26.1	27.6	29.8	32.0	33.4	34.8
	30-34세	58.7	64.9	62.5	60.1	57.3	55.9	54.4
	남성	47.8	42.6	44.8	44.8	45.0	45.1	44.9
	여성	52.2	57.4	55.2	55.2	55.0	54.9	55.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2015년 기준 한부모청년 중 틈틈이 일한 청년은 140천명, 틈틈이 일한 청년은 6천명, 일시휴직한 청년은 4천명, 일하지 않은 청년은 53천명 수준이다.

2010년 기준 한부모청년 중 틈틈이 일한 청년은 97천명, 틈틈이 일한 청년은 4천명, 일시휴직한 청년은 4천명, 일하지 않은 청년은 37천명 수준이다.

【표 3-35】 한부모 청년의 경제활동상대화 (단위: 명, %)

구분	2010				2015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일하지 않았음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일하지 않았음	
한부모 청년	19-34세	96,552	4,440	3,834	36,744	139,136	6,171	4,045	53,154
	19-24세	6.3	21.0	7.6	9.8	6.1	19.8	4.0	11.6
	25-29세	34.4	23.8	29.4	27.4	28.8	27.6	21.5	24.3
	30-34세	59.3	55.2	63.0	62.8	65.1	52.6	74.6	64.1

주: 인구승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15년 기준 '주로 일하였'거나 '틈틈이 일하였'거나 '일시휴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 청년 중 임금근로자는 133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천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0.5천명 규모다.

2010년 기준 '주로 일하였'거나 '틈틈이 일하였'거나 '일시휴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 청년 중 임금근로자는 97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7천명 규모다.

【표 3-36】 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 청년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2010				2015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한부모 청년	19-34세	96,552	4,440	3,834	36,744	133,478	11,133	4,277	465
	19-24세	7.4	4.7	1.5	14.2	6.9	3.8	2.7	10.1
	25-29세	35.2	24.0	29.2	17.5	29.5	21.5	19.1	26.6
	30-34세	57.4	71.4	69.4	68.3	63.6	74.8	78.2	63.3

주: 경제활동상태가 '주로 일하였'거나 '틈틈이 일하였'거나 '일시휴직'인 자에 한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에서 인구승수를 적용해 계산한 비율을 인구총조사(전수)의 모수에 적용하여 규모를 산출함.

다. 고립 청년

고립 청년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가족 또는 친척과 업무상 접촉을 제외한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중 교류하는 사람이 없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생활의 곤란,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하는 경제적 곤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정서적 곤란 상황에서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청년으로 정의하며, 이들은 전체 청년 중 3.1% 수준이다.

전체 청년인구 대비 19~24세 고립 청년은 2.5%, 25~29세 고립 청년은 3.4%, 30~34세 고립 청년은 3.3%이다. 전체 청년인구 대비 남성 고립 청년은 3.8%, 여성 고립 청년은 2.4%이다.

【표 3-37】 전체 청년 대비 고립 청년 현황 (단위: %)

구분	2019	
	19-34세	고립 청년
고립 청년	19-24세	2.52
	25-29세	3.44
	30-34세	3.34
	남성	3.78
	여성	2.36
	전체	3.09

주: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함. 해당 연령대 청년 대비 고립 청년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고립 인구의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은 1~5점 범위에서 2.74점으로 비고립 인구 3.36점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 연령집단에서 나타난다.

19~34세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은 3.3점으로 비고립 청년 3.5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표 3-38】 비고립 인구 대비 고립 인구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단위: %)

구분	2019	
	고립 인구	비고립 인구
전체	2.74	3.36
13-18세	3.00	3.84
19-34세	3.31	3.50

주: 가구원가중치를 적용함.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만족~⑥매우 불만족의 5점 리커트척도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

라. 자립준비청년

1) 규모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2020년 기준으로 12,857명이다.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가정위탁 보호종료의 비율이 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육시설(34.9%), 공동생활가정(7.1%) 순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으나, 전체 아동인구 수 대비 보호아동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0.00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이상정 외, 2020), 자립준비청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9〉 자립준비청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2016	만기퇴소	-	673	74	1,522*	2,703
	연장종료	-	369	65		
2017	만기퇴소	1,446 (55.8)	686	108	652	2,593
	연장종료	1,147 (44.2)	348	45	754	
2018	만기퇴소	1,558 (59.8)	754	157	647	2,606
	연장종료	1,048 (40.2)	311	35	702	
2019	만기퇴소	1,312 (50.7)	645	120	547	2,587
	연장종료	1,275 (49.3)	347	52	876	
2020	만기퇴소	999 (42.2)	536	112	351	2,368
	연장종료	1,369 (57.8)	291	56	1,022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각 년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 연차보고서, p.353.

한편, 만 18세의 만기퇴소 자립준비청년 비율보다 연장보호 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연장종료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연장보호 조건 없이도 개별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실태

(1) 주거 부문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 유형은 정부지원 전세 임대 주택으로 43.2%를 나타냈다. 정부지원의 공공·영구·국민 임대 주택 4.7%를 합하면, 자립준비청년 약 2명 중 1명(47.9%)가 정부 지원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세가 21.1%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월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후 '영구적인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 중 2명(20.6%) 정도의 자립준비청년이 취약 주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 자립준비청년의 취약 주거 경험률이 높고, 만 18세의 만기퇴소 시 연장종료 자립준비청년보다 취약 주거 경험률이 높았다.

(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년제 대학교 이하 33.6%, 4년제 대학교 이상 2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으나, 전체 아동인구 수 대비 보호아동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0.00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이상정 외, 2020), 자립준비청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0〉 교육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이상		
전체		3,104	1,154 37.2	1,046 33.6	904 29.1	29.1	
성별	남	1,461	636 43.5	469 32.1	356 24.4	24.4	
	여	1,643	518 31.5	577 35.1	548 33.4	33.4	
연령 (만)	18~19세	600	359 59.9	159 26.6	82 13.7	13.7	
	20~21세	1,289	625 48.5	451 35.1	213 16.5	16.5	
	22~23세	778	140 18.0	331 42.5	307 39.4	39.4	
	24세이상	437	30 6.9	105 24.1	302 69.0	69.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17	535 37.8	509 35.9	373 26.3	26.3	
	공동생활가정	332	117 35.2	119 35.9	96 28.9	28.9	
	가정 위탁	대리	403	163 40.4	127 31.5	113 28.0	28.0
		친인척	564	175 31.1	170 30.1	219 38.8	38.8
일반		388	164 42.3	121 31.2	103 26.5	26.5	
보호종료 유형	만기퇴소	1,774	947 53.4	510 28.7	317 17.9	17.9	
	연장종료	1,330	207 15.6	536 40.3	587 44.2	44.2	

주: '고등학교 이하'는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중퇴/휴학, 고등학교 졸업 포함. '2~3년제 대학교'는 2~3년제 대학교 재학중, 중퇴/휴학, 졸업 포함. '4년제 대학교 이상'은 4년제 대학교 재학중, 중퇴/휴학, 졸업, 대학원 이상 포함.
자료: 이상정 외.(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pp.294-29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고용·경제 영역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취업자는 1,286명으로 41.4%를 나타냈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만 24세이상 때 가장 높은 55.4%를 나타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는 1,196명이었다.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은 63.6%, 비정규직은 36.4%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졌다. 따라서 정규직 비율은 보호종료 5년차에 72.3%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보호종료 1년차에 44.7%로 가장 높았다.

임금 근로자 1,196명 중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의 정규직이나 계약직 비율은 74.7%,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은 21.3%, 1개월 미만의 일용직은 3.9%로, 자립준비청년의 약 25%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시직은 여자의 비율이 일용직은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아 각각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보호종료연차가 높을수록 상용직 비율은 늘어나고, 임시직·일용직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호종료 5년차에 상용직 비율은 가장 높은 85.7%,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은 가장 낮은 12.5%와 1.8%를 나타냈다.

제2절 신체·정신적 여건

1. 신체와 정신건강

가. 신체건강

1) 주관적 건강인지율

자신의 건강이 '매우 건강한 편'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20대 이하 남성 청년은 48.3%, 여성 청년은 39.3%로 같은 연령대 여성의 건강인지율이 9%포인트 낮고, 30대의 경우는 남녀 공히 34% 정도 수준이다.

〈표 3-41〉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구분	전체		19~29세		30~3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8	50.4	45.3	55.4	48.6	46.1	42.1
2001	53.0	50.9	61.3	53.1	46.6	49.1
2005	65.9	54.7	70.5	58.2	61.0	51.0
2007	36.6	35.2	41.4	37.2	31.7	33.2
2008	52.8	41.6	58.4	44.3	46.8	38.8
2009	52.5	42.8	55.4	44.7	49.4	40.8
2010	43.4	39.8	50.1	42.4	36.3	37.1
2011	44.9	34.6	52.4	34.3	36.7	34.9
2012	46.1	31.4	55.6	35.6	36.1	27.1
2013	47.6	38.8	51.9	39.9	42.6	37.8
2014	42.9	33.3	53.0	32.9	32.0	33.7
2015	40.3	31.6	42.7	33.2	37.7	30.0
2016	43.6	31.1	44.9	30.8	42.1	31.5
2017	35.3	32.5	40.6	33.5	29.1	31.5
2018	40.8	33.1	43.1	31.8	38.2	34.4
2019	41.6	37.0	48.3	39.3	34.3	34.5

자료: 질병관리청,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일반건강검진 대상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20~24세는 약 1,148천명, 25~29세는 약 1,512천명, 30~34세는 약 1,831천명이고, 수검인원은 각각 약 544천명, 약 1,145천명, 약 1,341천명으로 나타난다. 2019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이 대상으로 포괄되면서 2018년에 비해 대상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42〉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단위: 명)

연령	성별	2018		2019	
		대상인원	수검인원	대상인원	수검인원
20~24세	전체	397,350	337,873	1,148,373	544,396
	남자	178,776	152,513	517,525	238,829
	여자	218,574	185,360	630,848	305,567
25~29세	전체	1,171,316	1,008,398	1,511,927	1,144,773
	남자	639,508	550,527	811,173	607,684
	여자	531,808	457,871	700,754	537,089
30~34세	전체	1,464,560	1,195,162	1,831,276	1,340,699
	남자	924,635	765,042	1,012,876	779,657
	여자	539,925	430,120	818,400	561,04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건강검진통계.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나. 정신건강

1) 삶의 만족도 및 행복

(1) 주관적 삶의 만족도

19~29세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0년 기준 6.2점으로 2013년 5.7점에 비해 높아졌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3-43〉 연령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5.7	5.7	5.8	5.9	6.0	6.1	6.0	6.0
19-29세	5.7	5.9	5.8	6.1	6.1	6.1	6.0	6.2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0대	5.8	5.8	5.8	5.9	6.2	6.2	6.1	6.1
40대	5.7	5.7	5.8	5.8	6.0	6.2	5.9	6.1
50대	5.5	5.6	5.8	5.8	5.9	6.1	6.1	6.1
60-69세	5.6	5.5	5.9	5.9	5.9	5.9	5.8	-
60세 이상	-	-	-	-	-	-	-	5.7

주: 1)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2)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만 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 행복도

행복도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행복했다고 느낀 사람들(0-10점 중 7점 이상 응답자)의 비율로 19~29세 청년층의 비율은 60.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표 3-44〉 연령별 행복도 (단위: 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46.0	47.7	48.4	51.0	53.4	56.0	53.9	52.0
19-29세	52.4	52.2	51.6	56.5	56.1	56.6	56.6	60.3
30대	48.9	52.2	52.0	53.2	59.1	59.5	59.7	56.9
40대	44.6	47.0	47.0	49.8	52.3	58.7	52.8	54.5
50대	41.3	43.6	44.7	47.3	50.2	53.9	54.5	52.6
60-69세	41.7	42.0	46.6	49.1	48.8	50.9	45.1	42.5

주: 1) 행복도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행복했다고 느낀 사람들(0-10점 중 7점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2)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만 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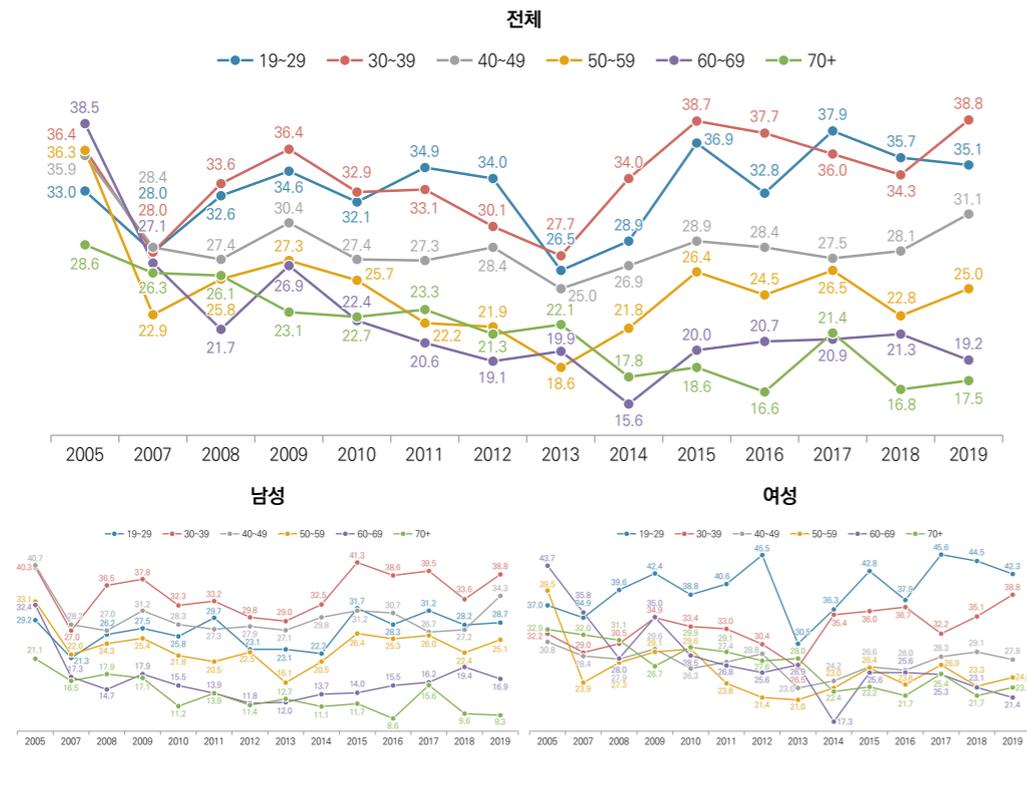
2)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1) 스트레스인지율

스트레스인지율이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을 말하며, 20.30대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 연령대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인지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이 있으며, 남성은 약 15년 동안 오히려 감소(0.5% 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성의 경우 증가(5.3% 포인트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스트레스인지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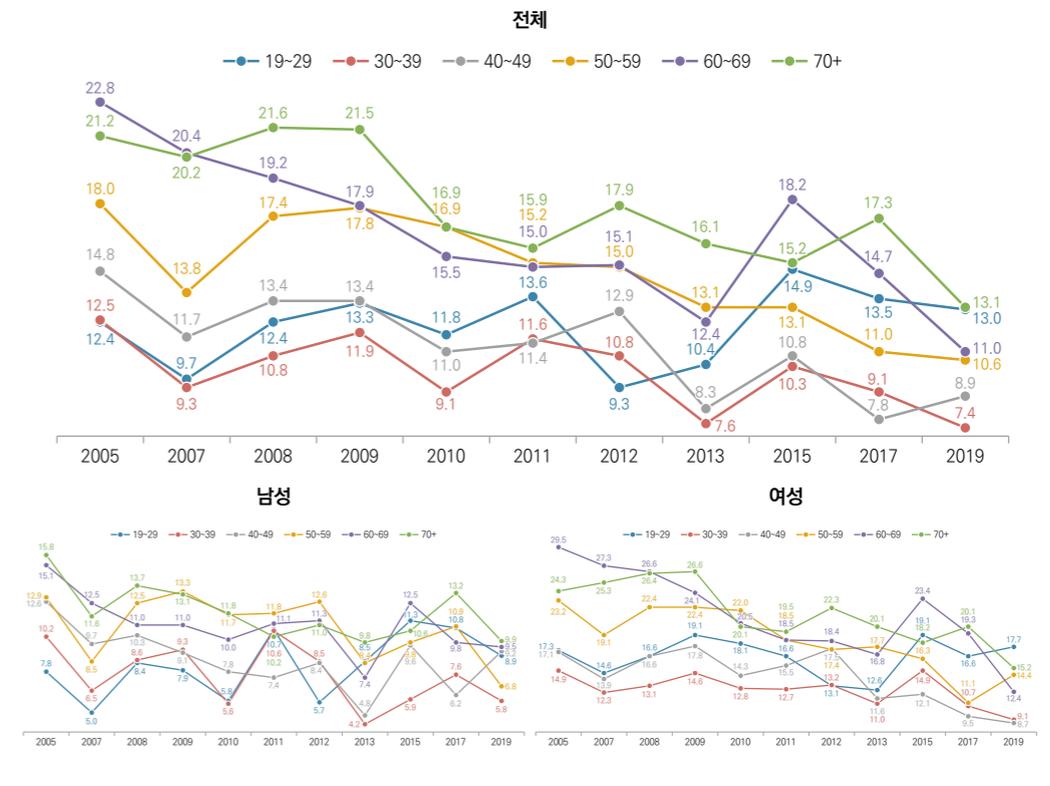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 우울감경험률

우울감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을 말한다. 70대 이상 다음으로 19~29세 청년층의 우울감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우울감경험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3-6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주: 우울감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수 / 각 연령별 분석대상자수

자료: 질병관리청,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3) 정신장애 유병률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06년 기준 18~29세 청년층에서 33.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차이는 2011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하였으며, 2016년의 경우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이 남성(29.6%) 청년보다 여성(33.1%)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 일년유병률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18~29세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3-45〉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단위: %)

구분	2006			2011			2016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체	30.0	38.2	21.7	27.6	31.7	23.5	25.4	28.8	21.9
18~29	33.8	40.7	26.5	29.7	30.0	29.4	31.2	29.6	33.1
30~39	30.7	37.9	23.3	29.1	34.1	24.0	27.1	25.9	28.2
40~49	29.2	40.9	17.4	28.1	34.5	21.6	24.7	30.8	18.8
50~59	26.6	33.6	19.6	27.2	31.9	22.7	25.2	33.9	15.8
60~64	23.0	28.6	18.0	-	-	-	-	-	-
60~69	-	-	-	23.2	26.8	20.0	21.9	25.9	18.5
70~74	-	-	-	19.2	24.1	15.4	-	-	-
70+	-	-	-	-	-	-	17.7	21.6	14.5

주: 2006년 조사시에는 만 18세~만 64세 연령군으로, 2011년 조사시에는 만 18세~만 74세 연령군으로, 2016년 조사시에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연령군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정신건강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표 3-46〉 정신장애 일년유병률 (단위: %)

구분	2006			2011			2016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체	17.1	20.7	13.5	16.0	16.2	15.8	11.9	12.2	11.5
18~29	19.2	22.3	15.9	18.9	17.7	20.1	18.6	17.2	20.3
30~39	17.9	20.9	15.0	15.8	15.7	15.8	12.7	11.9	13.5
40~49	16.4	22.3	10.4	15.5	17.2	13.8	10.9	14.0	7.9
50~59	15.5	18.1	12.9	15.4	15.9	15.0	11.1	13.4	8.8
60~64	11.8	11.8	11.9	-	-	-	-	-	-
60~69	-	-	-	14.2	13.3	15.1	8.1	5.0	11.0
70~74	-	-	-	11.9	12.5	11.4	-	-	-
70+	-	-	-	-	-	-	5.7	4.1	7.1

주: 2006년 조사시에는 만 18세~만 64세 연령군으로, 2011년 조사시에는 만 18세~만 74세 연령군으로, 2016년 조사시에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연령군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정신건강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4) 주요 우울장애 일년유병률

지난 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인 주요우울장애 일년유병률은 18~29세 청년층의 경우 2006년과 2011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6년과 2011년의 경우 남

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16년의 경우 남성 청년의 비율이 여성 청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표 3-47〉 주요우울장애 일년유병률 (단위: %)

구분	2006			2011			2016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체	2.5	1.7	3.2	3.1	1.8	4.3	1.5	1.1	2.0
18~29	2.3	1.4	3.3	4.0	2.4	5.7	3.0	3.1	2.9
30~39	2.1	1.2	3.0	1.8	1.2	2.5	1.2	0.1	2.4
40~49	2.3	2.0	2.5	2.8	1.6	4.0	1.0	1.4	0.6
50~59	3.6	2.6	4.7	3.6	2.4	4.9	1.2	0.6	1.8
60~64	2.5	1.9	3.0	-	-	-	-	-	-
60~69	-	-	-	3.0	1.3	4.6	1.3	0.0	2.0
70~74	-	-	-	3.8	1.8	5.4	-	-	-
70+	-	-	-	-	-	-	1.5	0.0	2.7

주: 2006년 조사시에는 만 18세~만 64세 연령군으로, 2011년 조사시에는 만 18세~만 74세 연령군으로, 2016년 조사시에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연령군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정신건강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다. 청년의 사망

1) 청년(20~34세)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인구 동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서 사망률은 청년인구 동태와 관련된 자연적 증감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34세 청년층의 사망률은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5~29세 연령층의 감소폭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여성의 경우 감소폭이 0.5명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8〉 청년(20~34세) 5세 단위 연령대별 사망률(2011~2020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구분	연령(5세)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0~24세	41.7	38.6	36.3	32.9	32.9	32.0	31.1	33.3	33.6	34.2
	25~29세	60.0	51.1	48.5	46.0	47.2	43.5	42.6	41.3	41.8	45.3
	30~34세	70.3	68.0	66.1	63.5	61.0	59.0	54.6	57.7	56.7	56.0

구분	연령(5세)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성	20-24세	51.8	49.8	46.9	42.7	42.3	40.1	40.5	40.2	38.8	38.0
	25-29세	75.6	65.2	61.1	58.6	60.5	55.9	55.9	52.6	51.8	54.5
	30-34세	85.3	83.4	82.7	79.5	72.7	72.2	66.2	70.7	69.6	68.2
여성	20-24세	30.5	26.1	24.5	21.9	22.3	22.8	20.5	25.6	27.8	30.0
	25-29세	43.4	36.2	35.0	32.4	32.9	29.8	27.9	28.9	30.7	35.0
	30-34세	54.7	51.9	48.7	46.9	48.7	45.1	42.2	43.8	43.1	42.7

자료: 통계청. (2021e).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만, 최근 4년(2017~2020년) 20-34세 청년층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4세는 2017년 31.1명에서 2018년 33.3명, 2019년 33.6명, 2020년 34.2명으로 4년 간 3.1명 증가하였으며, 25-29세는 2018년 41.3명에서 2020년 45.3명으로 4.0명, 30-34세는 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20-34세 청년층의 증가 양상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30대보다는 20대에서 더욱 크게 관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세 여성 청년층의 경우 최근 4년 간 9.5명 증가(남성 2.5명 감소), 20-29세 여성 7.1명 증가(남성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년(20-34세)의 주요 원인별 사망률: 고의적 자해(자살)을 중심으로

청년(20-24세)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상기 최근 4년 간(2017~2020년) 20-34세 청년층의 사망률 증가는 고의적 자해(자살)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신생물, 순환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시에 변화폭도 미미한 경향이 관측된 반면, 20-24세의 최근 4년 간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은 2017년 13.3명에서 2020년 19.6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25-29세의 경우에도 19.6명에서 23.7명으로, 30-34세의 경우 23.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간 증가 양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자살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즉, 20-24세 여성의 경우 2017년 9.5명에서 2020년 19.3명으로 9.8명 증가(남성 3.1명 증가), 25-29세 여성 6.0명 증가(남성 2.2명 증가), 30-34세 여성 3.0명 증가(남성 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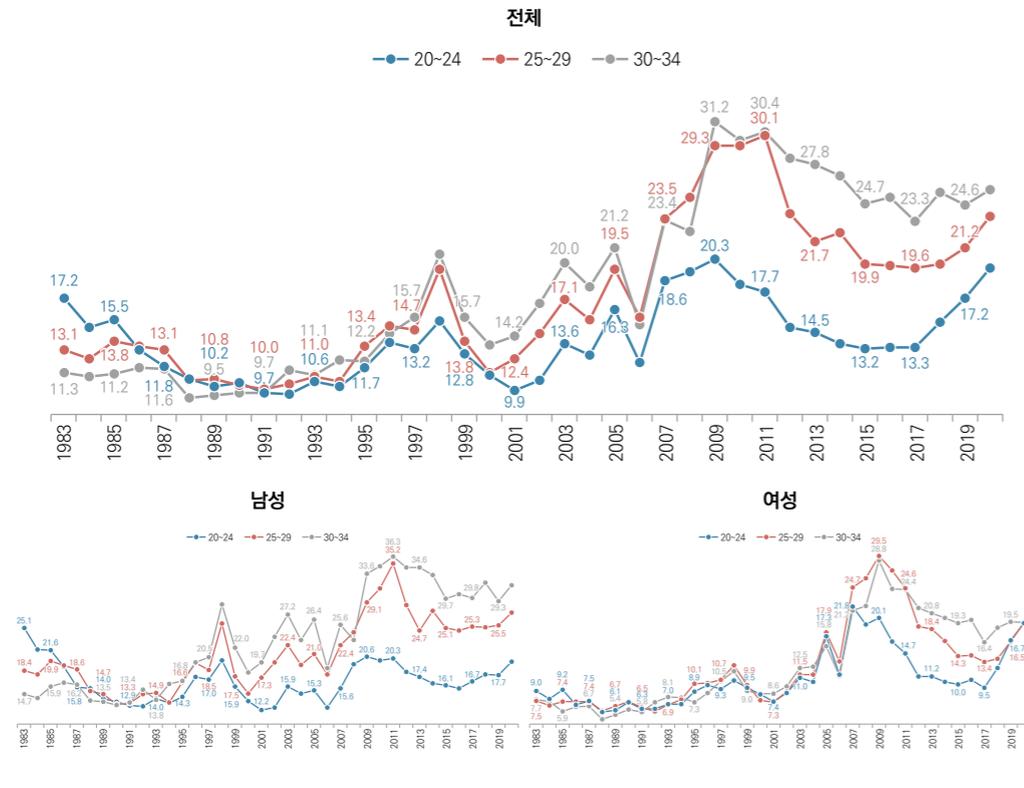
【표 3-49】 청년(20-34세) 5세 단위 연령대별 주요 원인별 사망률(2011-2020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주요 사망 원인별	성별	연령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생물	계	20-24세	4.2	4.3	3.9	3.8	4.2	4.0	3.5	3.8	3.5	3.0
		25-29세	6.6	5.2	6.0	4.9	6.1	4.6	4.9	4.3	5.2	5.3
		30-34세	10.8	10.5	11.6	10.2	11.1	9.8	9.4	9.1	8.9	8.3
	남성	20-24세	4.7	5.0	4.4	4.8	4.3	5.1	4.3	3.8	4.1	3.5
		25-29세	7.3	5.0	6.3	5.5	6.4	4.2	4.6	4.0	5.3	5.2
		30-34세	9.2	9.0	10.1	9.6	9.5	9.3	8.2	7.9	8.3	7.5
	여성	20-24세	3.7	3.5	3.2	2.6	4.1	2.8	2.7	3.9	2.7	2.4
		25-29세	5.8	5.5	5.6	4.2	5.9	5.0	5.1	4.7	5.1	5.4
		30-34세	12.4	12.2	13.2	10.9	12.9	10.4	10.6	10.3	9.5	9.3
순환계통 질환	계	20-24세	2.1	2.0	1.8	1.9	1.8	1.5	1.7	1.4	1.7	1.4
		25-29세	2.9	3.1	2.9	2.8	2.9	3.0	3.0	3.0	2.4	2.8
		30-34세	4.9	6.2	5.0	5.0	4.9	5.2	5.1	5.2	5.2	5.6
	남성	20-24세	2.9	2.5	2.4	2.4	2.4	1.6	2.3	1.8	2.3	1.9
		25-29세	3.8	4.5	4.3	4.0	4.0	4.1	4.5	3.8	3.2	3.7
		30-34세	6.7	8.4	6.5	7.4	6.9	7.6	6.4	7.8	7.1	7.9
	여성	20-24세	1.2	1.4	1.1	1.3	1.2	1.4	0.9	1.0	1.0	0.8
		25-29세	1.9	1.6	1.5	1.6	1.7	1.8	1.3	2.1	1.4	1.8
		30-34세	3.0	3.9	3.4	2.4	2.8	2.6	3.8	2.6	3.2	3.1
고의적 자해(자살)	계	20-24세	17.7	14.9	14.5	13.6	13.2	13.3	13.3	15.3	17.2	19.6
		25-29세	30.1	23.9	21.7	22.4	19.9	19.8	19.6	19.9	21.2	23.7
		30-34세	30.4	28.3	27.8	26.9	24.7	25.2	23.3	25.6	24.6	25.8
	남성	20-24세	20.3	18.2	17.4	16.4	16.1	15.6	16.7	17.8	17.7	19.8
		25-29세	35.2	28.7	24.7	27.8	25.1	24.7	25.3	25.2	25.5	27.5
		30-34세	36.3	34.6	34.6	33.4	29.7	30.4	29.8	32.2	29.3	31.8
	여성	20-24세	14.7	11.2	11.2	10.4	10.0	10.7	9.5	12.5	16.7	19.3
		25-29세	24.6	18.8	18.4	16.6	14.3	14.4	13.4	13.9	16.5	19.4
		30-34세	24.4	21.6	20.8	20.1	19.3	19.8	16.4	18.6	19.5	19.4

자료: 통계청. (2021e).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https://kosis.kr>에서 2021.11.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 성별 및 연령별 자살률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주: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해당연도연앙인구)*100,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3) 자살충동 여부 및 사유

20~29세의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08년 6.4%에서 2012년 9.3%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9세 청년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유로는 (1)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 직장문제, (5) 외로움, 고독, (6) 가정불화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0〉 자살충동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자살충동 여부											
	있었다	(자살충동 사유)									없었다	
		(1)	(2)	(3)	(4)	(5)	(6)	(7)	(8)	(9)		
2008	20~29세	6.4	23.9	6.2	6.0	22.9	19.4	11.8	4.3	1.4	4.0	93.6
	30~39세	6.9	39.3	3.2	5.0	9.7	17.6	20.6	0.3	1.4	2.9	93.1
	40~49세	7.7	49.7	3.3	7.8	4.8	12.9	19.2	0.1	0.2	1.8	92.3
	50~59세	6.3	49.9	0.8	16.8	2.9	8.9	17.3	0.2	0.3	2.9	93.7
	60세이상	7.1	33.9	0.9	37.1	0.6	13.2	10.6	-	-	3.7	92.9
2010	20~29세	7.5	30.0	7.0	5.9	15.0	16.5	12.9	5.3	1.0	6.4	92.5
	30~39세	7.7	37.4	3.4	4.8	9.5	17.4	20.5	-	1.0	6.0	92.3
	40~49세	8.6	50.4	2.6	8.4	4.7	10.7	17.5	-	0.3	5.5	91.4
	50~59세	8.2	52.7	3.3	14.2	4.4	9.4	14.1	-	-	2.0	91.8
	60세이상	5.3	35.3	2.4	36.2	1.2	11.4	8.8	-	-	4.6	94.7
2012	20~29세	9.3	28.7	5.4	8.7	21.4	17.0	7.9	4.2	1.0	5.9	90.7
	30~39세	9.1	42.6	5.6	6.1	8.9	15.0	17.6	0.3	0.5	3.3	90.9
	40~49세	9.0	51.5	4.3	8.8	5.1	11.1	16.9	0.1	0.5	1.6	91.0
	50~59세	9.3	52.6	3.9	12.3	5.3	11.0	13.5	-	0.2	1.3	90.7
	60세이상	7.1	37.4	4.2	36.2	1.7	11.7	6.9	-	0.0	1.8	92.9
2014	20~29세	7.7	22.3	8.6	7.0	19.8	17.6	10.9	5.2	1.7	6.7	92.3
	30~39세	7.6	47.2	4.6	5.1	12.1	11.9	12.7	0.2	1.0	5.1	92.4
	40~49세	6.1	45.6	5.6	7.2	6.4	11.5	20.9	-	0.3	2.3	93.9
	50~59세	7.0	46.7	6.0	12.9	4.2	10.6	14.6	-	0.6	4.4	93.0
	60세이상	5.2	34.2	2.0	32.0	0.5	14.8	13.0	-	0.1	3.5	94.8
2016	20~29세	7.9	26.6	2.4	9.5	25.9	14.3	9.7	4.7	0.9	6.0	92.1
	30~39세	6.5	32.8	6.0	4.4	14.3	17.0	17.6	-	1.5	6.5	93.5
	40~49세	6.4	45.5	3.5	10.2	5.4	12.3	20.1	-	0.7	2.4	93.6
	50~59세	6.6	46.8	1.8	14.9	5.0	14.8	15.2	-	0.8	0.7	93.4
	60세이상	5.3	35.7	3.2	32.8	1.2	14.3	10.3	-	-	2.5	94.7
2018	20~29세	-	-	-	-	-	-	-	-	-	-	-
	30~39세	5.2	44.5	1.7	7.1	15.5	10.0	14.1	-	0.5	6.5	94.8
	40~49세	5.4	41.1	2.4	10.0	10.3	11.8	19.9	-	1.4	3.2	94.6
	50~59세	4.9	49.0	4.3	13.8	2.2	12.1	14.5	-	0.5	3.6	95.1

구분	자살충동 여부											
	있었다	(자살충동 사유)									없었다	
		(1)	(2)	(3)	(4)	(5)	(6)	(7)	(8)	(9)		
2018	60세이상	4.7	34.4	2.0	34.5	1.1	12.9	13.1	-	0.1	1.9	95.3
	65세이상	4.2	30.4	1.4	38.0	0.9	13.7	12.6	-	0.2	2.8	95.8
2020	20~29세	5.5	23.4	4.2	12.2	23.6	14.8	13.4	3.7	2.4	2.3	94.5
	30~39세	6.1	37.3	4.4	10.8	12.3	15.9	12.9	0.5	2.7	3.3	93.9
	40~49세	5.0	49.0	3.2	9.8	7.5	11.4	16.5	-	1.0	1.8	95.0
	50~59세	5.2	51.9	2.3	19.2	4.3	11.3	10.4	-	0.2	0.5	94.8
	60세이상	5.1	36.5	1.1	36.8	2.5	13.6	8.5	-	-	1.0	94.9
	65세이상	4.6	32.5	0.8	41.6	1.0	15.9	6.7	-	-	1.5	95.4

주: 자살충동 사유로 (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 연애 상대와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3)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4) 직장 문제 때문에, (5) 외로움, 고독 때문에, (6) 가정불화 때문에, (7) 학교성적, 진학문제 때문에, (8) 친구나 동료와의 불화나 따돌림 때문에, (9) 기타 등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2년주기).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 문화와 여가

가. 청년의 여가활동 및 여가시간

1) 여가활동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순위는 20대는 취미와 오락활동이, 30대는 휴식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부 비율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5년간 일관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는 취미, 오락활동이 2018년 52.9%에서 2020년 41.3%로 하락한 반면, 2순위인 휴식활동이 24.8%에서 33.4%로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30대는 휴식활동이 2014년 60.6%에서 2016년 47.8%로 하락한 이후로 약 40%대를 계속 유지하며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본 장에서는 청년의 여가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살펴보았다. 해당 조사에서 청년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정의하였다.

〈표 3-51〉 연도별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순위 (단위: %)

구분	2014	2016	2018	2019	2020	
문화예술 관람활동	20대	2	1	1.5	0.9	3.7
	30대	1.5	0.7	1.2	0.3	4.2
문화예술 참여활동	20대	0.7	2	0.2	0.7	0.9
	30대	0.4	0.8	0.5	0.5	1.1
스포츠 관람활동	20대	1.3	1.8	1.1	2.2	2.7
	30대	2.4	2.2	1.6	2	2.5
스포츠 참여활동	20대	10	7.8	6.8	4.9	10.1
	30대	8.7	10.3	10	6.6	11.3
관광활동	20대	0.5	0.3	0.2	0.4	0.8
	30대	0.7	0.5	0.8	0.4	1.7
취미, 오락활동	20대	45.2	51	52.9	45.7	41.3
	30대	21.1	33	36.8	34.8	30.1
휴식활동	20대	30.6	28.5	24.8	35.5	33.4
	30대	60.6	47.8	42.8	48.7	45.1
사회 및 기타활동	20대	9.8	7.7	12.5	9.7	7
	30대	4.6	4.6	6.4	6.6	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 여가시간

지난 1년 동안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20대는 2016년 3시간 미만이 4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때를 제외하면, 모두 3-5시간 미만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1.8%에서 2020년 44.2%로 하락하는 경향도 보였다. 30대도 20대와 유사하게 3시간 미만과 3-5시간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3시간 미만의 평균 여가시간 비중은 2016년 46.3%에서 2020년 40.7%로 소폭 하락하였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대는 2016년 2.9시간에서 2020년 3.7시간으로 높아졌고, 30대도 2016년 2.8시간에서 2020년 3.1시간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52〉 연도별 지난 1년 동안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단위: %, 시간)

구분	2014	2016	2018	2019	2020	
3시간 미만	20대	31.6	44.6	32.9	31.3	30.2
	30대	38.9	46.3	43.8	42.7	40.7

구분		2014	2016	2018	2019	2020
3~5 시간 미만	20대	50.1	44.4	51.8	47.7	44.2
	30대	46.2	44.3	46.5	42.2	43
5~7 시간 미만	20대	14.8	9.6	13.6	17.7	18.4
	30대	12	7.8	8.9	12.8	12.5
7~9 시간 미만	20대	2.8	1.2	1.5	2.4	4.7
	30대	2.6	0.9	0.7	1.6	2.6
9시간 이상	20대	0.6	0.2	0.2	0.8	2.4
	30대	0.4	0.6	0.1	0.6	1.3
평균	20대	3.3	2.9	3.2	3.4	3.7
	30대	3.1	2.8	2.8	3.0	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나. 청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⁵⁾

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0대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았다. 20대는 2018년 97.1%에서 2020년 84.3%로 관람률이 감소하였다. 30대도 2018년에는 91.6%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72%로 대폭 하락하였다.

【표 3-53】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관람함	20대	97.1	97.4	84.3
	30대	91.6	91.5	72
관람 안함	20대	2.9	2.6	15.7
	30대	8.4	8.5	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2)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의향

2014년부터 문화예술행사 종류 별로 직접 관람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도별로 20대와 30대 모두 영화 관람 의향이 약 90%대로 가장 높았다. 단, 모든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이

5) 본 절에서는 청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살펴보았다. 해당 조사에서 청년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정의하였다.

2020년에는 소폭 하락하였다. 2020년에 20대는 86.3%, 30대는 79%로 영화 관람 의향이 하락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뮤지컬, 대중음악, 연예 관람의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20대에서 뮤지컬은 24.9%로, 대중음악, 연예는 21.9%로, 30대는 각각 23.5%, 18%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54】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의향 (단위: 명, %)

구분		2014	2016	2018	2019	2020
문학행사	20대	0	0	14.7	9.6	4.2
	30대	0	0	12	10.1	4.2
미술전시회	20대	0	0	21.5	22	16.8
	30대	0	0	20	21.3	13.2
서양음악	20대	13.9	8.3	11.4	8.7	3.8
	30대	12.2	7.9	10.8	10.5	4.9
전통예술	20대	7.7	4.9	5	7.4	2.4
	30대	7.5	6.6	6.6	9.7	2.2
연극	20대	42.7	37.1	32.5	29.7	19
	30대	32.7	27.9	29.7	28.7	15.5
뮤지컬	20대	43.2	33.8	30	32.8	24.9
	30대	34.7	27.7	32.4	33.6	23.5
무용	20대	10.3	3.9	5.4	4.8	2.4
	30대	9.3	3	4.2	4.8	1.6
영화	20대	95.6	95.9	97.8	97.5	86.3
	30대	90.6	90.7	94.1	93.4	79
대중음악, 연예	20대	43.7	36	41.2	38.8	21.9
	30대	33.5	23.7	32.9	30.2	18
역사, 철학강의 및 역사탐방	20대	0	11.2	0	-	-
	30대	0	11.5	0	-	-
의향없음	20대	1.5	0	0	2.1	-
	30대	4.9	0	0	4.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3)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2019년과 2020년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2, 30대 모두 참여 안함 비율이 증가하였다. 20대는 참여함 비율이 2019년 12.9%에서 2020년 5.7%로, 30대는 2019년 10.8%에서 2020년 4.4%로 하락하였다.

〈표 3-55〉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참여함	20대	12.9	5.7
	30대	10.8	4.4
참여안함	20대	87.1	94.3
	30대	89.2	95.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다. 청년의 국내여행 경험

2018년부터 공통된 항목을 살펴보면, 국내전체경험은 20대가 2018년 92.7%에서 2020년 92.1%로 소폭 하락하였다. 30대는 같은 기간 동안 95%에서 92.8%로 감소하였다. 관광 전체경험은 20대는 같은 기간 동안 90.4%에서 83.8%로 감소하였다. 30대는 같은 기간 동안 92%에서 84%로 낮아졌다.

〈표 3-56〉 연도별 국내여행 경험률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국내전체경험	20대	92.7	91.1	92.1
	30대	95	90.6	92.8
국내숙박경험	20대	-	-	65
	30대	-	-	65.6
국내당일경험	20대	-	-	77.9
	30대	-	-	80.3
관광전체경험	20대	90.4	82.5	83.8
	30대	92	84.4	84
관광숙박경험	20대	-	-	57.4
	30대	-	-	58.1
관광당일경험	20대	-	-	70
	30대	-	-	71.5
기타전체경험	20대	58.8	61.4	52.5
	30대	62.8	69.2	59.3
기타숙박경험	20대	-	-	27.3
	30대	-	-	33.1
기타당일경험	20대	-	-	43.8
	30대	-	-	49.5

주: 국내여행 경험률은 12월 조사에서 한 해 동안의 국내 여행 경험 여부를 파악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국민여행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신체·정신적 여건 및 사망 요약

“청년층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최근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인지율, 정신장애 유병률, 우울장애 일년유병률 등의 지표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한편, 자살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20대 초반 여성 청년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한 자살충동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직장문제, 외로움과 고독, 가정불화 순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사망률은 최근 10년간 감소세인 가운데, 25~29세 연령대와 남성의 감소폭이 큰 특징을 보인다. 다만, 최근 4년간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최근 여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20년 기준 20대 청년은 여가생활로 취미와 오락활동에, 30대 청년은 휴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으로 20대의 경우 3.7시간을 30대는 3.1시간을 각각 할애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20대는 0.4시간이 늘었고, 30대는 변화가 없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20년 기준으로 20대 84.3%, 30대 72.0%로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추측된다. 이는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의향은 영화, 뮤지컬, 대중음악·연예의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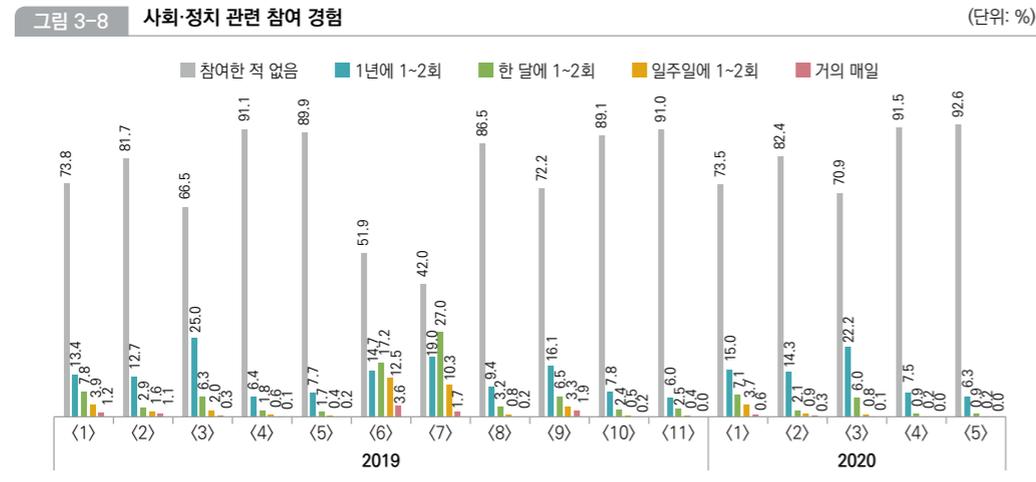
제3절 참여와 권리

1. 사회·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과 정치적 효능감

가. 사회·정치관련 참여 경험⁶⁾

사회·정치관련 참여 경험은 2019년과 2021년의 조사 대상과 조사 항목에 차이가 있어 비교는 어렵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정치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를 거의 매일 찾아봤다는 응답이 3.6%였다.

참여한 적 없음을 제외하고, 10%가 넘는 응답은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1년에 1-2회(16.1%)),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한달에 1-2회(27.0%)), (1년에 1-2회(19.0%)),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한달에 1-2회(17.2%))(1년에 1-2회(14.7%)), 서명에 참여하기(1년에 1-2회(25.0%)),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1년에 1-2회(12.7%)),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1년에 1-2회(13.4%))였다.



주: 2019년은 15세~39세, 2020년은 18세~34세.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19. 인출.

6) 사회·정치관련 참여 경험, 사회·정치관련 참여 의향, 정치적 효능감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통계청승인번호: 402004, 작성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단, 사회·정치관련 참여 경험, 사회·정치관련 참여 의향, 정치적 효능감 실태를 살펴보는 데는 다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정치관련 참여 경험은 2019년~2020년, 사회·정치관련 참여 의향과 정치적 효능감은 2017년~2020년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2019년에는 15세~39세까지, 2020년에는 18세~34세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둘째, 동일한 지표라 하더라도, 연도에 따라 문항이 조정되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의 사회·정치관련 참여 경험에 대한 조사 문항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는 유일하게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이 감소한 문항이었다.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가 미세하게 각 범주에서 모두 증가했다.

나. 사회·정치관련 참여 의향

대상과 문항에서 비교 가능한 2017년, 2018년 사회·정치관련 참여 의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전항목에서 모두 감소했다. 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항의전화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 부착,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서 늘어났다.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증가한 항목은 항의전화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서명에 참여하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 부착하기였다.

항목을 달리한 2019년의 조사에서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게 나온 문항은 투표에 참여하기(29.2%)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10% 미만의 확실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항 또한 투표에 참여의사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 부착하기,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또한 10%가 넘게 아마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범위가 18세~34세로 달라진 2020년의 사회·정치관련 참여 의향에서 항의 전화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와 같은 비교적 직접적,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는 참여뿐 아니라, 전 항목 모두에서 확실한 참여 의사는 모두 감소했다.

〈표 3-57〉 사회·정치 관련 참여 의향 (단위: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7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2.9	27.5	28.0	28.1	3.5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 부착	13	28.0	29.0	25.9	4.1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10.4	22.7	28.4	32.9	5.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7.0	34.1	29.4	17.5	2.1
	항의 전화하기	22.2	34.5	25.7	14.8	2.8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8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9.1	24.0	28.8	35.1	3.0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밴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13.4	20.2	29.9	32.4	4.1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12.8	22.1	29.6	31.1	4.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8.3	27.6	32.4	20.0	1.8
	항의 전화하기	19.9	30.3	32.7	15.4	1.7
2019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0.4	32.2	20.6	14.9	1.9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밴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34.2	32.1	19.1	12.2	2.5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27.3	27.3	23.3	18.8	3.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41.6	36.9	14.8	5.9	0.8
	항의 전화하기	43.7	35.0	14.6	5.9	0.8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24.9	22.6	23.2	23.7	5.7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21.7	22.2	29.1	23.5	3.5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42.4	39.1	13.6	4.4	0.5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32.9	28.7	20.1	14.8	3.5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47.4	35.9	13.2	3.0	0.5
2020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43.6	38.3	14.7	3.0	0.4
	투표에 참여하기	9.6	7.5	13.6	40.1	29.2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41.2	30	14.8	12.8	1.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밴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43.3	28.7	16	10.7	1.2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39.8	22.7	18.5	16.7	2.2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50.7	31.1	12.9	4.9	0.4	
항의 전화하기	50.9	31.6	12.3	4.7	0.5	

주: 2017~2019년은 15세~39세, 2020년은 18세~34세.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19. 인출.

다. 정치적 효능감⁷⁾

먼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38.4%, 2018년 39.1%, 2019년 37.00%, 2020년 44.8%였다. 다음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문항은 2017년 45.2%, 2018년 40.7%, 2019년 39.9%, 2020년 49.5%였다. 끝으로,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2017년 33.0%, 2018년 31.0%, 2019년 29.1%, 2020년 37.6%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리하면, 동일 연령대를 조사한, 2017년~2019년의 정치적 효능감은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며, 18세~34세를 조사한 2020년의 정치적 효능감은 2017년~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8】 정치적 효능감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6	16.9	42	33.8	4.6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7	12.2	40.9	40	5.2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8	19.8	43.4	29.7	3.3
2018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4	20.8	35.8	37.4	1.7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8	15.3	40.3	38	2.7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7	20.6	43.7	27.3	3.7
2019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9	19.3	37.7	32.8	4.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2.7	5	14.4	40.6	35.4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7	7.8	23.6	39.4	25

7) 정치적 효능감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문항으로 측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20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3	15.2	34.8	40.3	4.5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4	10.4	36.1	43.2	6.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6	16.7	38.2	32.7	4.9

주: 2017~2019년은 15세~39세, 2020년은 18세~34세.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19. 인출.

라. 사회적 관계

1)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

우리사회를 약간 믿을 수 있다는 응답과 매우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을 합한 수치를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29세, 30~39세 모두 증가했으며, 20대에 비해 30대가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의 경우, 20~29세는 45.1%, 30~39세는 48.6%가 2021년에는 20~29세는 47.9%, 30~39세는 52.2%가 우리사회를 약간 믿을 수 있거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표 3-59〉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단위: %)

구분	매우 믿을 수 있음	약간 믿을 수 있음	별로 믿을 수 없음	전혀 믿을 수 없음	
2019	전체	3.2	47.7	43.1	5.9
	20~29세	2.6	42.5	47.0	7.9
	30~39세	2.2	46.4	45.3	6.1
2021	전체	4.5	51.1	39.1	5.3
	20~29세	3.9	44.0	43.7	8.3
	30~39세	4.2	48.0	40.7	7.0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0R&conn_path=I3에서 2021. 12. 19. 인출
 (원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2)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20대와 30대 모두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가 더 도드라진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표 3-60〉 사회적 관계망 (단위: %)

	(1)	(2)	(3)	(4)	(5)	(6)	(7)	(8)	(9)
2019	79.6	20.4	2.3	51.4	48.6	2.2	83.3	16.7	2.9
	85.9	14.1	2.8	62.6	37.4	2.6	89.3	10.7	3.7
	83.4	16.6	2.3	62.5	37.5	2.1	88.9	11.1	2.9
2021	72.8	27.2	2.3	50.1	49.9	2.2	79.6	20.4	2.9
	77.5	22.5	2.8	60.0	40.0	2.7	85.4	14.6	3.7
	77.0	23.0	2.4	61.7	38.3	2.2	84.0	16.0	3.1

주: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2)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평균) (명)
 (4)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5)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6)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평균) (명)
 (7)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8)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9)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평균) (명)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2.19. 인출.

2. 정치·정책 참여

가. 청년정치인 비율⁸⁾

30세 미만의 경우, 19대에서는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20대와 21대에서 30세 미만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며, 그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에서는 미미하며, 비례대표에서 20대를 제외한 19대와 21대에서 약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61〉 국회의원 비율 (단위: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30세 미만 비율	30세 이상 40세 미만 비율	30세 미만 비율	30세 이상 40세 미만 비율
19대 (2012년)	0.0	1.2	0.0	11.1

8) 청년정치인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활용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시도의회) 연령별 당선인의 비율을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30세 미만 비율	30세 이상 40세 미만 비율	30세 미만 비율	30세 이상 40세 미만 비율
20대 (2016년)	0.0	0.4	2.1	2.1
21대 (2020년)	0.0	2.4	4.3	10.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r>에서 2021. 12. 19. 인출.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30세 미만보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당선인의 비율이 좀 더 높다.

〈표 3-62〉 지방선거(시·도의회선거) 비율 (단위: %)

	30세 미만 비율	30세이상 40세 미만 비율
6회 (2014년)	0.1	2.3
7회 (2018년)	0.1	4.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r>에서 2021. 12. 19. 인출.

나. 청년 투표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투표율 대체로 증가 추세이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19세가 가장 높고 20대 전반, 30대 전반, 20대 후반의 순서였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에 비해, 청년 투표율은 2020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낮은 편이다.

〈표 3-63〉 대통령선거 투표율 (단위: %)

연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2007	63.0	54.2	51.1	42.9	51.3
2012	75.8	74.0	71.1	65.7	67.7
2017	77.2	77.7	77.1	74.9	74.3

주1: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주2: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별 및 연령집단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투표율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https://www.index.go.kr>에서 2021.12.19. 인출.

〈표 3-64〉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단위: %)

연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2008	46.1	33.2	32.9	24.2	31.0
2012	54.2	47.2	45.4	37.9	41.8

연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2016	58.0	53.6	55.3	49.8	48.9
2020	66.2	68.0	60.9	56.7	56.5

주1: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주2: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별 및 연령집단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투표율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https://www.index.go.kr>에서 2021.12.19. 인출.

〈표 3-65〉 지방선거 투표율 (단위: %)

연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2008	46.1	33.2	32.9	24.2	31.0
2012	54.2	47.2	45.4	37.9	41.8
2016	58.0	53.6	55.3	49.8	48.9
2020	66.2	68.0	60.9	56.7	56.5

주1: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주2: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별 및 연령집단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투표율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https://www.index.go.kr>에서 2021.12.19. 인출.

다.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현황

정부는 2020년 9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총 152개 위원회에 340명의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45개 위원회에서 청년위원 211명을 위촉했다.

구체적으로는 28개 대통령·총리·각 부처 소속 청년참여위원회(중앙 청년참여위원회)에서 50명, 17개 시도 청년참여위원회에서 161명의 청년을 위촉했다. 2020년 9월 이전에는 16명의 청년위원이 중앙 청년참여대상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그 200% 이상인 34명이 추가 위촉되어 총 50명의 청년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 중이다. 현재 총 16개의 중앙 청년참여위원회가 청년위원 위촉 목표를 달성했다.

향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2025년까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청년참여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비율 20%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청년인재 발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처별·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국무조정실, 2021).

〈표 3-66〉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현황(위촉직 20%이상) (단위: 명)

소관기관	위원회	청년위원 목표	위촉직	전체위원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2	20	40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5	10	22
교육부	등록금심의위원회 (각 대학별 구성)	3인 이상	7인 이상	7인 이상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	1	3	8
대통령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5	22	43
국무총리	양성평등위원회	2	10	25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4	20	35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1	5	13
국방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1	5	12
복지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2	10	22
중기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2	6	16

자료: 관계기관 합동.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1. 3. 30.

참여·권리 요약

청년들의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명 참여, SNS 등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의견 표현 위해 뱃지 등 부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각 참여 경험은 30%에서 18%의 범위에 분포한다. 참여 의향은 투표 참여, 서명 참여, SNS 등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의견 표현 위해 뱃지 등 부착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해서 2020년 기준으로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약 50% 정도이고,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응답이 약 45%, 그리고 선거 등 참여를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이 약 38%로 나타난다.

한편, 21대 국회의 40세 미만 청년 정치인 비율은 2.4%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19대(1.2%)와 20대(0.4%)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다. 투표율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청년층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신뢰도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에 비해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30대에 비해 20대의 신뢰도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사회적 관계망은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제 2 부

대한민국 청년정책

총론
의의 및 주요내용

제1장
청년정책의 흐름

제2장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제3장
부문별 성과



총론

의의 및 주요내용

제2부 '대한민국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의 흐름과 문재인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2부의 특징은 향후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집필하였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 담당자가 현실적인 정책배경, 성과, 애로사항 등을 서술하여 청년 관련 법령, 조직 및 주요사업을 상세히 소개할 수 있었다.

제2부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의 청년정책의 역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청년정책의 진행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다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신설,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특별대책,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희망ON 프로젝트등 청년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2장 3절 이후부터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에서 분야별 대표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2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민·관, 중앙-지자체, 청년과의 소통을 주요 원칙으로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을,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의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다룬다. 주거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매입 임대주택,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등을, 복지·문화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의 일하는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청년심리지원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국민신문고, 청년참여 2030 등을 다루고 있다.

1 장

청년정책의 흐름



1.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청년정책

가.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김대중정부에서 청년 관련 이슈가 제시되었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점차 구체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실업대책은 전체 실업규모를 축소하고 기능·연령·학력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청소년(15~24세) 미취업을 다루었으나 정책대상으로 청년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청년고용촉진대책은 노동 공급측면에서 중소기업 미스매칭, 대학의 현장적합성 부족을, 노동 수요측면에서 해외취업, 공공부문 일자리를, 노동 인프라 측면에서 진로지원,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대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화되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고자 '고용률 70%'을 목표로 제시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09.10),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대응하였다.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화고용제, 중소기업 취업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 기조는 지속하였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을 통해 해외취업지원(K-Move),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기업·정규직의 경직성 문제, 근로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청년정책들은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이전에는 청년을 근로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취약집단을 부양하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기대했기 때문에 정책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청년실업률이 증가하여 정책 수혜자로서의 청년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청년정책들은 고용정책에 국한된 청년정책이라는 한계

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 청년문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사업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1-1〉 역대 정부 시기별 특징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2017
주요 이슈	ICT와 세계화 청년참여와 활동 청년문화 콘텐츠 글로벌 청년문화	청년 정치참여 청년우울 청년실업 경제양극화	생애주기별 문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글로벌 경제위기 청년 창업활동	일자리 문제 정치 참여 대학 창업지원 경제 개혁 저출산 고령화 청년복지정책
추진 체계	실업대책 위원회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 정책	정부 지원 인턴제 청년점포 임차지원	청소년직장체험 해외취업지원 기능사 양성훈련 고용정보망 운영 청년고용촉진장려금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연수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신규직업자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버스(취업상담) 중소기업직업체험 내일채움공제 대학중심 취업설명회 청년창업 2030정책참여단

출처: 김지경 외(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조례를 최초로 제정(15.1)하여 주거안정·부채경감·생활안정 등 다방면에서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전담부서, 청년정책위원회,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통해 정책수요자가 청년정책추진 과정에 심의·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하였다. 또한 서울형 청년보장제(5년간 7,136억)를 통해 설자리·일자리·살 자리·놀자리에서 각각 청년활동지원,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청년 활력공간 조성·지원 등을 핵심전략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보장제는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중심에서 그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서 대구 광주 경기 전남 등도 속속 조례를 제정(15)하여 현재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전담부서에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청년

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청년행복위원회와 따복청년포럼에서 의제발굴·자문을 담당한다. 참여, 도약, 자립, 향유의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 15개 추진전략으로 31개 청년지원정책과 17개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다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참여·자립기반형성·권익증진·지역사회발전 등 일자리 분야를 넘어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청년기본조례의 도입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구상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어 청년문제에 대해 위기감과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아젠다 제시 역할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발맞춰 다양하게 구상한 청년정책들이 원활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체감실업률도 잦아들지 않자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청년일자리대책은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 지원,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미래 먹거리 육성, 사회보상체계 혁신, 교육·훈련체계 혁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였다. 또한 청년고용촉진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하고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청년 취업준비 지원,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계층이동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정책으로는 일자리에서 新직업 Making Lab 신설, 주거에서 교통요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교육에서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확대, 취약청년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을 들 수 있다. 일련의 대책에서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이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먼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주요 토대로 청년 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

해 청년의 범위를 정의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의무, 청년 실태조사 시행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및 청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회의가 네 차례 개최되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기본계획·시행계획, 청년특별대책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이전의 청년정책은 한정된 분야로, 개별 부처에 국한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을 총괄로 9개 부처의 전담부서와 협조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청년정책추진단은 현재 청년정책조정실로 승격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보편적 청년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은 수립과정에서도 청년을 위함(for youth)에서 나아가 청년과 함께(with youth) 수립된 계획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청년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일자리 분야(94개), 주거 분야(24개), 교육 분야(83개), 복지·문화 분야(37개), 참여·권리 분야(32개)의 세부과제를 통해 5년 후 일자리 분야 128만명+α 청년구직자 지원·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를, 주거 분야 청년주택 27만 3천호 공급·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감축·43만 5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을, 복지·문화 분야에서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자산형성 지원·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교육분야에서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참여·권리 분야에서 청년참여20·30·청년마당 확대·온라인 청년하나로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308개 과제, 23.8조 규모(전년 대비 19.6% ↑)로 구체화 된 계획으로, 매년 수립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이 일 중심 정책에서 삶 중심 정책으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전 정부들의 청년 정책들이 일자리 분야에 국한되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 외에 주거비 부담·자산격차·참여 소외 등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을 사회진입 이행기라는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근무 및 주거 여건, 건강, 출산·보육, 문화 등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청년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들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2】 문재인 정부 시기별 청년정책 특징

	2017~2018	2019	2020	2021
중점 분야	청년 일자리 중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관심 영역 확대		
주요대책 등	청년 일자리대책 (18년 3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19년 7월)	청년기본법 제정 (20년 8월)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20년 3월, 20년 9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0년 12월)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1년 3월) 청년특별대책 (21년 8월)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21년 11월)

제2장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제1절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1. 「청년기본법」 제정

가. 제정 추진 배경 및 경과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은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다. 2004년 소비·투자 지표가 악화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이 활발해지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취업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확대 노력 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를 ‘청년’으로 규정하여, 현재의 법적 ‘청년’의 개념(19세~34세)와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등을 계기로 청년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민간 가계부문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청년들은 ‘등록금 인하’ 및 ‘주거비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240명의 청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답변하도록 구성된 기구였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활발한 제안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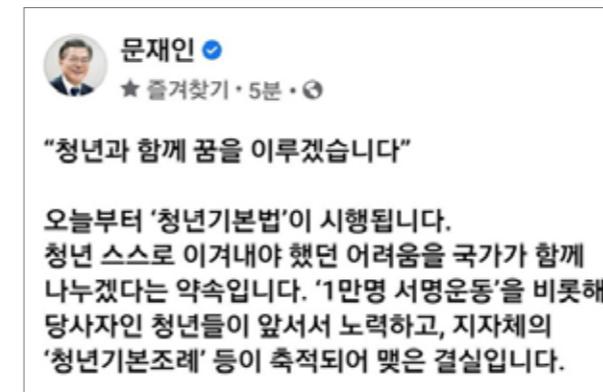
그 이후 ‘시흥’, ‘대전’ 등 타 지자체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확산되었으며, 이 흐름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2019년에는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한 지방정

부·청년 공동 실천문’이 발표되었다. 실천문에는 ▲ 지역 주도의 청년정책 논의와 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 정부와 국회에 청년기본법 제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청년의 협치 체계 구축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17년 11월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을 종합 검토하여 「청년기본법(안)」을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8.5월)하였고, 동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18.8월)되었다.

그러나 청년 관련 다양한 시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9년 5월 당·정·청 논의 끝에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을 총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7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출범하고 법안은 정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9월 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소위에서 2회(10월, 11월) 논의되고 11월 정부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사위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20년 1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2월 공포되고, 8월 부터 시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청년기본법 토론회 포스터

나. 주요내용

우선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수립·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 개정 사항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인재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1.8.17 신설, '22.2.18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 시행(‘20.8.5~) 1년 계기 주요 발언

김부겸 국무총리(‘21.8.5) :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5년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최초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제 시작입니다. '청년' 앞에 N포세대라는 좌절로 점철된 말 대신, 희망과 성공의 단어가 자리 잡는 날까지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 설치 배경

청년 정책이 청년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청년이 아닌, 정책 수립 참여자로서 '청년 주체성'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 정부, 청년 단체 등에서는 청년과 청년 전문가가 청년 정책 심의 및 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범정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민간위원 위촉 과정

민간위원 구성을 위해 전문가·관계부처 추천과 공모(20년 4~5월)등을 거쳐 각 영역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였고,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원 간 숙의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활동분야·나이·지역·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였다.

3) 구성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당연직 20명, ▲위촉직 20명)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18일에 설치 되었다.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20명(임기 2년)을 위촉하였고 그 중 청년위원은 12명, 여성위원 11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연직 위원 중 청년정책이 경제·사회분야를 망라한 전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과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연구에 매진해 온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청년위원들은 그간 청년의 권익·자립·주거 개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창업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2-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를 둘 수 있다. 이에 제1기 실무위원회는 2021년 3월 23일 설치되어, 청년위원 5명, 여성위원 4명을 포함한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하였다.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총 6개의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2021년 11월 15일에 출범하였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총 39명으로 청년위원은 23명이며, 여성위원은 18명이다.

그림 2-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구성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2-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 명단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분야	성명	직책
일자리 (7명)	김유빈(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강수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박경호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업육성팀장
	백경호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서신비	(주)마라피키 이사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일자리 (7명)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교육 (7명)	고재성(위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센터장
	고은혜	제주대 통번역대학원 통역번역센터 연구원
	김기윤	대구해울중 고등학교 교사
	손은령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대표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
주거 (6명)	윤성진(위원장)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우광	부산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분과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민병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활 (6명)	정세정(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부연구위원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 부연구위원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해영	서울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최천	(주)문화총동 대표
참여·관리 (6명)	배정희(위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안나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
	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 센터장
	김민재	생각나는마산을만드는청년들(활동가)
	엄창환	부산청년센터장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기획·균형 발전 (7명)	기현주(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김태진	(주)동네zoom 대표
	노경민	달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변지혜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분야	성명	직책
기획·균형 발전 (7명)	봉학중	농업회사법인 (주)녹색계란 대표
	정경은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준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원

5) 역할 및 기능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등

6) 주요 성과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0년 9월 18일에 이승윤 부위원장 등 20명의 민간위원 위촉식이 거행되었고, 위촉식 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을 발표하였다.

그림 2-3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위원과 청년정책추진단 좌담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현 청년정책조정실)에서는 「청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1차 5개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앙부처 청년정책 책임관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동참했다.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기한 상 촉박함으로 민간위원들은 2020년 9월 28일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첫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2020년 10월 10일 '기본계획 수립방안' 관련 좌담회를 개최, 민간위원 18명과 청년정책추진단이 참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 방향, 추진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분과TF를 구성하였고 분과TF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③ 민간위원 분과별TF 회의

2020년 10월 10일 좌담회 이후, 각 분과TF 장을 중심으로 분과별 두 차례의 회의를 각각 진행하였고, 분과별 회의에는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표 2-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위원 분과TF 회의

분과	주요 의견
일자리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받는 대상이 아닌 '청년의 주체적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 필요 •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필요 • 기본 노동권의 교육을 정규과정에 포함 필요 • 노사협의회에 청년비율 일정 포함 필요 • 청년기업 맞춤형 멘토 지정 • 창업을 위한 서류와 절차 간소화 및 부처별 분산 되어 있는 신청시스템 통합 <p>* 도움 주신 청년정책 전문가 : 김민서(고용정보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영민(청년유니온),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이수지(평스플로우), 최윤승(창업진흥원), 한상연(어쩌다농부)</p>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상 건물 임대부 사회주택 • 불법 건축물 임대시장 감독 강화 • 청년 주거정책 기금 신설 • 세입자 주도의 주거 정책 설계에 청년의 참여 • 정책어가 어려워 알기 쉬운 언어로 변경 필요 • 청년주택 입지 선정 시 청년 의견 적극 반영 필요 <p>* 도움 주신 청년정책 전문가 : 김솔아(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 남원석(서울연구원), 최은희(LH), 박미선(국토연구원), 김지선(서울대학교 학생)</p>
복지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사회적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파악 및 지원 사업 포함 • 코로나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청년 정신건강 바우처 확대 추진 • 이행기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확대 및 신용회복을 위한 특단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비예산 사업인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및 채무조정 특례 지원 사업에 예산 반영 필요 • 청년 사회 출발자산 마련 <p>* 도움 주신 청년 전문가 : 기현주(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김문길(보건사회연구원), 박원진(aud 사회적협동조합), 오욱찬(보건사회연구원), 장재열(청년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한영섭(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인권센터가 없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수기업의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모색 필요 • 금융, 노동안전, 양성평등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데 열악한 환경임 • 민간영역의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업체와 협력 방안 필요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 강조 보다도 진로 탐색 부분 강화 필요 • 학교 외 다양한 교육 부문의 청년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를 담을 필요 <p>* 도움 주신 청년정책 전문가 : 박석준(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 고원형(아름다운 배움 대표)</p>

분과	주요 의견
활동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자율성, 주체성, 창의성 기반의 사회 디자인(설계)을 통한 'Good Life' 실현 •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통해 인기와 부를 창출하는 크리에이터(creator)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지방, 청년, 여성 등 그동안 문화·체육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곳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 홍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gate way 역할 제고 필요 • 예비 청년이 청년정책을 조기에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 대상의 정책 정보 제공, 문화·활동 관련 교육 등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 정책 정보를 토대로 한 콘텐츠 생산·유통 시, 중앙광역기초 단위를 연계함은 물론, 청년 인플루언서 등과 협력하여 콘텐츠 품질 관리와 공급망 확보 필요
	* 도움 주신 청년정책 전문가 : 김선기, 차해영, 박도빈, 하현기 등 청년 활동가
참여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격차 및 지역 간 청년 생태계 특성 파악을 위한 전국 청년 실태 조사 진행 및 분석 바탕으로 지역 특성화 정책 도출 필요 • 시도 청년연석회의 정례화 • 위원회 청년 참여를 위해 기존 관점의 경력·전문성 기준 재검토 필요 • 법령에 정책담당관 및 정책전담부서 설치 명문화 • 청년정책을 전달할 주요 부처 설립 및 전달체계 구축 필요
	* 도움 주신 청년 전문가 : 김광민(대한민국 시도 청년정책 협의회), 서복경(서강대학교), 김선기(신촌문화정치연구모임), 이나윤(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진형익(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박은철(청년센터아카이브)

그림 2-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4 목요일대화

2020년 12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목요일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목요일대화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원들과 함께 청년문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5 민간위원 제안 과제 부처 협의 및 공론장 개최

분과TF 회의 결과 등을 통해 나온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부처 협의를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다혜 위원 주재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부처 협의

공청회 개최 포스터

공청회

6 제1차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0년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발표하였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은 청년의 삶 전체를 살피고 보듬기 위한 첫 대장정으로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혼연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청년들이 직접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청년이 정책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으로,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본계획 수립을 축하하였다.

그림 2-5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전 2021년 3월 23일 김종진 실무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등 10명의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구윤철 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주요 안건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2021년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중앙부처 시행계획에는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대책이 포함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 있고, 청년들에게 그 시작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 주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앞으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2021년 시행계획 정책 발표 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였다.

(4)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1년 8월 20일 구윤철 위원장(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실무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청년특별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2-6 제2차 실무위원회



2021년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청년 창업을 응원하는 'Front1'에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된 청년특별대책에 대하여 심의 및 발표를 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청년입니다.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우리 청년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앞에 희망과 성공의 단어가 자리 잡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청년특별대책은 실무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사전에 검토하는 등 민간위원과 부처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5)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17개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이승윤 부위원장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은 각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청년정책 관련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1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24일 경기도까지 총 17개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승윤 부위원장은 연석회의에서 나온 각 시·도의 의견 내지 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전달하였고, 향후 정책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45건 중 42건 수용)

청년센터 등 각 지역의 청년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의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표 2-3〉 17개 시·도 연석회의 및 현장 방문 일정

연번	시·도	일정	간담회 장소	현장 방문
1	강원	4. 1.(목)	강원도 제2청사 중회의실	춘천시 청년청
2	광주	4. 13.(화)	광주시청 소회의실(3층)	광주 청년센터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
3	경북	4. 15.(목)	경북도청 304호(중회의실)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4	충남	4. 22.(목)	청양군 청년LAB	청양군 청춘거리 부여군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5	부산	4. 29.(목)	부산청년센터	좌동
6	인천	5. 4.(화)	인천시의회(별관) 산업경제세미나실(405호)	인천 청년센터 (유유기지 1호)
7	대전	5. 7.(금)	청춘나들목 (대전역 B3)	좌동
8	울산	5. 20.(목)	울산시청	울산 청년센터
9	세종	5. 25.(화)	세종시 청년센터 회의실	세종 청년센터 조치원 문화정원 청년작가공방
10	충북	5. 27.(목)	충북청년희망센터(청주시)	좌동
11	경남	5. 28.(금)	경남도청 회의실	거북이집(청년주택)청년몰(김해시)

연번	시·도	일정	간담회 장소	현장 방문
12	서울	6. 3.(목)	서소문2청사 청년청 회의실(9층)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13	전북	6. 4.(금)	전북청년허브센터	좌동
14	대구	6. 8.(화)	대구청년센터 공감그래	좌동
15	제주	6. 10.(목)	제주청년센터	제주더큰내일센터
16	전남	6. 17.(목)	전남 중소기업 진흥원 회의실(3층)	휴먼아이티솔루션(청년일자리기업)
17	경기	6. 24.(목)	경기도청 상황실(신관 2층 202호)	용인 청년LAB

(6) 공론장(이슈 포럼) 개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청년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등 4개 분야별로 '2021 청년의제 열린공론장'을 개최하였다. 열린공론장은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공론장 개최에 앞서 이승윤 부위원장은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청년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정책가들이 모여 청년정책을 보다 섬세하게 다듬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였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남형기 실장은 “공론장을 통해 수립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공론장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www.youtube.com/2030youthpolicy)로 행사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2030.go.kr)에서 '2021년 청년의제 열린공론장'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협력

❶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동토론회 개최

2021년 4월 27일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코로나 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으로서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❷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세대연대포럼 개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세대간의 갈등 완화와 세대연대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2021년 7월 1일에 '세대연대'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 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동 포럼

(8) 주요 청년정책 관련 부처 협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21. 7. 5.), 인재양성 혁신방안·기술창업 활성화 방안(21. 11. 10.) 등 주요 청년정책 발표 전 정책 사항에 대하여 부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은 참여소득(교육·참여 연계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정책, 지자체 연계형 청년특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부처에 제안하고 정책 반영과 관련하여 협의(21. 8. 10.) 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과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담당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직원과 정책조정 협의(21. 11. 24.)를 하였다.

(9) 민간위원 정례회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은 온·오프라인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을 하여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1년 6월 12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은 좌담회를 개최하여 2021년 시행계획 이행점검 방향, 2021년 일몰사업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시 청조위·실무위·전문위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림 2-7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 좌담회



(10) 정부위원회 청년위촉 대상위원회 지정 확대 검토

2020년말 기준 청년 위촉 대상위원회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857개 중 총 135개 지정이 되었고, 2021년 추가 지정을 위해 2021년 5월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은 기 지정된 135개를 제외한 722개에 대한 추가 지정 검토를 하였다.

〈표 2-4〉 추가 지정 필요 위원회

연번	소속	주관부처	위원회명
1	고용부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2	국무총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3	방통위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4	국무총리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5	문체부	문체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6	고용부	고용부	중앙노동위원회
7	복지부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8	여가부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9	통일부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0	권익위	권익위	국민권익자문위원회
11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12	대통령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13	대통령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14	국무총리	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5	국무총리	국조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16	국무총리	국조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17	국무총리	인사처	공직인사혁신위원회
18	고용부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

연번	소속	주관부처	위원회명
19	고용부	고용부	노사관계발전위원회
20	교육부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21	교육부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22	교육부	교육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23	국방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회
24	국토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5	국토부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회
26	국토부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27	국토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8	금융위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29	문체부	문체부	문화도시심의회
30	문체부	문체부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31	법무부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32	법무부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회
33	보훈처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34	산업부	산업부	무역위원회
35	산업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36	중기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37	중기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38	중기부	중기부	중소기업사업조정위원회
39	통일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40	행복청	행복청	도시계획위원회
41	행안부	행안부	이북5도위원회
42	행안부	행안부	안전기준심의회
43	행안부	행안부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44	행안부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11) 청년정책 제작발표회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마친 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한솔 위원 주재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발표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기본계획(청년정책 시즌 1) 발표 이후의 일자리·주거·청년 참여 등 다양한 청년 이슈를 청년이 직접 논의를 하였으며,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www.youtube.com/2030youthpolicy)에 발표회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8 청년정책 시즌 2, 제작발표회



나.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입/추진배경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시도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위원회에는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17개 시도는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심의·조정 사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② 세부내용

17개 시도의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393명(당연직: 106, 위촉직: 287)으로, 위촉직 중 청년참여 비율은 60.6%이다. 특히, 울산·충남·전남·제주의 경우 청년참여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단위: 명, %, '21.6월 기준)

구분	위원 구성 현황						
	합계 (A+B)	연직 (A)	위촉직(B)				청년참여 비율 (C/B)
			소계	지방의원	전문가	청년(C)	
계	393	106	287	25	88	174	60.6
서울	18	4	14	3	2	9	64.3
부산	20	2	18	3	6	9	50.0
대구	20	6	14	-	7	7	50.0

구분	위원 구성 현황						
	합계 (A+B)	연직 (A)	위촉직(B)				청년참여 비율 (C/B)
			소계	지방의원	전문가	청년(C)	
인천	20	5	15	1	4	10	66.7
광주	24	8	16	2	5	9	56.3
대전	28	6	22	2	8	12	54.5
울산	19	8	11	0	2	9	81.8
세종	30	5	25	2	10	13	52.0
경기	20	3	17	2	5	10	58.8
강원	18	5	13	2	5	6	46.2
충북	20	6	14	-	5	9	64.3
충남	30	9	21	2	4	15	71.4
전북	22	9	13	1	4	8	61.5
전남	39	11	28	1	7	20	71.4
경북	20	6	14	1	6	7	50.0
경남	20	5	15	2	5	8	53.3
제주	25	8	17	1	3	13	76.5

3. 중앙부처 조직 정비

가. 청년정책추진단 및 청년정책조정실

1) 추진배경

청년들은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비용 증가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취업, 교육, 출산 등 삶의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간 정부의 청년정책은 주로 개별 부처 단위의 취·창업지원 분야에 제한된 정책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과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대통령직속) 폐지('17.6) 이후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이 미흡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국회 차원에서 청년특위('17.11~'18.5)를 설치·운영하며, 다수 의원이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청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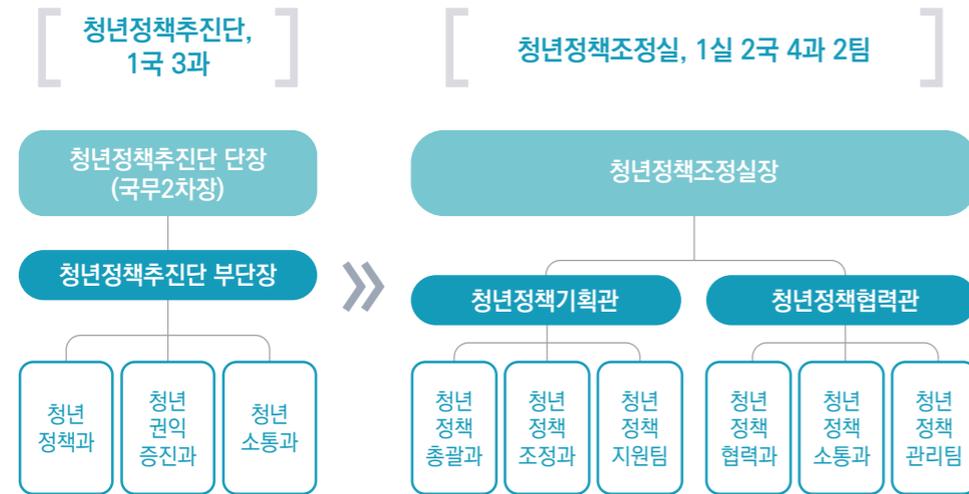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그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정책을 총괄·조정·수립함으로써, 청년들의 활

발한 정책 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추진경과

'19년 5월 당정협의를에서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이후,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되었다.

'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의 폭넓은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청년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국무조정실 직제에 반영하였다.('21.6월)



나. 중앙부처 청년책임관 지정·전담부서 신설과 전담부서협의회

1) 추진배경

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처별 업무량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 '20년 179개 과제 16.9조원 → '21년 270개 과제 약 22조원 /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

이에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일자리 등 청년정책 주요분야 주무부처(9개 부처)에 청년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되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정책책임관을 지정하였다. 주무 9개 부처를 중심으로 전담부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2개 부처(과기정통부, 여가부)를 추가하여 정책소통전략회의도 운영 중이다.

2) 추진내용

청년기본법에는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 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었다. 전담조직 신설은 청년정책책임관의 역할을 정식 직제에 반영함으로써 법에 규정된 청년정책책임관 규정의 취지를 살려 청년정책책임관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표 2-5〉 청년기본법 내 청년책임관 지정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 제16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②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기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해당기관 시행계획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 점검 3.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정책·계획등과의 연계 및 협력

〈표 2-6〉 중앙부처 청년정책책임관 현황(2021년 기준)

순번	부처명	담당부서	시행계획 과제수
1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3
2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37
3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21
4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1
5	통일부	정책기획관	2
6	법무부	정책기획관	-
7	국방부	보건복지관	3
8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	6
9	문체부	문화정책관	37
10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18
11	산업부	산업정책국	6
12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0
13	환경부	정책기획관	5
14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	35
15	여가부	정책기획관	16

순번	부처명	담당부서	시행계획 과제수
16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31
17	해수부	정책기획관	8
18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	20
19	방통위	기획조정관	2
20	공정위	경쟁정책국	1
2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5
22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	2
23	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4
24	인사처	기획조정관	2
25	법제처	기획조정관	-
26	식약처	기획조정관	3
27	원안위	기획조정관	-
28	국세청	기획조정관	-
29	관세청	기획조정관	-
30	조달청	기획조정관	2
31	통계청	사회통계국	-
32	병무청	기획조정관	4
33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	1
34	경찰청	기획조정관	-
35	소방청	기획조정관	-
36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2
37	농진청	농촌지원국	4
38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5
39	특허청	기획조정관	5
40	기상청	기획조정관	-
41	행복청	기획조정관	-
42	새만금청	기획조정관	-
43	해경청	기획조정관	-

청년전담조직 업무가 부처 특정사업이 아닌 부내 청년정책 총괄·조정한다는 내용이 각 직제령에 반영되어, 전담조직이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제시행규칙에도 부처 공통으로 통일된 내용(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을 우선 규정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기능과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신설되는 과의 명칭은 모두 '청년정책과'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가 신설되었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기존에 과단위 조직이 있던 고용노동부에는 팀 단위로 인력이 보강되었다.(21.9.7)

【표 2-7】 9개 부처 전담조직 신설 현황

부처명	인력구성(정원)	사업현황	구성 시기
기획재정부	4급(1), 5급(1), 6급(1), 7급(1)	- 기획재정부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점검 - 청년정책의 교육 및 홍보 - 타 기관 청년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	2021. 9. 7
국토교통부	4급(1), 5급(3), 6급 이하(3)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점검 -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 - 타 기관 청년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	2021. 9. 7
중소벤처 기업부	4급(1), 5급(3), 6급(1), 7급(2)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 조정 및 지원 - 청년 창업지원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청년 창업지원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 대학 창업친화적 제도 활성화	2021. 9. 7
금융위원회	4급(1), 4.5급(1), 5급(2), 6급(2), 7급(1)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 '22년중 청년희망적금 출시 추진 등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청년특별대책 포함과제 이행 -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과제 발굴 및 정책추진	2021. 9. 7
보건복지부	4.5급(1), 5급(1), 6급(1)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운영 - 보건복지 청년정책 기획·개발·연구 -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조사 - 타 기관 청년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	2021. 9. 7
고용노동부	4급(1), 4.5급(1), 5급(4), 6급(2), 7급(2)	- 청년고용 관련 법령 제·개정 - 청년고용대책 총괄·조정 - 청년고용정책 홍보 총괄 - 청년고용 동향 및 통계 조사·분석 -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관리·운영 등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운영	2011. 3. 2.
문화체육 관광부	4.5급(1), 5급(1), 6급(1)	- 문체부 청년정책 총괄 업무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타 부처 회의체 대응 -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 문체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 동·청소년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정책 총괄 - 기타 생애주기, 인구정책 관련 현안·회의체 관리 및 대응	2021. 9. 7

부처명	인력구성(정원)	사업현황	구성 시기
교육부	4.5급(1), 5급(2), 6급(1)	- 교육부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점검 - 청년정책의 교육 및 홍보 - 타 기관 청년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 -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총괄 -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지원 - 소관 예산사업 추진	2021. 9. 7
행정안전부	4.5급(1), 5급(1), 6급(1)	- 행정안전부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점검 - 청년정책의 교육 및 홍보 - 타 기관 청년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	2021. 9. 7

청년실-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전담조직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담조직 협의회는 9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전담부서 책임관이 참석, 격주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전략 설계, 주요대책 수립·이행상황 점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는 청년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4개 분야(채용과정·고용관계, 주거안정·채무경감, 미래설계·취창업, 취약청년·청년친화)의 17개 제도 개선사항을 담았다.

〈표 2-8〉 청년정책 전담조직 협의회 개최안건

회차	회의 안건	시기
1차	- 청년정책 전담부서 협업방안 - 업무추진 방향	2021. 9. 29
2차	- '22년 청년정책 주요 사업 예산 대응 - 부처별 청년체감 제도개선 과제 - 11,12월 청년정책 관련 주요행사	2021. 10. 27
3차	- 제도개선 과제 이견 조정 - 제도개선 과제 발표 방안 협의 - 전담조직 협의회 협조요청 사항	2021. 11. 10
4차	- 청년체감 제도개선 과제 검토	2021. 11. 24
청년정책 전담조직 차관회의	- 청년체감 제도개선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 11. 30

회차	회의 안건	시기
5차	- 17개 과제 후속조치 - 홍보계획 구체화 및 공유	2021. 12. 8.
6차	- 청년정책 성과중심 홍보계획 - 각부처 주요 청년정책 성과 홍보현황 및 계획 ※ 제2차 청년정책소통전략회의와 병행 개최	2021. 12. 15
7차	- 부처별 전담조직 업무보고 및 후속조치 - 1/4분기 집중 홍보계획 - 청년정책 시행계획 협의	2022. 1. 19

그림 2-9 제4차 청년체감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회

(단위: 개월, %)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청년체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부처협의회

정책소통전략회의는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각 부처의 고유한 정책에 대한 홍보 대비 청년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홍보의 효과가 높지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정책소통전략회의는 전담부서협의회에 참여하는 9개 부처에 2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가 추가하여 격월에 1회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청년정책 및 행사의 운영 및 홍보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4. 지자체 조직 정비 및 지자체 전담조직협의회

가. 도입/추진배경

시도는 청년기본법 제정(20.2.4) 이전부터 지역 청년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시도는 지역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지역 청년 정책의 총괄 조정,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시행계획 조정 및 실적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주요분야 중앙부처(9개 부처)에 청년 전담조직이 신설되면서 중앙지자체 청년 전담조직간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지자체 전담조직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 업무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 세부내용

'20년 12월 기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책임관 및 전담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년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가장 먼저 신설되었고(15.1), 세종특별자치시를 끝으로(21.9)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신설 되었다.

〈표 2-9〉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청년정책 담당		현황, 정원	전담 조직 신설 시기
	직위	직급	부서명	직급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장	3급	청년정책반 청년사업반	4급	1단 2반팀 36명	'15. 1월
부산광역시	청년산학창업국장	3급	청년희망 정책과	4급	4팀 1단 27명	'18. 8월
대구광역시	일자리투자국장	3급	청년정책과	4급	4팀 18명	'17. 1월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장	2급	청년정책과	4급	3팀 11명	'18. 10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4급	좌 동		3팀 13명	'15. 9월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장	3급	청년정책과	4급	3팀 16명	'17. 5월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급	사회혁신 담당관 청년정책팀	5급	1팀 4명	'20. 7월
세종특별 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급	청년정책 담당관	4급	3팀 9명	'21. 9월
경기도	복지국장	3급	청년복지 정책과	4급	3팀 18명	'18. 10월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청년정책 담당		현황, 정원	전담 조직 신설 시기
	직위	직급	부서명	직급		
강원도	일자리국장	3급	청년어르신 일자리과	5급	2팀 7명	'19.10월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2급	청년정책 담당관	4급	2팀 10명	'16. 1월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장	3급	청년정책과	4급	3팀 12명	'20. 1월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2급	대도약 청년과	4급	2팀 7명	'15. 7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4급	좌 동		1팀 4명	'18. 8월
경상북도	청년정책관	4급	좌 동		4팀 17명	'20. 1월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	4급	청년정책 추진단	4급	3팀 12명	'21. 1월
제주특별 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급	청년정책 담당관	4급	4팀 16명	'18. 8월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는 중앙-지자체 간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해 지역별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중앙-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간 회의를 통해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2-10〉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회차	주재	회의안건	일시
1차	청년정책조정실장	- '20년 청년정책 추진방향 - 청년기본법 시행령 및 기본계획 수립 -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2020. 4. 28
2차	청년정책조정실장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안 - 광역 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 추진 -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협조	2020. 10. 14
3차	청년정책조정실장	-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건의사항 검토 - 지자체 소관 위원회 청년참여 활성화 추진 - 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교육 및 워크숍 추진계획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의제 공론장	2021. 10. 28

제2절 주요 종합대책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가. 의의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은 청년기본법 시행 이래 처음 만들어진 기본계획이라는 점 외에도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청년정책의 첫 방향타로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5년을 내다보고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다. 둘째, 그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그 수립과정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청년을 위함(for youth)에서 나아가 청년과 함께(with youth) 수립된 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9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21년도부터 공동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1) 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법 제정(20.2.4),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20.9.18) 직후,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민간위원은 분과별 TF를 구성해 17회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5대 분야에 걸쳐 4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당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분야별 작업반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민간위원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20.12.18)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20.12.23)하였다.

(2) 시행계획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21.12월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32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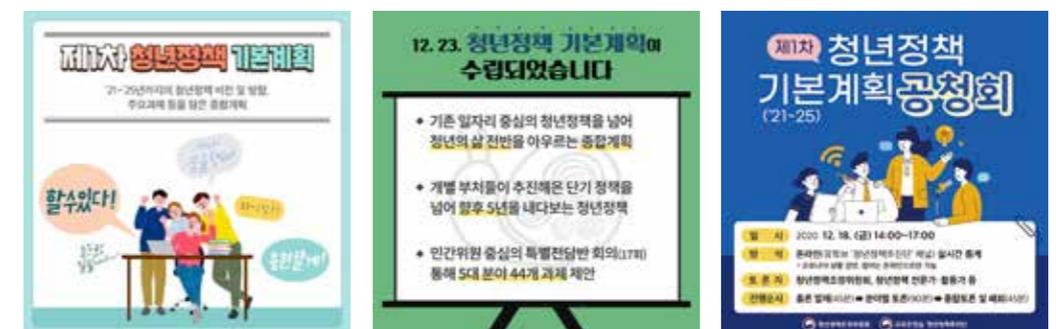
이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안)을 검토 조정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현장방문을 통해 추가로 시행계획을 보완하였다.

보완된 시행계획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본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발표(21.3.30)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SNS 격려글

그림 2-10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 포스터

청년정책 기본계획 요약

청년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2) 주요내용

(1)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①참여와 주도, ②격차 해소, ③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 '21년 55.5만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아이디어 발굴 → 교육·사업화 → 자금 → 재창업)를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 '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7.3만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를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한다. 교육 분야에서 '22년부터 저소득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혁신공유대학 48개교를 지정하여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희망저축계좌 통합신설하여 '25년까지 청년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에서 정부위원회 중 청년참여 위원회를 30% 지정 등 청년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2) 시행계획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약 23.8조원의 예산규모)이 포함되어 있다.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핵심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마련·집행하는 것이다.' 3대 세부 방향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청년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마련,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조기집행 및 관리강화, 코로나 블루 극복 및 보호종료 아동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들의 어려움 해소가 제시되었다.

시행계획의 주요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 '21년 청년구직자 101.8만명+0, 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기본계획 대비 11만명 추가)하고 주거 분야에서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공유대학 48개교를 지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을 지원하고,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원)을 최초로 시행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을 확대('20 13.9% → '21 17.1%)한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1,258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1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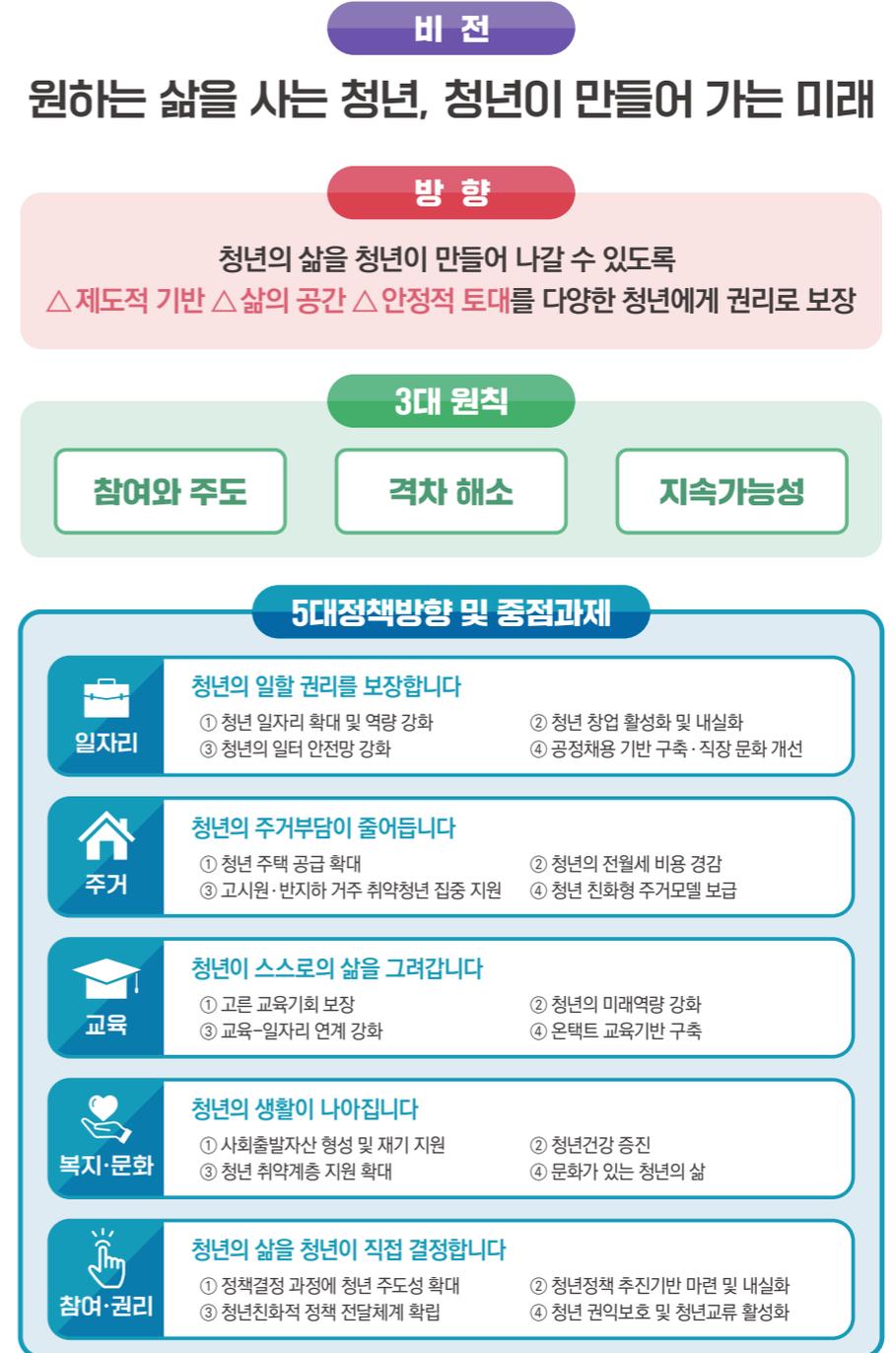


그림 2-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달라지는 모습



그림 2-13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지자체) 총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에 따른 청년정책이 확대·구체화 되고, 중앙·지방 상호협력·보완 강화
- 정책 사각지대 감소 + 지역 청년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구분	중앙정부	광역시·도	계
과제(개)	308	1,258	정책 308 사업 1,258
예산(조원)	23.8	2.2	26.0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분야	'21~'25년 5년간 목표 (기본계획)	'21년 목표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구직자 128만명+α 지원 *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	청년구직자 101.8만명+α 지원 * 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11만명 추가)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 청년 종사 업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창업 전주기 패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3.5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3.1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40만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 8만명+α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마련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선도지자체 선정, 주거상황 지원사업 본격화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혁신공유대학 48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평생교육 체계 구축	K-MOOC 청년 참여 인센티브 강화
복지문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합 및 확대방안 수립('21. 하반기)
	마음건강 바꾸쳐 지원	마음건강 바꾸쳐(월20만원) 최초 시행
참여권리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확대 ('20 13.9→'21 17.1%), 청년위원회 추가 확대 방안 마련('21.7월)
	온라인 청년하나로 구축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 ('21. 하반기)
	청년마당 조성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21. 하반기)

2.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가. 의의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본격적인 수립 이전에 청년정책 영역을 여러 분야로 확장함과 동시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시작한 대책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업대책 위주였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노무현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03) / (이명박 정부)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10) /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15) 등

동 대책들이 검토·발표될 당시, 청년의 삶은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토대로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20.3.26, '20.9.18)하였다.

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1)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정책 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다.

관계부처 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발표(20.3.26)하였다.

(2)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20.8)하여 청년들의 정책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수렴된 정책개선 의견을 토대로 43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9.18)를 통해 심의·의결하였다.

2) 주요내용

(1)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5개 분야(참여·권리 분야, 생활 지원 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3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고 청년참여 플랫폼을 신설한다. 생활 지원 분야에서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대상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 1인 S/W업 등 새로운 노무형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의 조건 및 금리를 개선하고,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분기 술인재에 대한 장학금을 신설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5개 분야(참여·권리 분야, 생활 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참여·권리 분야에서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전 대학교에서 대학생의 출산 공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생활 분야에서 청년 저축계좌의 지원 규모를 확대(20 5,000명, 7,321백만원 → '21 13,400명, 27,854백만원)하고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한다. 또한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한다.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재지원 시행,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확대, 지역기업 인식개선·취업연계를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교육 분야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사업을 확대한다.

3. 청년특별대책

가. 추진배경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¹⁾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취업난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생활비 교육비 충당을 어렵게 하여 부채의 증가²⁾는 물론,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시키며 청년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되었다.

나. 주요내용

이에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①코로나 위기극복 ②격차 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의 3대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5대분야 중심으로 쏠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 87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21.8.26)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였다.



1) 일자리 :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 회복

일자리 대책의 경우, 청년 취업역량 제고 및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을 통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률을 회복하고자 한다.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당장 급원 하반기부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

1) 전년동월 대비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48.1%) 증가(경향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5월기준)

2) 자산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2.5, ▲(30대) 8.7, ▲(40대) 3.7, ▲(50대) 3.2, ▲(60세 이상) 1.6

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을 신설하고, 지역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6만명)을 개편·연장한다. 또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며 단계별 맞춤 정책을 확대한다.

2) 주거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내집 마련” 기회 지원

주거정책은 1차적으로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22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15.2만명)하며,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한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2년 ‘청년임대주택’ 5.4만호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를 통해 “주거사다리”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3)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및 마음건강·문화 지원

복지·문화분야의 경우,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첫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건강·문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먼저,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하고,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월 10만원)한다. 그 외에도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4) 교육 :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분야에선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였다. 먼저,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년 4조원에서 내년도 4.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는 한편,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현장실습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050명),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만→1.5만)와 졸업 후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등을 통해 패키지 지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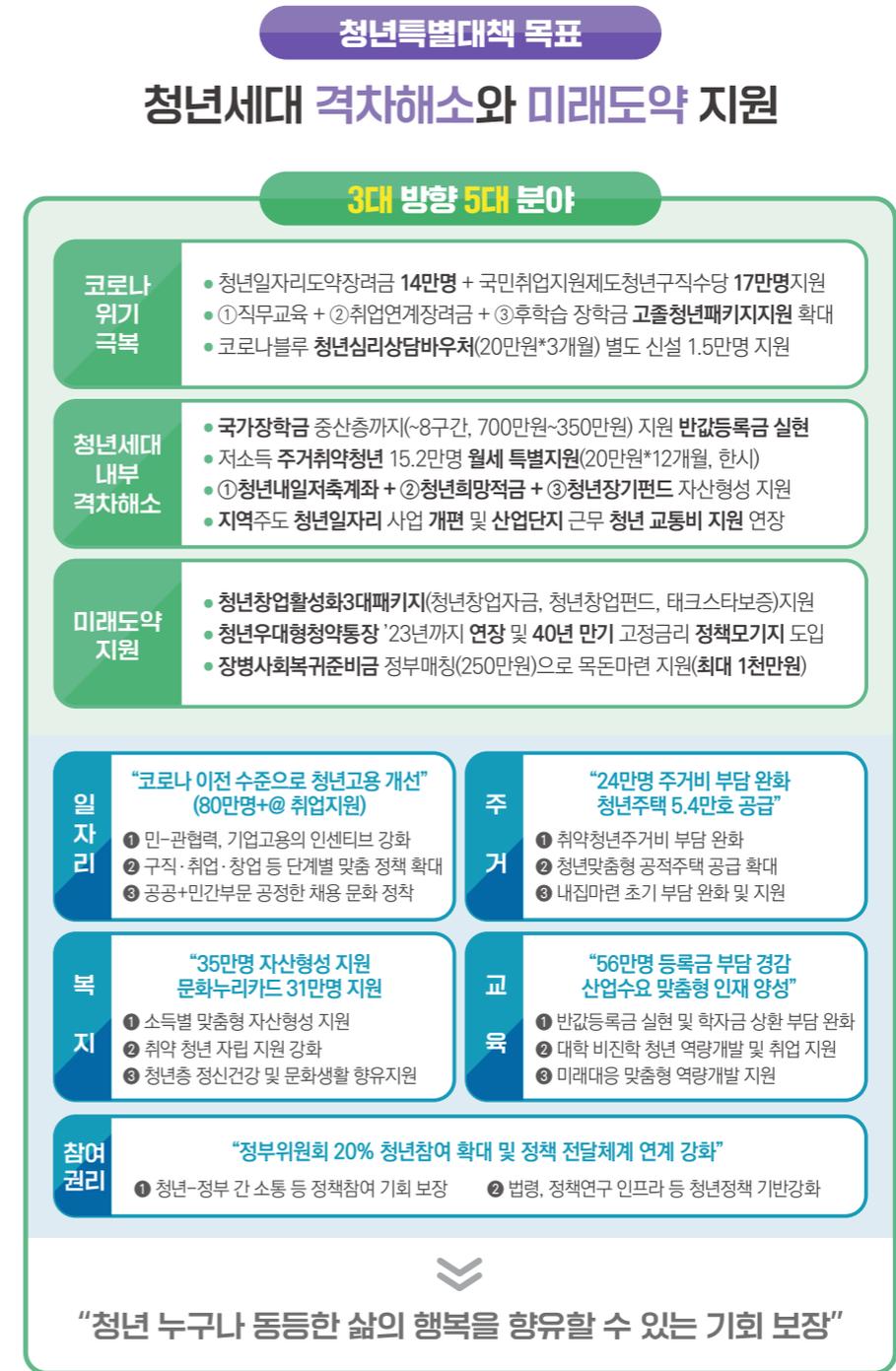
5) 참여·권리 :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참여·권리분야에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정책결정 주도권을 강화해 나간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관리하는 한편, 청년 공론화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청년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고,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청년실태조사 실시, 청년 전담연구체계를 구축 등 청년정책 기반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림 2-14 청년특별대책 체계도



4.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대부분 정책문제가 복합적이지만 특히 청년문제는 복합적이어서, 개별부처 보다는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가고자 9개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후, 9개 전담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해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 탁상공론이 아닌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자는 수용과 응답의 자세로 간담회 등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 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

나. 주요내용

그 결과 9개 전담조직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함께 마련한 첫 번째 청년정책 성과물로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21.11.30)'이 발표되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단기간에 △작은 절차나 제도의 개선만으로도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애로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수시로 부처협의를 청년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전담부서협의회 통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크게 4개 분야 17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1) 청년들이 채용 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청년구직자가 채용합격 후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방적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상담지원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 채용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사례를 집중홍보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청년취업자가 경력도 쌓고 목돈도 모을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음에도, 공제가입자가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나 임금 삭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신고채널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년도 신규 공제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이 외에도 기업인턴운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시정하고, 기간제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의 전세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인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LH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공급자인 집주인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자인 임차인은 전세임대 주택 물색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임대인의 전세임대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민간 플랫폼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근로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실직 등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절차의 신청이 없어도 상환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최근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학별 진로 교육 양적·질적 격차가 많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대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취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공서, 출신학교, 자격증 발급 기관 등 여러개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많았는데,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증빙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아 희망기관에 일괄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 기업에 대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420억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그간 사실상 창업휴학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온 규정을 삭제하고 차제에 창업휴학제도가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창업활동'을 휴학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제도운영 10년을 맞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현장 여건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창업지원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려 한다.

4)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현재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취업 준비청년들의 심리상담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취업준비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권역에서 취업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상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대학 온라인 강좌인 KMOOC 강좌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청년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가려한다.

다. 향후계획

발표된 과제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전담조직 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 조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런 작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작지만 청년 생활속 불편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림 2-15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요약표

①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담·애로사항 개선	①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 ③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 ④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
②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①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 ② 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임대인 참여 유인 강화 ③ 산단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④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③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①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②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③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④ 「FRONT1」청년창업펀드(창업지원+공간지원+투자 확대) ⑤ 청년사관학교 개편
④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①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 ② 청각장애 청년을 위한 K-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③ 등록금 관련 대학-학생 소통 강화 ④ 메타버스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

5.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가. 의의

‘경쟁력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 사업이다.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가중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직접 나서서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하며 호소하였고, 취지에 공감한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냈다.



나. 추진배경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형 정책·사업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구성·운영 등을 기업이 주도하고 재정·인프라 등을 정부가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확대를 비롯해 인재양성 지원 등 그간 추진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청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 인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업-정부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되었다.

다. 주요내용

① 채용확대, ② 교육·훈련, ③ 창업지원을 종합하여 기업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발표하였다.

기업이 원할 경우 정부는 교육·훈련비, 인턴십 수당,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지원사업, K-디지털 플랫폼 사업 등의 사업을 연계지원하였다.

라. 추진성과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1호기업 KT 12,000개(9.7), 2호기업 삼성그룹 30,000개(9.14), 3호기업 LG그룹 39,000개(10.21), 4호기업 SK그룹 27,000개(10.25), 5호기업 포스코그룹 25,000개(11.10), 6호기업 현대차그룹 46,000개(11.22) 등 6개 대기업이 참여해 '22년~'24년까지 3년동안 178,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다.

2021년 12월 27일 윤성욱 국무2차장은 희망ON 프로젝트 참여기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ON 참여기업기업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실시하며, “기업이 청년 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청년의 기술창업에 기업들이 멘토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도 하였다.



마. 향후계획

'21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 청년 희망ON 프로젝트는 청년이 선호하는 IT·플랫폼 기업, 중견·강소 기업 등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해 청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정보를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포털(www.2030.go.kr)에 기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여 청년정책조정실이 청년희망ON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KT 2021년 9월 7일



삼성그룹 2021년 9월 14일



LG그룹 2021년 10월 21일



SK그룹 2021년 10월 25일



포스코그룹 2021년 11월 10일



현대차그룹 2021년 11월 22일

3장

부문별 성과



제 1 절 교육 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가. 정책여건

청년세대는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는 사례는 더 많아지고 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학 미진학 사유로 '돈을 벌고 싶어서'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도 19,356명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하였다.

〈표 3-1〉 대학 미진학 사유별 비중(2020, 한국청소년연구원)

구분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남성	14.2	40.2	2.8	15.5	23.2	4.0
여성	11.9	35.0	9.4	13.2	25.6	5.0

〈표 3-2〉 고등교육기관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

(단위: 명)

연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타
'21년	19,356	18,927	0	340	89
'20년	16,963	16,645	2	263	53
'19년	13,443	13,185	0	202	56

주1) '19년부터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타(산업대학)의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을 조사함

교육기회는 제한되었지만, 교육비 부담은 지속되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채무발생 사유 중 약 34%가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당시 추진된 '청년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전공-취업간 연계성(34%)', '학자금 부담(31%)'이었다.

나. 정책 추진방향

2021년 기준 교육분야 과제는 88개이며, 전체예산은 약 5조 6천억원이다. 전체 예산은 ①대학 미진학자-진학자의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② 교육-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는데 투입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지원액은 대폭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다.

• 사람당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만 명/전체 재학생 대비 비율) : ('17) 53.5(26.5%) → ('18)66.5(30.5%) → ('19)68.4(31.5%)

또한,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해서도 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하에서는 교육분야 핵심과제인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일학습 병행제의 도입경과 및 주요 성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해당 3개 과제의 예산 합계는 4.1조이며, 전체 교육분야 예산의 약 70% 수준이다.

2. 국가장학금

가. 도입배경 및 경과

학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중 하나다. 이에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20년 한국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OECD 교육지표

2021), '20년 대학 진학률**도 72.5%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 학력 소지자 수/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원자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진학률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진학자/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KEDI,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20)

등록금 부담 문제는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에 대학 등록금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대두되었다.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 억제 3대 정책(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 대학정보공시)이 추진되었으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증가는 지속되었다. 2011년까지 저소득층·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관심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2011년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쟁점으로 나타났다.

〈표 3-3〉 국가별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비교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미국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312	5,315	4,840	4,602	4,140	3,774	3,019

출처: 2011 OECD 교육지표

2011년 9월, 정부는 당시 등록금 수준, 어려운 취업여건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충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부담완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등을 모두 포함한 약 1.75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부터 국가와 대학이 함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대학생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I 유형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교내장학금 확충 노력과 연계해 장학금 총액을 배분하고 대학이 자체계획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II유형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국가 재정투입과 함께 대학 역시 교내장학금의 유지·확충 역할을 맡아 등록금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2012년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한 이후, 대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범위와 대상자별 지원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왔다. 2014년에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우호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비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도 신설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 총액 기준으로 완성된 반값등록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감 가능한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그 결과 '21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대대적으로 인상하여 기초·차상위 계층부터 서민·중산층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와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추진현황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경제 수준(소득+재산)에 따라 학자금지원구간*을 나눈 뒤 경제 수준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두 자녀 이하)·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학 차원의 등록금 부담 감축 노력과 연계해 예산을 배분하고 대학 자체계획에 따라 학생을 선발·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비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우수 인재 및 대학 특성과 계획에 걸맞는 인재를 뽑아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자금지원구간 : 소득·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월)'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일정배율을 곱한 학자금지원구간 경계값과 비교하여 결정한 일종의 소득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구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신청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부터 연간 35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차상위 가정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복지 자격'이 확인될 경우, 첫째에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I 유형은 학자금지원 1~3구간에 연 520만원, 4~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 지원되며, 다자녀 장학금은 첫째, 둘째 자녀에는 1~3구간 연 520만원, 4~8구간 연 4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인 자녀는 8구간 이하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위 장학금은 '21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4,853억 원 중 약 3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 I 유형은 약 134만명, 다자녀 장학금은 약 33만명이 지원받고 있어('21년 11월 기준, 1,2학기 단순 합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 수준이 높은 편이다.

〈표 3-4〉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기준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기준중위소득(4일) 대비 비율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021년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022년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한편,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학생의 사회경제적 여건, 학교의 인재양성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 및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점에서는 교내장학금과 유사한 방식이나, 등록금 인하·동결,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배분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교비 등을 재원으로 자체 조성하는 교내 장학금과 차이점을 갖는다. '21년 기준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약 50.5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며, 자체적인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을 고려할 때 등록금 경감 혜택을 받은 학생 수 및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장학금 수혜 현황(2020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교내외 장학금(정부+지자체+사설+교내)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의 비율은 약 35%(2.29조원)로 '20년 국가장학금 지원액 3.44조원(결산 기준) 대비 상당한 수준이다.

지역인재 장학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비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에서도 특성화 계획에 따라 인재를 유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대상이 될 경우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기간이 차등적용(기초~5구간은 재학기간 내내 지원, 6~8구간은 1년(2학기) 지원)된다. '21년 기준 약 8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약 3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는다('21년 11월 기준)

다.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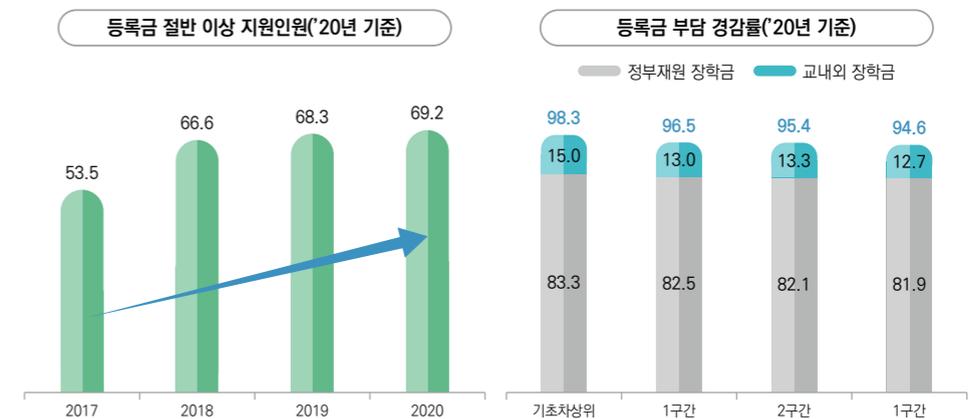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대학생 수가 줄어들에 따라 지난 5년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여오다가, '21년 청년특별대책을 기점으로 '22년 4조 1,348억 원의 예산이 결정되어, 전년 대비 약 6,495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대학생 수 감소로 인해 '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22년에는 장학금 지원단가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산 : '17년 3.63조원, '18년 3.68조원, '19년 3.6조원, '20년 3.55조원, '21년 3.48조원

** 지원인원 : '17년 112.1만 명, '18년 104.1만 명, '19년 102.6만 명, '20년 103.7만 명, '21년 11월 100.7만 명

한편,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368만원)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받는 학생의 수는 '17년 53.5만명(총 재학생의 26.5%, 이하 동일), '18년 66.6만명(30.6%), '19년 68.3만명(31.5%), '20년 69.2만명(32.1%)으로 지속 증가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체감도는 지속 상승해왔다. 또한 '20년 기준으로 저소득층(기초·차상위 ~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학생의 등록금 경감률은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 시 약 96%로 온전한 교육기회 보장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림 3-1 연도별 등록금 지원인원 및 등록금 부담 경감률



아울러, '21년에는 청년특별대책(21.8.)을 계기로 예산 총액 기준의 반값등록금 완성을 넘어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고등교육 기회를 온전히 보장하고, 서민·중산층에 이르기까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지원 5~8구간 대학생은 연간 368~67.5만원에서 390~350만원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기초·차상위 가정 첫째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등 지원금액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제도를 개선(‘21.11.)하여 2022학년도부터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가 3명 이상인 미혼 신청자라면,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에 셋째 이상인 자 1인당 40만원이 공제된 소득인정액(월)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여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향후 보완과제

다만, 한정적인 재정여건 하에서 가구별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대상자를 결정함에 따라, 8구간을 초과하는 대상자들의 등록금 부담에 따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정된 정부 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장학금 외에 교내외 장학금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 이수를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등록금은 국가장학금·등록금지원 목적의 기타 장학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담이 경감되고 있으나,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생활비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고,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금 외에 생활비에 따른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근로 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왔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이 자구노력으로 등록금과 학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스스로 마련하여 가계에 주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재학 중 근로 경험을 통해 삶의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 준비와 취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으며 장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는 등 교육-근로-복지가 연계된 사업으로서 강점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2005년 최초로 지방 전문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80억원, 4천명 지원) 한 이후, 2006년 전국 전문대학(100억원, 5천명 지원)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였다. 사업 수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2009년 4년제 대학(927억원, 4만명 지원)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부터는 원격대학 재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여, 2021년 현재 연간 약 12만명의 대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나. 추진현황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성적 C0이상인 학생이며, 근로장학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며, 2021년 기준 시간당 장학금 단가는 교내근로 9천원, 교외근로 11,1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20시간(학기 중), 최대 40시간(방학 중), 학기당 최대 520시간을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근로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사업에서 근로활동은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취업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로, 단순 영업 및 판매,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종교 및 정치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대학생들이 근로할 수 있는 기관은 교내외로 구분되며 교내근로는 대학 내 행정업무 지원, 장애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학교생활 지원 업무를 부여하며, 교외근로는 국가·공공기관, 지자체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초·중·고교생 학습 멘토링,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의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구의 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사업 개요

사업기간	매년 3월 ~ 차년도 2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 (성적) C0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장학금	근로시간당 장학금 지급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 ※ 2021년 기준
근로시간 (최대)	(일당)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근로내용	(교내근로) 대학 내 행정업무 지원 장애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교외근로)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교, 타 대학의 행정업무 지원 전공 관련 기업 등에서 의 취업 경험 초·중·고교생 학습 멘토링(온라인 멘토링 포함) 등

2) 사업 운영절차



3) 추진성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학사업 담당자들도 동 장학금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제도,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제도,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전공 관련 경험 축적에 유용한 제도, 학생들이 일한 만큼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강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학업과 병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근로를 부여하여 저소득층 및 서민층 대학생을 도와주는 복지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06년 100억원 규모로 4천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사업을 10여년만에 2018년 2,641억원 규모로 약 13만명에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약 3천억원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 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교내 및 교외근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전면 허용하였으며, 교내·외 근로유형의 구분 없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전용 및 교외근로 의무 비율 등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근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장학금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표 3-5〉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연간예산	264,007 (교내 140,779, 교외 123,228)			277,423 (교내 131,505, 교외 145,918)			306,455 (교내 129,984, 교외 176,471)		
지원금액	124,662	132,255	256,917	133,197	134,873	268,070	115,200	153,246	268,446
지원인원	62	67	129	62	67	129	52	67	120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0	2.0	2.0	2.2	2.0	2.1	2.2	2.3	2.2

출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한시, '21. 추정) 250억원은 별도 편성

4) 향후 보완과제

근로를 희망하나 실제 근로장학생에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은 매년 신청자의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많은 학생들의 근로 희망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학생의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표 3-6〉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신청인원	304	305	610	303	330	632	307	311	617
지원인원	62	67	129	62	67	129	52	67	119
선발률	20%	22%	21%	20%	20%	20%	17%	22%	19%

아울러, 근로장학사업이 다양한 취업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도 단순 근로 위주의 근로 활동 및 양질의 근로기관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단순근로에서 전공과 연계된 의미있는 근로활동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근로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일학습병행제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높은 사교육 부담과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로 유명하다. 가정에서는 사교육비로 18조원(2013년, 통계청)을 넘게 지출하는 등 가계경제의 교육비 부담도 높은 편이다. 힘든 입시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해도 각종 공모전, 어학연수 등 스펙 쌓기에 열중해야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 다시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높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이 쓸만한 인재는 부족하다고 토로하며 신입직원 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2012년)에 따르면 과잉 학력으로 노동시장 진출이 늦어져 발생하는 대학등록금, 임금 등의 기회비용이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19조원이나 발생하고, 이런 비용들이 GDP 성장률을 1% 이상 잠식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해 왔던 관행에서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하였다. 실력중심사회 구현은 청년층이 불필요한 휴학이나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결국 노동 시장의 진입을 앞당겨 줄 수 있다. 이런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2013년 9월부터 일학습병행이 도입되었다.

나. 추진현황

1) 사업내용

일학습병행은 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도제훈련이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으로 연계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이다.

일학습병행의 주요 특징은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운영방법 등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주도하고, 둘째,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 시간, 현장교사, 평가 기준 등 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훈련이 이루어지며 셋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하고, 넷째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평가하여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표 3-7〉 일-학습 병행제 유형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 내용	
재직자	30단독기업형 (50인 이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지원인원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 형태	
재학생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모델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
	〈대학교 단계〉 4년제대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OFF-JT, OJT)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P-TECH (고숙련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2) 추진현황

일학습병행은 2013년 9월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방안' 이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된 후,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13년 12월)되었다. 2013. 10월 51개 시범기업으로 시작으로 2020년 12월말까지 누적으로 16,603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104,967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졸업생 대상에서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먼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 재학생부터 기업에 채용되어 주기적으로 학교와 기업을 번갈아가며 이론(OffJT)과 실무(OJT)교육을 병행하는 직업교육 제도이다. '14년 선정된 9개교를 시작

으로 '20년에는 151개 특성화고, 20,430여명의 학생이 도제훈련을 실시하였다. 도제학교 운영 결과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취업을 보장 받고, 기업은 재교육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일찍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

전문대 재학단계 일학습병행은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으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남은 전문대 2학년 1학기 재학생(군필)을 대상으로 1년 산업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17.12월 인천재능대 등 3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한 후 '20년 6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은 4년제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이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일학습병행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대학을 '15년 14개교를 시작으로 '20년 기준 36개교를 지정·운영하였다. 기존의 단기·탐방형 현장실습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일학습병행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이 고교단계에서 습득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7년 6개교를 시작, '20년에는 35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융합형·최신 기술 위주로 훈련과정을 편성하여 미래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직무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추진성과

일학습병행은 제도 시행 7년 만에 1만 7천개 기업에서 10만 5천여 명 이상의 학습근로자 참여하는 등 양적 확산을 통해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연계한 현장기반훈련으로써 일학습병행의 전반적 만족도는 조사 결과 사업주(3.87점), 학습근로자(3.41점)의 만족을 보이는 등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 등 참여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히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숙련근로자 대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훈련 대비 직무수행능력이 평균 33.0%p 이상 향상되었다고 답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직무수행능력이 강화되고,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동기(흥미와 관심)가 부여되어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다.('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한,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신규인력 재교육 비용 감축 효과가 연간 평균 55.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규인력 재교육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등 기업 신규인력 수급 개선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제도 참여를 통하여 이직률 감소,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현장 사례들도 보이고 있다.('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이 현장에서 확산되어 가면서 기업은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들은 대학이나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도 실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의 입직기간 단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으로 청년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보완과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훈련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중도탈락률 방지, 현장 훈련 특성상 훈련 품질과 직결되는 기업현장교사의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현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2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모델 개요도



[운영 절차]

① 학생·기업 정보 선(先) 제공

-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보, 학습근로자 자기소개서 등을 상호 공유하여 도제학교 및 학생, 기업이 선(先) 탐색

② 기업 - 도제학교 매칭

- 도제에 미참여 중인 신규 발굴 우량기업 중심으로 학습기업(기존 협약기업 포함)과 도제학교 간 매칭

③ 기업 - 학생 매칭

- 사전 제공된 기업정보 및 학습근로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기업- 학생 간 매칭하되, 도제학교 또는 사업단별과 다(多) 대 다(多), 1 대 다(多) 매칭

④ 현장견학 및 직무체험

- 잡마켓을 통해 매칭된 학생이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해당 교과와 연계된 직무탐색 프로그램으로 운영
- 최대 2주 이내 체험기간 운영으로 기업은 학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학생은 기업에서 담당할 직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 부여

⑤ 미 매칭자 지원

- 잡마켓에서 채용이 연계되지 않는 경우 도제학교-고용센터-인력공단-일학습병행 지원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학생-기업 매칭 지원

제2절 일자리 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가. 정책 여건

일자리 부문에 있어 청년의 어려움은 크게 구직 및 재직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기업들은 신입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수시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6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채용계획이 있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신입 사원을 뽑을 계획인 곳은 약 62%에 불과했으며, 이 중 수시채용비율은 37.3%로 신입·공채 모집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속히 바뀌면서 일부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요국 4차산업 혁명인력경쟁력 현황 및 조사(2020)'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 혁명 인력부족률은 약 29.4%로, 전체 인력수요의 약 1/3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인 '태움' 등이 이슈화 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나. 정책 추진방향

2021년 기준 일자리 분야 과제는 115개이며, 전체 예산은 약6조 3천억원이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해, 청년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입직 이후에는 신체·정신적으로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률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후 기업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협력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기업의 청년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 AI 디지털, 그린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남녀가 평등한 직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을 지속하며,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청년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하에서는 일자리 분야 핵심과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총 14개 과제의 도입경과 및 주요성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4개 과제의 예산 합계는 약 4.9조이며, 일자리 분야 전체 예산 중 약 77% 수준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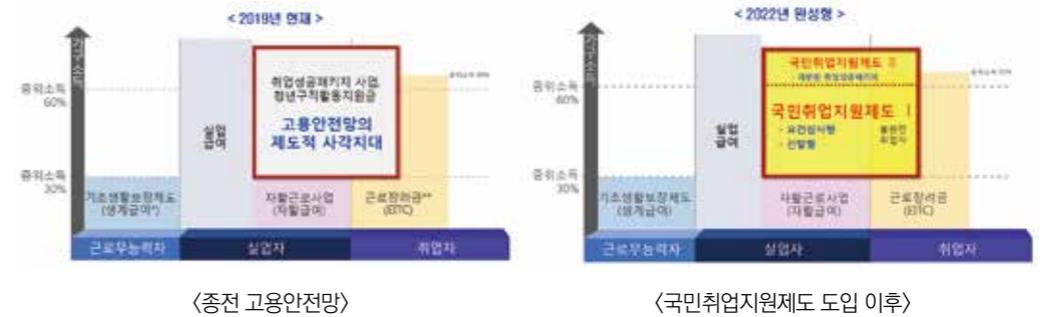
가. 도입배경 및 경과

고용보험은 국내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막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컸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등 우리 사회에 경제·고용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취업자를 모두 보호하지는 못했다. 특히,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여전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2009년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 진단 및 의욕제고(1단계), 직업능력개발(2단계), 취업알선(3단계) 등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만, 지침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매년 바뀌고, 취약계층 지원을 적시에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등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7.5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두 차례(2018.8월, 2019.3월)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통해 조속한 도입과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9.6월 일자리위원회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2020.6.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3-3 국민취업제도 도입 전후 비교도



나. 추진성과

1) 2021. 1. 1.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보다 폭넓게 촘촘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18~34세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I 유형).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림 3-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첫 해 59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그 중 청년은 총 23만명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I유형이 10만명,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II유형이 13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3월 추경을 통해 I유형 청년 선발형 지원규모를 5만명 확대하여,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였다. 2021.10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전체 380,240명이며, 그 중 청년은 235,748명(I유형 189,524명, II유형 46,22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2%에 달한다.

2)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시행 첫 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면서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21.7.27.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되면서, 18~34세 청년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 누구나 I 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 선발형 특례(중위소득 60~120%)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취업한 이력이 없어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일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되었다.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보호의 필요성이 생겼고, 2021.7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청년의 I 유형 참여 재산요건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2021.3월에는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의 II유형 참여요건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일경험 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종전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지원서비스의 대부분이 직업훈련에 연계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참여자 유형별로 꼭 필요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모델을 제시하는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직업훈련 외에도 직업능력·취업역량 향상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에게 괜찮은 일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의욕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간(30일 내외)의 체험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형과, 취업준비가 된 청년에게 3개월 내외의 직무 중심 일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었다. 2021.10월말 기준, 총 8,197명의 청년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21.11.1.부터 기존의 체험형, 인턴형 외에, 기초 직무교육과 각 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복합형 사업인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11월 기준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 등의 기업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경험에 참여 중이다.

4) 향후 보완과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한국형 실업부조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적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평가해가며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3.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지연·중단되면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IT 분야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20년 5월 기준 청년고용률이 42.2%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실업률도 10.2%로 '18년 5월 이후 2년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고용이 악화되어, 제5차 비상경제회의('20.4.22),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5.20)을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결정·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과 청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면서 '21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었고, '21년 본예산으로 5만명(4,67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1차추경(6만명, 5,611억원), 2차추경(1만명, 924억)까지 편성하여 사업이 확대되었다(총 12만명, 1조 1,212억원)

나. 추진현황

'20년 7월 사업이 시행되었고,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만 15세~34세 이하 IT 직무에 채용한 경우 월 최대 190원씩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IT 직무는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기업별로 특화된 IT 분야 직무)으로 구분하여, 새로이 채용될 청년이 수행할 업무가 4가지 유형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운영기관 심사를 거쳐 지원을 허용하였다.

'20년 목표인원 6만명 중 51,487명을 채용하여(채용률 85.8%)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IT 분야 일자리와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시기에 기업과 청년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21년까지 연장하여 '21년에는 5만명의 청년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여 '21년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6만명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21년 7월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명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21.8월 시행된 2차추경 사업은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면서, 기업과 청년의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다. 먼저, 지원대상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1인 이상 미래유망기업'으로 개편하였다.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 요건을 IT직무에서 단순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로 완화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유연한 인력활용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과 다양한 직무를 통해 직무경험을 쌓고 싶다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1년 10월말 현재 '21년 본예산 목표인원 5만명은 채용 완료하고, 1차추경 사업은 목표인원 6만명 중 34,655명(57.8%)을 채용하고, 2차추경 사업은 목표인원 1만명 중 3,289명(32.9%)을 채용하였다.

다. 추진성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20년 5.1만명, '21년 8.8만명(10월말 기준)을 채용하여, '20년 7월부터 '21년 10월말까지 약 13.9만개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20년 참여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72.5%, 정규직 채용·전환율이 61.9% 수준이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일자리는 모두에게 소중하지만, 특히 청년에게 있어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청년에게 취업이란 자아실현과 꿈을 쫓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비단 '청년'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청년의 취업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주지 못하면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여 노동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는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수 있음을 짐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청년고용'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 당시, 청년고용률(만 15~29세)은 42.7%로 2017년에 비해 0.6%p 상승하고, 실업률은 9.5%로 0.3%p가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15

년 21.9%에서 2018년 22.8%로 증가하는 등 실제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은 여전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20대 후반 에코세대 인구의 증가 시점과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시점(2008~2010년)에 입학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시기가 겹치면서 실업률이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을 타개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인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7년 8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에, 2018년 3월 발표된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일자리대책」을 계기로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현장의 요구에 맞게 사업 내용을 개선해왔고, 많은 기업들이 이 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을 채용하면서,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나. 추진현황

2018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본격화되면서 지원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적 측면도 크게 개선되었다. 먼저 양적으로는, 2017년 시범사업 당시 292명에 불과했던 지원 인원이, 2018년 12만8천명, 2019년 14만2천명, 2020년 10만6천명, 2021년 10월 8만5천명 지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질적으로는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고용유지 강화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더 많은 기업이 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인원을 9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한 대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인당 지원액을 3년간 최대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청년들의 고용유지와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신설하는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최저고용인원(30~99명 2번째, 100인 이상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을 정하여 채용 효과도 높였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거쳐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청년 1명당 월 75만원씩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안

- ①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인원 축소: 90명 → 30명
- ②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1개월 → 6개월
- ③ 기업규모별 지원인원 차등: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 시 모두 지원 → 2번째,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구분 고용	현행				개선			
	1	2	3	4	1	2	3	4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 ④ 신설 사업장 지원인원 한도 설정: 성립월말 피보험자보다 증가한 인원 모두 지원 → 신설연도 지원 한도 설정(성립월말 피보험자 수가 1~4인 경우 3명, 5~9인 경우 6명)

다. 추진성과 및 향후 보완과제

1) 추진성과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 10월까지 약 7.9만개 기업이 이 장려금을 활용하여 약 46만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기업당 평균 5.9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들도 이 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을 선발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전문가들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고용효과가 30~50%로 다른 장려금(20~30%)보다 비교적 양호하다고 분석하였다.(출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2019년)

우수사례

- ① 대전 소재 의료기계제조업체 A사는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생산을 위해 청년 채용이 필요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미루던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알게 되어 24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
- ② 서울 소재 B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기업으로 사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고민하던 중 고용센터 담당자의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알게 되어 16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려금은 비단 장려금 대상 청년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를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경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업이 최대한 고용규모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실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하반기의 지원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21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림 3-5 연도별 신규 지원 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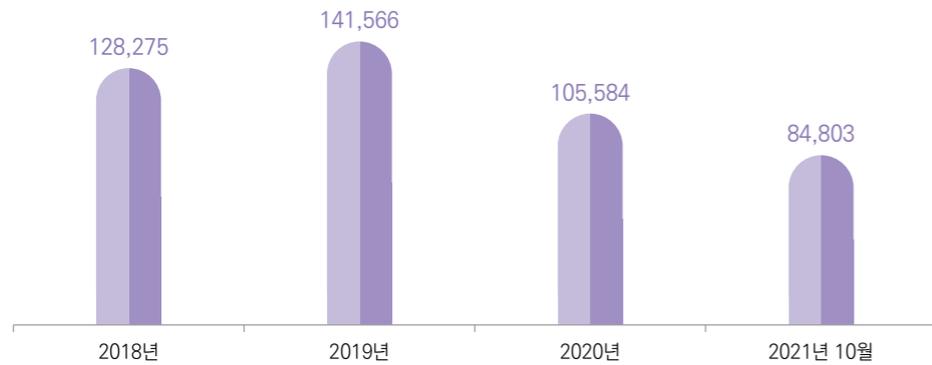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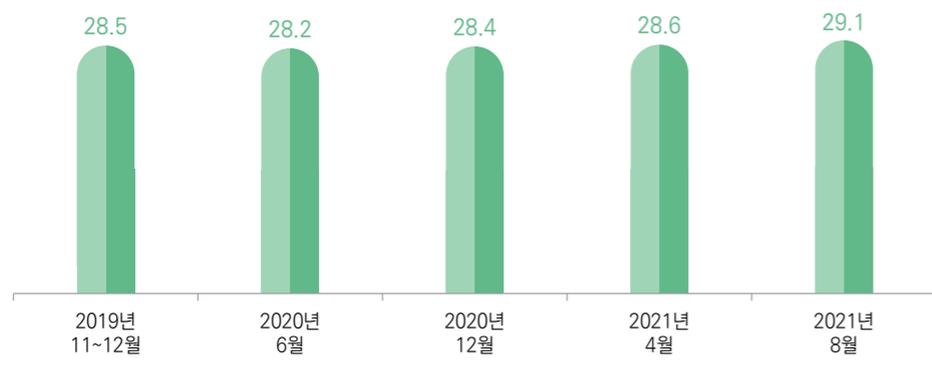


그림 3-6 2019년 하반기 이후 지원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 (단위: %)



뿐만 아니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정규직 채용,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장기근속을 전제)와 연계 등이 있다. 그 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의 1년 고용유지율은 81.4%로 일반 중소기업 청년의 1년 고용유지

율 46.6%(출처: 고용보험 DB)에 비해 약 35%p 높아, 청년의 장기 근속과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축적에 기여하였다.

끝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과 성장유망업종 등의 기업을 이어주었다. 고용노동부의 다른 고용장려금은 전체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기업, 벤처기업 등도 지원하여, 청년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향후 보완과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2021년까지의 한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2021년에는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을 목표로 운영되었는데, 기업의 높은 참여로 인해 5월에 마감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기존 지원 인원에 대한 잔여 지원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서 장려금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기업은 청년을 통해, 청년은 일을 통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가. 도입배경 및 경과

'17년 말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와 이듬해 3월 지방정부일자리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모델화 끝에 3대 기본 유형을 설계하는 등 국가시책 사업화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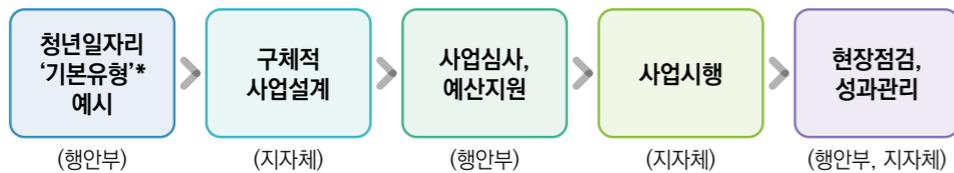
18년 3월 15일 청년실업 심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였고 추경(18.5.21.)을 통해 사업 공모·심사 등을 거쳐 사업 시행하게 되었다.

나.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당초 '18.7월 ~ '21년까지(4년간 한시사업)
- (사업규모) '18년 1만명 → '19년 2.6만명 → '20년 2.6만명 → '21년 2.9만명 계획
- (사업예산) '18년 831억원, '19년 2,210억원, '20년 2,350억원, '21년 2,4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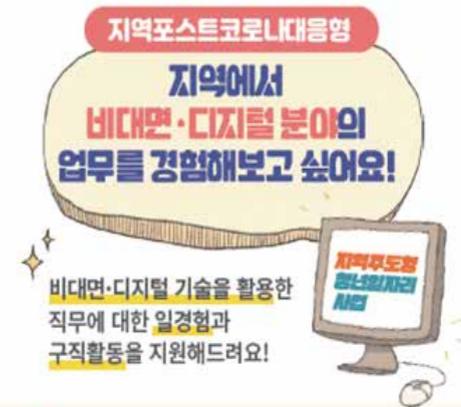
2) 사업추진 절차



3) 사업세부유형

세부유형	사업내용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기업에 청년 취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창업공간 지원 등 취·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
(4유형)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 '21년 신설(7천명)	비대면·디지털 영역에서 일 경험+전문교육을 통한 청년들의 역량 향상

출처: '22년 사업은 기존 2개유형(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과 3개 신규유형(지역혁신형, 지역상생형, 지역포용형)으로 추진



<p>어떤 사업인가요?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역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p> <p>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중소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지역 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서 일하게 됩니다.</p> <p>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p> <p>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드립니다. ② 2년간 연 2,400만원 내외의 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③ 마케팅, 문서 작성 등 직무역량 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④ 교통, 주거, 복지와 같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p>	<p>어떤 사업인가요? 디지털 분야 업종·직무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청년 여러분의 취·창업을 도와드립니다.</p> <p>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지역기업에서 비대면·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p> <p>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p> <p>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사업 기간동안 일경험을 쌓으면서, 연 2,400만원 내외의 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② 비대면·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직장 내 교육훈련(OJT),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직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p>
---	--

다. 추진성과

사업의 성과로는 지자체 주도 하에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였고 청년층의 고용 여건을 개선 및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3년간 총 8.3만명 지원)

(예산액) ('18년) 831억, ('19년) 2,210억원, ('20년) 2,350억원
 (사업수) ('18년) 368개, ('19년) 883개, ('20년) 773개
 (지원인원) ('18년) 11,056명, ('19년) 36,265명, ('20년) 36,067명

또한 사업추진 기간('18~'21년) 동안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29,585명*, 사업에 참여하여 창업에 성공한 인원 3,307명**, 사업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 취업이 연계된 인원은 5,899명***으로,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유입과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사업 참여 비중이 80% 이상으로,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되어있는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시키는 효과(수도권→비수도권 전입 청년 1,552명)도 고무적이다.

* 정규직 전환률 : ('18년) 3,324명(69%), ('19년) 11,801명(63.3%), ('20년) 14,460명(62.9%)

** 창업률 : ('18년) 720명(85.9%), ('19년) 1,708명(68.7%), ('20년) 879명(76.3%)

*** 민간취업연계율 : ('18년) 668명(42.6%), ('19년) 3,151명(42.1%), ('20년) 2,080명(64.4%)

일자리 제공,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 취·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사업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매년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 (만족도) ('18년) 85.8% → ('19년) 92.9% → ('20년) 97.1%

라. 향후 보완과제

앞으로는 '18~'21년까지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 및 고용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중장기적인 지속 필요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21.3.~12. 지방행정연구원)

6.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2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부터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3-7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2016년 시범사업 이래 2020년 말까지 누적 38만 8천명의 청년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그 중 7만 7천명의 청년이 만기공제금을 수령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 추진현황 및 성과

청년공제는 2017년 본사업 시행이래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20년에는 임금 상한액을 당초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 이하로 설정내일하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 기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청년에게 집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0년에는 13만 7천 여명의 청년과 약 9만 8천 개소의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청년의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청년공제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취업 후 1년 고용유지율은 전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금 수령 후에도 약 58%가 1년 이상 동일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당초 사업이 목표했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에 가입한 청년에 더하여 신규 1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년형과 3년형을 통합하고, 만기 공제금을 당초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개편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고, 이미 가입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기공모전 우수작품

◆ 기업부문 대상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기업희망공제) <주식회사 위넷시스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면서 세금은 이렇게 싸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같은 중소기업이 그나마 숨쉴 수 있도록 해주는 산소와도 같은 지원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소개하자 좋은 인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름 좋은 인재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수 22명, 공제 가입자수 7명(만기자 3명 포함)

◆ 청년부문 대상

(갈매기의 꿈, 그리고 비상) <더클럽 정승민>

미래 강소기업의 멋진 CEO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스타트업에서 힘찬 출발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대기업 취업을 고민하던 중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다 가입 후 만기 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흐뭇해진다. 만기가 되면 먼저 만기금의 일부는 엄마께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동생 학비를 대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용처가 있다. 바로 나에 대한 투자다. 오늘의 나를 발전시키려면 늘 새롭게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클럽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가 되어 우리회사도 강소기업으로 발전시켜 찬란한 내 꿈을 이뤄낼 것이다.

그림 3-8 5년간 가입 현황

(단위: 명,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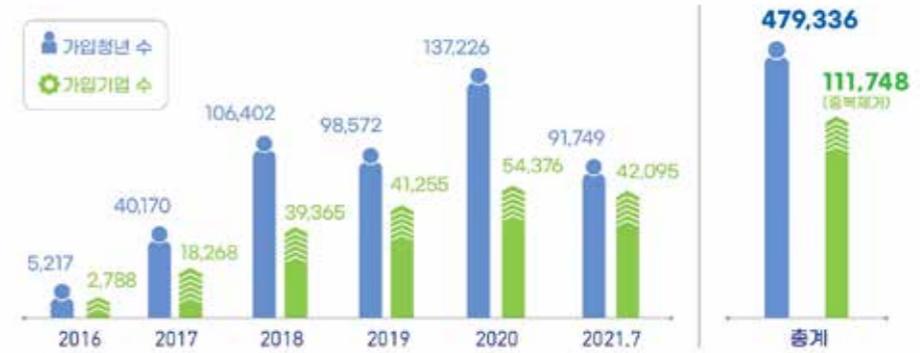


그림 3-9 5년간 누적 만기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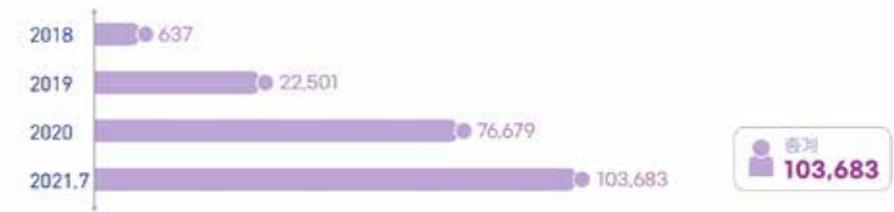


그림 3-10 근속비율 비교

'20년말 기준



다. 향후 보완과제

또한, 청년공제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현재 전액 기업지원금으로 지원하던 기업기여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이 직접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7.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가. 사업 목적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만 19~39세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와 문화 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사업의 목적이 있다.

나. 추진현황

지원 내용은 크게 청년몰 조성 및 청년몰 사후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청년몰 조성은 전기·수도·소방 등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전시·판매장, 창고 등 공용공간 확충, 교육·컨설팅,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청년몰 사후관리는 청년몰 활성화, 청년몰 확장 및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경우, 공동마케팅, 청년상인 교육·컨설팅, 메뉴 개발,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등을 지원하며 청년몰 지원예산은 2021년 기준 개소당 최대 5억원이다.

청년몰 확장 사업의 경우, 영업 기반시설, 편의시설 및 환경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몰당 2021년 지원예산은 최대 1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의 경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진단·컨설팅, 시작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상인 1명당 2021년 지원예산은 최대 1천만원이다.

다. 추진성과

최근 5년간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4개 시장에 256개 청년몰 점포가 조성, 19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8년에는 12개 시장에 203개 점포가 조성, 2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9년에는 9개 시장에 143개 점포가 조성, 1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년에는 4개 시장에 70개 점포가 조성, 12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1년에는 연말까지 3개 시장에 청년몰이 개장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6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점포는 2017년 개장된 256개 점포 중 160개 점포, 2018년 개장된 203개 점포 중 136개 점포, 2019년 개장된 143개 점포 중 131개 점포, 2020년 개장된 70개 점포 중 67개 점포다. 점포 영업률은 2017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시작된 이래 해당 사업으로 개장한 점포 중 74%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다.

라. 향후 보완과제

복합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청년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몰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시장에 그동안 몰 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청년몰 공동 마케팅, 신메뉴(제품) 개발, 청년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상인 교육·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상인 경영·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협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회원 모집 등을 통한 청년네트워크 확대, 청년상인 간 공동브랜드(공동상품) 개발, 공동매장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8.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직장 문화 개선

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제도 개요 및 사업목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19.7.16.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주 등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업장의 조사 등 조치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사용자 및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사용자 의무강화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21.10.14.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고,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무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괴롭힘 다발 업종 및 괴롭힘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공정한 조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현황 및 성과

'20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8개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지원 필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21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2개소 추가하여 10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5개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3개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1개소), 한국EAP협회(1개소)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위 4개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실적 등 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영상을 제작,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SNS에 관련 교육 홍보영상 보급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향후 보완과제

현재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수요 대비 전문 강사 양성이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강사양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1) 도입배경 및 경과

정부는 기업의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 및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일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표 3-8〉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내용

구분	요건	지원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근로 3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5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2 [간접노무비] 월 최대 20만원 ※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3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활용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승인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접노무비] 월 단위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70명,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2) 추진현황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자 2015년에 신설되었으며, 2020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신설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을 위해 예산 확충, 지원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하였다.

3) 추진성과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 증가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2020.1.1)에 따라 2019년 5,993명(100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2020년 20,837명(447억원), 2021년 10월말 28,951명(710억원)을 지원하여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9〉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0
예산액	11,130	10,751	10,950	45,462	79,327
집행액	7,134	9,696	9,912	44,662	70,967
지원인원	5,487	5,730	5,993	20,837	28,95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예산 확충, 지원절차 간소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019년 6,824명(147억원) 지원한 것에 비해 2020년 30,088명(440억원), 2021년 10월말 37,502명(717억원)을 지원하여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4) 향후 보완과제

재정부담 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이 용이하고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시차출퇴근제보다는 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표 3-10〉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0
예산액	7,920	13,689	14,671	44,184	79,452
집행액	6,122	13,689	14,671	44,027	71,726
지원인원	3,880	6,571	6,824	30,088	37,502

9.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

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강화

1) 도입배경 및 경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등의 성희롱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재만으로는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취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2) 추진현황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등 관련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23.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에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 등) 또는 적절한 배상 등 포함
- 배상명령 시 사업주의 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배상을 위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가능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 법안은 2021년 3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18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어 1년 뒤인 2022년 5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등 법률에서 위입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개정 중이며, 제도 시행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3) 추진성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는 행위자의 징계조치 이외에도 필요하면 분리조치 등을 통하여 성희롱 발생 이후에도 건강하고 안심하며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배려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권력을 통한 사업주 제재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심판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나.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1) 도입배경 및 경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내 규범을 마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비용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20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은 횟수 제한 없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하는 교육에 대하여 무료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20년 439개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여 일반적인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0.3월),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20.8월)하였다. '21년에도 156개소('21.9월)를 대상으로 무료 강사를 지원하였다.

3) 향후 보완과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체 교육 방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독려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1) 도입배경 및 경과

2013년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에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이 포함됨에 따라,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인식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전국 17개 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년에는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21년 청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12월 기준 92회 실시하였다.

청년 대상 교육 운영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2030 청년 세대의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의 청년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1) 도입배경 및 경과

2019년부터 기업 내 성별균형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2020년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법 적용 대상 기업을 포함한 상장법인의 성별 임원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하여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업 내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별균형적 인력운영 방향 등을 자문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성별균형 제고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형태의 자율협약 등의 방법으로 기업 조직문화 개선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9년 4.0%에서 2021년 5.2%로 1.2%p 상승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이사회 구성 특례조항 적용대상 기업(자산총액 2조 이상) 중 여성 등기임원 선임기업은 2019년 27개에서 2021년 85개로 215% 늘어났다.

10. 근로감독 강화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정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간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한 저임금 노동을 일컫는 소위 '열정페이'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이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추진현황

2021년도는 청년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감독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사업장, 청년들이 다수 취업하고 있는 IT 기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1년도 5월에는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 체불하는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다. 추진성과

위와 같이 2021년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현안에 적기 대응하여 청년들의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에서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라. 향후 보완과제

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사례가 다수 수면 아래에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이 맘 놓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보상과 자기 계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열정페이'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청년들이 희망하거나, 청년 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주거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가. 정책여건

청년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주거이동률*(82.2%)과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거주비율**(13.4%)이 높다. 주거비 부담 측면을 살펴보면 '20년 청년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은 16.8%로 '19년(17.7%) 대비 감소하였으나, 집값 상승 등에 따라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5.5배로 '19년(5.0배)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이동률) 청년 82.2%, 신혼부부 66.5%, 일반 37.2%, 고령 14.7%
 ** (주택이외 거처) 청년 13.4%, 신혼부부 1.8%, 일반 4.8%, 고령 1.7%

주거수준을 살펴보면 청년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했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2.0%로 '19년 1.9%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청년가구 주거실태

구분	주거 이동률	주거비(중위수)		주거수준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임차 RIR	자가 PIR	최저주거 미달가구	1인당 면적	1위	2위	
청년	'19	81.6%	17.7%	5.0배	9.0%	27.9㎡	전세대출(39.0%)	구입자금(24.2%)
	'20	82.2%	16.8%	5.5배	7.5%	30.9㎡	전세대출(39.1%)	구입자금(23.4%)
일반	'20	37.2%	16.6%	5.5배	4.6%	33.9㎡	구입자금(34.6%)	전세대출(24.5%)

나. 정책 추진방향

2021년 기준 주거분야 정책과제는 총 24개이며, 전체 예산은 약 7조 수준이다. 예산은 ①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과 ② 청년이 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 등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대출의 수혜계층(연소득 2→5천만원 이하)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직장 인근에 부담가능한(시세 50~95% 수준) 청년주택을 2021~2025년 동안 약 24.3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계층을 위해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21년 종료예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다양한 청년의 주거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건설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나간다. 또한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역세권 인근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하에서는 주거분야 핵심과제인 청년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 총 5개 과제에 대해 상술한다. 해당 5개과제의 예산 합계는 6.6조원이며, 전체 주거분야 예산의 약 95% 수준이다.

2.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가. 추진배경

정부는 학생들이 주거걱정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 실현을 위해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숙사 질적 확충을 통해 대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현황 및 성과

대학생 기숙사 확충 사업은 '22년 5만명 확충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은 '21년에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3,632명 확충하여 조기 달성하였다. 또한 노후화 된 기숙사를 대상으로 4인실 등 협소한 주거 공간, 공용 화장실·샤워장 이용, 노후화 된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하여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3-12〉 연도별 기숙사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용인원 현황				
	'17	'18	'19	'20	'21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현황(연도별)	22,718	6,448	7,446	10,052	6,968

더불어, 다양한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20.1.1.시행)」개정을 통해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20.8.20.시행)」을 개정하여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행복기숙사(연합)의 무상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인하 효과를 유도하였다.

3.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1) 도입배경 및 경과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주민등록지 기준) 동일가구로 보아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제한 규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9.7.30)에서는 '21년부터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가구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그 결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원(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도모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21년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 예시 :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現)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改)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3) 향후 보완과제

'21년 9월 기준 약 5,100명의 20대 미혼청년이 별도의 주거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학교 비대면 수업 확대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크게 줄어들어 당초 계획(3.1만 가구) 대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루어져 비대면 수업이 종료될 경우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연초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신청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연령기준(만19~29세)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하여 만 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신입생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22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출 상품 운용

1) 도입배경 및 경과

「주거복지 로드맵」(17.11월)에 따라 청년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부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 청년전용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하였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상품 출시 이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월)에 따라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추가,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대출한도 확대, 청년 우대금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20년에는 무주택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버팀목 지원대상 확대(만25세→만34세 이하), 대상주택 완화(5천만원→1억원), 대출한도 확대(3.5천만원→7천만원), 대출금리 인하(하한 1.8%→1.2%)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 연장('21년→'23년未),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다. '18년부터 '21년 7월까지 총 26.3만 청년가구에 19조원을 지원하여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3) 향후 보완과제

상대적으로 대출수요가 적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상품의 경우, '22년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상품 운영에 참고할 예정이다.

〈표 3-13〉 청년전용 금융상품 (22.1월 기준)

구분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이하 무주택자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이하 무주택자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이하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2.1%(25세미만 단독 세대주&보증금7천만원·대출금 5천만원이하는 1.2~1.8%)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 별도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 1.3% 월세금: 0.0%(20만원 限) 1.0%(20~50만원)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보증금 80% 이내 7천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1,200만원 (월50만원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4. 청년 공적임대 주택 확대

가. 청년 매입임대 주택

1) 도입배경 및 경과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을 통해 '17년부터 별도 유형이 신설되어 도입되었다. 무주택자인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시중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2) 추진현황

청년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21년 10월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2.6만호를 공급하여 청년 주거안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들을 빌트인으로 제공하여 입주 청년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표 3-14〉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10월	계
공급 호수	1,606	3,319	5,147	7,168	8,817	26,057

또한, 소득·자산 기준 완화('19.10, 지침개정), 매입임대 건설 사업자 양도세·법인세 감면('21.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주차장 기준 완화('20.10,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노력도 병행 하고 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20년 10월에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급함으로써, 청년 1인 가구 주거수

요에 대응하고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등 성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림 3-11 비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표사례(*20년)



안암동 관광호텔 리모델링(안암생활)

영등포 관광호텔 리모델링(아츠스테이)

3) 추진성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으로써 청년 주거 안정의 기반이 되어왔으며, 평균 10:1 이상의 높은 경쟁률로 청년들에게 좋은 인기를 얻는 임대주택 제도로 정착하였다. 특히, 최근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테마형 청년 주택 등 주거 서비스와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으로 발전되어 입주민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4) 향후 보완과제

공급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혼·만혼 추세 및 1인 가구 급증으로 직주근접형 청년 주택 수요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매입물량 및 공급면적 확대 등 양질의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취업·문화·예술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임대 주택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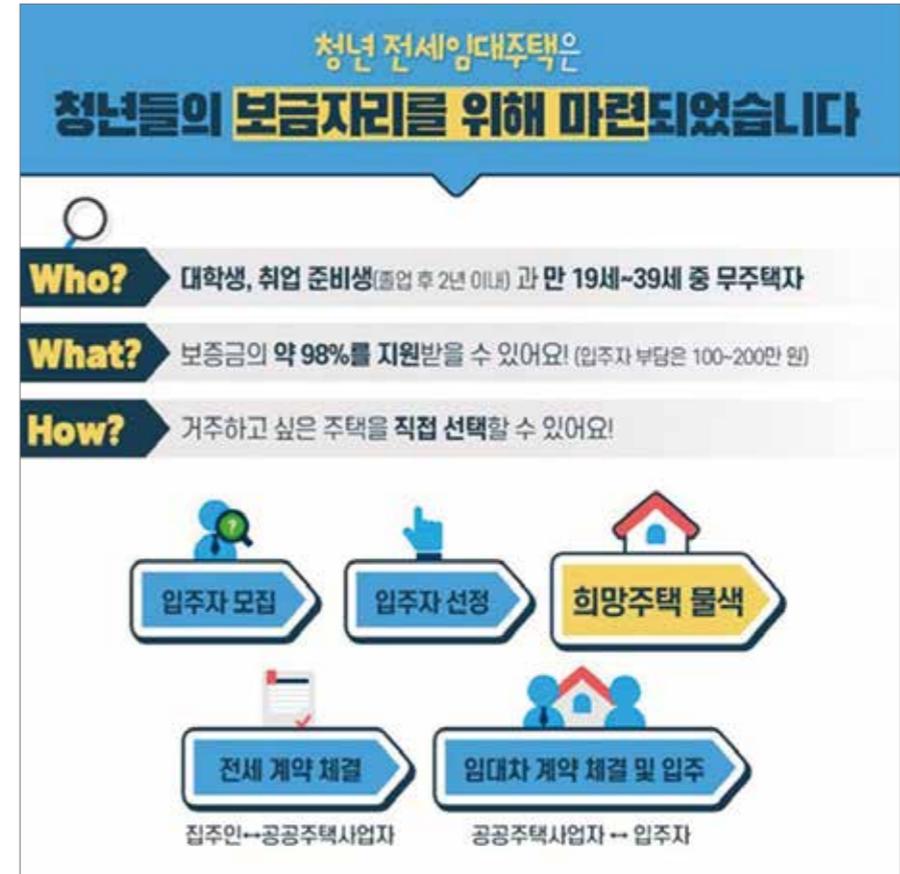
나. 청년 전세임대주택

1) 도입배경 및 경과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인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05년 시범사업(500호)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1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초 신설되었고, '16년 취업준비생, '18년 만19~39세 유형이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39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본인부담금 : 1~200만원

수준, 월임대료 :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로 공급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2) 추진현황

인근에 청년이 원하는 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5.3만호를 공급하여 청년 주거안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3-15〉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10월	계
공급호수	7,044	8,163	13,288	14,416	9,828	52,739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도권 120백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백만원, 기타지역 8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추진성과 및 향후 보완과제

도심 내 공급확대가 쉽지 않은 건설임대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입임대와 더불어 도심 내에 저렴하고 빠르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전세시세 상승으로 현재 정부 지원한도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내 전세주택 물색이 어려워 지원한도 인상 등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 추진배경

청년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을 출시·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현황 및 성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더하여 우대금리(1.5%p 우대)와 비과세(이자소득 500만원 限)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21년 11월 기준 총 55.5만명의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며, 청년층의 높은 선호도를 고려하여 가입기간을 당초 '21년말에서 '23년말까지 2년 연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22년부터는 가입자격도 연소득 3천만원에서 3천 6백만원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6〉 청년 우대형 통장 요약

구분	가입자격 및 혜택
가입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병역기간 인정)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 무주택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금리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 5천만원까지 연최대 3.3%
비과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소득 5백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납입액(최대240만원)의 40%까지 *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제4절 복지·문화 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가. 정책 여건

청년세대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신체·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20·30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건수(비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취업난 등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3-17〉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건수

	2019년		2020년	
	건수(만건)	비중(%)	건수(만건)	비중(%)
20대	11.6	15	22.4	20
30대	10.7	14	21.1	19

또한 필수적 지출인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와 함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부채는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채무발생 사유는 주거비 마련(42.9%), 학자금 마련(34.1%), 생활비 마련(12.0%)으로 나타나, 주거비 상승·학자금 문제가 청년부채의 주요한 원인을 알 수 있다.

나. 정책 추진방향

2021년 복지·문화분야 과제는 50개이며, 전체 예산은 약 1조 1천억원이다. 예산 투입 중점분야는 코로나 블루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및 최근 늘어난 학자금·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의 사회출발 자산 형성하는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바우처를 지원하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층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 청년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소득공제를 가능하게 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완화한다.

이하에서는 복지·문화분야 핵심과제인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층 정신건강 강화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도입 경과 및 주요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해당 5개 사업의 총 예산은 4천 1백억원 규모이며, 총 예산의 약 40% 수준이다.

2.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빈곤층의 저축습관을 장려하고 나아가 일반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근로를 통해 탈빈곤과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도입한 희망키움통장 I 을 시작으로 자활참여자, 차상위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청년 대상 사업은 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 이후 차상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020년도에 청년저축계좌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및 비정규직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현황

1)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2018년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였으며 가입연령은 사업 초기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청년까지 가능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만 39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적립방식은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에 비례해서 정부지원금을 일정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구조이며, 타 통장과는 달리 본인적립금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예산으로 적립(소득공제)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로 청년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다.

2) 청년저축계좌 도입

생계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청년까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였다. 청년저축계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아니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청년희망과 동일하게 만 15세~만 39세까지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신 반드시 본인이 10만원 정액 저축을 해야하며, 청년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30만원 정액으로 1(저축액):3(지원금) 매칭지원하고 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추진

복지부 수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기존 5개통장(희망키움통장 I·II·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의 복잡성 해소를 위해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통합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하였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청년만 지원하던 기준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기존 사업에서 유지하고 있던 연령 기준을 동일하여 적용하여 만 15세~만 39세까지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의 청년은 만19세~만 34세까지 연령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한다. 지원 금액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에게는 청년저축계좌에서 지원하던 정액 30만원을 매월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토록 정부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다. 추진성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이래 2018년 3,616명, 2019년 4,669명, 2020년 5,667명, 2021년 10월 기준 누적 약 6,557명이 가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중 1,891명(28.8%)이 탈수급 성공하여 지원을 받았다.

2020년 도입한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7,156명, 2021년 10월 기준 누적 9,698명이 가입하였으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는 향후에 살펴볼 수 있다.

라. 향후 보완과제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처리하던 기존의 대면 관리 방식으로는 청년의 요구를 대응하기 어렵고 비효율적면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강조되는 비대면 서비스의 대응과 접근성에서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통장의 가입·유지·적립증지·지급 관련한 각종 신청 서비스 제공, 통장계좌내용 확인 및 재무·금융교육, 취업일자리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포털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그림 3-12 자산형성사업 개편 개요



〈표 3-18〉 자산형성사업 개편 세부방안

구분	개편 전 통장					개편 후 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이하	차상초과
시행	'10. 4월	'14. 7월	'13.3월	'18. 4월	'20.4월	'22. 4월	'22. 4월	'22. 7월	'22. 7월
근로여부	일반시장	0	0	×	0	0	0	0	0
	자활근로	×	×	0	×	×	0	0	0
연령요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만15~39세	만15~39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만15~39세	만19~34세
가입대상	생계	0	×	자활근로 참여자	0	×	0	×	0
	의료	0	×		×	×	0	×	0
	주거·교육	×	0		×	0	×	0	0
	차상위	×	0		×	0	×	0	0
본인저축액	5/10만	월 10만	5/10/20만	본인저축 없음	월 10만	월10만원 이상			
정부지원	소득 비례 * 월 평균 33.4만원	1:1 매칭	1:1 매칭	소득 비례 * 월 평균 30만원	1:3 매칭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민간매칭 (최대 월 2만원)	-	자활사업단 매출액 (평균 22만원)	민간매칭 (최대 월 2만원)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적용			
3년후 평균 수급액	정액		720만원 + 이자	2,232만원 + 이자 * 최대 2,340만원		1,44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소득 비례	1,695만원 + 이자 * 최대 2,757만원		1,569만원 + 이자 * 최대 2,314만원					

구분	개편 전 통장					개편 후 통장				
	희망키움 통장 I	희망키움 통장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이하	차상초과	
3년후 수급 요건	교육	x	0	0	x	0	x	0	0	
	사례 관리	x	0	0	x	x	x	0	x	
	국가 자격증	x	x	x	x	0	x	x	x	
	탈수급	0	x	0 (또는 취창업 등)	0	x	0	x	x	x

3. 햇살론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청년층은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실적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정부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지원 상품인 '햇살론유스'를 '20.1월에 출시하였다.

나. 추진현황 및 성과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이며, 연 3.5%의 저금리로 최장 15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대 1,20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인 신한, 전북,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13 햇살론유스 지원체계



'20.1월 출시 이후 '21년 말까지 약 2년간 5,686억원, 약 15만건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1년 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7.0%가 동 상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햇살론유스는 청년·대학생이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지 않고 제도권금융으로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 : 김00씨에 대한 햇살론유스 이용사례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어 약기 교습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사기 당해 모아놓은 돈을 모두 잃은 후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카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던 그때, 우연히 지원제도를 살펴보다가 햇살론유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햇살론유스로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덕분에 카드론 완제는 물론 6개월 정도의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하던 시기 속에서 햇살론유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자살예방사업

가. 도입배경 및 경과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역대정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2018년 1월에는 자살예방의 범사회적 접근을 위해 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보완한 자살예방 관련 정부 정책을 총망라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2018년 2월 자살예방정책과를, 국무조정실에는 2019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는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살예방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살예방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을 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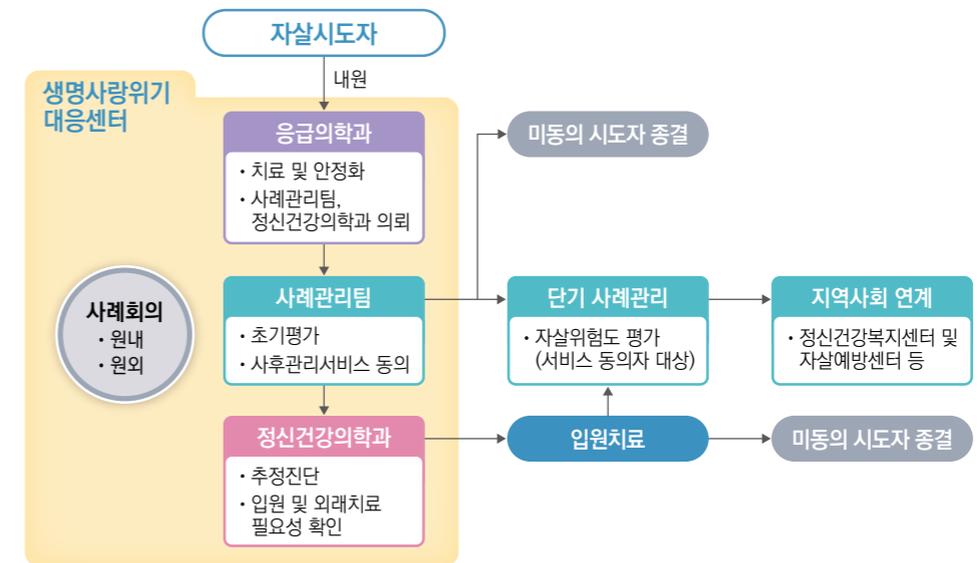
나. 추진현황

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 고위험군 관리의 일환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25개 응급의료기관 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현재 전국 76개 응급의료기관으로 수행기관이 확대되었다. 사업 수행병원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사례관리팀-정신건강의학과-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사업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자살 유족에게 적절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9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원스톱 사업에서는 기본적인 심리·정서지원 외에도 법률·행정, 사후 행정처리, 학자금, 일시주거, 특수청소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연계로 치료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업무 진행도



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일반적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치료와 재활지원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019년 조현병 환자로 인한 진주방화살인사건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부족함이 지적되어, 이를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광주광역시 1개 시도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가 추가 참여하여 총 7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인천,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이 추가 참여하여 총 12개 시도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청년 특화사업' 내 핵심전략으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대·30대의 고용불안, 사회적 고립감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심층평가, 집중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그룹인지 행동치료, 취업준비 프로그램, 신체건강 프로그램, 증상관리프로그램 등이 있다.

3) 자살예방상담전화

청년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해 전문자살예방상담 및 서비스 안내를 진행하기 위해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2018년도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를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24시간 4교대로 운영되며 단순한 자살예방, 정신건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을 통해 필요 시 유관기관에 연계까지도 지원 중에 있다.

* 고객 → 1차 ARS 안내 → 2차 자살예방상담팀 응대 → 접수/이관연계 ①, ②, ③
 ① (응급의료 또는 자살 등 위기상황시) 112, 119 연계
 ②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시군구 연계
 ③ (정신보건) 129홈페이지 ↔ 민간전문기관 연계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자살예방상담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2018년 26명의 상담사로 시작된 자살예방상담전화는 2021년 하반기 57명으로 인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위기대응상담팀(학대, 긴급복지 등)에서 자살예방상담팀으로 전담팀이 분리되었다. 기존 상담센터 인력만으로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자살예방상담 요청을 응대하기 어려워 전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1393 자원봉사센터를 2020년 11월부터 병행 운영하였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단은 공모를 통해 2020년에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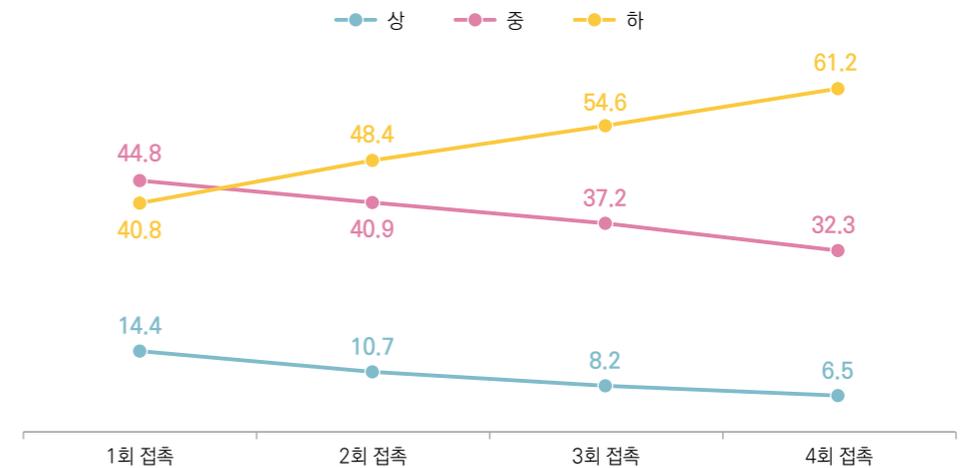
다. 추진성과

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 25개 사업수행기관에서 2017년 42개, 2018년 52개, 2019년 63개, 2020년 69개, 2021년 7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수행기관 중 7개 기관은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 확대에 예산도 매년 증가해, 2021년 예산은 12,636백만원이다.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내원 자살시도자는 12,268명('17년)에서 17,553명('18년), 21,545명('19년), 22,572명('20년), 23,484명('21년 11월)이다. 사례관리 서비스 4회 이상 완료자 중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은 7.9%p 감소하였다.(사후관리 초기 14.4% → 4회 진행 후 6.5%)

그림 3-15 사후관리에 따른 '전반적 자살위험도' 변화

(단위: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유입된 자살 유족은 2021년 11월까지 총 1,243명으로, 사업 첫해인 2019년 9~12월까지 유입된 유족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7배 증가하였다. 원스톱으로 발굴된 유족에 대해 총 38,225건의 상담과 527건의 환경·경제지원(법률·행정지원, 사후행정지원, 학자금 지원, 일시주거 및 특수청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1년 10월까지 302명의 유족에게는 8,200만원의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이 이루어졌다. 자살 유족에 대한 서비스 효과성 평가결과, 일반 자살 유족과 원스톱 서비스 자살 유족을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우울 개선 효과(12.79점(일반) vs. 6.57점(원스톱))를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원스톱 서비스 참여 유족은 사전·사후 평가에서 자살위험, 삶의 질, 애도 반응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통합건강증진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 우울, 자살 생각 등이 증가되고 있다. 동시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2년에는 12개 시도에 서울, 대구, 울산, 세종, 충북까지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예산은 '21년 20,416백만원에서 '22년 29,099백만원(정부안)으로 전년 대비 8,683백만원(42.5%)이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특히 강화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전략으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바우처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로, '21년 270명 규모에서 '22년 1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문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때 월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지원금 18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지자체, 범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청년맞춤의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센터(공간)를 연계·활용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자살예방상담전화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위험요인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2018년도 6억원 대비 약 3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21년 예산은 19억원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한 상담건수는 2018년 11월 개통 이후 317건에서 2019년 5만 7천건, 2020년 7만 2천건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초기에 급격하게 증가한 자살예방상담건수로 응대율은 2~30%대로 하락하였으나, 1393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기점으로 응대율은 70%대로 상승하였다.

코로나 19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상담전화의 인력은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등 SNS에 익숙한 세대들을 위해 SNS, 문자 등을 기반으로 한 상담창구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5.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가. 도입배경 및 경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20대 여성 자살시도자는 4,607명으로 전체 자살시도자 2만2572명(여성 1만4148명, 남성 8,424명) 가운데 20.4%(전년 대비 33.5% 증가)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3-16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성·연령대별 현황 (66개 응급실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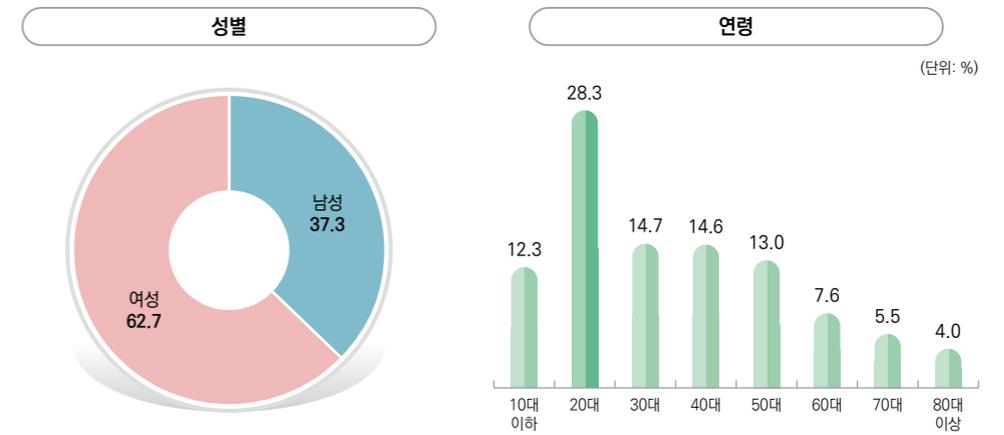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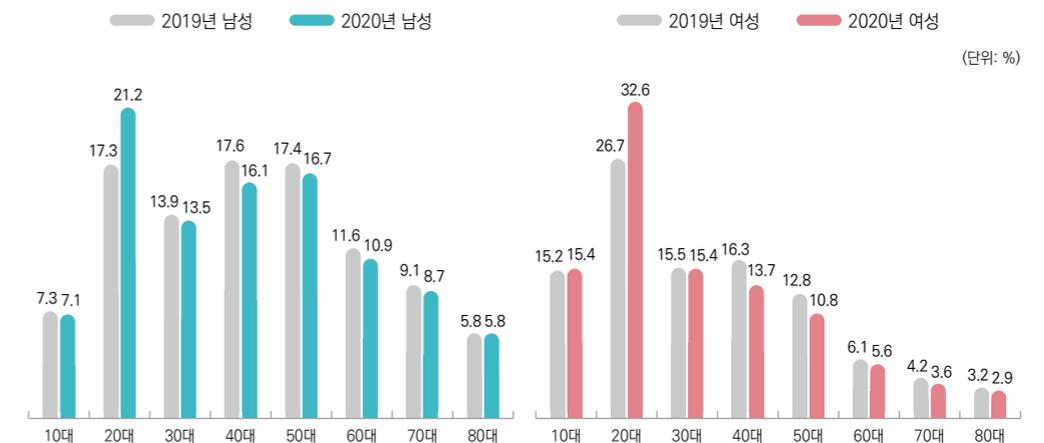


그림 3-17 2019년~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연령대별 비율 추이 (단위: %)



20·3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여성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지원방안' 발표(20.11월) 및 '21년 이행계획을 수립(21.3)하였다.

나. 추진현황

최근 20·30대 여성의 자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성별 특성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 및 ‘성인지 관점의 상담 매뉴얼’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정책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지원방안’ ‘21년 이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21.6~7월)’을 실시하였다.

* (구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통계청

다. 향후 보완사항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지원방안’ 이행계획을 수립(‘21.3월) 후 ‘21년 하반기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21.12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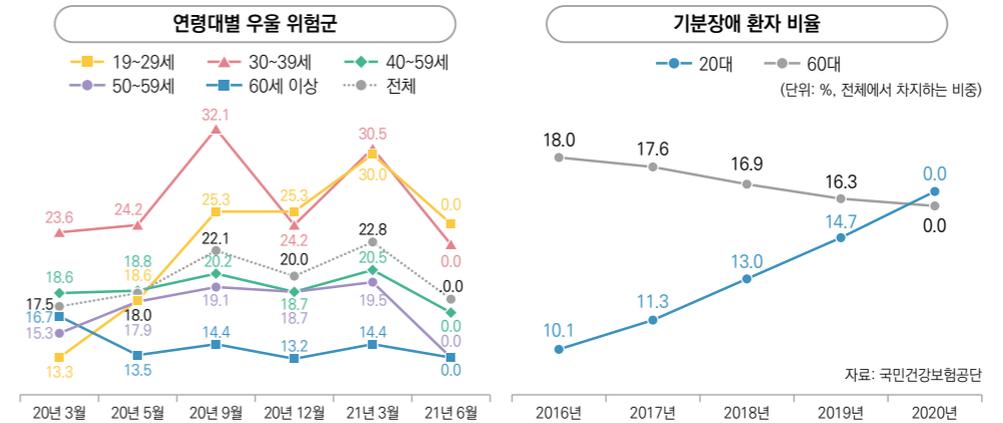
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심리지원서비스)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연령층의 우울 위험군은 2021년 3월 기준 22.8%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전체 평균치인 3.2%보다 약 7배 증가하였고, 자살생각률은 4.6%에서 16.3%로 약 4배까지 증가하였다. 그 중 20·30대는 우울 위험군이 20대는 30%, 30대 30.5%이며 자살생각률은 20대 22.5%, 30대 21.9%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어 고통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인 “기분장애 환자” 수도 20대(17만987명)가 60대(16만4,401명)를 추월하였다.

그림 3-18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및 기분장애 환자 비율



정신건강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에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굴·예방·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상적인 정신건강 문제 관련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청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정신질환 진입·심화를 예방하고자 2021년 5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표준모델로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 추진현황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이 가능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심리문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21.5~)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19~34세(청년기본법 기준)의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없으며, 의사·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연계 의뢰한 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사전검사와 상담 이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검사를 진행하며 기본 6개월 간 주1회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문제 개입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본 6개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재판정을 통해 또한 서비스 대상자 중 고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표 3-19】 서비스 내용 및 연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연계
사전·사후검사	서비스제공(기본 6개월, 재판정 1회 가능)	
개인 심리상담 관련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로 하였고,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은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1년 5월부터 1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21년 8월까지 서비스 이용자 수는 288명이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74개, 제공인력은 140명이 사업에 투입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델로 시행함에 따라 자율참여 지자체 수가 16개에 한정되어 있어, 현 추진체계로는 청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전국 청년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울감, 자살생각 조사 결과 50%가 해당있다고 응답하여 심리지원 서비스가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2년부터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일반 청년 약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바우처'(5,670백만원) 사업으로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가. 도입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투입하여 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나눔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8년부터 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2020년 기준 문화복지 관련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신나는예술여행,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이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범 운영 이후, 2006년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관광바우처 3개 분야 바우처를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추진경과 및 성과

1)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전용 카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5년 국고 4억 원을 투입하여 시범 운영 이후, 2006년 26억 원(기금 20억 원, 국고 6억 원)에서 2011년 340억 원(기금 245억 원, 지방비 95억 원) 2014년 732억 원(기금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매년 예산이 증가하여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은 총 1,993억 원 (문예기금 1,402억 원, 지방비 591억 원)이다.

당초 포인트제로 운영하던 문화바우처에서 2011년 카드제 도입 이후 2012년에는 선기명식에서 후기명식으로 전환하고,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사업명을 문화바우처에서 문화이용권으로 변경(외래어 순화 및 문예진흥법 상 법정 용어 적용)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대상자 자격검증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세대 검증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발급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공연장, 영화관, 서점 등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할인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영화·음악, ebook, 중고도서 등 문화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여행·스포츠관광 3개 이용권을 일원화한 통합문화이용권을 도입하여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대외명칭을 '문화카드'에서 '문화누리카드'로 변경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을 계기로 가구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문화 경험이 중요한 계층인 청소년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추가발급 연령을 10~19세(2013년)에서 6~19세(학령기 아동 추가)로 확대하였다. 한편, 동일 세대원 간 카드합산 및 개인비용 충전 기능을 신설하여 사용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2015년에는 세대 당 10만 원에서 개인당 5만 원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구성원 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5. 7.)에 따라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안정적인 카드 발급을 위하여 권역별로 순차 발급을 실시하였으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카드 발급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2016년에는 기획사업(문화누리사업)을 폐지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관람뿐만 아니라 운동용품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가맹점 정보 현행화 및 가맹점 위치(좌표) DB 구축으로 모바일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고, 전국 체육시설을 이용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다. '문자도움말서비스' 신설, 전문상담인력 투입, 표준상담 DB 구축,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응대율을 제고하였다.('16년 58.6% → '17년 76.5%)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7만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모바일 발급을 도입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불편 지역 거주자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용 분야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했으며 가맹점을 신규로 확충하였다.(캠핑장 117개소, 워터파크 31개소, 케이블TV방송, 체육시설 플랫폼 TLX 등) 아울러,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카드 발급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일 일자에 시작함으로써 발급 시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일반적인 카드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8만 원을 지원하고,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교통 및 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발급 환경을 개선하였다.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 대상 권리구제서비스 시행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를 최소화하였다. 영화관, 놀이공원, 지역 축제에서의 식음료 구입 허용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최근 문화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숙박예약, 음원재생, 전자책 구독, 취미생활 등)을 확대하여 이용처의 폭을 넓혔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9만 원을 지원하고, 위탁가정거소 아동 대상 별도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초·차상위 전체 대상 권리구제서비스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가맹점(OTT서비스, 웹툰, 비대면 공연, 홈트, 씽씽, 텀블벅 등)을 대폭 확대 하였다. 지역 사회적 기업 연계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화결제 방식 도입 등 비대면 문화활동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발급과 이용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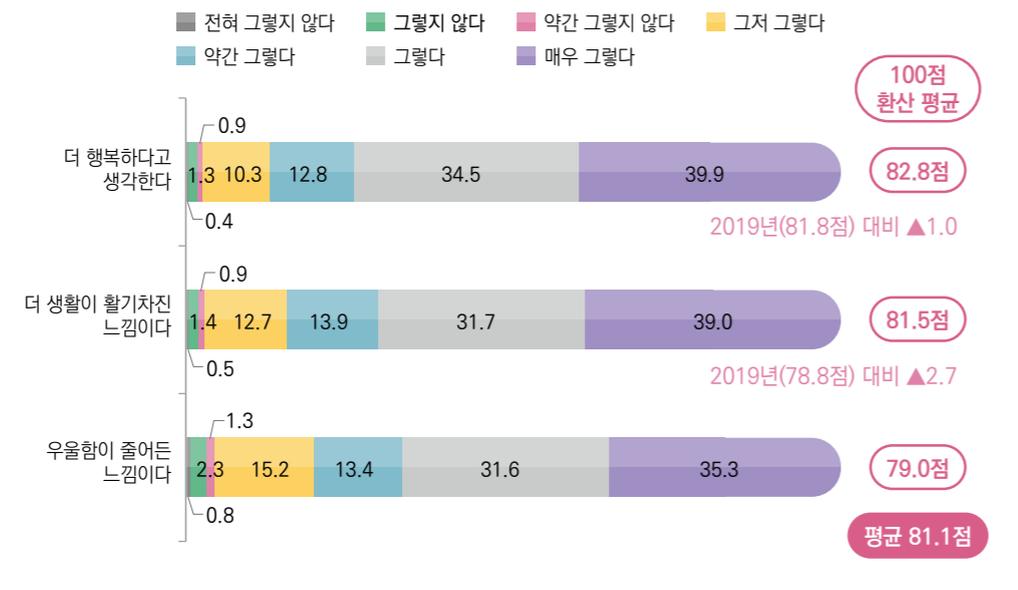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각 10만 원을 지원하고, 전년도 카드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충전되는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를 더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월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개시하여 카드 발급·재충전 신청 및 잔액조회, 인근 가맹점 확인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9 문화누리카드 이용 절차도

신청 불필요	발급(신규 또는 재충전) 신청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ARS
자동재충전 '20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동 재충전 * 자동재충전 제외자 별도 확인 필요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누리집 (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 필요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후 신청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는 '후기명식' 카드로서, 주민센터에 공(空)카드가 사전 배포되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 입력하여 카드 발급				
별도 배송 없음 (소지한 카드에 재충전) * 재충전 완료 시 안내 문자 발송 * 카드 분실시 재발급	주민센터에서 수령 * 주민센터에 공카드 여유시 즉시 발급	농협지점 수령 (농협지점 방문하여 수령) * 농협지점에 공카드 여유시 즉시 발급 * 우편 수령 : 입력 주소로 배송 *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모바일 앱	전화ARS 별도 배송 없음 (소지한 카드에 재충전) * 재충전 완료 시 안내 문자 발송

문화누리카드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카드이용 전보다 행복해지고(82.8점)', '이전보다 생활이 더 활기차다(81.5점)'고 느끼는 등 개인의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문화누리카드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또한, 20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에 걸쳐 약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9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취업유발인원은 1,904명, 고용유발인원은 1,360명이 발생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년 문화예술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 최고 소득(600만원 이상)과 최저 소득(100만원 미만)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20년 50.6%포인트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 관람률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문화누리카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참여·권리 분야

1. 중점 정책 추진방향

가. 정책여건

그간 청년권익의 증진을 위한 시책은 청년고용이 중심이었다. 반면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의 어려움을 교육,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청년을 위한(for youth)' 정책에 그치지 않고 '청년에 의한(with youth)' 정책을 지향하게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타 연령에 비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을 직접 정부 위원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도 청년정책 수립부터 그 정책이 청년에 전달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청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러한 청년의 권리가 제도적 기반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나. 정책 추진방향

2021년 참여·권리 분야 전체 과제는 31개이며, 총 예산은 685억원 수준이다. 청년의 참여·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함께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이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순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확립을 위해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청년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자립 및 활력지원사업 역시 추진한다.

이하에서는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등 청년 참여·권리 분야의 3개의 핵심사업의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 서술한다. 해당 3개사업의 전체 예산은 76억원 수준이며, 참여·권리 분야 전체 예산 대비 약 11% 수준이다.

2.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가. 도입배경 및 경과

인구감소위험 지자체 수는 '13년 75개에서 '20년 105개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부산(0.76), 대구(0.87) 등 광역시도 인구감소 주의단계에 진입하였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보다 청년층의 인구 유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0대 이상은 귀농·귀촌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순유입* 되고 있으나, 20~30대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이동) 40대 이상 8만명 (지난 5년간)

** (비수도권→수도권 인구이동) 10대 이하 6만명, 20대 17만명, 30대 11만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시·군·구 (228개)	75개	79개	80개	84개	85개	89개	97개	105개
	33%	34%	35%	37%	37%	39%	43%	46%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이에, 지방 생활을 꿈꾸는 청년과 청년을 필요로 하는 지방도시를 매칭하여 청년문제(일자리, 단절, 고립 등)와 지역문제(빈집, 청년인구 감소 등)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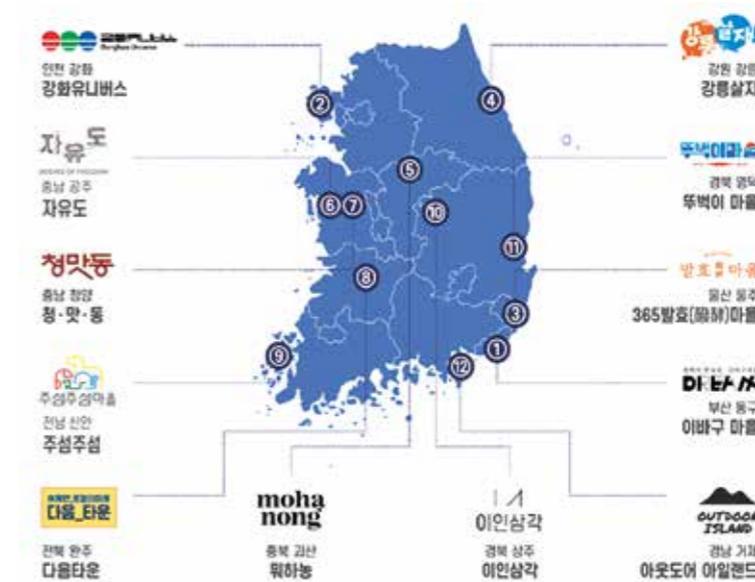
나. 추진현황

지난 '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매년 1개씩 시범 조성했으며, '21년부터는 12개소로 대폭 확대·추진 중이다.

〈표 3-20〉 2021년 청년마을 현황

구분	지역	청년마을	운영
1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주)공공플랜
2	인천 강화도	강화유니버스	협동조합 청풍
3	울산 울주군	365발효(醱酵)마을	발효문화(주)
4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주)더웨이브컴퍼니
5	충북 괴산군	뫼하농's 강철부대	(주)뫼하농
6	충남 공주시	자유도	(주)퍼즐랩
7	충남 청양군	청·맛·동	협동조합 청양사람
8	전북 완주군	다음_타운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9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	스픽스
10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이인삼각협동조합
11	경북 영덕군	뚜벅이마을	(주)메이드인피플
12	경남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	(주)공유를위한창조

그림 3-21 청년마을 현황



청년마을에서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청년단체의 역량·경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자립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하고 있다.

다. 추진성과 및 향후 보완과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교류행사(관계인구 등) 등 각종 지역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표 3-21】 청년마을 주요성과(당해연도 말 기준)

구분	참여인원	정착인원	공간활용	교류행사*
(18년) 목포 팬텀아마일	60명	32명	3개소	3,457명
(19년) 서천 삶기술학교	93명	47명	13개소	5,000여명
(20년) 문경 달빛탐사대	70명	31명	16개소	759명

출처: 참여청년, 지역주민, 외지인 등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축제, 공연, 발대식, 성과공유회) 등

그간 청년마을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체계를 가지고 있어, '청년마을'에서의 성공경험을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발전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년 자립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성과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2년 사업부터는 단년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매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성·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3.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청년제안 및 제도개선 활성화

가. 도입배경 및 경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 3월 28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개통하였다. 1만6천여 명의 참여로 시작한 국민생각함은 5년만인 2020년 약 22배 증가한 35만8천여 명이 참여하는 포털로 성장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정책참여 욕구 증가로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정부정책에 대한 제안·설문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히 우리 사회의 동력인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주요 관심이슈인 일자리·주거·불공정 관련 민원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고, 국민생각함

을 통해 청년 제안을 활성화하여 대학-지역사회-정부가 정책·행정서비스 등을 함께 개선해가는 청년주도형 협업 사례를 창출하였다.

나. 추진현황

- (1) 국민생각함은 '17년부터 전국의 주요 대학과 협업해 청년 주도로 지역의 민원과 갈등 요인을 발굴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 대안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 등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청년 정책참여 프로그램 추진경과

- » (17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상명대 공공인재학부와 시범 운영
- » (18년) 경희대 22개 과제, 상명대 11개 과제, 꽃동네대학교 10개 과제
 - * 서울 도시재생사업 개선, 유학생을 위한 학식 다양화, 청주시 헌옷 수거함 운영 절차 개선 등
- » (19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서울여대 행정학과 추가 / 5개 대학, 32개 과제
 - * 교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각장애인 이동·음식 선택권 확대, 놀이공원 안전점검 강화 등
- » (20년) 상명대, 서울여대, 건국대, 경희대, 부경대 / 5개 대학, 48개 과제
 - * 가상의 택시 승차대(앱), 반려동물 사전교육 의무화, 코로나19 시각장애인 교육권 보장 등
- » (21년) 상명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조선대 / 5개 대학, 89개 과제
 -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행 키오스크' 설치, 재활용 보증금 환불제도 활성화 방안 등

- (2) 또한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불편·부당한 일들을 미래세대의 눈으로 발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8년도부터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우수 아이디어는 소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작 사례

- » (20년) 교통표지에 안전모를 씌어주세요.



현재의 교통안전 표지



안전모를 착용한 교통안전 표지
- » (21년) 올바른 일회용품 분리수거 방식 확산을 위한 공공배달 앱 내 환경 리뷰(review) 서비스 도입

(3)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는 불공정·특혜 관행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년까지 90여 건의 청년세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표 3-22〉 청년세대 관련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례

구분	권고 제목
불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17.6월) 소방공무원 채용 기출문제 공개('18.5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방안('19.12월)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20.4월)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20.9월)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21.6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21.6월)
사회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 제도개선('17.8월) 소액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강화('19.3월) 산업기능요원제도 관련 고충해소방안('19.3월) 코로나19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개선('20.6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21.1월)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21.2월) 등

다. 추진성과 및 향후 보완과제

청년세대가 정부 정책수립 및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정책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처음 시범 운영한 '17년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총 18개 대학이 참여해 200여개의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 중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청년 정책참여 프로그램 주요 추진 성과

- » ('19년) 보육원 퇴소,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 확대 (경희대-복지부 협업)
- » ('20년) '반려동물 소유자 사전교육 이수' 시범사업 추진 (건국대-광진구 협업)
- » ('20년) 부산 '해운대구 상권 활성화', '영도구 관광객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 제정 (부경대-부산시 기초의회-부산참여연대 협업)



또한, 교육·자격·채용, 일자리·주거 분야 등 청년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각급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4. 청년참여 20-30

가. 도입배경 및 경과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의 대표성을 높이고, 청년이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제15조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정부위원회 확대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지속 발굴하고 청년위원 위촉을 독려하고 있다.

나. 추진현황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0. 9. 18.)에서 정부위원회 중 135개, 시도별 청년위원회 17개를 청년위촉 대상위원회로 우선 지정하는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제1차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0. 12. 23.)에서 발표하였는데, 2025년까지 정부위원회 중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30% 이상 지정, 지정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는 추진안을 마련하였다.

〈표 3-23〉 청년위촉위원회 비율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청년위촉 위원회 비율	중앙부처	13.9%	17.1%	20.3%	23.6%	26.8%	30% 이상
	광역지자체	0.6%	6.5%	12.4%	18.2%	24.1%	30% 이상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정부위원회 857개 중 135개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위원회로 지정하였고, 총 71명의 청년위원을 위촉하였다.

〈표 3-24〉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 청년위촉 현황

구분	'20.9월	'20.12월	'21.3월	'21.6월
청년위원을 위촉한 위원회 수	13	22	28	38
청년위원 위촉 수	16	40	50	71

청년특별대책(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1. 8. 26.)에서 정부위원회는 청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2021. 11. 현재 일괄 지정을 추진 중이다.

다. 추진성과

정부위원회 내 청년 참여 확대를 추진하면서 각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추진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별 위촉 자격 요건(경력 등)이 까다롭고, 적합한 청년 위원 후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각 위원회 구성에서 필요한 청년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위원을 쉽게 발굴 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 DB를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라. 향후 보완과제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장애가 되는 규정 등 제도가 있는지 점검·개선하고, 중앙 및 시도별 위원회 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청년위원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확대와 청년위원 위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6절 민관협력

1.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

가.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사업 추진배경

청년들은 정책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과제(안)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였다. 이에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과 정부의 상호 인식 차이를 줄이고,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동 사업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5항(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 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년도 '청년소통 열린회의'를 권역별로 개최해 청년으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을 받았다. '20년도에는 청년의 참여와 주도로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청년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였다. 이어서 '21년도에는 청년 거버넌스를 각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시킨다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0.12월)을 기초로, 전국 지자체의 청년참여기구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의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세부내용

1) 2019년도 추진사항

2019년 7월 청년정책추진단 설치와 함께 9월부터 '청년소통 열린회의'를 개최했다. 9~10월 2달간 전국 광역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청년 549명으로부터 451건의 정책 제안을 직접 받았다.

청년이 제안한 과제는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받고, 청년들과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청년정책에 반영에 검토의견으로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2) 2020년도 추진사항

2020년에는 ‘청년참여단’ 200명을 모집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5개 분야로 분과를 나누고, 소그룹 20개를 구성하였다. 청년참여단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료수집과 토론을 통해 총 91건의 청년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온라인 청년패널’ 총 1,027명을 모집, 운영하였다. 온라인 청년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총 6회 실시했으며, 청년참여단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제시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청년 대상 6개 분야(연구, 콘텐츠, 제작, 캠페인·행사, 교육·교류, 디지털·플랫폼) 30팀을 선정하여 각자 설계한 청년주도형 정책실험을 진행하는 ‘청년정책 실험실’도 운영하였다.

3) 2021년도 추진사항

2021년도에는 공무원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거버넌스 교육강의를 제작·배포하여 청년참여의 기반을 다졌다. 강의에는 청년기본법에 대한 이해, 중앙부처 청년정책 현황, 지자체 청년정책 사례, 민주적 토론방법 등 청년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으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되었다. 아울러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거버넌스 매뉴얼’도 제작하여 전국 참여기구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

중앙-지자체 거버넌스 연계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청년참여 거버넌스 권역별 워크숍’도 11월 중 5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지역의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회차별 20~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테이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3-25〉 2021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개최현황

개최일	권역(대상 지자체)	장소
11. 13. (토)	경상·제주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부산청년센터 (부산)
11. 20. (토)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전북청년허브센터 (전주)
11. 27. (토)	경기·강원권 (경기, 강원)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구리)
11. 28. (일)	서울·인천권 (서울, 인천)	(취)대학내일 (서울)
12. 4. (토)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세종청년센터 세청나래 (세종)



경상·제주권 워크숍



전라권 워크숍



경기·강원권 워크숍



서울·인천권 워크숍

2021년도에는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 전 1주일을 ‘청년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청년주간 컨퍼런스’, ‘청년주간 교류회’ 등의 청년참여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청년주간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청년주간 컨퍼런스’는 청년정책·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5개 세션이 열렸으며, 각 주제별 전문가 및 참여청년의 발제와 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청년주간 교류회’는 4차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각각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청년센터 담당자, 청년단체 활동청년, 청년참여기구 활동청년들이 참여하여 활동사례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였다. 컨퍼런스와 교류회 내용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www.youtube.com/2030youthpolicy)를 통해 중계되었으며, 다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주간 컨퍼런스



청년주간 교류회

청년의 날 기념식(21.9.17)에는 청년정책 관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민간에게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6), 국무총리표창(7), 장관표창(10)을 수여 하였다.

〈표 3-26〉 청년의 날 포상 현황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공무원	-	-	2(기관 1)	3(기관 1)	5(기관 1)
민간	1	1	4(기관 1)	4(기관 1)	5(기관 1)
총계	1	1	6	7	10

〈표 3-27〉 2021년 청년의 날 포상 세부 내용

구분	대상자 명단
훈장 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현주(41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16년~'20년)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초로 청년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건강 분야의 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진로정서 자가진단지 개발 등) - 서울시 복지재단 사업 중 '마을살이'사업을 통해 청년혁신활동가 발굴·양성하여 청년층의 지역사회 교류에 기여
포장 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현호(40세, 신용회복위원회 / 수석조사역 / 금융부문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 조정 지원제도 개선('20.12) - 미취업 청년층 대상 종합신용상담서비스 제공, 대학생 실용금융 온라인 강좌 및 워크북 개발 등 금융부문 청년정책 개발에 기여
대표 민 (4) 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철(33세, 프라임에셋(주) / 변호사 / 자립준비청년 권익증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시설출신 변호사로서, 본인이 퇴소하여 사회에 진출하기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시설 아동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 자립준비청년 대상 관련 법률 강의 - 보호시설 청소년 대상 강의 및 멘토링 활동, 보호시설 법률교육 목적 법인 '세발자전거' 설립('14년) 후 자립준비청년 대상 관련 법률(노동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강의를 통해 자립 지원 • 김동희(28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위원 /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청년의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장 '청년활동리더십 과정' 기획·주관 청년참여 활성화 - '제1·2회 경기도내 청년도민의 밤' 기획·주관하는 등 다양한 청년활동 주도 • 엄창환(37세, 부산청년센터 / 센터장 / 지역 청년활동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커뮤니티하우스(심오한 집) 설립하여 지역사회 청년 교류기반 구축에 기여 - '17년 부산 청년참여기구 지원단장 역임, 청년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부산시 청년정책 제도화에 기여

구분	대상자 명단
대표 민 (4) 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가치있는누림(비영리단체 / 주거복지 개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야학동아리로 시작, 안산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 캠페인 등 지역청년정책 개선 기여 - 수도권 주거취약 청년 대상으로 총 309호의 사회적 주택을 운영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하지영(34세, 고용부 /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 /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수립 지원(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총괄하여 인구구조 등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대구광역시(광역 / 광역차원의 선도적인 청년정책 제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전국최초 청년위원회 출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17~'20) 수립 등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의 생애 이행 과정 분야를 지원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21년 7개사업) 시행
국표 민 (4) 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창열(36세, 청년창업네트워크'프리즘'대표 / 청년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학 창업 동아리, 3년 이하의 스타트업 5,000명을 모아 청년창업 네트워크 프리즘 창설·운영(현 2만명) - 서울시 청년창업 교류 자문단 단장으로 역임, 서울시와 지방창업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 • 김홍일(55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청년 창업 생태계 개선 및 경력개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최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투자 공모 주식형펀드 개발 및 운용보수 5%를 청년 창업 지원 기금으로 활용('13) - 세계최대 규모의 국내청년 창업 전용 보육공간 FRONTI 개관('20.7월) 등 창업 생태계 개선 • 최정린(39세, 보통청년들의 가살리기 / 대표 / 청년 진로설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장('16~'20)으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 취업준비생 대탈출 프로젝트, 삼삼오오 프로젝트, 진로취업 마중물 연계사업 등 전주 청년의 진로설계 및 구직활동에 기여 • 군인권센터(비정부기구 / 군 청년 권익개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공관병 제도 폐지,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청년 장병들의 권익증진에 기여 - 장병 인권 침해 상담을 진행하여 민간영역에서 군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회복지원체계 구축

구분	대상자 명단
국표 민 (4) 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근영(48세, 제주도 / 청년정책담당관 지방행정주사 /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운영하여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발굴·논의된 청년 제안의 정책과 예산 반영률 제고 등 청년참여예산 제도화 적극 추진 - 청년다락 5호점 조성계획 수립 등 청년활동공간 이용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순옥(51세, 통계청 /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사무관 / 청년 통계 신속 분석 및 자료제공을 통한 양질의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통계 업무 6년간 담당하며, 매월 고용동향을 작성·공표하여 신속한 통계 자료 제공 - 매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위해 청년층 등 정책대상별 세부 분석자료 제공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수립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청(광역단체 / '일자리국' 전국 최초 설치, 광역단위의 종합적인 청년정책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국'(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설치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취직사회 책임제(1,200억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강원형 my-job 플랫폼 구축 등 강원지역 청년 일자리 발전에 기여

다. 추진성과 및 향후 보완과제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국의 청년위원회(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 및 청년네트워크(청년정책 제안기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의 정책에의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 (지자체 청년위원회) 139개, 청년위원 1,115명(20.7.) → 182개, 1,375명(21.7.)
- (지자체 청년네트워크) 111개, 청년위원 5,166명(20.7.) → 243개, 8,129명(21.7.)

다만, 청년들의 정책제안이 실제 정책반영에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추진되거나 오프라인에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22년도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기관 운영

가. 청년 네트워크

1) 개요

지자체는 각 지자체에 속해 있는 청년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의 협업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청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세부내용

2021년도 기준 전체 243개 지자체 중 63.8%인 153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속 지자체의 운영현황을 보면 울산·세종·제주 100%, 전남95.7%, 서울 88% 순이며, 강원은 21%로 19개 시군 중 4개만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20년 6월 111개 지자체(45.7%)에서 비해서 1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시군 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 네트워크를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네트워크에는 청년 8,1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청년의 비중은 약 43%로 3,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약5,100여명이 참여하던 것에 비해 2021년도에는 약 1.6배 정도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다.

3) 연도별 지자체 청년 네트워크 현황

【표 3-28】 2020년-2021년 광역(시부) 운영 현황 (단위: 개수, %)

구분	자치단체	운영 네트워크	운영네트워크 비율(%)	미 운영
2021년	서울	26	88.5	3
	부산	17	35.3	11
	대구	9	33.3	6
	인천	11	54.5	5
	광주	6	83.3	1
	대전	6	83.3	1
	울산	6	100	-

구분	자치단체	운영 네트워크	운영네트워크 비율(%)	미 운영
2021년	세종	1	100	-
	소계 (평균)	82	55 (63%)	27
2020년	서울	26	19 73.1	7
	부산	17	2 11.8	15
	대구	9	2 22.2	7
	인천	11	1 9.1	10
	광주	6	5 83.3	1
	대전	6	5 83.3	1
	울산	6	4 66.6	2
	소계 (평균)	82	39 (48%)	43

〈표 3-29〉 2020년~2021년 광역(도부) 운영 현황 (단위: 개수, %)

구분	자치단체	운영 네트워크	운영네트워크 비율(%)	미 운영
2021년	경기	32	17 53.1	15
	강원	19	4 21.1	15
	충북	12	5 41.7	7
	충남	16	12 75.0	4
	전북	15	10 66.7	5
	전남	23	22 95.7	1
	경북	24	13 54.2	11
	경남	19	16 84.2	3
	제주	1	1 100	-
소계 (평균)	161	100 (62%)	61	
2020년	경기	32	14 43.7	18
	강원	19	2 10.5	17
	충북	12	4 33.3	8
	충남	16	8 50.0	8
	전북	15	9 60.0	6
	전남	23	19 82.6	4
	경북	24	6 25.0	18
	경남	19	9 47.4	10
	제주	1	1 100	-
소계 (평균)	161	72 (45%)	89	

나. 지자체 청년센터

1) 개요 및 도입배경

지자체는 청년의 정책참여 및 상호 교류·네트워크 구축 지원, 각 지역별 청년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의 정책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세부내용

6월 기준 지자체에 18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이 114개(62%), 직접운영은 71개(38%)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실질적인 행정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센터가 약 70%인 130여개소에 달한다.

청년센터 운영비는 185개소, 약 500억원의 운영비를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비율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중 10개소에는 국비가 11.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림 3-22 제주도 청년센터



그림 3-23 서울시 청년센터



3)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현황

〈표 3-30〉 운영주체별 현황: 185개(위탁 114, 직접 71) (단위: 개수)

구분	센터수	위탁운영	직접운영	
합계	185	114	71	
광역 시부	서울	35	29	6
	부산	22	13	9
	대구	4	3	1
	인천	5	4	1
	광주	9	3	6
	대전	7	7	-
	울산	4	4	-
	세종	1	1	-
	광역 도부	경기	32	11
강원		4	2	2
충북		2	2	-
충남		6	1	5
전북		13	9	4
전남		11	3	8
경북		17	12	5
경남		8	5	3
제주		5	5	-

〈표 3-31〉 야간 및 주말 운영 현황 : 야간 127개소, 주말 132개소 (단위: 개수)

구분	센터수	야간운영	야간운영비율	주말운영	주말운영비율	
합계	150	98	68.5	102	71.2	
광역 시부	서울	35	29	82.9	30	85.7
	부산	22	11	50.0	15	68.2
	대구	4	4	100	4	100
	인천	5	4	80	5	100
	광주	9	4	50	4	50
	대전	7	7	100.0	7	100
	울산	4	1	25	1	25
	세종	1	-	-	1	100

구분	센터수	야간운영	야간운영비율	주말운영	주말운영비율	
광역 도부	경기	32	24	75.0	25	78.1
	강원	4	1	25	1	25
	충북	2	2	100	2	100
	충남	6	3	50	3	50
	전북	13	12	92.3	12	92.3
	전남	11	6	54.5	5	45.5
	경북	17	7	41.2	5	40.0
	경남	8	7	87.5	7	87.5
	제주	5	5	100	5	100

〈표 3-32〉 운영비 지원 현황 : 185개소, 499억 5,500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센터수	운영비	지원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85	49,955	1,140	26,163	22,652	
광역 시부	서울	35	15,067	12,016	3,051	
	부산	22	3,185	387	1,856	942
	대구	4	968		847	121
	인천	5	2,115	315	610	1,190
	광주	9	2,077	200	1,552	325
	대전	7	1,314		915	399
	울산	4	1,194		744	450
	세종	1	498		498	
	광역 도부	경기	32	8,800	225	953
강원		4	730			730
충북		2	874		468	406
충남		6	740			740
전북		13	2,462		580	1,882
전남		11	1,549	13	379	1,157
경북		17	4,005		1,617	2,388
경남		8	2,897		1,648	1,249
제주		5	1,480		1,480	

3. 기업의 청년지원 사례

가. 입직 지원

1)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사용자단체 협력: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인 정부, 기업, 사용자단체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 일경험 등 청년고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만들어가는 등의 활동을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8월 3일에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삼양식품 등 5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했다. 이후 광주과학기술원 컨소시엄(꿈꾸는 AI), KT, 스타벅스, KT&G, 현대자동차 등 5개 기업이 추가로 가입했다.

이 중 롯데그룹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2014년 하반기부터 신입채용 불합격자 결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역량면접, PT면접, 토론면접, 임원면접 등 면접 전형별 점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본인의 점수뿐만 아니라 지원자 및 합격자 평균 점수도 같이 제공함으로써 이후 취업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공정채용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취업준비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스타벅스는 청년 인재양성 활동과 채용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바리스타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업 홍보,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을 통한 청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시, 보호종료 청년 후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현장실습 등 일경험 지원 사례: 일경험 지원

기업의 일경험 지원은 청년고용의 유용한 지원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경험 지원은 대학 등 교육기관과 정부(고용노동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여기서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1~3개월 간의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의 우수사례로 꼽힌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2021년 12월 2일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하나은행 등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경험 직무 발굴과 관련해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적응 지원 측면에서 고충처리 창구 운영,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역량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서울)은 직무 발굴 및 적응지원의 측면에서 '시니어파트너' 직무를 신설·발굴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자 취업 지원을 위해 타은행권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3) 공정채용 우수사례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층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로 공정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경쟁은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용과정에서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능력중심 선발이 가능하도록 블라인드채용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부문 우수 공정 채용사례 시상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 2021년 우수사례 중 민간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코리아세븐은 직무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 관련 레포트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전제형 인턴십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지역별 균형선발을 위한 지역단위 채용 전환 등의 채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조용하여 비대면 채용을 위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원자 스스로 직무에 관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 PR면접'과 면접주제를 선택하는 '키워드면접'을 도입하였다.

4) 현대백화점, GS25: 청년창업지원

현대백화점은 2021년 11월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청년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더 성장마켓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푸드테크(식품+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대백화점은 2021년 9월초에 선발한 15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9월~11월 약 3개월 간에 걸쳐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품화·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그리고 백화점 식품관 및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홈' 입점 등 청년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명절 특화 선물세트 제작, 단독 상품 공동 개발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GS25는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창업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2021년 12월부터 군 복무를 마친 후 1년 내에 GS25를 오픈하는 가맹 경영주에게 가맹비

770만원 중 220만원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군 복무에 매진하는 장병들의 전역 이후의 삶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재직자 지원

1) 청년친화 강소기업 사례: 청년친화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등급이 높고,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 중소기업 중에서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성, 청년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정부(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기업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해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취업지원, 금융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우대, 방송광고비 할인, 세무조사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6년에 임금(1년차 신입사원 월평균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근로시간(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근무 월 1회 이하), 복지혜택(휴가비, 생활안정, 자기계발, 여가활동 지원 등 4개 이상 복제도 운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강소기업 891곳을 첫 선정하였고, 2018년에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 임금 외에도 고용안정, 근로시간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임금 우수, 일생활균형 우수, 고용안정 우수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1,280개소 선정에 이어 2021년 1,222개소, 2022년 1,214개소가 선정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가비아'를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2018년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으로 기준이 변경된 이후 3개 분야에서 모두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월 회 금요일무제를 시행하다가 2021년부터는 월 2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육아 및 가족 돌봄 휴직도 운영하고 있으며, 조식/석식/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직원 전용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다(정민규, 2021.12.22. 가비아,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 강소기업' 7년 연속 선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2)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청년친화기업

고용노동부가 매년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대상으로, 기업 규모나 업계 특성과 무관하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워라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포스코에너지(주)'로 해당 기업의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기타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2일 사무실 출근 및 주3일 재택근무 방식,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일하는 문화와 관련해서는 '집중근무제도(09:30~11:00)' 캠페인, 정시퇴근 'Follow(8-5) me' 캠페인, '인문학 발전소' 운영, '포스코에너지인의 서재'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의 복지제도로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하고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가비 지원, 여름휴가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에듀윌'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4일 근무제 운영, 출산휴가자 육아휴직 사용률 100%, 비즈니스 강연 및 지식 교육 콘텐츠 제공, 아침 식사 제공, 휴식공간 및 심리상담 제공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사회공헌활동

1) BC카드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스타벅스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취약청년지원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보호 아동은 보호 종료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보호 종료 아동이 퇴소 이후 주거지 확보 및 취업 준비 등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 기업 중에서 BC카드는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2억8905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다. 전달된 기부금은 사회적협동조합 '십시일방'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을 펼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BC카드는 2022년월부터 1년간 서울 지역 보호 종료 아동 10여명의 주거지와 주거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진로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도울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 종료 아동과 BC카드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펼칠 예정이다.

청년고용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청년자립꿈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종료 청년의 자립정착금 지원,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적성검사, 이력서·면접준비 교육, 스타벅스 바리스타 체험교육, 자립에 필요한 생활법률

공부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자립정착금 지원금도 지원한다.

2) 롯데쇼핑 '영케어러 기부펀딩 리조이스온': 취약청년지원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보도 등으로 영케어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롯데쇼핑이 기부 펀딩 '리조이스온'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에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기부 펀딩을 시작하였다. 기부금 전액은 학업과 생계의 문제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청년인 '영케어러'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여성들의 자존감과 꿈을 응원하는 '리조이스 캠페인'을 시작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영케어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기부 펀딩의 목표 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으며, 영케어러 30명에게 자기계발지원금과 상담지원금 형태로 사용될 예정이다.

3) 집토스 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거지원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는 '1억 N빵' 이벤트를 통해 총 1억원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집토스 직영부동산에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고객 200명을 대상으로 매월 40명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21년 10월 시작한 '집토스 서울 청년 주거 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 고객인 20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생애주기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거 관련 편의 서비스로도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에 기반하고 있다.

4) CSR Youth Forum: CSR 청년참여

우리나라 350여 기업의 기업사회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담당자 600여 명의 단체인 CSR Fourm의 산하 청년기구로 청년들의 눈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기업과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탐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포럼은 기업, 정부, 비영리기관, 국제기구, 미디어, 학계, 대중 등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CSR을 통한 청년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1)CYFO X 더브릿지 클라우드 펀딩(청년컨설턴트가 2주간 펀드레이징 캠페인 진행, 6주간 활동 통한 현지 파트너와 실무자들과 직접 협업 기회 제공), 2)CSR 스터디(CSR의 기본 이론 이해를 통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기업의 CSR 실질적 활용 콘텐츠 제작), 3)CSR 기자단(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의미한 아젠다 제시, CSR 영역의 트렌드를 청년관점에서 정리하여 대중에게 전달), 4)CSR 정기포럼(각 분야 관련 전문가 강의 수강 등), 5)CSR 청년포럼(기업과 청년단체 토론 및 네트워킹), 6)기업탐방(기업 CSR 담당자 미팅)

4. 주요 청년단체 활동

가. 도입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현재의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기까지는 청년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기존의 일자리 중심으로 논의되던 청년정책이 주거, 교육, 생활문화, 참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청년단체의 여러 활동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청년단체가 기여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청년 의제 단체의 등장과 청년기본조례 제정

명시적으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다루는 법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최초였다. 이 법은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고용환경 악화뿐만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청년의 사회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가장 부담이 됐던 대학등록금을 인하해달라는 운동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시도가 펼쳐졌다.

1)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은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들의 노동권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만15~39세 청년이라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과 차별화됐다. 실제 청년층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다양한 상황에 부딪치는 상황이었으며, 청년유니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형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었다.

그림 3-24 청년유니온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처: 청년유니온

(1) 청년 일자리 및 노동문제 관련 활동

2010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청년 가게부 실태조사, 청년노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알리고,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2011년에는 피자업체가 30분 배달제를 통해 배달원에게 속도경쟁을 강요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를 공론화 하여 30분 배달제 폐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카페 등의 주휴수당 미 지급실태를 고발하고,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단체 교섭을 추진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2년에는 서울시와 사회적 교섭을 처음으로 추진했다. 더불어 청년유니온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해 서울, 광주, 인천, 대전, 충북 등 청년유니온 지부가 설립됐다.

2013년에는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 결과로 정책협약을 이뤄내고, 미용실 스텝 실태조사를 통해 미용계의 도제식 과정에서 무급 인턴 등으로 일하는 미용실 스텝의 현실을 조명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아르바이트 감정노동 실태조사, 청소년 호텔알바 실태조사,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최저임금 위반 등의 근로조건 이외에도 일하는 과정에서의 갑질 문제, 청소년들까지 문제를 확장해 청소년유니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들의 실태를 전하기 위해 발언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드라마, 영화제 등 문화영역의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림 3-25 미용실 스텝 실태조사 기자회견 사진



출처: 청년유니온

(2) 거버넌스활동: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

2015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지속해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만드는 데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 동네모임과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 열린회의와 노동법 아카데미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하며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청년 주거불평등 완화 해결을 위한 단체로, 일반적인 달팽이와 달리 집이 없이 살아가는 민달팽이에 청년들의 삶을 빗댄 이름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시작은 201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집을 찾는 달팽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주거권 보장 운동에서 출발했다. 당시 연세대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집을 찾는 달팽이'는 서대문구 구청에 대학생들의 주거 실태를 지적하였고,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설립 요청과 학교에는 기숙사 증축을 요구하였다.

(1) 대학생 주거문제 본격화

대학생 주거문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고자 2011년 5월 단체의 틀을 갖추고 본격 출범했다. 그렇기에 초기 민달팽이유니온의 초기 활동은 대학 기숙사, 고시원 등을 비롯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집중했다.

품앗이 이사, 민달팽이 장학금 등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했다. 연세대가 비용이 높은 민자 방식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학본부의 예산으로 직접 건립하는 직영 기숙사 건립을 촉구하고, 착한 기숙사 건립과 주택바우처 청년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요구하는 활동 등을 진행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지역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자를 모아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은 각 학교의 기숙사 등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상황을 공유하며, 서울 내 기숙사 및 자취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나갔다. 청년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공론화했다. 특히 2013년에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평당 임대료가 높은 것을 발표, '방값역전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의 실패, 공공개입의 필요성과 해결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

그림 3-26 민달팽이유니온 및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총회사진



출처: 민달팽이유니온

(2) 청년 주거 전반으로의 확장과 주거상담사 양성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리비에 대한 문제제기 원룸 관리비를 둘러싼 과다, 불공정 부과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14년부터 청년 주거 전문가, 청년주거상담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계약을 맺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 관련 상담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상담 역량을 키워 2020년 5월에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했다.

(3)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2014년에는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유형 사회주택인 '달팽이집'을 직접 공급하고자 나섰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였다. 달팽이집은 당시 월세 시세의 70% 수준으로 집을 보급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내 사례가 거의 없었던 비영리 주거모델을 청년들이 직접 실천해 보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회투자기금의 사회주택 지원, 서울시, 서울주택토지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다양한 곳과 협업을 통해 집을 늘려나갔다. 이 같은 시도는 타 지역까지 확산돼 2018년에는 전주에도 달팽이집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림 3-27 민달팽이유니온 및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총회사진



출처: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한다는 시도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특히 가장 크게 부딪혔던 장벽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논의를 거쳐 완성된 정책 제안이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한 제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3-28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오픈캠프 사진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3) 청년 참여기구 모델 수립을 주도한 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

2013년 서울시에서 청년이 문제제기를 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생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시작할 때, 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추진단으로 함께했다. 총 249명의 청년정책위원이 모집되었고 일·노동, 주거, 생활안정망 등의 분과 테이블을 직접 자유롭게 결정했다. 이후 시장에게 직접 정책제안을 전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20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의 청년 참여기구에 비하면 매우 초기적인 단계였지만 당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정 비빔밥’과 ‘정책토론회’는 청년의 정책제안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의무를 지운 최초의 사례였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청년 참여기구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청년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청년 당사자, 청년 단체, 시의회 의원, 전문가 약 150명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그 이후 시의회, 서울시와의 실무 교섭이 수차례 진행됐다.

마침내 2015년 1월 서울시의회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년 발전 기본 조례가 청년 단체와 청년들의 참여로 제정 되었다. 이 조례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담기게 됐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에만 국한되던 청년문제가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장되는 첫 시작이었다.

그림 3-2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오지랴캠프 사진



출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다. 청년단체의 지역 확산과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

서울시가 2015년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한 후, 이를 주목한 전국 각지의 청년활동가들은 '청년기본조례'를 자신의 지역에도 도입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

이를 통해 '시흥', '대전' 등 다양한 지자체가 잇달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는 후술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1) 청년기본조례의 지역 확산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1주년을 앞둔 2015년 10월, 청년기본조례 운동을 펼치던 다양한 청년주체들이 모여 청년기본조례 1주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제정 이후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다양한 청년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며 추후 일정을 계획하였다.

특히 시흥시는 청년들이 주도해 1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지역에서 시, 도의원들과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며 청년기본조례 논의를 펼쳐나갔다.

전국으로 청년기본조례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추가해 나가기도 했다. 제주는 '청년정담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청년단체와 도의원들 간의 6차례의 걸친 협의 과정과 타 지역 사례 답사를 통해 청년들의 교류를 조례에 담았으며, 전주의 경우는 건강권을 추가하기도 했다.

2)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림 3-30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창립총회 사진.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이 삶의 이행단계에서 겪게 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2017년 4월 출범했다.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발적 시민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특히 거버넌스를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림 3-31 어쩌다 모임 활동사진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러한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청년기본조례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 청년단체들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2월, 지역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을 나누던 서울, 경기, 대전, 전북,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청년활동가 100여명이 경기도 시흥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의 느슨한 네트워크가 시작됐다.

문화기획,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각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찌다 모이게 됐다는 이름으로 '어찌다 모임'이라 불렸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모여 소규모 교류회를 진행하고, 전국각지에 청년활동가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 각 지역에서 청년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열며, 서로를 초대해 사례를 듣고, 그 지역에 문제를 함께 토론했다. 그리고 청년 활동가들의 활력을 돕기 위한 청년 교류회 및 월례 모임을 대전,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전주 각 지역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힘들이 모여 결국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1) 정책기획자 과정 설계: 전국청년대학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을 돕고자 '전국청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책기획자 과정을 준비해나갔다.

정책기획자 과정은 청년정책이 확산되게 된 과정과 원인을 전하는 것은 물론 청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 거버넌스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고려해 과정이 설계됐다. 거버넌스가 주목받는 이유와 그 의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정책과정의 프로세스 등을 교육하고, 이를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지역 곳곳에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설계한 후, 부산·울산·경남 캠퍼스, 시흥·경기 캠퍼스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했으며, 서울시의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2) 지방정부와의 협력: 포럼 및 토론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개별적으로 지방정부와 접촉해 청년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 지방정부들이 구성한 지방정부협의회와의 협력도 해나갔다. 특히 광역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의도자사협의회와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을 공동주관 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17개 광역 지방정부, 20개의 기초 지방정부와 청년들이 함께 '청년과 지역이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청년 공동 실천문'이 발표됐다. 실천문에는 청년정책 논의와 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 등을 담았다.

그림 3-32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사진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외에도 다양한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 시민단체 등의 연대해 개최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기획토론회'를 공동주최 했으며, 전국의 청년단체 및 중간지원조직들과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국 합동포럼'을 열기도 했다.

(3) 청년정책 관련 연구 및 조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정책 관련 연구 및 조사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2017년에는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연구'의 연구자로 참여했으며, 서울시의 청년교류공간 운영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이 모인만큼 지역격차 문제에도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시각으로 지역격차를 분석한 '청년인구 이동문제 진단을 위한 청년 현실에 기초한 지역격차 분석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청년수당에 대한 청년의견조사'를 진행해 청년수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향 연구’에서 청년활동가 토폴이 조사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4) 의제, 정치, 네트워크 모임 활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역과 부문 모임으로 나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모임은 지역의 회원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거나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대전, 대구,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지역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

의제모임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책 읽기 세미나, 자체 토론회 등을 열고 있다.

정치모임은 청년정치 이슈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모임으로 선거자금, 규제 등 청년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제주, 전주, 시흥 등에서 로컬유스파티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원 후원회구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지역에서 청년시절 정치 입문 경험을 가진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대담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연결의가능성, 지역방랑단 모임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청년활동가들이 만나고,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장들을 만들고 있다. 네트워크 모임은 월례모임과 교류회 등을 기획하고, 연결의가능성 모임은 각 지역의 청년 공간들의 정보를 교류하며, 지역방랑단 모임은 여러 지역을 방문해 보고 싶은 회원들을 모아 직접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교류하고 있다.

그림 3-33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모임 사진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3)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1) 청년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정책영역으로 확대한 청년기본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했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재정자립도 격차 등에 따라 지역 청년정책이 국비 매칭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예산의 절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원이 일자리 정책에 편중됐기 때문에 결국 지방정부의 청년정책도 일자리 편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해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2017년 대선으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과 청년단체들, 중간지원조직 등은 2017년 6월, ‘청년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배운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 ‘20년의 준비기간, 40년의 직장생활, 10년의 노후를 보내는 인생은 더 이상 없다’는 슬로건으로 기존의 생애과정에서 벗어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률만 주목하는 일자리 중심의 기존 청년정책을 비판하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2)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은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청년단체와 정당 등 50여개 단체가 모여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 단체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림 3-34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활동 사진



출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6명의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원내 모든 정당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목표로 1만 서명운동, 지역사회 간담회, 입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년기본법 제정요구 1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국에 각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5개지역 오픈테이블, 캠페인 45회를 통해 10,459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했다.

당시 여야 5개 정당 국회의원 23명이 함께 주최한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 청년기본법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에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만들어졌으며, 2018년 5월 21일 특위에 참여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끝나가던 2019년말까지도 청년기본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2019년 안에 청년기본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합의안은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국회 정상화와 조속한 청년기본법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청년기본법 연내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국회 현장사무실 운영해 정무위원회, 청년미래특위 간사, 청년의원 등 32명을 방문,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자 12월에는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1명의 청년이 참여해 30일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를 넘겼지만 1월 4일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2월 4일에 제정될 수 있었다.

라.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조직의 다변화

새롭게 등장한 청년 의제와 담론은 대학생 단체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청년을 비롯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공론화됐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운동 이후 대학을 넘어 다양한 청년 문제가 조명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단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자치기구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자치기구들도 좀 더 세부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다변화가 이뤄졌다.

1) 성평등 분야

기존의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활동들이 총학생회 폐지 등으로 인해 성평등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학생회를 벗어난 대안적인 활동 단체들이 등장했다.

(1) 유니브 페미

2019년 9월 설립된 유니브 페미는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상식으로 만든다'는 기치 아래 활동하며, 대학생 활동가들 중심으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19년부터 대학 익명 커뮤니티의 혐오 문제에 대해 대응하거나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본부에 여성 의제 관련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2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대학공동체의 역할과 책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성평등 대학 만들기 워크숍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대학 인권헌장 제정원칙'을 만들어 대학 내에서 인권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네이버의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조항을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2) 기타 네트워크

총학생회 해산 이후 대학 내 만들어진 대안조직인 성인권위원회들은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생인권자치단체연합이 구성됐으며, 여성주의 동아리들은 여성주의의 내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고, 대학 내 여성권리 침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2) 대학 언론 분야

대학언론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 대학언론은 발행인이 총장으로 되어 있고 재정이 독립적이지 못해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언론 기자들은 자유롭게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비영리독립언론을 출범시켰다.

(1) 대학알리

편집권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한 학교의 기자들이 참여해 여러 대학의 알리들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알리가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알리는 초기에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랑의열매, 다음세대재단 등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대학언론들이 제대로 다루기 어렵거나 주요 언론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대학언론인네트워크

2020년에는 전·현직 대학언론인 및 대학알리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는데, 이 단체가 '대학언론인네트워크'이다.

이들은 '대학언론인 아카데미'를 알리와 함께 진행하고 대학언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활동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자들 간의 공론장 열거나 주요 언론 매체들과 협업을 진행하여 대학생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 중이다.

3) 기후 분야

최근 사회 주요 의제인 '기후위기'와 함께 대학생기후행동도 등장했다. 2020년에 출범한 대학생기후행동은 다양한 환경운동 및 기후위기 대응 운동 단체들과 함께 연대활동을 진행하며, '대학생기후 비상행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 등을 진행했다.

4) 계열별 대학생 연대체

계열별 대학생 연대체들도 새롭게 재편들이 이뤄졌다. 기존의 계열별 대학생 연대체는 의학계열과 교육계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다 최근 예술계열에서도 연대체가 구축되었다. 특히 계열별 대학생 연대체가 전공 관련 정원 문제 등 전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부대응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예술계열은 대학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예술대학생네트워크

2018년 출범한 예술대학생네트워크는 초기에는 예술대학의 등록금 등 교육 공공성 관련 의제에 대응해 예술계열에게만 차별이 있었던 '국가우수장학금' 제도를 개선을 하거나 대학의 실험실습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9년에는 예술대학생의 의제 외에도 청년 예술가의 의제로 확장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 위원 선임 문제를 공론해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청년 위원이 선임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

었다. 청년 문화 및 예술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서울문화재단 등과 청년 예술인의 작업과 활동을 아카이브 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차등등록금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해 예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인 '도시문화 LAB'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해 사업화했다.

2021년에는 국회 및 문화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정책 협의를 이어가 예술대학 혁신 관련 정책 예산을 반영하는데 역할을 했다. 현재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서울문화재단 등과 함께 청년예술 정책 관련 공론 및 설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마. 민간의 청년 지원

청년들을 지원하는 민간의 노력도 함께 했다. 기존의 시민단체나 사회적경제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다. 앞서 달팽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투자기금 지원이나 청년유니온 활동을 지원한 노동조합이나 재단, 지역의 청년단체들에게 공간을 지원한 지역신흥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청년재단이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고, 정부 일자리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청년희망펀드를 모금해 만든 것이 청년재단이다.

청년재단은 초기에는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매칭, 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글로벌 취·창업, 일경험 제공 등 정부 등에서 정책으로 수행하는 보편적인 일자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추진하는 데 힘썼다.

대표사업으로는 스타트업·창업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1인당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해 스타트업에서 2,178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청년취업 매칭'과 구직청년들이 면접 시 소요된 경비를 6개월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 총 6,583명에게 19억 9,000만원을 지원한 '청년면접비용 지원'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지원자 모두에게 1차 면접기회를 부여토록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시 담당 컨설턴트가 동석해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1,398명이 취업에 성공한 '온리원열린채용'이 있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등 비전공 청년이나, 미취업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 및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여 211명 중 184명 취·창업 연계한 '인재 양성 사업', 청년 개인이나 청년 단체 등에서 제안하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사·선정해 재단수행사업, 프로젝트지원 등을 추진한 '청년희망채움사업' 등이 이뤄졌다.

2018년부터 재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편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특화 지원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사업으로 정책 추진해 나갔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한 사각지대 연계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이 일경험을 통해 사회경험을 축적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지원한 사업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2,733곳에서 2,988명의 청년이 6개월간 일경험을 제공했다.

'청년 맞춤형 지원'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창업 프로그램이나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12개월간 개인 밀착형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 미취업 청년이고, 전국 10개 지역에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공간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사회적응 및 자립이 어려운 고립청년을 발굴해 개별 상황에 따른 자립 프로그램 및 참여청년 가족 자조 프로그램 지원하는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를 통해 80명을 지원했다.

'청년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활동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활동가, 연구자, 청년단체, 공익활동가 등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하고, 청년이슈의 사회적 가치창출 기능 및 청년 정책 싱크탱크로의 발전방향 모색하고자 20개의 프로젝트 및 6개의 정책 과제 연구 수행했다.

특히 청년재단 초기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지난 5년간 31,219건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청년의 삶 모니터링 지표관리, 공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마치며

미래를 위한 제언

그간 진행되어온 청년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을 인식하고, 특히 IMF 이후에는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며 대부분의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역대 정부들은 고용률, 실업률 같은 지표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자리를 포함하여 청년들의 삶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청년문제가 이슈화가 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청년문제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청년정책은 각 시기마다의 정책수요를 반영해서 그에 맞게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앞으로의 청년정책도 시대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제도로 전달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기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의 정의 및 권리·책임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다. 또한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평가계획의 점검체계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등 수평적·수직적인 정책체계를 모두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년센터와 같이 각 지역에서 청년들과 실제로 교류하는 접점을 만들어내어 청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오고 있다. 차기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에 부응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이제 막 체계를 잡기 시작하여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보다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지난 정부부터 최근까지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정책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단기간에 작은 절차나 제도의 개선만으로도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듯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은 청년문제의 복합적인 성격과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개편 및 확충 등 정책인프라 보강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청년정책의 질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가치관,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인 반응들을 세심하게 쟁겨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청년들과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추진 주체와의 상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청년정책이 많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세심한 정책을 기획·집행하기 위해 차기정부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예산 현황

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예산 및 자체사업 현황

- 2021년 기준 중앙부처는 총 308개 세부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약 23.8조원 수준이다.
- 세부 과제별로는 일자리 영역 과제가 115개로 가장 많고, 교육 88개, 복지 50개, 참여·권리 31개, 주거 24개 순이다.
- 영역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거 부문 예산이 8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 8조2천억원, 교육 5조 6천억원, 복지·문화 1조 1천억원, 참여·권리 685억원 순이다.

분 야	과제수	예 산 ¹⁾		
		'20년 ²⁾	'21년 (비중,%)	
합 계	308	199,357	238,338	
I. 일자리	115	62,855	82,197	34.5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57	45,991	63,490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0	10,071	12,052	
3. 일터 안전망 강화	9	23	26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9	6,771	6,630	
II. 주 거	24	70,974	87,039	36.5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8	40,852	50,970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6	27,072	28,929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4	2,850	7,125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200	15	
III. 교 육	88	53,306	56,793	23.8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5	43,145	43,907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39	4,716	6,041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0	5,160	6,422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285	423	
IV. 복 지·문 화	50	11,238	11,623	4.9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4	599	752	
2. 청년 건강 증진	9	5,939	6,057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282	360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6	4,418	4,454	

분 야	과제수	예 산 ¹⁾		
		'20년 ²⁾	'21년 (비중,%)	
V. 참여·권리	31	984	685	0.3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6	11	11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0	3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8	102	160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13	871	511	

2. 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및 자체사업 현황

- 지자체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체 청년정책으로 3,460여개의 사업에 총 3조 4,00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고 있다.
- 정책성격별로는 취업지원 분야가 1,409개 사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뒤를 지어 창업지원 사업 699개(20%), 주거금융 532(15%)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지자체간 청년정책 사업의 확산 및 공유와 지방 청년정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매년 지자체 청년정책 대표사례집을 제작하여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배포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2030.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1-1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수 및 예산현황 : 3,461개(3조3,939억원)

구분	사업수	예산
합 계	3,461	33,939
광역 시부	서울	6,553
	부산	1,056
	대구	1,158
	인천	814
	광주	1,865
	대전	547
	울산	3,269
	세종	64

구분	사업수	예산	
합 계	3,461	33,939	
광역 도부	경기	509	5,118
	강원	154	459
	충북	206	1,766
	충남	175	870
	전북	355	3,060
	전남	203	1,524
	경북	226	2,546
	경남	418	2,826
	제주	74	443

부록 1-2 지자체 청년정책사업 정책성격별 현황

구분	합 계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합 계(건수)	3,461	1,409	699	532	484	337	
광역 시부	서울	327	133	55	40	42	57
	부산	250	129	41	21	32	27
	대구	134	73	13	11	27	10
	인천	111	49	23	23	9	7
광역 시부	광주	126	53	17	21	22	13
	대전	86	45	5	9	12	15
	울산	75	36	11	10	6	12
	세종	32	12	4	4	10	2
광역 도부	경기	509	183	90	71	91	74
	강원	154	45	71	23	4	11
	충북	206	78	34	56	27	11
	충남	175	55	37	35	25	23
	전북	355	125	103	54	52	21
	전남	203	55	50	48	32	18
	경북	226	120	56	20	26	4
	경남	418	180	79	76	58	25
	제주	74	38	10	10	9	7

청년단체 현황

출처: 청년재단

1. 개요

- 본 자료에서 청년단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주된 사업에 청년이 포함된 단체 및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중 청년위원 소속 단체를 뜻한다.
- '21.3.31.을 기준으로 청년단체는 중앙 비영리민간단체 16개, 시도 비영리민간단체 85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 19개(중복 제외 16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5개이다.

2. 현황 및 목록

부록 2-1 청년단체 현황

중앙 비영리민간단체	시도 비영리민간단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6개	85개	19개 (중복 제외 16개)	5개

부록 2-2 청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목록

연번	등록기관	단체명	등록년
1	서울	전국백수연대	2006
2	서울	청년평화센터 푸름	2007
3	서울	한국 YBA	2009
4	서울	새물결봉사단	2010
5	서울	소원	2011
6	서울	열린의정봉사단	2012
7	서울	꿈꾸는다락방	2012
8	서울	청년대안교육세움터	2012
9	서울	진보와 나눔의 2030 커뮤니티 노원청년회	2012
10	서울	열린옷장	2013
11	서울	(사)하나누리	2013
12	서울	청년다움 서울지구대	2013
13	서울	사단법인 느헤미야코리아	2013
14	서울	청춘리얼스펙학교	2014

연번	등록기관	단체명	등록년
15	서울	청년일자리창출 운동본부	2014
16	서울	민달팽이유니온	2014
17	서울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2014
18	서울	아시아희망캠프기구	2014
19	서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4
20	서울	소리디	2014
21	서울	글로벌창의인재양성소	2015
22	서울	동아시아청년연맹	2015
23	서울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24	서울	라운	2016
25	서울	도시樂 & TALK	2016
26	서울	청년인재지원센터	2016
27	서울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	2016
28	서울	국제비전캠프	2016
29	서울	아시아미래지식인포럼	2017
30	서울	유니시드 통일 봉사단	2017
31	서울	한국청소년동아리서울연맹	2017
32	서울	청년문화포럼	2017
33	서울	평화이음	2017
34	서울	드림메이커(DREAM MAKER)	2017
35	서울	통감	2019
36	서울	컬처그라운드	2019
37	서울	꿈톡	2019
38	서울	청년콘텐츠랩유니콘	2020
39	서울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2020
40	서울	디딤	2020
41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청년연합회	2000
42	부산	부산청년문화센터	2001
43	부산	(사)한국청년센터 부산지부 "청년희망센터"	2007
44	부산	부산청년봉사센터	2007
45	부산	사)부산광역시 청년연합회해운대구 지회	2008

연번	등록기관	단체명	등록년
46	부산	부산YWCA브라스밴드	2012
47	부산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2015
48	부산	사단법인 한울장애인자활센터	2016
49	부산	청년과 사회가 함께하는 포럼	2017
50	부산	문화와 동행	2018
51	부산	사단법인 부산청년정책연구원	2019
52	대구	대구KYC	2000
53	대구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대구광역시지부	2001
54	대구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	2007
55	대구	대구청년회의소	2012
56	대구	유니에즈	2019
57	대구	의미경영	2019
58	대구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2020
59	인천	나라사랑청년포럼	2014
60	인천	NGO US	2015
61	광주	겨레사랑 청년회	2001
62	광주	사랑의물레산타 광주본부	2009
63	광주	아시아청년문화네트워크	2014
64	광주	한국청년연합광주본부	2015
65	광주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광주본부	2015
66	광주	청소년문화공작소	2018
67	대전	21C청년 자원봉사네트워크	2000
68	대전	청년고리	2016
69	대전	청년다움	2017
70	대전	대전청년회	2020
71	대전	등불	2020
72	울산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2005
73	경기도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2000
74	경기도	수원KYC	2000
75	경기도	한국청년연합회경기도협의회	2001
76	경기도	(사)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2004

연번	등록기관	단체명	등록년
77	경기도	청년생각	2018
78	경기도	꿈이룸교육공동체	2018
79	경기도	고양평화청년회	2011
80	충북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충청북도지부	2015
81	충북	보은청년회의소	2016
82	충북	충북지구청년회의소	2016
83	충북	단양군 청년연합회	2017
84	충남	천안KYC	2000
85	충남	충 청춘소리	2015

2021 청년정책백서 집필진 명단

기획·편집	집필 (가나다순)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이상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홍정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관리팀장
이가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관리팀 사무관
김성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관리팀 사무관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김병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지원팀장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철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김우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과장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류승목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장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박진석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
박희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서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총괄과장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양호경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소통과장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원소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이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미래데이터기획팀장
이민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이병성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이찬중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장
임동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천영평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최유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최은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최준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정책백서

2021년 청년정책백서 Youth Policy White Paper

발행일 : 2022년 2월

발행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주 소 : 세종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층

전화번호 : 044-200-1996

디자인 기획 · 인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